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를 발간하며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안영률입니다.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해주신 부위원장님, 심의위원님 이하 심의원,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수 속에 치러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남북, 북미 관계 개선과 화해 분위기로 선거초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본격적인 선거기간에도 미투 운동,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선거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선거와 관련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슈도 선거구 획정문제, 드루킹 의혹이나 유명정치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 등 다소 소모적인 정쟁이어서 '선거실종'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7회 지방선거는 제1회 지방선거의 68.4%에 이어 60.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역대 2위를 기록하였는바, 이와 같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에는 지역 언론들이 지역의 선거이슈나 후보자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행한 보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선거를 대하는 국민의 수준과 관심이 높아졌으며, 유권자 대부분은 선거 정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얻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안 영 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언론은 여전히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불공정한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론형성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이 그러한 의무를 잘 이행해 바람직한 선거보도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력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언론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부터 7월 13일까지 150여 일에 걸쳐 활동하는 동안 약 460여 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91건의 기사에 대해 제재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9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조치를 하였으며, 후보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한 12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게재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 때의 제재 건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위원회 발족이 2월 중순이어서 연초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었고, 올림픽 등 대형 이슈가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심의라는 본연의 역할을 매우 충실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선거보도 문화 구현에는 기여할 수 있도록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

의를 하였다고 자평합니다.

한편, 심의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몇몇 지역 언론들, 특히 선거가 치열한 지역의 언론들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를 부각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행태 및 선거에 임박해 터뜨리는 무책임한 기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가 3분화되어 있는 탓에 심의결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기사·보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함에 있어 각 심의기관 사이에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경우 심의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도의 미비로 이번처럼 6월에 선거가 있을 경우 연초 언론들이 대거 생산하는 불공정한 기사, 홍보성 기사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제재의 공백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공정한 상황의 방치는 유권자, 후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상설화는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의 출발점이며, 위원회의 업

이 백서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선거기사 심의의 방향을 짚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는 선거보도 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선거보도 문화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자료로, 또 한편으로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보도 심의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무 단절과 공백에 따른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기사가 빚어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언론이나 언론인들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위원회 제재결정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결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현장의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심의 사례나 제재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서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선거기사 심의의 방향을 짚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는 선거보도 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선거보도 문화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자료로, 또 한편으로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보도 심의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선거기사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의해주신 심의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심의원 여러분, 심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심의2팀 직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면을 빌어서 위로하고자 합니다.

목차

심의위원장 백서 발간사 00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를 발간하며」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008

제1장 위원회 구성 009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014

제2부 심의 · 의결 현황 018

제1장 심의 · 의결 현황 및 분석 019

Ⅰ. 심의 · 의결 현황 개요 020

Ⅱ. 자체 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2. 결정유형별 분석

3. 매체유형별 분석

Ⅲ. 시정요구 심의 · 의결 현황

제2장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 · 의결 현황 비교 060

제3부 **종합평가** 064

제1장 심의위원 평가 065

제2장 결산좌담 082

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089

제1장 자체심의 090

제2장 시정요구심의 433

제5부 **기타 사례** 503

제1장 안내문 조치 및 불문 사례 504

제2장 기타 논의사항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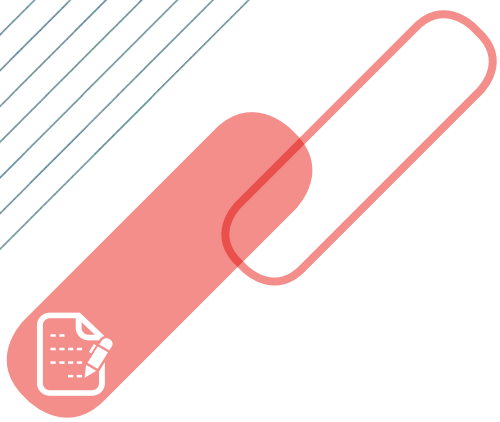
부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512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518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530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554
5. 색 인 558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2018년 2월 12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18년 7월 13일까지 150여 일간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 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2018. 7. 13.	2018. 6. 13.	
2018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4. 13. ~ 2018. 7. 13.	2018. 6. 13.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과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안영률	법무법인 KCL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윤원구	(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원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자유한국당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바른미래당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남영진	(전)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자협회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추천권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바른정당과의 신설합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심의위원을 해촉하고,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위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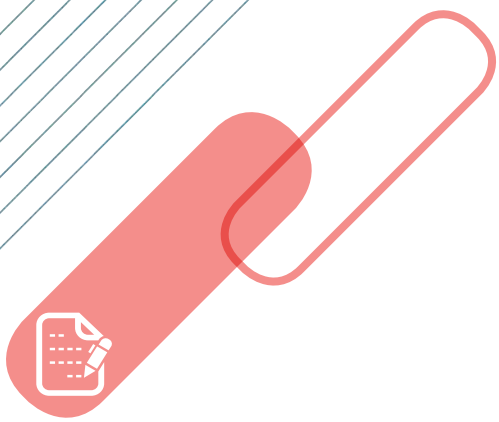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사진 : (왼쪽부터) 김정범 위원, 김춘식 위원, 김민전 위원, 남영진 위원, 안영률 심의위원장, 윤원구 부위원장, 이완규 위원, 소순창 위원, 이장희 위원,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제2장
심의·의결절차

1. 자체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하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해당 언론사에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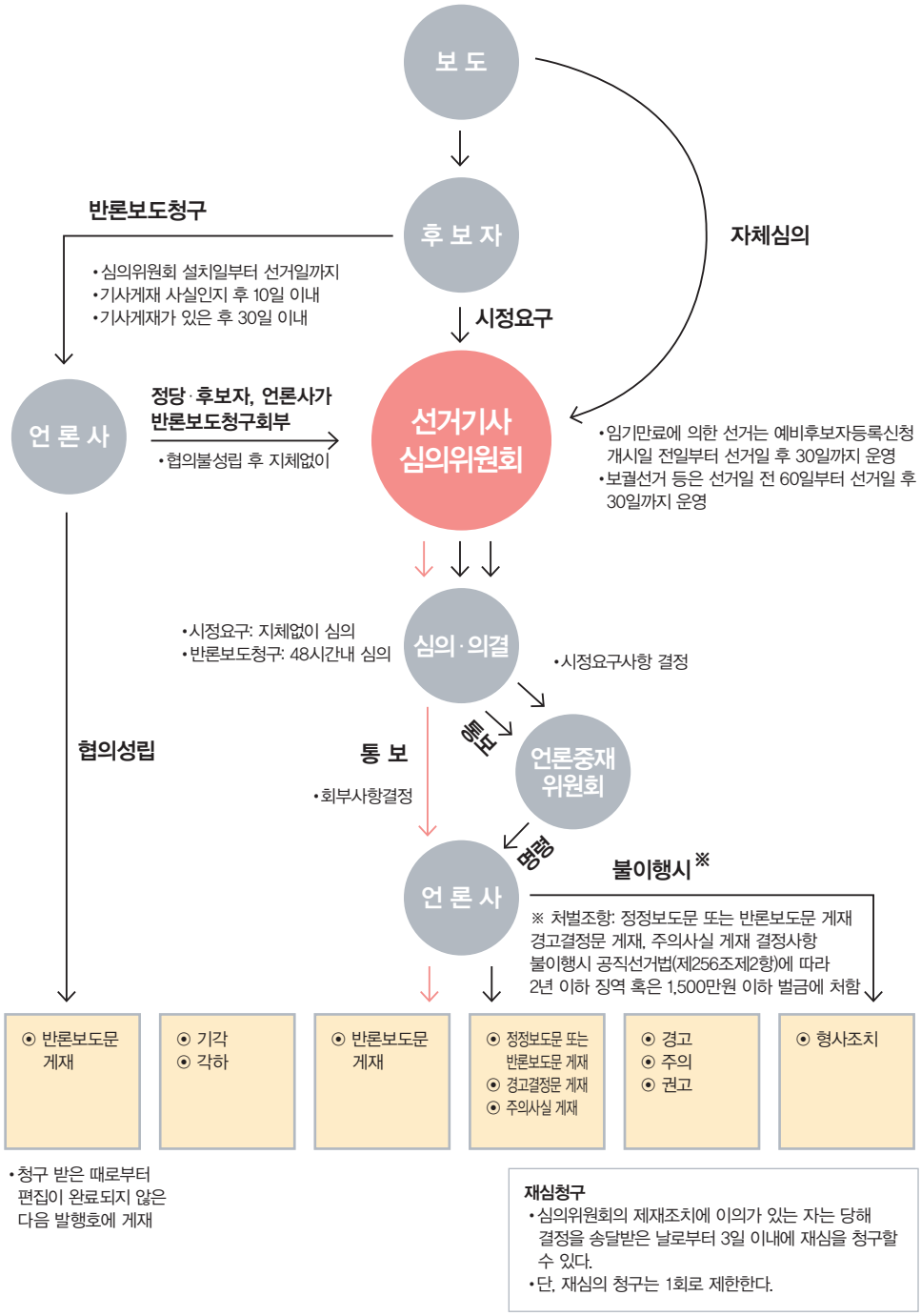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한편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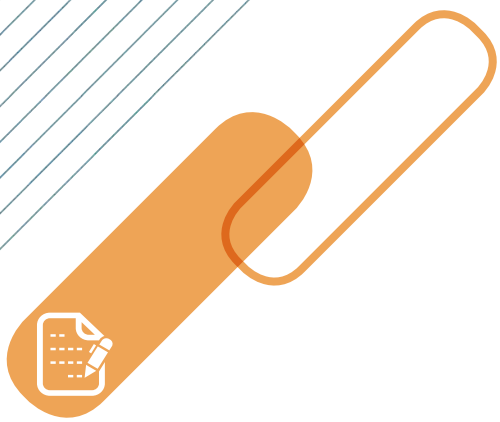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 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의결 흐름도


보 도
후 보 자
반론보도청구
•심의위원회 설치일부터 선거일까지
•기사게재 사실인지 후 10일 이내
•기사게재가 있은 후 30일 이내
자체심의
시정요구
언 론 사
정당·후보자,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회부
•협의불성립 후 지체없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시정요구: 지체없이 심의
•반론보도청구: 48시간내 심의
심의·의결
•시정요구사항 결정
협의성립
통 보
•회부사항결정
회부
언론중재
위원회
결정
불이행시※
※ 처벌조항: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결정사항 불이행시 공직선거법(제25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언 론 사
⊙ 반론보도문 게재
⊙ 기각
⊙ 각하
⊙ 반론보도문 게재
⊙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 경고결정문 게재
⊙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형사조치
•청구 받은 때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게재
재심청구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제2부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 · 의결 현황 및 분석
제2장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 · 의결 현황 비교



제1장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1. 자체심의

선거기사심의 담당부서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매체 중 심의대상매체 469개(중앙일간지 28개, 지역일간지 128개, 기타일간지 5개, 종합주간지 42개, 월간지 19개, 뉴스통신 10개, 지역주·월간지 237개)를 선정하고, 해당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검토한 후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총 104건의 기사를 자체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중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을 위반한 91건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다. 결정유형별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주의 39건(42.9%), 경고 38건(41.8%)으로 주의 및 경고 결정이 다수를 차지했다. 선거에 임박해 특정 후보자 관련 의혹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반대로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다수 게재해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문 게재(1건, 1.1%) 및 주의사실 게재(3건, 3.3%) 결정이 내려졌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8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기고를 제한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10건(11.0%),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 5건(5.5%),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 관련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등 광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4건(4.4%), 오차범위 이내 차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여론조사보도 기준을 위반한 안건이 4건(4.4%)이었다.

자체심의 회차별 의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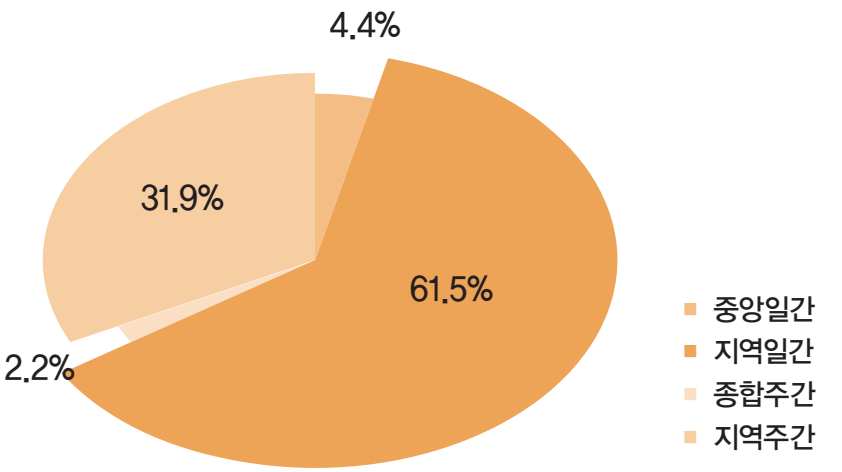
회차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2차	8	3	3			2			3	5	
3차	11	10	1					1	4	6	
4차	5	3			2				1	3	1
5차	10	5		1	4				5	3	2
6차	8	7			1				3	5	
7차	10	4		3	3				3	6	1
8차	3	3							2		1
9차	7	5	1			1		1	2	3	1
10차	5	5							2	2	1
11차	8	8						1	5	1	1
12차	2	1				1				1	1
13차	11	11					1		5	4	1
14차	3	3							3		
총계	91	68	5	4	10	4	1	3	38	39	10
	100%	74.7%	5.5%	4.4%	11.0%	4.4%	1.1%	3.3%	41.8%	42.9%	11.0%

매체유형별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56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간지 29건(31.9%), 중앙일간지 4건(4.4%), 종합주간지 2건(2.2%)순이었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간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 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신문	중앙	4	3			1				1	1	2
	지역	56	41	3	3	7	2	1	2	22	28	3
종합주간지		2		2						1	1	
지역주간지		29	24		1	2	2		1	14	9	5
월간지		0										
뉴스통신		0										
총계		91	68	5	4	10	4	1	3	38	39	10
		100%	74.7%	5.5%	4.4%	11.0%	4.4%	1.1%	3.3%	41.8%	42.9%	11.0%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현황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총 12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반론보도문 게재 2건,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3건, 기각 4건의 결정을 내렸다. 그 외 2건은 취하로 종결되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주간지 7건, 지역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뉴스통신 1건이었다.

시정요구심의 매체유형별 현황

간별		계	처리결과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일간지	중앙	0									
	지역	3		1		1	1				
주간지	종합	1								1	
	지역	7		1			2			1	3
월간지		0									
뉴스통신		1									1
총계		12	0	2	0	1	3	0	0	2	4
		100%	0.0%	16.7%	0.0%	8.3%	25.0%	0.0%	0.0%	16.7%	33.3%

3. 반론보도청구회부 및 재심청구

제7회 지방선거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5건으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청구 의결현황

안건번호	원심결정	결과
2018지선-재심1	2018지선-자심13 (주의사실 게재 결정)	기각
2018지선-재심2	2018지선-자심33 (주의)	기각
2018지선-재심3	2018지선-시심4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기각
2018지선-재심4	2018지선-시심6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기각
2018지선-재심5	2018지선-자심61 (주의사실 게재 결정)	기각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기사는 모두 68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는 크게 (1) 현직 단체장의 역점 사업 등을 홍보하는 기사, (2) 특정 후보에 관한 긍정적 평가와 주요 이력 등을 강조하는 인물 부각 기사, (3) 특정 후보에 대해 일반적인 후보 검증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정적 내용만을 다룬 기사, (4)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 (5) 기타 공정성 위반으로 구분된다.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1	내외일보	2월 13일	6	[기고문] 광명시의회 7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주의
2018지선–자심2	내외일보	2월 21일	16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새로운 광진구의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주의
2018지선–자심3	전주일보	2월 22일	14	지방선거의 멋진 결과를 기대하며	경고
2018지선–자심9	경기신문	3월 9일	10	“8년간 행정력 성공은 34만 시민·공직자들 덕분”	주의
2018지선–자심10	경도신문	3월 6일	3	“변화와 혁신, 잘사는 안성 설계”	주의
2018지선–자심11	경북도민일보	3월 8일	19	주민 없는 지방선거	주의
2018지선–자심12	경북신문	2월 28일	19	경북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선택이 중요한 이유	주의
2018지선–자심13	담양뉴스	2월 14일 (72호)	1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 최 군수, 6·13지방선거 ‘출마’	주의 사실 게재
		2월 28일 (73호)	4~5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3월 7일 (74호)	1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2018지선–자심14	도민일보	3월 5일	18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다	경고
2018지선–자심15	도민일보	3월 7일	20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다	경고
2018지선–자심16	선경일보	3월 5일	12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17	안산정론신문	2월 28일 (1009호)	6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주의
2018지선–자심18	전북타임스	3월 6일	16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에게 주목”	주의
2018지선–자심20	강릉신문	3월 14일 (1157호)	3	6·13 지방선거 강릉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심재종 출마의 변	권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21	뉴스경남	3월 19일	5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감시와 미행…동정론 확산	경고
2018지선–자심22	뉴스제주	3월 7일 (100호)	5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쟁력, 김우남 보단 문대림	주의
			7~8	문대림 예비후보 "제대로 제주 만들겠다" 문 예비후보 "3대 무상복지 반드시 실현"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 성 논란에 '일침'	
2018지선–자심25	거창중앙신문	3월 22일 (614호)	9	김석태 거창군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경고
2018지선–자심26	남도일보	4월 5일	17	평범한 아버지의 도전	권고
2018지선–자심27	머니투데이	3월 28일	8	'34세의 젊은' 강남구청장	권고
2018지선–자심28	아시아일보	4월 2일	9	政治人 이재정은 경기도교육감 不出馬가 정답이다	경고
2018지선–자심29	일간경북신문	4월 2일	6	이철우 의원, 신바람 경북 100대 공약 발표 "준비된 현장도지사 면모로 정면승부"	경고
2018지선–자심35	경동신문	4월 6일 (586호)	6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두영택, 그는 누구인가!	경고
2018지선–자심36	경상매일신문	4월 3일	18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치 실천 목표"	주의
2018지선–자심37	경상매일신문	3월 26일	18	新 성장산업 육성으로 포항 미래 연다	경고
		4월 5일	18	도시재생 미래 100년 이끌 '포항 건설'	
		4월 10일	1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포항 조성 시민건강 보호 앞장	
2018지선–자심38	경인종합일보	4월 16일	3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주의
2018지선–자심39	아시아일보	4월 18일	16	신 성장·새 지평 … 스마트(S.M.A.R.T–Hub) 양주시	주의
2018지선–자심40	보령신문	4월 11일 (1253호)	2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들	주의
2018지선–자심41	시민일보	3월 30일	3	서울 공천만큼은 안철수에게 맡겨라	경고
		4월 3일	3	안철수의 승부수, 得이냐 失이냐	
		4월 4일	3	안철수–장진영, 경선의 得과 失	
		4월 5일	3	안철수–김문수 후보단일화?	
		4월 16일	3	안철수–장진영, '아름다운 경선' 필요하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43	경인종합일보	4월 23일	16	“수원 시민의 정부 ‘4가지 복지 시민권’ 강화 할 것”	주의
2018지선–자심44	전북일보	4월 20일	14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45	제주신문	4월 23일	1	원희룡 바람 “미워도 다시 한 번”	경고
2018지선–자심46	함양신문	4월 16일 (1215호)	3	서춘수 전 밀양시 부시장 군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 가져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당월 300여명 동시 탈당의사 밝혀...	경고
2018지선–자심53	남해신문	4월 27일 (1382호)	2	만67세 초선현역 김두일 의원의 메시지	경고
2018지선–자심54	충북일보	5월 2일	8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의 인생유전	경고
		5월 4일	9	정정순 후보의 외유내강	
2018지선–자심55	경북매일	5월 3일	4	한국당, 광역 6명중 3~4석 차지 전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	권고
		5월 4일	5	한국당 6·13 地選 공천자 명단	
2018지선–자심56	대구경북일보	5월 11일	11	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성명발표	경고
2018지선–자심57	도민일보	5월 4일	20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을 만나다	경고
2018지선–자심58	도민일보	5월 9일	20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주의
2018지선–자심59	합천신문	4월 19일 (1123호)	2	김윤철 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원에 재도전하다	권고
2018지선–자심61	경북일일신문	4월 30일	1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주의 사실 게재
		5월 2일	1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5월 8일	1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5월 11일	1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2018지선–자심63	김해뉴스	4월 25일 (370호)	3	“도지사 되면 김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추진”	주의
2018지선–자심64	남해시대	5월 10일 (597호)	21	남해인의 긍지를 안고 강남 한 복판에 출사표 던지다	권고
2018지선–자심65	조선일보	4월 26일	E02	“문화도시로 대변신…시민들 이제 의정부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경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66	함안뉴스	4월 30일 (220호)	12~13	함안출신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인터뷰	주의
2018지선–자심67	산경일보	5월 14일	3	3각 뇌물의혹 드라마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경고
2018지선–자심68	경기매일	5월 23일	4	홍승표 광주시장 후보 “수도권 스포츠 메카 조성”	경고
2018지선–자심69	경북일일신문	5월 21일	1	만학도의 꿈, 준비된 지역 큰 정치 일꾼으로…	경고
2018지선–자심70	북부신문	5월 2일 (969호)	1	이동진, “책임정치의 본모습 보여주겠다”	권고
2018지선–자심71	시민일보	5월 23일	3	새로운 도전은 무지개빛 희망	주의
2018지선–자심72	한남일보	5월 2일	1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주의 사실 게재
		5월 11일	1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5월 14일	1	김태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UP 7대 공약 발표	
		5월 16일	1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5월 23일	1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 공약	
		5월 25일	1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5월 28일	1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2018지선–자심73	담양곡성타임스	5월 22일 (471호)	3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74	담양뉴스	5월 23일 (84호)	6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75	선경일보	5월 25일	5	이충우 여주시장후보 지지선언문	경고
2018지선–자심76	서울신문	5월 30일	14	“쇠락한 도심 ‘변화’해야…영등포역 고가부터 철거” 채현일 민주당 후보 “43년 토박이…도시재생 사업·교육환경 개선할 것” 김춘수 한국당 후보 “3번째 도전…동네별 랜드마크로 새로운 도약” 양창호 바른미래당 후보 “구민이 저를 불러내…구청장 3選땐 민주당 복당” 조길형 무소속 후보	권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78	경북일일신문	5월 24일	1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경고 결정문 게재
		5월 25일	1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와(?)	
		5월 28일	1	해오름 동맹 포항.경주 시장 후보 '떳떳한 者 누구(?)	
		5월 29일	1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6월 1일	1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 시작	
		6월 1일	1	도전 개척정신 미래 발전 희망 쏘다	
		6월 4일	1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의심(?)	
2018지선–자심79	대전투데이	6월 1일	1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 TV토론회로 지지율 상승하나	주의
2018지선–자심80	산경일보	5월 30일	4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 주요 공약	주의
2018지선–자심81	상산신문	5월 24일 (132호)	9	신순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려 기초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감동 현장 신순화의 애절한 인사말 신순화 장남 격려사	경고
2018지선–자심82	순창신문	5월 30일 (877호)	9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경고
2018지선–자심83	시민의소리	5월 28일 (883호)	1	장휘국 교육감 후보 '3선 피로도' 심상찮다	경고
			2	장휘국, 자기만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2018지선–자심84	청송영양신문	5월 30일 (112호)	8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군의원 후보 '심민종'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무소속 군의원 후보 '이광호'	주의
2018지선–자심85	호남일보	5월 30일	15	시민과 소통하는 '광주나그네'	권고
2018지선–자심86	제주신문	5월 31일	1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당선 굳히기 돌입 원희룡 후보 당선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	주의
2018지선–자심87	담양곡성타임스	5월 29일 (472호)	5	정당정치가 필요한 이유	경고
2018지선–자심88	담양군민신문	5월 20일 (396호)	5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경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89	문화매일	6월 11일	4	“지하철 유치 광명시민이 이깁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90	시민의소리	6월 4일 (884호)	3	이용섭 투트랙 선거운동 호평	경고
2018지선-자심91	열린순창	5월 24일 (394호)	22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회고	경고

(1) 현직 단체장 홍보성 기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성 기사가 공정성·형평성 위반 유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기사는 현직 단체장의 역점 사업이나 성과 등을 홍보하거나 인터뷰를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 없이 부각 보도한 경우였다.

특히 현직 단체장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주의사실 게재 조치가 내려졌다. 담양뉴스는 2월 14일자 1면에 담양군수 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군수의 군정 주요방향과 출마소식을 보도한 후, 다음 발행호에 군수 인터뷰와 출판기념회 소식을 4~5면에 걸쳐 보도하고, 다시 1주일 후 군수의 특별 강연 소식을 보도하는 등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현직 군수를 홍보하는 기사를 실어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받았다.

한남일보도 5월 2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경상남도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자의 공약을 그래픽, 사진과 함께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면에 부각 보도해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받았다.

경상매일신문은 경북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장의 성과를 특집기사로 3차례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조선일보는 ‘문화도시, 의정부’ 제하의 애드버토리얼 섹션(advertorial section)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직 시장의 인터뷰 및 사진을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인종합일보와 아시아일보, 도민일보는 양주시장에 출마 예정인 현직 시장의 중장기 시정 계획 등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인물 사진과 함께 전면기사로 게재해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기신문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광명시장 재임 중 성과와 출마각오 등을 사진과 함께 전면기사로 부각 보도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북부신문은 서울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구청장의 출마 입장, 구청장 재임 중 성과 등을 부각 보도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현직 단체장 홍보성 기사 게재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9	경기신문	3월 9일	10	“8년간 행정력 성공은 34만 시민·공직자들 덕분”	주의
2018지선–자심13	담양뉴스	2월 14일 (72호)	1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 최 군수, 6·13지방선거 ‘출마’	주의 사실 게재
		2월 28일 (73호)	4~5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3월 7일 (74호)	1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2018지선–자심37	경상매일신문	3월 26일	18	新 성장산업 육성으로 포항 미래 연다	경고
		4월 5일	18	도시재생 미래 100년 이끌 ‘포항 건설’	
		4월 10일	1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포항 조성 시민건강 보호 앞장	
2018지선–자심38	경인종합일보	4월 16일	3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주의
2018지선–자심39	아시아일보	4월 18일	16	신 성장·새 지평 … 스마트(S.M.A.R.T–Hub) 양주시	주의
2018지선–자심43	경인종합일보	4월 23일	16	“수원 시민의 정부 ‘4가지 복지 시민권’ 강화 할 것”	주의
2018지선–자심58	도민일보	5월 9일	20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주의
2018지선–자심70	북부신문	5월 2일 (969호)	1	이동진, “책임정치의 본모습 보여주겠다”	권고
2018지선–자심72	한남일보	5월 2일	1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주의 사실 게재
		5월 11일	1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5월 14일	1	김태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UP 7대 공약 발표	
		5월 16일	1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5월 23일	1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 공약	
		5월 25일	1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5월 28일	1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⑵ 인물 부각 기사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 사안 중에는 특정 후보자만을 사진 등과 함께 부각 보도하는 인물 부각 기사가 가장 많았다. 인물 부각 기사는 대체로 전면 크기의 특집 기획기사나 인터뷰 형식으로 후보자의 프로필, 출마입장,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한 경우였다.

도민일보는 2018년 3월 5일자 18면에 특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출마소식을 프로필, 사진 등과 함께 기획기사로 보도하고, 3월 7일자 20면에 특정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인터뷰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경기 여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내용을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선경일보, 거창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전 신문사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부각 보도한 거창중앙신문, 특정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동정과 함께 후보자 인사말, 후보자 가족의 격려사,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칼럼 등을 전면에 보도한 상산신문 등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안산정론신문은 '이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연재 코너에 안산시장 선거 출마예정인 광복회 안산지회장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안산을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대부도를 그리스의 산토리니처럼 발전시킬 비전을 갖고 있다' 등 출마 관련 포부를 담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도신문은 특정 경기 안성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선언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대판 김정호다', '인생역전을 일궈낸 사람이다' 등 우호적인 평가만을 기사화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후보자 기고문 게재 금지 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업적과 출마관련 입장 등을 언급한 기고문을 게재한 내외일보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물 부각 기사 게재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1	내외일보	2월 13일	6	[기고문] 광명시의회 7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주의
2018지선–자심2	내외일보	2월 21일	16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새로운 광진구의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주의
2018지선–자심10	경도신문	3월 6일	3	"변화와 혁신, 잘사는 안성 설계"	주의
2018지선–자심14	도민일보	3월 5일	18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다	경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15	도민일보	3월 7일	20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다	경고
2018지선–자심16	선경일보	3월 5일	12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17	안산정론신문	2월 28일 (1009호)	6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주의
2018지선–자심18	전북타임스	3월 6일	16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에게 주목”	주의
2018지선–자심22	뉴스제주	3월 7일 (100호)	5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쟁력, 김우남 보단 문대림	주의
			7~8	문대림 예비후보 “제대로 제주 만들겠다” 문 예비후보 “3대 무상복지 반드시 실현”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 성 논란에 ‘일침’	
2018지선–자심25	거창중앙신문	3월 22일 (614호)	9	김석태 거창군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경고
2018지선–자심36	경상매일신문	4월 3일	18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치 실천 목표”	주의
2018지선–자심57	도민일보	5월 4일	20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을 만나다	경고
2018지선–자심58	도민일보	5월 9일	20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주의
2018지선–자심59	합천신문	4월 19일 (1123호)	2	김윤철 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원에 재도전하다	권고
2018지선–자심63	김해뉴스	4월 25일 (370호)	3	“도지사 되면 김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추진”	주의
2018지선–자심64	남해시대	5월 10일 (597호)	21	남해인의 긍지를 안고 강남 한 복판에 출사표 던지다	권고
2018지선–자심69	경북일일신문	5월 21일	1	만학도의 꿈, 준비된 지역 큰 정치 일꾼으로…	경고
2018지선–자심81	상산신문	5월 24일 (132호)	9	신순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려 기초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감동 현장 신순화의 애절한 인사말 신순화 장남 격려사	경고
2018지선–자심90	시민의소리	6월 4일 (884호)	3	이용섭 투트랙 선거운동 호평	경고

⑶ 특정 후보자 관련 부정적 기사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만을 보도한 경우와 반대로 후보 검증의 차원을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만을 여러차례 반복 보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경북일일신문은 특정 경주시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처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4월 30일, 5월 2일, 5월 8일, 5월 11일자 1면에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 등과 같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경북일일신문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 기사를 1면에 4차례 게재하는 한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 홍보 등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의소리는 특정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3선 피로도', '자기만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등의 부정적인 제목과 기사를 1~2면에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정 후보자 관련 부정적 기사 게재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61	경북일일신문	4월 30일	1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주의 사실 게재
		5월 2일	1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5월 8일	1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5월 11일	1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2018지선–자심78	경북일일신문	5월 24일	1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경고 결정문 게재
		5월 25일	1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와(?)	
		5월 28일	1	해오름 동맹 포항.경주 시장 후보 '떳떳한 者 누구(?)	
		5월 29일	1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6월 1일	1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 시작	
		6월 1일	1	도전 개척정신 미래 발전 희망 쏘다	
		6월 4일	1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의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83	시민의 소리	5월 28일 (883호)	1	장휘국 교육감 후보 '3선 피로도' 심상찮다	경고
			2	장휘국, 자기만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4) 특정 후보자,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기고, 사설

칼럼이나 기고문, 사설에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먼저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칼럼, 기고문을 실어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민일보는 특정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언급한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경동신문, 특정 남해군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남해신문, 기고문에 특정 청주시장 예비후보의 이력 등을 우호적으로 언급한 충북일보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머니투데이는 특정 서울 강남구청장 예비후보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권고 조치를 받았으며, 남도일보는 고정 필자가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 하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쓴 기고문을 게재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칼럼이나 기고문 등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을 피력해 심의기준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었다. 아시아일보는 특정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출마해야 한다는 단정적 제목과 함께 해당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칼럼을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북일보는 전북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하는 현직 교육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다른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언급한 기고문을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보령신문은 특정 충청남도도지사 출마예정자에 대해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고문 등을 게재한 사례도 있었다. 전주일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에 힘을 실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평화당 후보를 선택한다면 적당한 견제도 되고, 감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등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을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등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경북도민일보와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한 경북신문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 조치했다.

담양곡성타임스와 담양뉴스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해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정 후보자,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기고, 사설 게재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3	전주일보	2월 22일	14	지방선거의 멋진 결과를 기대하며	경고
2018지선–자심11	경북도민일보	3월 8일	19	주민 없는 지방선거	주의
2018지선–자심12	경북신문	2월 28일	19	경북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선택이 중요한 이유	주의
2018지선–자심26	남도일보	4월 5일	17	평범한 아버지의 도전	권고
2018지선–자심27	머니투데이	3월 28일	8	'34세의 젊은' 강남구청장	권고
2018지선–자심28	아시아일보	4월 2일	9	政治人 이재정은 경기도교육감 不出馬가 정답이다	경고
2018지선–자심35	경동신문	4월 6일 (586호)	6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두영택, 그는 누구인가!	경고
2018지선–자심40	보령신문	4월 11일 (1253호)	2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들	주의
2018지선–자심41	시민일보	3월 30일	3	서울 공천만큼은 안철수에게 맡겨라	경고
		4월 3일	3	안철수의 승부수, 得이냐 失이냐	
		4월 4일	3	안철수–장진영, 경선의 得과 失	
		4월 5일	3	안철수–김문수 후보단일화?	
		4월 16일	3	안철수–장진영, '아름다운 경선' 필요하다	
2018지선–자심44	전북일보	4월 20일	14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	경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53	남해신문	4월 27일 (1382호)	2	만67세 초선현역 김두일 의원의 메시지	경고
2018지선–자심54	충북일보	5월 2일	8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의 인생유전	경고
		5월 4일	9	정정순 후보의 외유내강	
2018지선–자심73	담양곡성타임스	5월 22일 (471호)	3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74	담양뉴스	5월 23일 (84호)	6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경고
2018지선–자심85	호남일보	5월 30일	15	시민과 소통하는 ‘광주나그네’	권고

⑸ 기타 공정성·형평성 위반

성명서, 기자회견문, 출마의 변 전문 게재

뉴스경남은 지역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 진주시장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해당 후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싣는 등 우호적인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정 경기 여주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그대로 게재한 선경일보, 특정 함양군수 예비후보자의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함양신문, 특정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대구경북일보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산경일보는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 대변인이 상대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해 발표한 논평을 그대로 기사화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일간경북신문은 특정 경북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100대 공약 내용을 후보자가 발표한 보도자료 그대로 전면에 부각 보도해 경고 조치했다.

합천신문은 특정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의 출마입장문 전문을 게재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후보자별 상반된 평가 게재

제주신문은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경력과 평가를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책임감 없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만을 보도해 경고 조치했다. 또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예단하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 조치했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및 공천자 명단만 게재

경북매일신문은 경상북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예측하면서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자 명단만을 게재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특정 후보자의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

경기매일은 특정 경기 광주시장 후보자의 홍보물을, 문화매일은 특정 경기 광명시의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그대로 게재해 경고 조치했다. 경북 청송군의원 후보자 2명의 홍보물을 게재한 청송영양신문, 특정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의 기호와 사진, 주요 공약이 담긴 홍보 이미지를 게재한 산경일보는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역술인의 우호적인 인물평 게재

시민일보는 특정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역술인의 우호적인 인물평을 게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뷰 후보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만 배제

서울신문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입장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인터뷰 후보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만 배제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후보자 TV 토론회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 발언만을 소개

대전투데이는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TV 토론회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발언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1면에 부각 보도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5건이었다. 경북도민일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구·경북지역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약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칼럼을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일요신문은 역술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권의 70%와 호남·충청·경북·경남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는 등의 판세분석 기사를 게재해 경고 조치했다.

충청일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일부 군민들의 의견만을 근거로 특정 증평군수 입후보예정자에게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일요서울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정당별 광역단체장 당선자 수를 예단하는 제목을 게재하고, 기사에도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남매일은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관련 의혹 및 수사 진행상황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정적 제목을 사용해 주의 조치했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8지선–자심4	경북도민일보	2월 26일	19	바른미래당 다음달 일낸다	경고
2018지선–자심5	일요서울	2월 12일 (1241호)	2~3	[2018 설특집] 2018 광역단체장 17개 시도 판세, 민주12 한국3 민평1 무1	주의
2018지선–자심6	일요신문	2월 18일 (1344호)	10~11	"지방선거 PK서도 여당 승리 보인다"	경고
2018지선–자심19	충청일보	3월 7일	11	홍성열 증평군수의 고민	경고
2018지선–자심60	경남매일	5월 10일	1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	주의

다. 광고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등에 대한 상업광고를 게재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4건이었다. 이 중 3건은 의견광고, 1건은 상업광고였다.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는 충청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특정 단체의 입장 및 해당 단체가 특정 예비후보자를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해 주의 조치했다.

고령신문은 상업광고 게재 금지기간 내에 후보자가 집필한 서적 관련 광고를 게재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34	고령신문	3월 19일 (1080호)	1	후보자 저술(가야국의 중심, 고령) 광고	경고
2018지선–자심50	동양일보	4월 26일	1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제하 의견광고	주의
2018지선–자심51	중부매일	4월 26일	1	〃	주의
2018지선–자심52	충북일보	4월 26일	1	〃	주의

라. 후보자 기고 제한 위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 제재 조치가 내려진 안건은 10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칼럼 등의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반적 사안인 경우에는 권고,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경고 조치했다.

후보자 기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23	제주매일	3월 23일	14	“다시, 마을 그리고 돌봄을 말하자”	주의
2018지선–자심24	홍성신문	3월 19일 (1591호)	21	괴물들이 사는 나라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냉정히 평가해야	주의
2018지선–자심30	경기일보	3월 27일	23	경기도 4.0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주의
2018지선–자심31	경북일일신문	4월 2일	11	“격이 다른 교육감 후보, 대한민국 보수 교육의 품격”	경고
2018지선–자심32	국민일보	3월 27일	26	미세먼지 대책 패러다임 바꿔야	주의
2018지선–자심33	전남일보	3월 28일	19	지방분권개헌 국회가 답할 차례	주의
2018지선–자심42	전남매일	4월 12일	19	청년 구직 포기자 제로화 대안 필요	주의
2018지선–자심47	경기매일	4월 23일	8	월요편지	주의
2018지선–자심48	경인매일	4월 20일	4	선거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주의
2018지선–자심49	정읍시사	4월 16일	7	연변을 다녀와서	권고

마.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

여론조사보도 관련 심의기준 사례는 4건으로 모두 오차범위 이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였다.

경북연합일보는 경북도지사 선거 관련 9개 여론조사 중 3개 여론조사의 출처만을 밝히고, 자유한국당 내 후보 적합도만을 조사한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특정 후보자가 모든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보도하여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안일보는 1, 2위 격차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인 정당별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제목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도지사후보 적합도 1위'라고 언급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서천신문은 서천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일부 결과는 오차범위 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목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가 1위라고 보도해 주의 조치했다.

홍주신문은 충남 홍성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특정 후보자가 '선두'라고 언급하고, 후보 지지도를 나타낸 그래프 상에 후보자간 차이를 부정확하게 표시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사례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정
2018지선–자심7	경북연합일보	2월 19일	2	'여론 1위' 이철우, 도지사 선거 1강 독주 체제	주의
2018지선–자심8	경안일보	2월 14일	1	김광림 도지사후보 적합도 1위	주의
2018지선–자심62	서천신문	4월 27일 (1198호)	3	노박래후보 여론조사 '1위'	주의
2018지선–자심77	홍주신문	5월 31일 (538호)	1	군수 후보 지지도, 최선경 후보 38.6% '선두' 김석환 후보 37.4%, 채현병 후보 12.2% 순	주의

2. 결정유형별 분석

가. 경고결정문 게재

심의위원회는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한 경북일일신문의 7개 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했다. 경북일일신문은 특정 경주시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시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면서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 등을 강조하며 우호적으로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해 정정·반론보도문 외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인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앞서 경북일일신문은 위의 경주시장 후보자 처가의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이미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보도를 반복해 제재 조치가 상향되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78	경북일일신문	5월 24일	1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공정성/형평성
		5월 25일	1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와(?)	
		5월 28일	1	해오름 동맹 포항.경주 시장 후보 '떳떳한 畜 누구(?)	
		5월 29일	1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6월 1일	1	자유 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 시작	
		6월 1일	1	도전 개척정신 미래 발전 희망 쏘다	
		6월 4일	1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의심(?)	

나. 주의사실 게재

자체심의 안건 중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3건이었다. 위반내용은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담양뉴스, 한남일보)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경북일일신문)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였다. 심의위원회는 기사의 분량, 게재 지면, 사진 등 그래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기사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각 기사의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13	담양뉴스	2월 14일 (72호)	1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 최 군수, 6·13지방선거 '출마'	공정성/형평성
		2월 28일 (73호)	4~5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3월 7일 (74호)	1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2018지선–자심61	경북일일신문	4월 30일	1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공정성/형평성
		5월 2일	1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5월 8일	1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	
		5월 11일	1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2018지선–자심72	한남일보	5월 2일	1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공정성/형평성
		5월 11일	1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5월 14일	1	김태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UP 7대 공약 발표	
		5월 16일	1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5월 23일	1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공약	
		5월 25일	1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5월 28일	1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다. 경 고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안건 중 38건(41.8%)의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22건, 지역주간지 14건으로 지역신문이 대부분이었고, 중앙일간지와 종합주간지는 각 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33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3건, 광고 제한 규정 위반 및 기고문 게재 금지 위반이 각 1건이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3	전주일보	2월 22일	14	지방선거의 멋진 결과를 기대하며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4	도민일보	3월 5일	18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5	도민일보	3월 7일	20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6	선경일보	3월 5일	12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1	뉴스경남	3월 19일	5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감시와 미행…동정론 확산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5	거창중앙신문	3월 22일 (614호)	9	김석태 거창군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8	아시아일보	4월 2일	9	政治人 이재정은 경기도교육감 不出馬가 정답이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9	일간경북신문	4월 2일	6	이철우 의원, 신바람 경북 100대 공약 발표 “준비된 현장도지사 면모로 정면승부”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35	경동신문	4월 6일 (586호)	6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두영택, 그는 누구인가!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37	경상매일신문	3월 26일	18	新 성장산업 육성으로 포항 미래 연다	공정성/형평성
		4월 5일	18	도시재생 미래 100년 이끌 ‘포항 건설’	
		4월 10일	1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포항 조성 시민건강 보호 앞장	
2018지선–자심41	시민일보	3월 30일	3	서울 공천만큼은 안철수에게 맡겨라	공정성/형평성
		4월 3일	3	안철수의 승부수, 得이냐 失이냐	
		4월 4일	3	안철수–장진영, 경선의 得과 失	
		4월 5일	3	안철수–김문수 후보단일화?	
		4월 16일	3	안철수–장진영, ‘아름다운 경선’ 필요하다	
2018지선–자심44	전북일보	4월 20일	14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	공정성/형평성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45	제주신문	4월 23일	1	원희룡 바람 "미워도 다시 한 번"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46	함양신문	4월 16일	3	서춘수 전 밀양시 부시장 군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 가져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당월 300여명 동시 탈당의사 밝혀...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53	남해신문	4월 27일	2	만67세 초선현역 김두일 의원의 메시지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54	충북일보	5월 2일	8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의 인생유전	공정성/형평성
		5월 4일	9	정정순 후보의 외유내강	
2018지선–자심56	대구경북일보	5월 11일	11	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성명발표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57	도민일보	5월 4일	20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을 만나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65	조선일보	4월 26일	E02	"문화도시로 대변신... 시민들 이제 의정부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67	산경일보	5월 14일	3	3각 뇌물의혹 드라마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68	경기매일	5월 23일	4	홍승표 광주시장 후보 "수도권 스포츠 메카 조성"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69	경북일일신문	5월 21일	1	만학도의 꿈, 준비된 지역 큰 정치 일꾼으로…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73	담양곡성타임스	5월 22일 (471호)	3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74	담양뉴스	5월 23일 (84호)	6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75	선경일보	5월 25일	5	이충우 여주시장후보 지지선언문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81	상산신문	5월 24일 (132호)	9	신순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려 기초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감동 현장 신순화의 애절한 인사말 신순화 장남 격려사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82	순창신문	5월 30일 (877호)	9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공정성/형평성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83	시민의 소리	5월 28일 (883호)	1	장휘국 교육감 후보 '3선 피로도' 심상찮다	공정성/ 형평성
			2	장휘국, 자기만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2018지선–자심87	담양곡성 타임스	5월 29일 (472호)	5	정당정치가 필요한 이유	공정성/ 형평성
2018지선–자심88	담양군민 신문	5월 20일 (396호)	5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공정성/ 형평성
2018지선–자심89	문화매일	6월 11일	4	"지하철 유치 광명시민이 이깁니다"	공정성/ 형평성
2018지선–자심90	시민의소리	6월 4일 (884호)	3	이용섭 투트랙 선거운동 호평	공정성/ 형평성
2018지선–자심91	열린순창	5월 24일 (394호)	22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회고	공정성/ 형평성
208지선–자심4	경북도민 일보	2월 26일	19	바른미래당 다음달 일낸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2018지선–자심6	일요신문	2월 18일 (1344호)	10~11	"지방선거 PK서도 여당 승리 보인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2018지선–자심19	충청일보	3월 7일	11	홍성열 증평군수의 고민	객관성 및 사실보도
2018지선–자심31	경북일일 신문	4월 2일	11	"격이 다른 교육감 후보, 대한민국 보수 교육의 품격"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34	고령신문	3월 19일	1	후보자 저술(가야국의 중심, 고령) 광고	상업광고 게재

라. 주 의

주의 결정은 39건(42.9%)이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 28건, 지역주간지 9건, 중앙일간지 및 종합주간지 각 1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2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2건, 후보자 기고문 게재 금지 조항 위반 8건, 의견광고 게재 금지 조항 위반 3건, 여론조사보도 관련 기준 위반 4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결정을 하였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1	내외일보	2월 13일	6	[기고문] 광명시의회 7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	내외일보	2월 21일	16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새로운 광진구의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9	경기신문	3월 9일	10	"8년간 행정력 성공은 34만 시민·공직자들 덕분"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0	경도신문	3월 6일	3	"변화와 혁신, 잘사는 안성 설계"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1	경북도민일보	3월 8일	19	주민 없는 지방선거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2	경북신문	2월 28일	19	경북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선택이 중요한 이유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7	안산정론신문	2월 28일 (1009호)	6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18	전북타임스	3월 6일	16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에게 주목"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2	뉴스제주	3월 7일 (100호)	5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쟁력, 김우남 보단 문대림	공정성/형평성
			7~8	문대림 예비후보 "제대로 제주 만들겠다" 문 예비후보 "3대 무상복지 반드시 실현"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 성 논란에 '일침'	
2018지선–자심36	경상매일신문	4월 3일	18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치 실천 목표"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38	경인종합일보	4월 16일	3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39	아시아일보	4월 18일	16	신 성장·새 지평 … 스마트(S.M.A.R.T–Hub) 양주시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40	보령신문	4월 11일 (1253호)	2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43	경인종합일보	4월 23일	16	"수원 시민의 정부 '4가지 복지 시민권' 강화 할 것"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58	도민일보	5월 9일	20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63	김해뉴스	4월 25일 (370호)	3	"도지사 되면 김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추진"	공정성/형평성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66	함안뉴스	4월 30일 (220호)	12~13	함안출신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인터뷰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71	시민일보	5월 23일	3	새로운 도전은 무지개빛 희망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79	대전투데이	6월 1일	1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 TV토론회로 지지율 상승하나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80	산경일보	5월 30일	4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 주요 공약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84	청송영양신문	5월 30일 (112호)	8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군의원 후보 '심민종'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무소속 군의원 후보 '이광호'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86	제주신문	5월 31일	1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당선 굳히기 돌입 원희룡 후보 당선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5	일요서울	2월 12일 (1241호)	2~3	[2018 설특집] 2018 광역단체장 17개 시도 판세, 민주12 한국3 민평1 무1	객관성 및 사실보도
2018지선–자심60	경남매일	5월 10일	1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2018지선–자심23	제주매일	3월 23일	14	"다시, 마을 그리고 돌봄을 말하자"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24	홍성신문	3월 19일	21	괴물들이 사는 나라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냉정히 평가해야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30	경기일보	3월 27일	23	경기도 4.0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32	국민일보	3월 27일	26	미세먼지 대책 패러다임 바꿔야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33	전남일보	3월 28일	19	지방분권개헌 국회가 답할 차례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42	전남매일	4월 12일	19	청년 구직 포기자 제로화 대안 필요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47	경기매일	4월 23일	8	월요편지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48	경인매일	4월 20일	4	선거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기고문 게재
2018지선–자심50	동양일보	4월 26일	1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제하 의견광고	의견광고 게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51	중부매일	4월 26일	1	〃	의견광고 게재
2018지선–자심52	충북일보	4월 26일	1	〃	의견광고 게재
2018지선–자심7	경북연합일보	2월 19일	2	'여론 1위' 이철우, 도지사 선거 1강 독주 체제	여론조사 보도
2018지선–자심8	경안일보	2월 14일	1	김광림 도지사후보 적합도 1위	여론조사 보도
2018지선–자심62	서천신문	4월 27일 (1198호)	3	노박래후보 여론조사 '1위'	여론조사 보도
2018지선–자심77	홍주신문	5월 30일	14	군수 후보 지지도, 최선경 후보 38.6% '선두'김석환 후보 37.4%, 채현병 후보 12.2% 순	여론조사 보도

마. 권 고

자체심의 의결 안건 중 권고 결정은 10건(11.0%)이었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중앙일간지 2건, 지역일간지 3건, 지역주간지 5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9건, 기고문 게재 금지 규정 위반이 1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결정을 하였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20	강릉신문	3월 14일 (1157호)	3	6·13 지방선거 강릉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심재종 출마의 변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6	남도일보	4월 5일	17	평범한 아버지의 도전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27	머니투데이	3월 28일	8	'34세의 젊은' 강남구청장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55	경북매일	5월 3일	4	한국당, 광역6명중 3~4석 차지 전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	공정성/형평성
		5월 4일	5	한국당 6·13 地選 공천자 명단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2018지선–자심59	합천신문	4월 19일 (1123호)	2	김윤철 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원에 재도전하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64	남해시대	5월 10일 (597호)	21	남해인의 긍지를 안고 강남 한 복판에 출사표 던지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70	북부신문	5월 2일 (969호)	1	이동진, “책임정치의 본모습 보여주겠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76	서울신문	5월 30일	4	“쇠락한 도심 ‘변화’해야…영등포역 고가부터 철거” 채현일 민주당 후보 “43년 토박이…도시재생 사업·교육환경 개선할 것” 김춘수 한국당 후보 “3번째 도전…동네별 랜드마크로 새로운 도약” 양창호 바른미래당 후보 “구민이 저를 불러내…구청장 3選땐 민주당 복당” 조길형 무소속 후보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85	호남일보	5월 30일	15	시민과 소통하는 ‘광주나그네’	공정성/형평성
2018지선–자심49	정읍시사	4월 16일	7	연변을 다녀와서	기고문 게재

3. 매체유형별 분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중앙일간지 28개, 지역일간지 128개, 기타일간지 5개, 종합주간지 42개, 월간지 19개, 뉴스통신 10개, 지역주·월간지 237개 등 총 469개 매체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4개, 지역일간지 39개, 종합주간지 2개, 지역주간지 26개 등 총 71개 매체가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건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16개 매체였으며, 경북일일신문, 도민일보 2개 매체에 대해서는 각각 4건의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원회는 4개 중앙일간지에 대해 경고 1건, 주의 1건, 권고 2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 3건, 후보자 기고 게재 금지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지는 39개 매체가 제재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41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 3건, 광고제한 위반이 3건, 기고문 게재 금지 조항 위반 7건,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2건이었다. 결정유형별로는 경고결정문 게재 1건, 주의사실 게재 2건, 경고 22건, 주의 28건, 권고 3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 중에서는 2개 매체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2개 언론사 모두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고, 결정 내용은 경고 1건, 주의 1건이었다.

지역주간지는 26개 매체가 제재 결정을 받았는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이 24건, 광고 제한 기준 위반 1건, 후보자 기고 제한 및 여론조사 보도 관련 기준 위반이 각 2건이었다. 결정유형별로는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14건, 주의 9건, 권고 5건이었다.

자체심의 결과, 월간지 및 뉴스통신의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 결정은 없었다.

매체별 위반현황(자체심의)

구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일간지	국민일보	1				1					1	
	머니투데이	1	1									1
	서울신문	1	1									1
	조선일보	1	1							1		
	소계	4	3			1				1	1	2
지역일간지	경기매일	2	1			1				1	1	
	경기신문	1	1								1	
	경기일보	1				1					1	
	경남매일	1		1							1	
	경도신문	1	1								1	
	경북도민일보	2	1	1						1	1	
	경북매일	1	1									1
	경북신문	1	1								1	
	경북연합일보	1					1				1	
	경북일일신문	4	3			1		1	1	2		
	경상매일신문	2	2							1	1	
	경안일보	1					1				1	
	경인매일	1				1					1	
	경인종합일보	2	2								2	
	남도일보	1	1									1
	내외일보	2	2								2	
	뉴스경남	1	1							1		
	대구경북일보	1	1							1		
	대전투데이	1	1								1	
	도민일보	4	4							3	1	
	동양일보	1			1						1	
	문화매일	1	1							1		
	산경일보	2	2							1	1	
	선경일보	2	2							2		
	시민일보	2	2							1	1	

구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역일간지	아시아일보	2	2							1	1	
	일간경북신문	1	1							1		
	전남매일	1				1					1	
	전남일보	1				1					1	
	전북일보	1	1							1		
	전북타임스	1	1								1	
	전주일보	1	1							1		
	제주매일	1				1					1	
	제주신문	2	2							1	1	
	중부매일	1			1						1	
	충북일보	2	1		1					1	1	
	충청일보	1		1						1		
	한남일보	1	1						1			
	호남일보	1	1									1
	소계	56	41	3	3	7	2	1	2	22	28	3
종합주간지	일요서울	1		1							1	
	일요신문	1		1						1		
	소계	1		1						1		
지역주간지	강릉신문	1	1									1
	거창중앙신문	1	1							1		
	경동신문	1	1							1		
	고령신문	1			1					1		
	김해뉴스	1	1								1	
	남해시대	1	1									1
	남해신문	1	1							1		
	뉴스제주	1	1								1	
	담양곡성 타임스	2	2							2		
	담양군민신문	1	1							1		
	담양뉴스	2	2						1	1		
	보령신문	1	1								1	
	북부신문	1	1									1
	상산신문	1	1							1		

구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역주간지	서천신문	1					1				1	
	순창신문	1	1							1		
	시민의소리	2	2							2		
	안산정론신문	1	1								1	
	열린순창	1	1							1		
	정읍시사	1				1						1
	청송영양신문	1	1								1	
	함안뉴스	1	1								1	
	함양신문	1	1							1		
	합천신문	1	1									1
	홍성신문	1				1					1	
	홍주신문	1					1				1	
	소계	29	24		1	2	2		1	14	9	5
총계		91	68	5	4	10	4	1	3	38	39	10
(%)		(100)	(74.7)	(5.5)	(4.4)	(11.0)	(4.4)	(1.1)	(3.3)	(41.8)	(42.9)	(11.0)

Ⅲ.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12건이었다. 심의결과 반론보도문 게재 2건,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3건, 기각 4건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2건은 시정요구인의 취하로 종결되었다. 대상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7건, 뉴스통신 1건이었다. 한편,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진 2건은 피시정요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1. 반론보도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린 사례는 2건이었다.

중부일보는 경기 가평군수 선거 출마예정인 시정요구인이 제보자 B씨 및 2013년 7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A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으며, 시정요구인이 B씨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금전적 도움을 부탁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2013년 술자리를 가졌던 시점은 A씨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로 해당 술자리와 이사장 임명은 관계가 없으며, 시정요구인이 제보자 B씨에게 성접대를 받거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및 피시정요구인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피시정요구인 중부일보는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반론을 게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심의위원회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사의 크기, 게재 지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하고, 선거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거창군민신문은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예정인 시정요구인이 2017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직 시 거창군 관내 체육단체가 전례 없는 직접 지원을 받는 등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이 증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자신이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5, 2016년에도 거창군 내 일부 체육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 금액이 타 시, 군에 비해 매우 적어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기사에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1면에 게재되어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2. 주의사실 게재

경남매일은 5월 28일자 및 5월 30일자 1면에 시정요구인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후보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명의로 등기됐다가 국가소유로 바뀐 토지를 상속받기 위해 사기를 벌인 일당과 연루된 공무원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6월 7일자 1면에 시정요구인의 병역 비리 의혹 및 외삼촌의 월북사건 등을 보도하였다. 또 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자 1면에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가 시정요구인보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태호가 경수 잡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30여년이 지난 부친 관련 사안 등을 보도하고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 중 유일하게 김태호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된 결과만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태호가 경수 잡았다'라고 언급하는 등 편파적인 보도를 해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며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 부친의 국유지사기단 연루 및 병역 관련 사항, 외숙의 월북 등에 관한 의혹 보도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이 발표한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하여 보도한 것은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며 이를 부각하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심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했다.

3. 경고

심의위원회는 12건의 시정요구 안건 중 3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시사문경은 경북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발행인의 칼럼과 경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를 1면에 함께 게재했다.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경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는 제목에 '대성황'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호적으로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 관련 칼럼은 '전직 시장의 몽니를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적인 내용만을 담아 공정성, 형평성 등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발행인의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칼럼을 게재하면서, 동일 지면에 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를 게재해 유권자들이 두 후보자에 대해 긍·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새목포일보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시정요구인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시정요구인의 완도군수 재임 시 지역경제 관련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 및 시정요구인의 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불리한 내용의 기사만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며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비판보도임을 고려하더라도 기사의 분량, 게재 지면, 게재 횟수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만을 집중 보도해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경고 조치했다.

새전북신문은 바른미래당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시정요구인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금권선거'로 인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고문을 게재해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위배하였다며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경쟁후보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선거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4. 기각

후보자가 시정요구를 신청한 안건 중 시정요구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례는 4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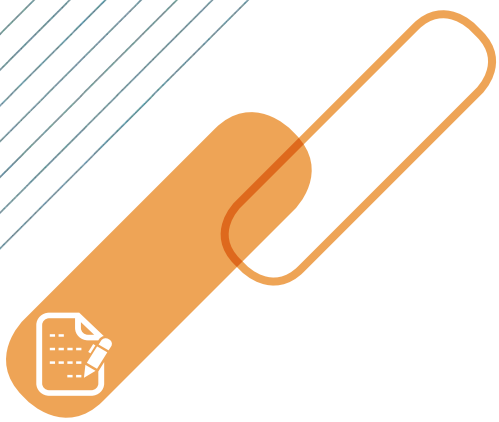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시정요구인은 문경저널이 경쟁 후보자인 현직 문경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다수 게재해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문경저널의 보도가 여타 언론사의 기사 내용과 비교해 특별히 편향되었다거나 특정 후보자를 현저히 부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 하였다.

전라북도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시정요구인은 타 뉴스통신사에 비해 연합뉴스가 시정요구인에 대한 기사를 적게 보도했으며, 시정요구인이 먼저 TV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후보자가 TV 토론회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을 보도해 해당 후보가 먼저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다며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형평성 여부는 타 언론사와의 비교가 아닌 해당 언론사의 기사량, 게재지면, 기사배열 등이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연합뉴스의 보도는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토론회 제안 관련 기사는 타 후보자가 토론회 주최기관을 전북기자협회로 하자고 역제안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이 부당하게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괴산군수 선거 출마자인 시정요구인은 괴산타임즈가 괴산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동기와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4명의 예비후보 중 시정요구인만을 제외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였

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괴산타임즈는 시정요구 신청 직후 발행한 신문에 시정요구인을 포함한 후보자 4명의 출마 관련 입장을 게재했고,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를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 했다.

안산시장 선거 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은 안산타임스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의 주요 공약관련 내용을 1면에 보도하면서 하단에 안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렸고, 선거 2주 전부터 발행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공지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실시 알림과 함께 게재된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에 특별히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거나 해당 후보자를 부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시정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제2장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의결 현황 비교

2000년 공직선거법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래로 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재·보궐선거마다 해당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하고 있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 심의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까지 총 5차례 이루어졌다. 그동안 설치·운영되었던 제3~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1. 결정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심의유형	결정유형	제3회 지선 (2002)	제4회 지선 (2006)	제5회 지선 (2010)	제6회 지선 (2014)	제7회 지선 (2018)	계
자체심의	경고결정문 게재		6	8		1	15
	주의사실 게재					3	3
	경 고	12	30	91	23	38	194
	주 의	34	17	45	108	39	243
	권 고			16	75	10	101
	소 계	46	53	160	206	91	556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 게재	1	1	2	3		7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			2
	반론보도문 게재	1	1	4		2	8
	경고결정문 게재			4	1		5
	주의사실 게재					1	1
	경 고		2		4	3	9
	주 의	2	2		5		9
	권 고			1	2		3
	취 하	4	15		1	2	22
	기 각	2	4	4	2	4	16
	각 하			1			1
	소 계	10	25	18	18	12	83
총 계		56	78	178	224	103	639

각 지선 심의위원회의 의결건수는 제3회 지선 56건, 제4회 지선 78건, 제5회 지선 178건, 제6회 지선 224건이었다. 이번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는 10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제6회 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과문 게재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 경고결정문 게재 등 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자체심의 안건 중에서는 경고결정문 게재나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없었다.

제6회 지선 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15년 헌법재판소가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2015. 7. 30. 2013헌가8)을 하였고, 2017년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및 주의사실 게재, 경고·주의·권고 등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제8조의3제3항에 신설되었다. 이에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심의 안건 중 심의기준 위반정도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1건, 주의사실 게재 3건을 의결했다.

5차례의 지선 심의위원회 자체심의 의결건수는 총 556건으로 주의 결정이 243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194건(34.9%), 권고 101건(18.2%), 경고결정문 게재 15건(2.7%), 주의사실 게재 3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시정요구는 제3~7회 지선 선심위에 총 83건 신청되었으며, 제재결정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건, 정정보도문 게재 7건, 반론보도문 게재 8건, 경고결정문 게재 5건,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주의 각 9건 등이었다.

2.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위반유형	제3회 지선 (2002)	제4회 지선 (2006)	제5회 지선 (2010)	제6회 지선 (2014)	제7회 지선 (2018)	계
공정성 및 형평성	33	31	100	84	68	316
객관성 및 사실보도					5	5
여론조사보도	13*	11*	24	86	4	138
광고 제한		1	4		4	9
기고 제한		10	32	35	10	87
기타				1		1
총 계	46	53	160	206	91	556

* 제3회 및 제4회 지선에서 여론조사 보도 위반으로 제재 받은 사안 중 제3회 지선 2건, 제4회 지선 1건은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여론조사보도요건 기준을 위반한 것임

제3~5회 지선 심의위원회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16건(56.8%)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여론조사보도 138건(24.8%), 기고 제한 87건(15.6%), 광고 제한 9건(1.6%), 객관성 및 사실보도 5건(0.9%), 기타 1건(0.2%)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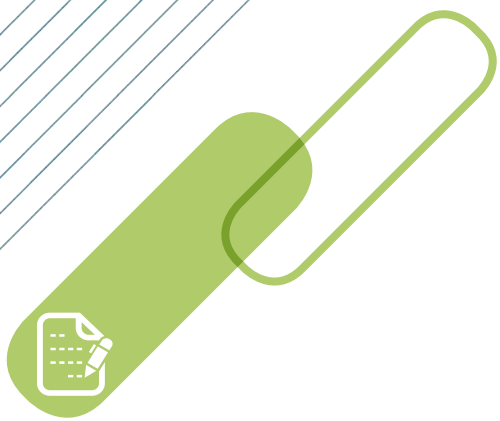
매 선거마다 현직 단체장 관련 홍보성 기사 게재, 특정 후보자 부각 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은 제3회 13건, 제4회 11건, 제5회 24건, 제6회 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여론조사보도요건 심의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면서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4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제6회 지선 심의위원회에 비해 여론조사보도요건 기준 위반 의결건수가 80건 가량 감소한 것이 전체 의결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제6회 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으나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 관련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고 과장·축소하는 등 객관성 및 사실기준 위반 사례가 5건, 후보자 저술 광고 및 부적법한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등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안이 4건 있었다.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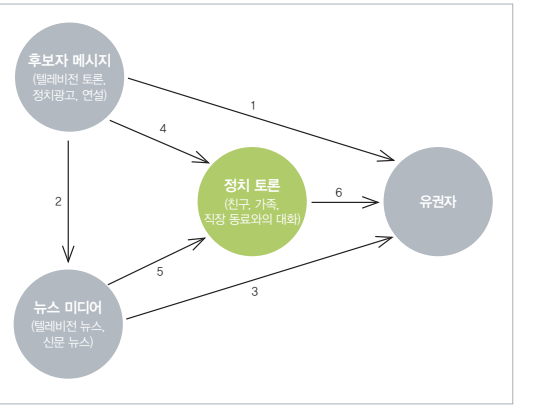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도 및 선거기사심의에 대한 평가

김춘식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 선거와 언론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가 언론으로부터 학습하는 정치 정보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McClure & Patterson, 1974), 언론은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캠페인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그림 1〉 참조)을 수행한다(Alger, 1989; Davis, 1992; Ansolabehere, Behr & Iyengar, 1993).[1] 언론의 매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들은 뉴스미디어들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정책과 이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의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민주주의 기능(democratic function)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유권자의 선거 정보 학습 과정

언론의 민주주의 기능은 언론이 공적 숙의가 작동하도록 돕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는 "공공 정책의 장점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과 토론"(Page, 1996, p. 1)으로 정의되는데 유권자들이 식견을 갖춘 상태에서 사실과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1) 〈그림 1〉은 정치적 현실과 유권자 사이에서 언론의 매개자 역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통의 유권자들은 뉴스미디어(3)와 미디어 캠페인(1)에 직접 노출되던지 혹은 언론(3)이나 정치인의 미디어 캠페인(1)을 경험한 주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를 경험한다. 종이신문 및 텔레비전 뉴스, 정치광고 혹은 후보자 간 텔레비전 토론,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선거 상황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결국 언론이 제일의 선거정보원인 셈이다.
*출처: Benoit, W. A. (2007). Communication in political campaigns. New York: Peter Lang, 23쪽에서 인용. 원 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언론학자들은 언론의 저널리즘 실천이 정치 영역에서 공적 숙의를 촉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저널리즘 학자들은 저널리즘을 "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재의 일들에 대한 정보와 논평"으로 정의하고,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것이 저널리즘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Anderson, Dardenne, & Killenberg, 1996). 이들은 저널리즘이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대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하여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는 공공 포럼(public forum)을 제공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2)]

저널리즘이 공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말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일치한다(Bennett, 2016; Iyengar, 2011; Sparrow, 1999) 예를 들어, 정치언론학자 아옌거(Iyengar, 2011)는 선거 상황에서 미디어는 정치인 및 정치세력이 집권 역량 혹은 공직 선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마당' 역할을 해야 하고, 평상시에는 주요 이슈를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해 시민들이 식견을 갖추도록 도와야 하며, 시민을 대신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파수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언론이 정치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편집실 의사결정 구조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기사 작성 방식으로 인해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정치인과 정책전문가 혹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처럼 제한된 계층만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말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Tuchman, 1972; Cook, 1998; Schudson, 2003).

2. 선거보도 관행

1) 부적절한 선거보도 관행

선거 상황에서 후보자는 토론회, 연설, 정치광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며 경쟁자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Bennett, 2016).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치뉴스 생산 과정에서 편집실의 뉴스 생산 의사결정 구조와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기사 작성 방식이 정치인의 전략적 활동을 오히려 돕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자들은 권력의 크기와 뉴스 가치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인식 하에 정치인 같은 공식 취재원에 의존하여 뉴스 거리를 찾는다. 정치지도자와

2) 대의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작동된다면, 즉 권력과 시민 간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여 민의가 왜곡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사회구조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에 노출되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토론회, 연설, 정치광고를 통해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경쟁자를 공격하며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므로 메시지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Bennett, 2016). 이런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전문 전략커뮤니케이터가 미디어의 정보 전달 및 뉴스 생산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우려한다.

후보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자들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제공하여 자기의 이익을 돕는 관점을 뉴스에 투입할 기회를 가진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뉴스는 사안과 관련 있는 다양한 관점이 뉴스에 등장할 기회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관점이 사안에 대한 해석 및 평가 측면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든다.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이 공적 숙의 과정을 왜곡시키는 셈이다.

한국언론학회는 우리나라의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관행을 여덟 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이준웅, 2002), 16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표 2〉의 모든 항목이 여전히 진행되는 지배적인 관행이라 볼 수 없다. 김춘식(2018)은 여덟 가지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질적인 편파'는 지금까지 치러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관행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는 야당보다 집권 여당에게 더 많은 지면과 시간이 할애되고 소수 정당은 보도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집권당에게 외형적으로 유리한 편파보도는 거의 사라졌다(권혁남, 2009). 그런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질적인 편파는 여전하다(이준웅, 2013). 가령, 특정 정당 소속 후보가 경쟁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한 이슈를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룸으로써 특정 이슈를 선거 쟁점으로 전화시키는 보도가 그러하다. 이는 '(2)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하기'와 마찬가지이다.

'(2)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하기'는 선거국면에서 정당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쟁 정당을 비방하면 이를 주요 뉴스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이 깊다. 언론은 선거보도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외형적인 장치를 동원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이를 반박하는 경쟁 정당의 주장을 큰따옴표를 활용해 인용하고 이를 제목으로 삼는 관행이 대표적이다(김춘식·이강형, 2008; 이준웅·양승목·김규찬·송현주, 2007). 이러한 행위는 최근 들어 특정 정파적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한국 언론의 보편적인 관행이 됐다(김춘식, 2017).

'(3) 전략적 용어를 사용하는 보도'는 선거를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기자는 선거를 게임으로 간주한다(Patterson, 1993). 따라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 승리를 위해 선택한 선거 전략과, 선거 전략이 선거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주목한다. 사건의 전개 방향 및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보도가 시의성 및 새로움이라는 기자의 관심과 조응하기 때문인지, 언론은 이에 큰 뉴스가치를 부여한다. 학자들은 언론의 이러한 관행을 '경마 저널리즘'이라고 칭한다. 경마저널리즘 관행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뉴스를 사건(events) 혹은 우발적 사건(happenings)으로 정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자들은 후보자 간 경쟁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새로이 발생한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의 언론은 정당 혹은 후보자 간 정책 차이보다는 주요 정당 후보의 발언과 행동에 주목하여 이를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으로 보도하는 관행이 있다.

'(4)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남발'은 최근의 한국 언론에서 발견되는 지배적인 형태의 부적절한 관행이다. 주로 무주체 수동태 술어('~로 알려졌다' 혹은 '~로 전해졌다')(박재영·이완수, 2007)를 사용하는데, 이는 행위자보다 객체가 더 중요한 경우,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Kessler & McDonald, 1986, p. 82; 박재영·이완수, 2007, 448쪽 재인용). 하지만 한국의 선거보도에서는 주어와 주체가 없는 문장이 많아 실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되어도 언론이 스스로 정정 또는 보도하여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선거보도 관행이다.

'(5) 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윤색하는 인용'은 기자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익명의 개인 취재원이나 불특정 다수 취재원(예: 지역 주민들은)의 입을 빌어 유권자들의 평가적 감정(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은 의견기사와 더불어 사실보도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할만하다.

나머지 세 가지 관행은 '(6) 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 '(7) 비과학적인 설명 제공', '(8)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인데, '(6) 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부정적인 관행이라 못 박을 수 없고, '(7) 비과학적인 설명 제공'은 2016년 여론조사보도준칙 제정 및 실천으로 인해 발생 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민주화가 30년 이상 진행된 현재의 시점에서 '(8)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또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표1〉 한국 언론의 부정적 선거보도 관행의 세부 내용

한국 언론의 부정적 선거보도 관행	(1) 질적인 편파법
	(2)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하기
	(3) 전략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보도
	(4)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남발
	(5) 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윤색하는 인용
	6) 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
	(7) 비과학적인 설명 제공
	(8)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2) 내용분석을 통해 본 종이신문의 선거보도 관행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의 대통령선거(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2017년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민영·채영길·김현정·유용민, 2017),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김선호·김위근, 2016; 양승찬, 2016),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백선기·류한호·최경진, 2014)에 대한 언론의 선거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을 토대로 종이신문의 선거보도 관행[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사실을 전하는 기사 즉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59.6%를 차지했고, 논평은 22.1%, 분석해설 기사는 9.4%였고 가짜뉴스검증 기사는 1.7%에 불과했다(민영 외, 2017). 언론사별로 비교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은 경향(69.9%), 한겨레(64.2%), 조선(59.2%), 동아(55.6%), 중앙(44.3%)의 순이었고, 분석해설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아(19.5%), 조선(11.1%), 중앙(9.5%), 한겨레(8.6%), 경향(0.5%)의 순이었다. 논평은 중앙(33.4%), 한겨레(21.2%), 동아(19.9%), 경향(19.5%), 조선(18.1%)의 순이었다. 진보적 논조의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그리고 보수 성향 신문들의 경우 분석해설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선거기사에서 이벤트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2년 선거에서 75.7%로 매우 높았다가 1997년에 52.7%로 줄었다. 하지만 2002년 62.1%, 2007년 72.0%, 2012년 76.2%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박재영 외, 2014). 언론들은 정치 이벤트를 주요 뉴스로 간주하지만 심층 보도가 이루어질 내용이 없어 이를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

셋째, 기사에 하나의 관점만 등장하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완전히 단일한 관점'의 기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 반면,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여타 견해가 기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복합적 관점의 기사가 현저하게 줄었다(박재영 외, 2014).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종이신문 뉴스를 분석해 보니 완전히 단일한 관점을 담은 기사의 비율이 1992년에는 21.8%였지만 2012년에는 50.2%로 2.3배 증가했다. 분석대상지별로 살펴보면 1992년과 2012년 사이에 중앙일보는 16.1%에서 34.0%로, 조선일보는 18.5%에서 55.8%로, 한겨레는 30.8%에서 60.8%로 크게 늘었다. 복합적 관점의 기사 비율의 감소는 분석대상지 모

3) 필자는 유권자들의 뉴스 소비 습관의 변화가 언론의 세 가지 부적절한 선거보도 관행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전통미디어 이용이 감소하는 반면 모바일 인터넷 뉴스 노출은 증가하는 현실이 상업언론으로 하여금 정확성이나 심층성보다 시의성있는 주제를 신속하게 보도하도록 강요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양한 취재원의 해석적 관점을 담은 심층보도는 단순 사실 보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뉴스를 생산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뉴스 유통 및 소비 환경 하에서는 좋은 뉴스가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도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5%(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8)만이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고,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이 한 자리수이며, 텔레비전 뉴스 이용률이 줄어드는 반면, 만 3세 이상 전체 국민의 90.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99.4%가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터넷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이들이 48.7%에 달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85.6%가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뉴스 제목이나 사진을 보고 뉴스를 클릭'해서 인터넷 뉴스에 노출(한국언론진흥재단, 2017)되는 현실이 언론으로 하여금 시의적인 주제를 빠르게 전달하는데 더 집착하게 만든 셈이다.

두에게서 발견된다. 1992년과 2012년 사이에 조선일보는 77.8%에서 14.3%로, 중앙일보는 77.4%에서 40.4%로, 한겨레는 53.8%에서 27.0%로 감소했다.

넷째, 선거를 갈등과 대결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기사의 비율이 높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신문 기사를 분석한 연구(백선기 외, 2014)에 의하면 '갈등과 대결'을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의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고, '이슈와 정책'(20.7%), '공명선거'(16.3%), '인간적 흥미'(14.7%)에 주목한 기사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선거를 갈등과 대결의 측면에서 조명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일간지는 지방일간지보다 인간적 흥미(25.3% v. 4.1%) 그리고 이슈와 정책(25.2% v. 16.2%)에 주목한 반면, 지역일간지는 중앙일간지보다 갈등과 대결(35.7% v. 27.3%) 그리고 공명선거(26.4% v. 6.1%)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는 정당과 후보자의 주장과 반박을 인용부호를 통해 중계하는 관행이 있다(김춘식·이강형, 2008; 이준웅 외, 2007). 스트레이트 중심의 뉴스 생산과 완전한 단일 취재원 의존 관행이 결합해 인용 저널리즘을 낳은 셈이다. 1992년 이후 2012년까지 신문의 대통령선거보도를 분석한 연구(박재영 외, 2014)는 1997년의 경우 1992년 선거에 비해 엘리트 취재원 직접 인용구가 줄었지만 이후에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가령, 엘리트 취재원의 직접 인용구 등장 빈도가 시민 취재원의 직접 인용구 등장 빈도보다 훨씬 높았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 취재원의 대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의 경우 엘리트 취재원의 의견은 기사 한 건에 4.5회 등장한 반면 일반시민의 의견은 기사 10건에 1회 등장했고, 한겨레의 경우 엘리트 취재원은 기사 한 건에 3.9회 등장했지만 시민취재원의 의견은 기사 10개에 3-4회 정도 인용됐다. 이러한 인용 저널리즘은 언론이 정치현실과 독자 간을 매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뉴스매체의 민주주의 기능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정치권의 정책 결정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Arnold, 2004).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의 관행은 언론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훼손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4)]

4) 김춘식(2018)은 부적절한 선거보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p. 18). 첫째, 사실(fact)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법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객관성을 기계적 균형성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관행을 버리고, 취재원의 발언을 '사실'로 여겨 이를 스트레이트 뉴스로 생산하는 대신 취재를 통해 취재원 발언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둘째, 기사의 토대가 되는 정보원(보도자료, 기획취재, 타언론 보도, 취재원 유형 등)을 분명히 밝히고, 기사의 본문에서 복수의 취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사안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야 하며, 무엇보다 익명 취재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김춘식, 2017). 기자와 취재원 간 신뢰관계가 돈독할 때 익명 취재원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Cronkite, 1988, p. 65)을 감안하면 기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단일 취재원에 의존해 그들의 발언을 주관적 술어로 처리하는 관행은 특정 취재원을 편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정당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출입처를 통하면 기사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의존이 지나치면 기자의 관점이 아닌 출입처 취재원의 시각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동화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비판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게 어려워진다. 언론이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 선거 상황을 전달하는데 머무르고, 완전한 단일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해 쟁점 사안을 묘사하며, 정치권의 의혹 제기나 폭로를 'A후보는 이렇게 주장했고, B후보는 이렇게 반박했다'는 보도 방식("He said, she said" reporting)(Patterson, 2013, p. 35)을 좇는다면 언론은 선거캠페인 국면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경쟁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격할 때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쟁의 당사자들을 스포츠 용어나 전쟁 용어를 사용해 보도하는 관행을 고집할 때 기자는 방관자에 머물게 되고(Ladd, 2012), 지금처럼 출입처 취재원 의존을 통한 뉴스 생산 관행에 집착한다면 언론은 정당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어 정치 극화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Patterson, 2013).

3. 선거기사심의위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 심의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법정기간[5]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운영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자체심의)하고, 후보자가 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선거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시정요구심의)한다. 아울러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정당 또는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도 결정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총 103건으로 자체심의가 91건(88.3%), 그리고 시정요구심의가 12건(11.7%)이었다(〈표 2〉 참조). 2000년 이후에 실시된 지방선거 보도 심의 건수와 비교해보면 제3·4회보다는 많았지만 제5·6회보다는 다소 적었다. 다만, 자체심의 건수와 시정요구심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5·6회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2〉 지방선거별 심의 건수 현황

[단위: 건(%)]

선거명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계
제3회 (2002년)	46(82.1)	10(17.9)	56(100.0)
제4회 (2006년)	53(67.9)	25(32.1)	78(100.0)
제5회 (2010년)	160(89.9)	18(10.1)	178(100.0)
제6회 (2014년)	206(92.0)	18(8.0)	224(100.0)
제7회 (2018년)	91(88.3)	12(11.7)	103(100.0)

*설명: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별 선거기사심의백서에서 관련 수치를 인용함. 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1~15차)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5)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 (社說·論評·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 전 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되며 신문·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과 뉴스통신의 선거보도를 심의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자체심의 현황

자체심의 대상 91건(불문, 안내문조치 제외)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보자 기고 제한'(10건, 11.0%), '객관성 및 사실보도'(5건, 5.5%)의 순이었고 '여론조사보도'와 '광고제한'은 각 4건씩(각 4.4%)이었다(〈표 3〉 참조). 이전 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선거기사심의 사례수(제3회 제외)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지나치게 높았지만,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기보다는 2016년 12월에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이 제정, 선포[6]되어 선거여론조사 보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누락한 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2014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보도요건'이 누락된 기사의 비율이 40%를 넘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심의에서는 4건으로 4.4%에 불과했고,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수 또한 68건으로 이전 선거심의사례 84건보다 적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제7회 지방선거 보도 심의에서 처음으로 '객관성 및 사실보도' 범주를 채택했다는 점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는 5건으로 5.5%였다.

〈표3〉 선거별 자체심의 위반유형(불문·안내문 제외)

[단위: 건(%)]

선거명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제한	(외부/후보자) 기고	기타	계
제3회	33(71.7)		11(23.9)	2(4.4)				46(100.0)
제4회	31(58.5)		10(18.9)	1(1.9)	1(1.9)	10(18.9)		53(100.0)
제5회	100(62.5)		24(15.0)		4(2.5)	32(20.0)		160(100.0)
제6회	84(40.8)		86(41.7)			35(17.0)	1(0.5)	206(100.0)
제7회	68(74.7)	5(5.5)	4(4.4)		4(4.4)	10(11.0)		91(100.0)

*설명: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별 선거기사심의백서에서 관련 수치를 인용함. 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1~15차)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6)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이 선거국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할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하고 2016년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5장(목적과 적용 범위,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원칙, 여론조사의 기획, 취재와 보도, 언론사의 역할)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보도 심의 기간 동안 자체심의 대상 91건을 심의한 후 확정된 결정[7]내용을 보면 '주의'(39건, 42.9%), '경고'(38건, 41.8%), '권고'(10건, 11.0%)의 순이었고, '주의사실 게재'(3건, 3.3%)와 '경고결정문 게재'(1건, 1.1%) 결정은 상대적으로 적었다.[8] 2014년 지방선거 심의보다는 결정내용의 강도가 센 편이지만 2010년 지방선거 심의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었다(〈표 4〉 참조).

자체심의에서 '게재' 결정을 받은 사례는 '경고결정문 게재' 1건과 '주의사실 게재' 3건 등 모두 4건이었다. 자체심의에서 제재수준이 가장 높은 결정은 '경고결정문 게재'이다. 이번 자체심의에서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받은 언론사는 경북에 소재한 지역일간지로 발행부수가 수 천부 정도이다. 이 신문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와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한 반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제기한 의혹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신문 1면에서 여러 차례 다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와 제5조(형평성)를 위반했다.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보도할 수는 있으나,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신문의 1면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유권자의

〈표4〉 선거별 자체심의: 결정내용(불문·안내문 제외)

[단위: 건(%)]

선거명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계
제3회			12(26.1)	34(73.9)		46(100.0)
제4회	6(11.3)		30(56.6)	17(32.1)		53(100.0)
제5회	8(5.1)		91(56.9)	45(28.1)	16(10.0)	160(100.0)
제6회			23(11.2)	108(52.4)	75(36.4)	206(100.0)
제7회	1(1.1)	3(3.3)	38(41.8)	39(42.9)	10(11.0)	91(100.0)

*설명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별 선거기사심의백서에서 관련 수치를 인용함. 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1~15차)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7)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는 선거기사 공정성 여부 심의 및 제재 결정(자체심의)과 시정요구사항 심의 및 제재 결정(시정요구심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항은 결정 유형을 정정보도문 게재(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론보도문 게재(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결정문 게재(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실 게재(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일곱 가지로 정하고 있다.

8)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임에 분명하다.

자체심의에서 '주의사실 게재' 판정을 받은 사례는 3건인데,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았고 기사의 양과 보도 횟수 차원에서도 매우 편파적이었다. 가령,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인 현직 군수의 성과와 출마입장 등을 수차례에 걸쳐 크게 보도하고(2018지선-자심13),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1면에 보도하면서 사실관계 검증 없이 기자 개인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2018지선-자심61).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관련 내용을 사진 및 그래픽과 함께 1면에 반복하여 부각시키면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 관련 내용은 2,3면에 적은 양으로 보도하기도 했다(2018지선-자심72). 이러한 보도들은 정당이나 입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와 제5조(형평성)(2018지선-자심13, 2018지선-자심72)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2018지선-자심61)를 위반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2) 시정요구심의 현황

후보자가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진행된 시정요구심의 결정 내용은 〈표 5〉와 같다. 총 12건으로 이전 선거에 비해 심의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결정내용의 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기각'이 4건이었고 '경고'가 3건, '반론보도문 게재'와 '취하'가 각 2건씩이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주의사실 게재'였다.

〈표5〉 선거별 시정요구심의 결정내용(불문·안내문 제외)

[단위: 건(%)]

선거명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결정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각하
제3회	1(10.0)	1(10.0)					2(20.0)		4(40.0)	2(20.0)	
제4회	1(4.0)	1(4.0)				2(8.0)	2(8.0)		15(60.0)	4(16.0)	
제5회	2(11.1)	4(22.2)	2(11.1)	4(22.2)				1(5.6)		4(22.2)	1(5.6)
제6회	3(16.7)			1(5.6)		4(22.2)	5(27.8)	2(11.1)	1(5.6)	2(11.1)	
제7회		2(16.7)			1(8.3)	3(25.0)			2(16.7)	4(33.3)	

*설명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별 선거기사심의백서에서 관련 수치를 인용함. 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1~15차)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시정요구심의에서 '게재' 결정을 받은 사례는 '반론보도문 게재' 2건과 '주의사실 게재' 1건 등 모두 3건으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진 두 건(2018지선-시심4, 2018지선-시심6) 모두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와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시정요구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

시정요구심의 대상에서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은 언론사는 한 곳이었다(2018지선-시심12). 이 언론사는 선거 막바지에 수 십 년 전에 있었던 직계존속과 친척 관련 사건을 1면에 반복적으로 보도했는데, 기사에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평가적 어휘와 술어(예: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등)를 반복하여 사용했다. 뿐만아니라 다수의 여론조사가 의혹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승리한다는 결과로 나왔음에도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특정 한 곳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특정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잘못된 보도였다.

3) 심의 결정 대상 매체의 특징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대상 매체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표 6〉과 〈표 7〉 참조).

먼저, 자체심의 대상의 경우 지방일간지(61.5%)의 비율이 높았고, 시정요구심의 대상으로는 지역주간지(58.3%)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자체심의와 시정요구심의에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심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시정요구심의 대상에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고, 자체심의의 경우에도 4건(4.4%)만 심의대상에 회부되어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적게는 2.8배(제5회), 많게는 4.5배(제3회) 적었다. 셋째, 지역주간지가 심의대상으로 회부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

〈표6〉 자체심의 대상 매체 현황 [단위: 건(%)]

선거명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계
제3회	9(19.6)	27(58.7)	1(2.2)	7(15.2)	2(4.3)		46(100.0)
제4회	7(13.2)	33(62.3)		12(22.6)	1(1.9)		53(100.0)
제5회	20(12.5)	92(57.5)	16(10.0)	24(15.0)	7(4.4)	1(0.6)	160(100.0)
제6회	26(12.6)	128(62.1)	7(3.4)	38(18.4)	5(2.4)	2(1.0)	206(100.0)
제7회	4(4.4)	56(61.5)	2(2.2)	29(31.9)			91(100.0)

*설명: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별 선거기사심의백서에서 관련 수치를 인용함. 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1~15차)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았다. 자체심의 대상에서 지역주간지(31.9%)는 지방일간지(61.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시정요구심의의 경우 대상 매체의 약 60%를 차지해 지방일간지(25.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표7〉 시정요구심의 대상 매체 현황 [단위: 건(%)]

선거명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계
제3회	1(10.0))	4(40.0)		5(50.0)			10(100.0)
제4회	5(20.0)	10(40.0)		10(40.0)			25(100.0)
제5회	1(5.6)	7(38.9)		8(44.4)	1(5.6)	1(5.6)	18(100.0)
제6회	2(11.1)	6(33.3)		8(44.4)		2(11.1)	18(100.0)
제7회		3(25.0)	1(8.3)	7(58.3)		1(8.3)	12(100.0)

*설명: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별 선거기사심의백서에서 관련 수치를 인용함. 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1~15차)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의 선거기사심의방식은 인쇄 뉴스매체의 선거보도가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현행 심의방식은 심의에 적용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해야 한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심의기본원칙)는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을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심의기본원칙 위반여부를 심의할 때 다섯 가지 사항들('①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②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③ 선거기사의 게재 시기', '④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⑤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①, ②, ⑤번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판정이 가능하다. 가령, '①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은 과학적인 내용분석 연구를 통한 빈도 분석과 보도의 편파성을 평가하는 질적 분석을 거치지 않고서는 판단이 어렵고, '⑤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의 경우 기사 생산에 개입한 기자와 데스크, 편집책임자의 솔직한 진술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위원 개인의 '객관적인' 추론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또한 제3조 2호에 정한 '영향력'은 외적인 요소에 따른 평가방식으로 위원이 지각한 영향력이 실제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8의3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위원회 추천 방식이 위원들의 완전히 독립된 심의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편향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 심의위원이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법률가 4인, 사회과학 교수 2인, 선관위 공무원 1인, 언론학자 1인, 전직언론인 1인 등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저널리즘 관련자는 2명에 불과하다. 위원 간에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는가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이 추천하는 법률가와 소수의 저널리즘 관련자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탈정파성을 겸비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넷째,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현행 심의방식이 종이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및 통신의 부적절한 선거뉴스 생산 관행의 개선을 이끌어 낸다고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서울 소재의 주요 신문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적이고 선거와 관련된 여론형성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선거보도 심의 결과를 보면 주요 신문들이 생산한 뉴스들이 심의에 회부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거기사심사위원회로 대표되는 제도적 기관이 뉴스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여야만 언론이 부적절한 선거뉴스 생산관행을 개선하려 노력할 터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 언론계에 만연한 부적절한 선거보도 관행과 위원회의 선거보도 심의 방식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행 심의체계는 기사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편들거나 비난하는 지나치게 편파적인 뉴스만을 골라 제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교묘한 장치들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를 편향되게 묘사하는 질적 편파 보도를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선거기사 심의 위반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의의 기본원칙(공평성과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다섯 가지 사항('①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②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③ 선거기사의 게재 시기', '④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⑤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심의기준을 '여론조사보도', '인터뷰 및 인용기사', '사진게재', '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현황에 정리된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

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조사 보도' 다섯 가지이다. 이 가운데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는 심의기준이 아닌 기본 원칙에 해당된다. 기본원칙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고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가를 평가하는 잣대이므로 이들이 동일한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오히려 '인터뷰 및 인용기사'를 적용해 심의한 결과를 세분해서 위반유형으로 분류하는 게 바람직하다.[9)]

둘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매체와 인터넷매체를 구분하여 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종이신문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정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언론들은 여론형성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이신문 뉴스를 받아쓰거나 일부만 삭제 혹은 추가해 기사를 만들고 이를 포털 같은 유통 플랫폼에 공급한다. 이와 같은 뉴스 생산 관행과 인터넷뉴스 유통 현실을 감안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현재보다 더 정교한 위반유형 항목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 제도 및 절차에 관한 교육과 바람직한 선거저널리즘 교육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 제도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그리고 언론진흥재단과 언론학계가 추천한 선거보도 전문가들이 선거 저널리즘 교육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필자의 진단 및 제언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부적절한 선거보도 관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이 개선되어야만 제대로 된 선거기사 심의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언론은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을 단순히 매개하는 대신 취재원의 주장과 행동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설명하는 민주주의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기사 심의 방식은 현실에 만연된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관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만 한다.

9) 가령,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정성 위반유형을 보도량 불균형, 칼럼불균형, 특정후보지지, 특정후보폄훼, 홍보자료전재, 기타의 여섯 가지로, 그리고 객관성 위반유형을 과장, 미확인보도, 선거결과예단, 왜곡, 제목과장, 특정후보비방, 허위사실보도, 기타의 여덟 가지로 세분화해 각 위반유형별 위반 건수를 정리해 발표한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018).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위반유형을 세분화하면 지금과 같은 지방일간지와 지역일간지 편중된 제재를 넘어 영향력이 큰 중앙일간지의 선거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참 / 고 / 문 / 헌

권혁남 (2009). 텔레비전의 15대, 16대 대통령선거 보도 비교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12호, 45–91쪽.

김춘식 (2017).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 보도 관행과 방송의 민주주의 기능의 퇴행: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폭로'에 관한 보도분석(1992년–2012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5권 3호, 79–157쪽.

김춘식 (2018).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 및 심의제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 심의 및 평가를 중심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한국언론학회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 및 심의제도 세미나〉 발제문.

김춘식·이강형 (2008). 언론의 선거보도에 나타는 캠페인 관련 인용구: 2007년 대통령선거에 관한 신문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377–400쪽.

박재영·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韓美)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제51권 6호, 439–468쪽.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 보도의 기사 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1992–2012년 국내 주요 신문의 경우. 〈방송문화연구〉, 제26권 2호, 33–66쪽.

이준웅 (2002). 캠페인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세미나 발제문. 45–84쪽.

이준웅 (2013).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논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자와 중앙일간지 정치부 데스크의 토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돌아보다〉 특별세미나 발제문.

이준웅·양승목·김규찬·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64–90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사례 통계표. URL: http://www.iendc.go.kr/library/library03.php

언론중재위원회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2018). 선거기사심의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 URL: http://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4&bn=2394&m=read.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Alger, D. E. (1989). *The media and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Anderson, R., Dardenne, R., & Killenberg, G. (1996). *The conversation of journalism: Communication, community, and news*. Westport, CT: Praeger.

Ansolabehere, S., Behr, R., and Iyengar, S. (1993). *The media game: American politics in the television age*. Boston, MA: Allyn and Bacon.

Arnold, R. D. (2004). *Congress, the pres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ngl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nnett, W. L. (2016).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ew York: Longman.

Benoit, W. A. (2007). *Communication in political campaigns (10th edition)*.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co press.

Cook, T. E. (1989). *Governing with the new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onkite, W. (1998). Reporting presidential campaigns: A journalist's view. In D. Graber, D. McQuail, P. Norris (Eds.), *The politics of news, the news of politics* (pp. 57–69). Washington, D. C.: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Davis, R. (1992). *The press and American politics: The new mediator*. New York: Longman.

Iyengar, S. (2011). *Media politics: A citizen's guid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Kessler, L., & McDonald, D. (1996). *When words collide: A media writer's guide to grammar and style*.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Ladd, J. M. (2012). *Why American hate the media and how it matte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Clure, R. D., and Patterson, R. E. (1974). Television news and political advertising. *Communication Research*, 1 (1), 3–31

Page, B. I. (1996). *Who deliberates? Mass media in modern democracy*.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tterson, T. E. (1993). *Out of order*. New York: Alfred A. Kno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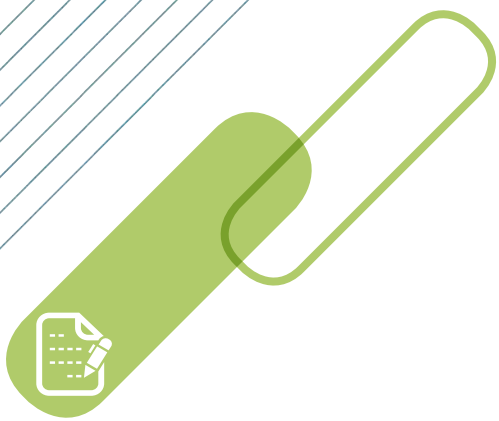
Patterson, T. E. (2013). *Informing the news: The need for knowledge–based journalism*. New York: Vintage Books.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8). Digital news report 2018. URL: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digital–news–report–2018.pdf.

Schudson, M. (2003). *The sociology of new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Sparrow, B. H. (1999). *Uncertain guardian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660–679. In H. Tumber (1999). News: A reader (pp. 297–3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제2장
결산좌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일 시** : 2018. 7. 4.(수) 17:00
- **장 소** : 위원회 강의실
- **참석자**

  안영률 (심의위원장,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윤원구 (부위원장,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남영진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7월 4일 결산좌담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영률 심의위원장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무엇인지 세심히 논의, 결정한 것이 이번 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권고부터 경고결정문 게재까지 다양한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규정된 제재조치 외에도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한 안내문 발송 조치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검토하며 각 안건 별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무엇인지 세심히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조치를 의결하지 않고 불문에 부친 안건도 네 건 있었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 외에 공정성 여부가 다소 의심되는 기사까지 세심히 살펴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엄밀하게 모니터링한 과정에 더하여, 언론의 역할과 책무를 존중해 과도한 제재조치가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매 안건을 주의 깊게 논의한 엄격한 심의 과정의 좋은 상호작용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구 부위원장

심의 안건들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는 명료한 심의기준 마련위해 더욱 노력해야

기사를 심의하고, 실제로 언론사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제재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심의위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판단 기준을 일관되고 합리적이게 견지하려 노력한 덕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를 진행하면서 현행 선거기사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심의기준이나 제재 결정 방법 등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보니, 도리어 실제 안건과 규정상의 기준을 합치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명료한 심의기준이 마련된다면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영진 위원

**공정보도에 대한 교육, 심의기관의 심의,
언론사의 노력 등이 어우러지다면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만들 수 있을 것**

각종 지방일간지 및 주간지의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을 위해 한국 언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는 자성도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공정보도에 대한 교육, 심의기관의 심의, 언론사의 노력 등이 합쳐지면 효과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226건)와 비교했을 때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건수는 103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여러 국가적인 이슈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켜 선거보도의 양 자체가 적었던 측면도 있겠으나, 그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심의기구에서 교육과 감시, 제재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온 것도 다소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범 위원

**시정요구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도시기에 따른 제재수위의 차별적 적용 유지해야**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을 보면 후보자 신청에 의한 시정요구안건이 12건으로 비교적 적습니다. 후보자들 중 시정요구절차에 대해 알지 못한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사에 심의기준 등을 안내하는 것 외에, 후보자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절차를 교육하고 홍보한다면 향후 더 많은 후보자들이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누적적인 제재를 받은 언론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위반 안건에 대해 선거에 근접할수록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했는데, 이렇듯 보도시기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참고할 기준이 마련된다면 보다 엄밀하고 형평성 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완규 위원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개인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상반된 입장이 존재할 때 그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프로세스를 위원님들께서 잘 운영해 주신 덕분에 이렇듯 원만한 심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소순창 위원

**모니터링 인력 확충, 과거 의결사례 및
제재수준의 효과적인 전수,
제재 결정 후 언론사의 위반현황 분석 제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심의 안건 중 중앙지의 비율이 무척 낮습니다. 지방선거이다보니 지역신문 위주로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겠으나, 중앙지의 보도행태도 더욱 엄격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매체 수가 46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또, 초반 회의에 심의한 안건과 후반에 심의한 안건 사이에 논의방식, 결정방법 등의 차이가 다소 존재했던 점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초반 안건들의 경우 그 내용만을 바탕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데 반해, 회의가 진행될수록 과거의 제재 전례를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차이겠으나, 과거 선거에서 누적된 의결사례나 제재수준 등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다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언론사들의 위반현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거 출마하는 현직 지자체단체장의 홍보성 기사 제재할 방안 모색해야

제7회 지방선거의 심의 건수가 제6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언론사들이 선거기사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보도 문화의 향상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판단이 기여한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선은 선거보도의 총량이 매우 적은 선거였고 이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묻지마 정당투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보와 공약에 대한 보도를 늘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가 그러한 보도를 억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만을 소개 혹은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더 많은 후보를 소개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들의 미래비전을 검토하고 후보를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문제는 후보 검증 기사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기사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심위가 심의해 게재한 기사들은 비교적 명백하게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사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더 구비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지선기간에도 현직단체장인 후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단체장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 현역후보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리는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에 후보 혹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이 있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에는(혹은 예비후보등록 기간 이후부터는) 해당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춘식 위원

불공정 선거기사로 의심되지만 형식적 공정성·형평성 유지로 심의 피해가는 사례 많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저는 보도의 의도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다고 느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등 언론사의 보도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라고 다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소위 저널리즘 관행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도 있는 보도들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앞서 소순창 위원님께서 심의건수 중 중앙지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해주셨는데, 중앙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문법을 견지하는 등 저널리즘 관행에 철저히 따르다 보니 내용이 일부 불공정한 것으로 의심되어도 안건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균형을 갖춘 보도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심의기준을 명문상의 '공정성과 형평성'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장희 위원

불공정 선거보도의 재발을 막을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의기준 검토, 보완 이루어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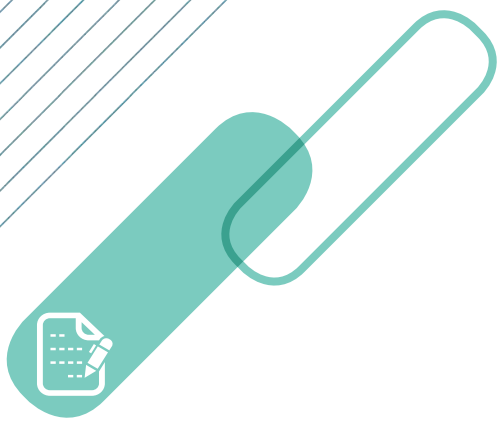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보도라는 가치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셨다시피, 사안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조치를 결정했을때, 해당조치가 불공정보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측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되,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회의 운영 방식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이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또 사무처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제2장 시정요구심의



제1장
자체심의

1. 경고결정문 게재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8
언론사	**주식회사 일일경북신문(경북일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85 3층 발행인 오주섭
심의대상기사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4일자 1면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2018년 5월 25일자 1면 「부동산 거래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와(?)」, 2018년 5월 28일자 1면 「해오름 동맹 포항. 경주 시장 후보 '떳떳한 者 누구(?)'」, 2018년 5월 29일자 1면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2018년 6월 1일자 1면 「자유 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시작」 및 「도전 개척정신 미래 발전 희망 쏘다」, 2018년 6월 4일자 1면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의심(?)」 제하의 기사
주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일일경북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경북일일신문〉 1면 하단에 〈별지〉를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8년 6월 1일자 1면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시작」의 상단 부제목(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24일자 1면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제하의 기사 등 4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기된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살피건대 위 심의대상기사들은 모두 특정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A씨의 주장에 관한 것으로 보도 지면, 보도 횟수 등의 측면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후보자 검증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심의대상기사들은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특정 경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동일 지면에 다른 경주시장 후보자 또는 다른 지역 시장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부각하는 기사를 함께 게재하는 등 후보자간 형평성을 심대하게 위배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나. 내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4일자 1면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등 주낙영 후보의 배우자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 관련 보도 3건, 2018년 5월 29일자 1면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등 최양식 후보 관련 부각 기사 2건 및 2018년 5월 28일자 1면 「해오름 동맹 포항. 경주 시장 후보 '떳떳한 者 누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북일일신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의 입장을 1면에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타 후보 및 다른 지역 시장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후보자 검증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후보자간 형평성을 심대하게 위배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경북일보신문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경주시민 A씨가 23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을 작성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A씨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시민 A씨 주예비후보 배우자 등 4명 부동산 다운 계약의혹 검찰 진정

22억원 이상 건물 원가에도 못 미치는 18억7천5백만원에 팔았다(?)

주식회사 매입, 평당 1천만원 땅 공시지가 2배7십여만원에 팔았다(?)

지방선거 사상 시민이 선거 출마자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주시민 A씨는 23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을 작성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왜, 이런 사단이 벌어 진걸까.

이날 진정인에 따르면 주예비후보 배우자가 토지구입비 3억8천4백만 원, 건축비 추정 14억 원, 취·등록세 1천5백만원, 대출이자 1억4천5백만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등 총 예상원가가 22억4천4백만원이 넘는 땅을 왜 공시지가로 넘겼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주낙영 예비후보는 MBA출신 첨단 행정자치 비서관으로 근무 중 아빠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온갖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후보, 참대어니놀이에 해위사실이다 비방이다 하지 말고 소상히 설명해주시길 촉구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X씨와 함께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주식회사 태왕으로부터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토지를 공시지가인 2억3천5백만원에 근접한 2억8천2백만원에 매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 당 90만원 이었다. 주변시세는 ㎡ 당 28만4십만원 평당 1천만에 호가했다.

이 땅은 2005년 7월 주식회사 태왕이 개인으로부터 매입 같은 해 12월29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한다.

이후 2006년 9월 4일 주 예비후보 배우자와 X씨 등 2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8일 뒤인 9월12일 태왕은 토지신탁 해지와 같은 날 두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두 사람은 이 땅을 분할한다.

주 예비후보 배우자는 분할 후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년 3월 31일에는 대구은행에서 8억 4천5백만원, 9월 25일에는 1억4백만원 총합계 9억4천9백만원을 근저당 설정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는 실 대출금 7억3천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매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낙영 예비후보는 MBA출신 첨단 행정자치 비서관으로 근무 중 아빠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온갖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후보, 참대어니놀이에 해위사실이다 비방이다 하지 말고 소상히 설명해주시길 촉구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X씨와 함께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주식회사 태왕으로부터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토지를 공시지가인 2억3천5백만원에 근접한 2억8천2백만원에 매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 당 90만원 이었다. 주변시세는 ㎡ 당 28만4십만원 평당 1천만에 호가했다.

이 땅은 2005년 7월 주식회사 태왕이 개인으로부터 매입 같은 해 12월29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한다.

이후 2006년 9월 4일 주 예비후보 배우자와 X씨 등 2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8일 뒤인 9월12일 태왕은 토지신탁 해지와 같은 날 두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두 사람은 이 땅을 분할한다.

주 예비후보 배우자는 분할 후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년 3월 31일에는 대구은행에서 8억 4천5백만원, 9월 25일에는 1억4백만원 총합계 9억4천9백만원을 근저당 설정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는 실 대출금 7억3천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록세 1천5백만 원, 대출이자 1억4천5백만 원, 전세보증금 2억1천만 원 등 총 예상원가가 22억4천4백여만 원에 이르는데 이보다 손해를 본 18억7천5백만원에 자신의 건물을 팔았다는 것이다. 당시 주변시세는 평당 1천3백만 원으로 시가 39억 원 상당이었다.

또 배우자가 토지매입과정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주식회사 태왕이 평당 실거래가 1천만 원이 넘는 땅을 왜 공시지가로 넘겼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때 주낙영 예비후보는 MB시절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온갖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후보, 절대 아니라며 허위사실이다 비방이다 하지 말고 소상히 설명해주시길 촉구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ㅈ씨와 함께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주식회사 태왕으로부터 대한토지신탁에 신착한 토지를 공시지가인 7억6천5백만 원에 근접한 7억8천6백만 원에 매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 당 9십만 원 이었다. 주변시세는 ㎡ 당 3백3십만 원 평당 1천만에 호가했다.

이 땅은 2005년 7월 주식회사 태왕이 개인으로부터 매입 같은 해 12월 29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한다.

이후 2008년 9월 4일 주 예비후보 배우자와 ㅈ씨 등 2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8일 뒤인 9월 12일 태왕은 토지신탁 해지와 같은 날 두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두 사람은 이 땅을 분할한다.

주 예비후보 배우자는 분할 후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년 3월 31일에는 대구은행에서 8억 4천5백만 원, 9월 29일에는 1억4백만 원 총합계 9억4천9백만 원을 근저당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는 실 대출금 7억3천만 원을 들여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 당시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는 5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 당 1백5십6만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14억8천7백5십만 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주 예비후보 배우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도한 경위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A씨는 "피진정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개인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얻도록 방조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양에 외압을 행사, 권리 행사방해, 부당한 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을 누락하였다는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진정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조세의 의무를 교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회피했기에 진정인은 피진정인 전원을 법의 존엄함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법집행을 강력히 요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예비후보 캠프측은 "아직 정확한 진정 내용을 알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신문 2018년 05월 25일
이면 (종합)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와(?)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 시세보다 싸게 판 의혹(?) 있다

캐도 캐도 끝없이 고구마 줄기 캐듯 부동산 거래 의혹이 계속 나온다.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가 이번에 또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번지 땅 매매과정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24일 거래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경주시민 A씨가 지난24일에 이어 25일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주식회사 가인주택건설 등 5명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및 조세포털 의혹이 있다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포항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등 피진정인들 4명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번지 2013㎡ 토지를 공시지가 가격인 19억2백47만4천원보다 조금 많게 21억2천8백만원에 주식회사 가인주택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30일께다.

A씨는 2015년 기준 죽도동 624-2번지 주변은 매물도 없었으며 시세는 평당 4백50만원에서 5백만원 선으로 이에 기준하면 27억원에서 30억원 상당을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건물에 대해 주낙영 예비후보는 "A씨는 진정서에서 배우자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누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어"요즘은 부자간에도 다운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운계약을 해준다? 이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주예비후보는 이 진정이 반려 된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 해명했다.

이에대해 A씨는 "경주지청 문의 결과 사건이 경주지검 302호 검사실에서 수사과에 수사지휘 한 상태 라"며 "진정이 경찰에 넘어 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오주섭 대표기자

(12.0×21.0)cm²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5일자 1면

보도 내용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의혹 고구마 줄기 캐듯 나와(?)

캐도 캐도 끝없이 고구마 줄기 캐듯 부동산 거래 의혹이 계속 나온다.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가 이번에 또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번지 땅 매매과정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거래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경주시민 A씨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주식회사 가인주택건설 등 5명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및 조세포털 의혹이 있다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포항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등 피진정인들 4명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번지 2013㎡ 토지를 공시지가 가격인 19억2백47만4천 원보다 조금 많게 21억2천8백만 원에 주식회사 가인주택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30일께다.

A씨는 "2015년 기준 죽도동 624-2번지 주변은 매물도 없었으며 시세는 평당 4백50만 원에서 5백만 원 선으로 이에 기준하면 27억 원에서 30억 원 상당을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건물에 대해 주낙영 예비후보는 "A씨는 진정서에서 배우자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누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요즘은 부자간에도 다운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운계약을 해준다? 이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주예비후보는 이 진정이 반려된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주지청 문의 결과 사건이 경주지검 302호 검사실에서 수사과에 수사지휘 한 상태라"며 "진정이 경찰에 넘어 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북일일신문

해오름 동맹 포항.경주 시장 후보 '떳떳 한 者 누구(?)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

포항 잘사는 도시로 만들터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배우자 부동산 기부 천사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운집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6.13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다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주낙영 후보 등록 모습, 사진 오른쪽 위 2010년 당시 골프연습장 사진, 왼쪽 아래 2014년 주차장 사진, 오른쪽 아래 2015년 매매 후 2018년 현재 모습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지진피해 위로금 포항시민들에게 1억2천만원 쾌척 하기도
주말에도 불구, 시민과 지지자 등 3천여명 운집

A씨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진정서 제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시세차익 보다 싸게 팔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 번지 당시 가격보다 낮게 팔아

이강덕 포항시장(자유한국당) 후보는 26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 선거사무소에서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지지자, 시민 등 3천 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6.13지방선거 필승을 향한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제막을 시작으로 후보자 소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김정재(포항북), 김

해오름 동맹 포항.경주 시장 후보 '떳떳 한 者 누구(?)'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
"포항 잘사는 도시로 만들터"

이강덕 포항시장(자유한국당) 후보는 26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 선거사무소에서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지지자, 시민 등 3천 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6.13지방선거 필승을 향한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제막을 시작으로 후보자 소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김정재(포항북), 김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8일자 1면

석기(경주)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며 재선을 향한 힘찬 기치를 올렸다.

차분한 분위기로 이어지던 개소식은 후보의 연설이 절정에 치닫자, 참석한 시민과 지지자들은 '이강덕'을 연호하며, 재선을 향한 도전과 당당한 발걸음에 열렬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포항은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최후의 보루였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항이 아니면 누가 지켜 내겠냐"며, "보수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눈으로도 확인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보수, 신뢰받는 보수의 한사람으로 밀알이 되어 헌신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며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번 6.13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포항대학교 신입생 서희주 씨는 이 후보에게 유권자로서의 바람을 전했으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5대 공약 발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강덕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정에 임해왔다. 앞으로 4년이 허락된다면 시대변화에 맞춰 우리 포항을 다른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 있고, 잘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포항을 환동해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는 지난 5월 2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6.13지방선거의 포문을 열었다.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배우자 부동산 기부 천사"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가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과 국세청에 진정을 당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연 이틀 경주시민 A씨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번지 토지를 시세 보다 싸게 팔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비싼 가격에 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4-2번지 땅의 변천사를 지목하며 투자 대비 해 매매 금액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A씨는 "쉽게 이야기하면 3억 원 짜리 집을 지었다가 허물고 이보다 싼 2억 원에 파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어 A씨는 "위성사진을 통해보면 2010년 당시 추정 이 땅에 평당 1백만 원 정도 6백여평에 6억 원 상당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에는 골프장 연습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운영하다 2015년에 나대지 상태에서 주식회사 가인주택건설에 매매를 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건물 값을 산정해야하고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 허물었다"고 의혹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이후 바로 팔기 뭐하니 주차장으로 변환,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시세차익을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 제기했다.

당시 이 주변 시세는 평당 약 5백만 원선에서 보면 27억 원에서 3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확신했다.

경북신문

2018년 05월 29일 1면 (종합)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28일, 기호8번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로 가야한다" 며, 문화와 관련된 일부공약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경주 역사문화 콘텐츠 디지털화
용담정 남측 동학 발상지 성역화
역사도시 경주 제왕 위인 재조명

기호8번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로 가야한다"며, 문화와 관련된 일부공약에 대한 발표를 했다.

시민의 문화식견과 능력을 높이는 첨단 정보화도서관을 황성공원의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건립해 최신 정보화교육과 시민포럼의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특히, "황성공원의 현 도서관을 정보화시설을 갖춘 국학도서관으로 개수해 각 문중과 기관, 개인이 소장한 귀중한 서적과 책판, 현판 등 유형 자산들이 타 도시로 기탁되는 것을 지양하고 경주시가 책임 있게 보관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로 가야한다"며 "문화와 관련된 일부공약에 대한 발표를 했다.

시민의 문화식견과 능력을 높이는 첨단 정보화도서관을 황성공원의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건립해 최신 정보화교육과 시민포럼의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특히, "황성공원의 현 도서관을 정보화시설을 갖춘 국학도서관으로 개수해 각 문중과 기관, 개인이 소장한 귀중한 서적과 책판, 현판 등 유형 자산들이 타 도시로 기탁되는 것을 지양하고 경주시가 책임 있게 보관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문화와 관련된 일부공약에 대한 발표를 했다.

시민의 문화식견과 능력을 높이는 첨단 정보화도서관을 황성공원의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건립해 최신 정보화교육과 시민포럼의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특히, "황성공원의 현 도서관을 정보화시설을 갖춘 국학도서관으로 개수해 각 문중과 기관, 개인이 소장한 귀중한 서적과 책판, 현판 등 유형 자산들이 타 도시로 기탁되는 것을 지양하고 경주시가 책임 있게 보관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로 가야한다"며 "문화와 관련된 일부공약에 대한 발표를 했다.

시민의 문화식견과 능력을 높이는 첨단 정보화도서관을 황성공원의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건립해 최신 정보화교육과 시민포럼의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특히, "황성공원의 현 도서관을 정보화시설을 갖춘 국학도서관으로 개수해 각 문중과 기관, 개인이 소장한 귀중한 서적과 책판, 현판 등 유형 자산들이 타 도시로 기탁되는 것을 지양하고 경주시가 책임 있게 보관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29.8×21.7cm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9일자 1면

보도 내용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기호8번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로 가야한다”며, 문화와 관련된 일부공약에 대한 발표를 했다.

시민의 문화식견과 능력을 높이는 첨단 정보화도서관을 황성공원의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건립해 최신 정보화교육과 시민포럼의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특히, “황성공원의 현 도서관을 정보화시설을 갖춘 국학도서관으로 개수해 각 문중과 기관, 개인이 소장한 귀중한 서적과 책판, 현판 등 유형 자산들이 타 도시로 기탁되는 것을 지양하고 경주시가 책임 있게 보관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선비문화 본향으로서의 위상제고와 문집 등 고문헌 활용으로 경주의 전통선비문화를 재조명하며, 복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스마트벨리 조성사업은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실적을 기초로 융·복합 스마트벨리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4년간 2천여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최후보는 "실감미디어 사업, 실크로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 기존 수행중인 국책사업과 연계함으로서 지역기반 관광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국내 최초 체험·전시 테마파크인 유네스코 디지털 박물관, 실감미디어 체험관, 게임 박물관, 지진 안전체험, 교육센터 등의 체험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용담정 남측에 동학 발상지를 성역화해 한국사상의 세계성을 부각시키고, 기념관 및 수련관 등과 산소, 생가, 용담정을 잇는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신문화의 본향인 경주위상을 정립하게 되고 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는 동학을 재조명함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창의적인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공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계속해 나간다. 올해는 월지(안압지)에 발굴된 궁궐터에 정전, 부속건물, 회랑 등 신라궁궐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게 된다. 또한 궁궐건축과 궁내조경의 조화를 통한 전통문화 고취와 세계에 신라문화를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며,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사로6부촌장과 신라56왕의 역사와 문화 및 치적 등을 전시, 체험, 활용하는 역대 제왕관, 육부화백관, 체험교육관 등으로 구성된 신라역사관을 건립해 이천년 역사도시 경주의 제왕 위인 등을 재조명해 한국역사의 정체성을 정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라를 건국한 사로국6부촌장의 화백사상과 신라천년왕국 근간이 된 화랑 및 원효정신, 선덕사상 등을 계승 발전시켜,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역사에 내제된 가치와 충과 효의 정신을 체득하며, 미래세대 역사문화교육(체험)에 기여하는 정신문화의 산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된 수목원 조성으로 동궁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2동궁원을 조성해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화계획으로 신라전통정원, 실크로드 미니어처 시티, 수목원 등으로 구성된다.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관총전시관과 연계한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봉황로, 동성로 등 도심을 전선지중화와 아케이드를 설치해 관광객이 선호하는 특화된 거리를 권장하며, 황리단길과 연속되어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일보신문

자유 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 시작

검찰, 선거 기간 중 진정 사건 이례적 조사 시작…사안 심각 판단
주 후보 배우자 측 11억5천만원 거래 실토…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실거래 보다 낮춰 거래금액 신고 양도소득세 더 낸 세금 기부천사(?)

검찰이 선거기간 중 현행범이나 선거법 위반 사범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이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진정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진정서 접수 열흘 만에 진정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안이 신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 지지자들의 항의나 시위에 곤혹을 치룰 수 있는 부담감을 안고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피진정인 측인 주낙영 후보 배우자가 선거 기간 중 선거 운동을 핑계로 검찰에 출두 할지 여부는 불투명 해 보인다.

31일 경주시민 A씨는 "지난 20일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지청에 자유 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한 진정서 제출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고 본지에 전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주 후보 배우자가 언론에 배부한 해명서를 통해 대구시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11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스스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꼴이 됐다"며 관계를 확실히 입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조사에서 " 등기부 등본 상에는 '토지거래가가 7억8천8백만원에 명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에 대한 반박으로 주 후보 배우자가 11억5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사실관계를 입증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A씨 본인이 주장한 '18억7천 5백만원으로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 후보 배우자 측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낸 세금기부 천사로 불리어도 마땅하다"고 비꼬았다.

A씨는 "일반적으로 건축비 가격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해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하는데 주 후보 배우자측은 이와 반대로 얼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더 냈으니 천사가 아니면 바보 아니냐"며 비웃었다.

이어 "주 후보 배우자 측 반박자료에 세무당국에 15억5천10백36만1천433원으로 인정 양도소득세 5천5백3천6백82십2원, 지방소득세 5백5십만 3천 6백2십2원을 정상 납부했다"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A씨의 주장대로 18억5천만원에 거래했다는 신고를 하면 양도 소득세가 이보다 낮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런데도 굳이 줄여서 세금신고를 한 것 도 이상하지 않느는 것이다.

이에대해 A씨는 "더 가관인 것은 주 후보측이 해명서에서 '추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매입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어쩔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뿐만아니라 "주 후보 측은 해명서에서 '배우자가 425㎡를 분할 해 취득하는데 땅이 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1억원을 더 주고 평당 481만원2천원, 총 6억7천 5백만원에 매입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아는 평당2백90원이라는 본인 주장에 대해 공시지가보다 높게 샀다고 해명하려고 425㎡를 평당 4백81만원에 매입했다고 했지만 128.5평으로 환산 토지 매입가 6억7천5백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5백2십5만원인데 이 계산법도 이해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오주섭 대표기자

보도 내용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세포탈 '진실 게임' 시작

경북일일신문 2018년 6월 1일자 1면

검찰이 선거기간 중 현행범이나 선거법위반 사범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이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진정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진정서 접수 열흘 만에 진정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안이 신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 지지자들의 항의나 시위에 곤혹을 치룰 수 있는 부담감을 안고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피진정인 측인 주낙영 후보 배우자가 선거 기간 중 선거 운동을 핑계로 검찰에 출두할지 여부는 불투명 해 보인다.

31일 경주시민 A씨는 "지난 20일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지청에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한 진정서 제출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고 본지에 전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주 후보 배우자가 언론에 배부한 해명서를 통해 대구시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11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스스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 한 꼴이 됐다"며

관계를 확실히 입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조사에서 "등기부등본 상에는 '토지거래가가 7억6천8백만 원에 명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에 대한 반박으로 주 후보 배우자가 11억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사실관계를 입증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A씨 본인이 주장한 '18억7천5백만 원으로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 후보 배우자측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낸 세금기부 천사로 불리어도 마땅하다"고 비꼬았다.

A씨는 "일반적으로 건축비 가격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해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하는데 주 후보 배우자측은 이와 반대로 원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더 냈으니 천사가 아니면 바보 아니냐"며 비웃었다.

이어 "주 후보 배우자 측 반박자료에 세무당국에 15억5천6백36만1천433원으로 인정 양도소득세 5천5백3만 6천2백2십 원, 지방소득세 5백5십만 3천6백2십2원을 정상 납부했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A씨의 주장대로 16억5천만 원에 거래했다는 신고를 하면 양도 소득세가 이보다 낮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런데도 굳이 줄여서 세금신고를 한 것도 이상하지 않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더 가관인 것은 주 후보측이 해명서에서 '추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매입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주 후보 측은 해명서에서 '배우자가 425㎡를 분할 해 취득하는데 땅이 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1억 원을 더 주고 평당 481만 원2천 원, 총 6억7천 5백만 원에 매입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이는 평당2백90원이라는 본인 주장에 대해 공시지가보다 높게 샀다고 해명하려고 425㎡를 평당4백81만 원에 매입했다고 했지만 128.5평으로 환산 토지 매입가 6억7천5백만 원으로 나누어 보면 5백2십5만 원인데 이 계산법도 이해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경북신문

2018년 06월 01일 01면 (종합)

도전 개척정신 미래 발전 희망 쏘다

지난달 31일 기호8번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 출정식
검증 안 된 후보자 결코 경주 이끌어 갈 수 없다

기호8번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지난달 31일 오후3시 일반시민과 지지자 등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경주역 앞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대 장정에 들어갔다.

최 후보는 "품격 있는 경주와 존경받는 경주인에게 드립니다라는 인사말에서 "미래, 희망, 시민행복이란 편지 속에 화합, 개척, 미래, 번영이란 소식을 전한다"고 운을 뗀 뒤 "분열, 체념, 포기, 갈등이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며 도전적인 개척정신으로 미래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또 지난 8년간 850억 원이나 되던 빚을 566억이나 갚았으며, 살림살이는 1조 4천억으로 늘렸고 말했다.

관광객도 1,300만 명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1,900여개 기업이 왕성한 활동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등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리고 왕릉만 있던 2천년고도에 꿈에 그리던 왕궁이 복원된다고 희망을 전했다.

"세계적 원전기업 한수원이 경주 경제를 받치고 있어 경주의 미래는 밝지만 국가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려하고 있음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이라"고 인사말을 이어갔다.

기존의 주요 현안사업들은 연속성이 바탕이 되어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와 도약의 시기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지지율 1위에 흠 없이 시정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자부했다.

최병화 선임기자

(23.8×10.0cm)

경북일일신문 2018년 6월 1일자 1면

보도 내용

도전 개척정신 미래 발전 희망 쏘다

기호8번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일반시민과 지지자 등 2천 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경주역 앞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최 후보는 "품격 있는 경주와 존경받는 경주인에게 드립니다"라는 인사말에서 "미래, 희망, 시민행복이란 편지 속에 화합, 개척, 미래, 번영이란 소식을 전한다"고 운을 뗀 뒤" 분열, 체념, 포기, 갈등이란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며 도전적인 개척정신으로 미래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또 지난 8년간 850억 원이나 되던 빚을 566억이나 갚았으며, 살림살이는 1조4천억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관광객도 1,300만 명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1,900여 개 기업이 왕성한 활동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등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리고 왕릉만 있던 2천 년 고도에 꿈에 그리던 왕궁이 복원된다고 희망을 전했다.

"세계적 원전기업 한수원이 경주 경제를 받치고 있어 경주의 미래는 밝지만 국가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려하고 있음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이라"고 인사말을 이어갔다. 기존의 주요 현안사업들은 연속성이 바탕이 되어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와 도약의 시기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지지율 1위에 흠 없이 시정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자부했다.

경북일보신문

2018년 06월 04일
01면 (종합)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의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 사실 드러나면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처벌 피할 수 없을 듯…'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이 검찰 진정 사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누락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경주시민 A씨가 검찰 진정인 조사가 끝난 뒤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공시지가인 7억6천5백만원에 근접하는 7억6천8백만원에 매입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주 후보 배우자는 11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3억8천2백만원을 누락했다고 시인 꼴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진정내용을 추가 했다"고 전언했다.

A씨는 "주후보 배우자가 주장한 1315-3번지 559㎡와 1314-5번지외 2필지 291㎡는 합하면 850㎡로 이 3필지를 합필하면 1316번지로 땅 크기가 같다"며 "㎡ 1316번지 1백만원 1314-5번지는 6십2만4천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정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관계확인을 해준 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배우자가 1316번지를 분할취득하면서 425㎡를 도로와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1억원을 더 주고 평당 4백81만2천원 총 6억 7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128.5평으로 평단 가격이 5백2십5만원이 되는데 이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맞받아 쳤다.

A씨는 "주후보 배우자가 당시에는 부동산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2004년9월 부동사 전문지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을 지목하면서 이지역 상가부지의 경우 6백만원 안팎이던 것이 1천만원을 주고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도한 신문 내용을 인용 반박했다.

오주섭 대표기자

(11.7*19.0)cm

경북일일신문 2018년 6월 4일자 1면

보도 내용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의심(?)

경주시장 주낙영 후보 배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이 검찰 진정 사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누락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경주시민 A씨가 검찰 진정인 조사가 끝난 뒤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공시지가인 7억6천5백만 원에 근접하는 7억6천8백만 원에 매입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주 후보 배우자는 11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3억8천2백만 원을 누락했다고 시인한 꼴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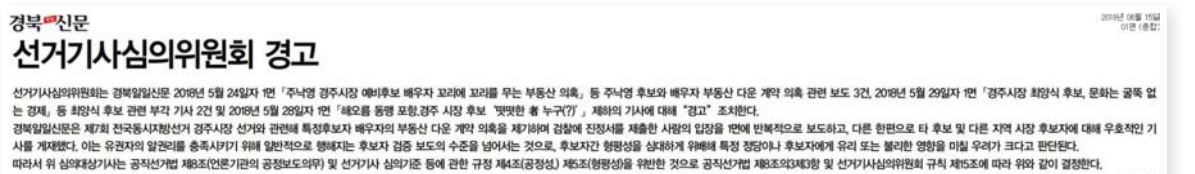
A씨는 "검찰이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며 진정내용을 추가 했다"고 전언했다.

A씨는 "주 후보 배우자가 주장한 1315-3번지 559㎡와 1314-5번지외 2필지 291㎡는 합하면 850㎡로 이 3필지를 합필하면 1316번지로 땅 크기가 같다"며 "㎡ 1316번지 1백만 원 1314-5번지는 6십2만4천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정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관계확인을 해준 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배우자가 1316번지를 분할취득하면서 425㎡를 도로와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1억 원을 더 주고 평당 4백81만2천 원 총 6억 7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128.5평으로 평당 가격이 5백2십5만 원이 되는데 이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맞받아 쳤다.

A씨는 "주 후보 배우자가 당시에는 부동산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2004년 9월 부동산 전문지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을 지목하면서 이 지역 상가부지의 경우 6백만 원 안팎이던 것이 1천만 원을 주고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도한 신문 내용을 인용 반박했다.

[결정 후 보도문]



경북일일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4일자 1면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의혹」 등 주낙영 후보와 배우자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 관련 보도 3건, 2018년 5월 29일자 1면 「경주시장 최양식 후보, 문화는 굴뚝 없는 경제」 등 최양식 후보 관련 부각 기사 2건 및 2018년 5월 28일자 1면 「해오름 동맹 포함,경주 시장 후보 '뜻땃한 者 누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북일일신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의 입장을 편에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타 후보 및 다른 지역 시장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후보자 검증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후보자간 형평성을 상대하게 위배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경북일일신문 2018년 6월 15일자 1면

2. 주의사실 게재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3
언론사	**담양뉴스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3길 7-5 발행인 장광호
심의대상기사	담양뉴스 2018년 2월 14일자(제72호) 1면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 및 「최 군수, 6·13 지방선거 '출마', 2018년 2월 28일자(제73호) 4~5면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및 7면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3월 7일자(제74호) 1면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제하의 기사
주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담양뉴스 주식회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담양뉴스〉 1면 하단에 〈별지〉를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8년 2월 14일자(제72호) 1면 「최 군수, 6·13 지방선거 출마」의 부제목(지역언론인 간담회에서 출마입장 피력)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군수 입후보예정인 현직 군수의 성과와 출마 입장 등을 여러 회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나. 내용 : 본지는 2018년 2월 14일자(제72호) 1면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 및 「최 군수, 6·13 지방선거 '출마'」, 2월 28일자(제73호) 4~5면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및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3월 7일자(제74호) 1면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제하의 기사에서 담양군수 입후보예정인 현직 군수의 성과와 출마 입장 등을 여러 회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률)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재심1** **(원결정 2018지선-자심13)**
재심청구인	**담양뉴스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3길 7-5 발행인 장광호
재심청구대상기사	담양뉴스 2018년 2월 14일자(제72호) 1면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및 「최 군수, 6·13 지방선거 '출마'」, 2018년 2월 28일자(제73호) 4~5면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및 7면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3월 7일자(제74호) 1면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제하의 기사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주의사실 게재(2018지선-자심13)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시장 입후보예정인 최형식 군수 관련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으나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담양지역의 다른 언론사들도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인에게만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심청구대상기사는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 기사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지면의 구성과 배치, 관련 보도내용 및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정 후보자를 부각한 보도로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최형식 군수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

군민관심 투자유치 및 주택개발사업, 읍면 현안사업 등 설명
6.13지방선거 군수선거 '3선 출마' 뜻도 밝혀

최형식 군수가 지난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이날 지역 언론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한해 지역언론인들이 군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들이 담양을 변화시키고 성과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인사한 뒤 "우리 군은 2015년 본예산 3천억 원 시대를 연 이후 2018년 올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3,422억 원의 본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유치 및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비롯 417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79개 공모·평가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천년담양을 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소득 3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정원)도시'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또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미리 준비한 자료와 PPT를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주택개발 진행상황을 비롯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에코하이테크담양산업단지 분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및 메타프로방스 관광지 활성화, 고서 보촌지구 택지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차질없이 추진중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담빛 야외음악공원(아시아문화야외음악당), 담빛 역사관광체험관 조성, 남도정원 및 전통정원 조성, 복합휴양타운(국민체육센터,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 청소년 문화회관 신축, 치매안심센터 설치, 농업회의소 건립,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추진 및 슬로시티 전역화(슬로시티 담양 종합계획) 등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 군수는 또 담양군이 향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현안도 제시했다.

주요현안으로는 고서JC~대덕JC 폐도 건의(봉산진입로 인터체인지)를 비롯 국도29호선 지선(담양읍 우회도로) 국도승격, 원예종묘 국제품질인증센터, 스마트팜 천단농업 교육센터, 한국전통정원 지역특구 지정 및 국립한국전통정원센터 건립, 도시재생사업(담양읍, 창평면, 고서면, 남면, 대전면, 수북면), 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개설 건의, 대전면 태목리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 등이며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은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해 군정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최 군수는 "1,000만 문화관광 도시와 농업소득 5,000만 원 시대, 대안형 인문학교육 도시, 현세대와 후손의 먹거리를 위한 천년 기념사업을 통해 신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청년이 함께하는 벤처기업도시 조성과 풀뿌리 경제기반 및 담양형 주민자치 모델을 통한 민주공동체로 군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2개 읍면에서 실시된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께서 건의하신 사업들을 적극 반영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며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담양」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군정 주요현안 설명을 마친 뒤, 6.13지방선거 군수선거 출마여부와 관련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 입장을 밝혔다.

최 군수, 6·13 지방선거 '출마'

최형식 군수가 최근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오는 6.13지방선거 군수선거에 출마할 뜻을 피력했다.

최 군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도 군정 운영방향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준비한 보도자료를 통해 6.13지방선거 군수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군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군민의 뜻인가 그동안 고뇌의 시간을 많이 가졌고, 또 거취와 관련해 일부에서 이제는 '큰일', '큰 정치'를 해야한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2월 13일까지 군수직을 사퇴해야 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중요한 시책과 군정현안을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는 선을 그었다.

이어 최 군수는 "초임 군수때나 지금이나 담양군정을 잘 수행하고 담양발전을 위해 열심히 책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큰일' 이고 '가장 큰 정치' 라는 생각으로 군정에 매진해 왔으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군민의 뜻을 확인한 바,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큰일이자 큰 정치인 담양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군수선거 출마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자신이 가진 세가지 강점으로 ▲다선의 경험과 경륜, 검증된 혁신적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 ▲담양군 유사이래 가장 많은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 ▲민선7기 4년은 문재인 정부와 임기가 같아 중앙정부와 당에 대한 풍부한 인맥 등 담양발전을 위한 좋은 장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은 강점을 잘 살려 민선 7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큰 담양을 만들고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군수는 가까운 시일에 6.13 지방선거 군수선거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선언 및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도 내용

대담/ 민선 6기 마무리…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18년은 민선 6기 담양군정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담양지명 천년"이 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 6기 4년 동안 최형식 군수께서 추진한 여러 가지 군정현안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내놓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올해 마무리해야 할 주요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최 군수에게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민선 3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생태도시 정책'은 물론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주요 군정현안과 시책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인문학 교육특구'에 지정되고, 나아가 2017년부터 '한국정원문화도시' 및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나서는 등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굵직한 미래 먹거리 정책들에 대한 최 군수의 남다른 의지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더불어 '2018담양지명 천년'을 맞이한 담양군이 현재 추진중인 기념사업과 함께 과거 담양천년, 현재 담양천년을 넘어 '미래 담양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또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담양뉴스 2018년 2월 28일자 4면

담양뉴스 2018년 2월 28일자 5면

Q 지난 4년 민선6기 군정수행에서 가장 의미있고 내놓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소재로 개최한 최초의 국제행사인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제10차 세계대나무협회 총회(WB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 특히,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담양다움'의 특성을 잘 살린 짜임새 있는 박람회장으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당초의 우려를 잠재우고 목표했던 관람객 90만명을 이른 시기에 달성하고 104만명(수익금 45억원)을 돌파하는 흥행기록을 세우는 등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견인' 했습니다.

-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민간 투자유치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과 함께 '관광도시 담양'의 위상을 드높이며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의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첨단문화복합단지 기공식과 담양일반산업단지(에코하이테크 2단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 고서보촌지구 택지개발사업, 대덕매산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 3만달러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관광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 2년 연속 700만 관광객 유치로 내륙권 관광도시로서의 발돋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담양대나무축제가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2017~2018년), 한국관광100선에 '죽녹원'이 4년 연속 선정,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연속 개최(2014~2016년) 등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 지난해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관광의 별'로 대통밥과 떡갈비, 죽순요리, 담양식 돼지숯불갈비, 담양국수 등을 맛볼 수 있는 '담양 음식테마거리'가 선정되는 등 남도음식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 얼어붙은 한중 관계 속에서도 담양군은 중국 최대 포털 언론사인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광콘텐츠 공유와 취재 및 홍보협력, 중국 현지 홍보사업 등 폭넓은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담양식 창조농정'으로 담양 농업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 쌀'이 대한민국 명품 쌀 선정평가에서 전국 1위에 등극,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딸기 '죽향'은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과 캐나다 등에 품종출원과 종묘를 수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 또한,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딸기의 여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리퀸(Merry Queen)'은 10년의 연구 끝에 '죽향', '담향'에 이어 세 번째로 군이 자체 육성한 순수 담양 품종으로 국립종자원 품종출원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 '대숲맑은 담양 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1위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납품산지 지자체 선정,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속 납품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로 담양군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인문학으로 미래 천년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 가사문학을 꽃 피웠던 우리 담양은 전국 최초로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2016. 3월)됨으로써 인문학으로 미래 천년(담양 신 르네상스시대)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에 걸맞는 다양한 인문학 평생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이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2018년 '담양지명 천년의 해'를 맞아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잘 가꾸어나가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과 인문학 등 분야별로 미래천년 실천계획을 세웠습니다.
- 담양군은 미래천년을 열어가는 슬로건을 '자연이 사람을 품다'와 '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로 정하여 고유한 문화자산과 지적자산을 마련해 현세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자산과 먹거리를 의미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천부적인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천명하고 미래로 나갈 가치를 담아 '천년담양 선언문'을 조례로 제정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Q 군수 임기가 오는 6월말로 끝나는데 민선6기 군정을 어떻게 마무리 하실 생각이신지?

'민선7기 담양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 담양의 지도를 바꾸는 대형 현안사업인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및 첨단문화복합단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등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 투자유치와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존 사업들의 조기 마무리 등으로 군민의 풍요로운 삶의 여건을 조성하고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성장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겠으며 각종 현안을 꼼꼼히 챙겨 민선 7기 담양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략) –

Q 끝으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담양군은 물론 5만 군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데, 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선 7기 4년은 담양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담양군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담양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품격 높게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현세대와 후손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천년담양의 기초설계를 어떻게 하여 초석을 다질 것인가? 입니다.

- 이와 같은 과제를 놓고 저는 민선 7기 출마를 고민해왔습니다. 물론 뜻깊은 많은 분이 최군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양군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일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수직 자체를 욕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군수직을 누려 본다는 생각도 역시 없었습니다. 오직 담양 발전만이 인생의 목표였고 일을 하기 위해 군수라는 직이 필요했고 그렇게 제 청춘을 바쳐 왔습니다.
- 그동안 추진했던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 메타프로방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생사업과 천년담양의 기념사업 등 담양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다면, 민선 7기가 담양발전의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천년담양 발전을 위한 비전과 기반을 다져 타 지자체 보다 10년, 20년을 앞서가는 담양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담양"을 완성해 가기 위해 저는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기회를 사심 없이 봉사하고자 합니다.

- 현안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소득 3만 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화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선 7기 4년은 문재인정부와 임기가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당에 대한 풍부한 인맥 등은 담양발전을 위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강점을 살려 "문재인정부와 함께 더 큰 담양을" 만들고 "자치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무는 뿌리가 깊어집니다. 깊어진 뿌리만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군정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삶의 여정과 군정 철학 고스란히 담겨
3월 10일(토) 오후 3시 담양문화회관

최형식 군수가 오는 3월 10일 오후3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과 군정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저서 '나의 삶 나의 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최 군수의 저서 '나의 삶 나의 길'은 ▲제1장-나의 삶 나의 길 ▲제2장-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제3장-내가 꿈꾸는 세상 ▲제4장-담양군정 24시(대담) 등 4장으로 구성됐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정치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비롯 도의원, 군수로 지방정치에 몸을 담아 오로지 담양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온 열정과 노력들에 대한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특히, 최 군수는 이 책에서 2018년 담양지명 천년을 맞아 담양의 후손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소신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큰 담양을 만들고, 자치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 군수는 저서 출간에 즈음해 "저의 인생여정과 함께 군민이 저에게 부여해 준 기회를 토대로 고향 담양의 정직한 일꾼으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 한결음 더 나아가는 책으로 엮었다" 며 "비록 재미없는 책일지라도 이 책을 읽고 천년담양의 새로운 꿈과 나래를 펼치면서 담양의 희망 찾기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기대 한다" 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저서는 최 군수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변화의 바람, 희망의 물결' 등 '담양의 희망 찾기 시리즈'에 이어 새로운 주제와 내용을 담아 출간하는 책으로 자신의 인생여정과 함께 담양군이 미래 천년을 준비하고 도약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잠행의 시간들, 정치의 길을 걷게 한 '민주대학', 담양의 성장 동력 대나무, 돈 버는 나무로 쑥쑥, 담양다움의 특성화로 관광도시 건설, 담양을 인문학 교육의 중심지로, 생태도시 정책은 담양의 핵심가치, 천년기념사업으로 후손들의 먹거리 준비, 담양식 마을자치, 대안교육의 메카 담양,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등이다.

이외에 제4장 '담양군정 24시' 에는 신 르네상스 시대 준비와 경한 농업군을 만들기 위한 비전제시 등 언론사 인터뷰로 구성된 대담기사를 수록해 담양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 군수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깊어진 뿌리만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뿐더러, 세월이 흐를수록 뿌리가 굳건해진다" 면서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스스로를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군수의 출판기념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 각계 인사가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취재팀

담양뉴스 2018년 2월 28일자 7면

보도 내용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최형식 군수가 오는 3월 10일 오후3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과 군정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저서 '나의 삶 나의 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최 군수의 저서 '나의 삶 나의 길'은 ▲제1장-나의 삶 나의 길 ▲제2장-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제3장-내가 꿈꾸는 세상 ▲제4장-담양군정 24시(대담) 등 4장으로 구성됐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정치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비롯 도의원, 군수로 지방정치에 몸을 담아 오로지 담양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온 열정과 노력들에 대한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특히, 최 군수는 이 책에서 2018년 담양지명 천년을 맞아 담양의 후손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소신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큰 담양을 만들고, 자치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 군수는 저서 출간에 즈음해 "저의 인생여정과 함께 군민이 저에게 부여해 준 기회를 토대로 고향 담

양의 정직한 일꾼으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 한걸음 더 나아가는 책으로 엮었다" 며 "비록 재미없는 책일지라도 이 책을 읽고 천년담양의 새로운 꿈과 나래를 펼치면서 담양의 희망 찾기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저서는 최 군수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변화의 바람, 희망의 물결' 등 '담양의 희망 찾기 시리즈'에 이어 새로운 주제와 내용을 담아 출간하는 책으로 자신의 인생여정과 함께 담양군이 미래 천년을 준비하고 도약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잠행의 시간들, 정치의 길을 걷게 한 '민주대학', 담양의 성장 동력 대나무, 돈 버는 나무로 쑥쑥, 담양다움의 특성화로 관광도시 건설, 담양을 인문학 교육의 중심지로, 생태도시 정책은 담양의 핵심가치, 천년기념사업으로 후손들의 먹거리 준비, 담양식 마을자치, 대안교육의 메카 담양,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등이다.

이외에 제4장 '담양군정 24시'에는 신 르네상스 시대 준비와 강한 농업군을 만들기 위한 비전제시 등 언론사 인터뷰로 구성된 대담기사를 수록해 담양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 군수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깊어진 뿌리만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세월이 흐를수록 뿌리가 굳건해진다" 면서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스스로를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군수의 출판기념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 각계 인사가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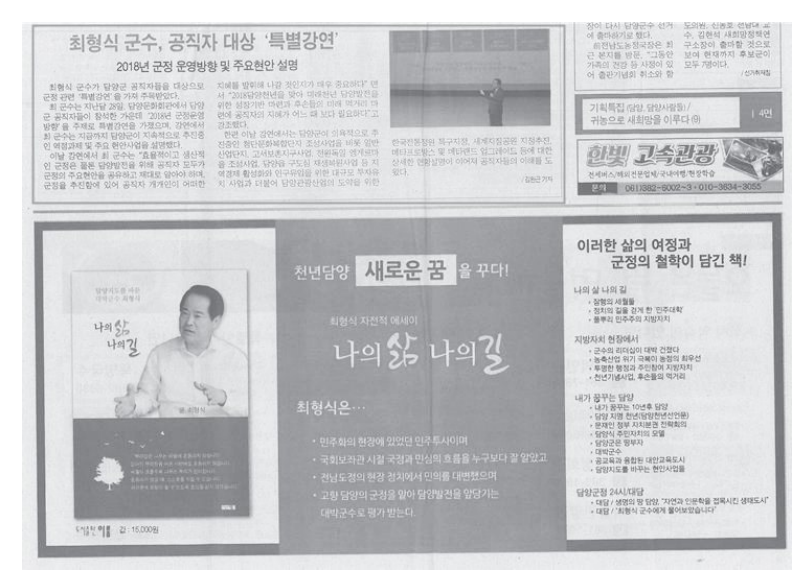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최형식 군수가 담양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군정 관련 '특별강연'을 가져 주목받았다.

최 군수는 지난달 28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담양군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군정운영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으며, 강연에서 최 군수는 지금까지 담양군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 군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은 물론 담양발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군정의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며,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 개개인이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면서 "2018 담양천년을 맞아 미래천년 담양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과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 마련에 공직자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는 담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일반산업단지, 고서보촌지구사업, 전원독일 엥게르마을 조성사업, 담양읍 구도심 재생복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과 더불어 담양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한국전통정원 특구지정, 세계지질공원 지정추진, 메타프로방스 및 메타랜드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이 이어져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2018년 군정 운영방향 및 주요현안 설명
천년담양 새로운 꿈 을 꾸다!
최형식 자전적 에세이
나의 삶 나의 길
최형식은…
이러한 삶의 여정과 군정의 철학이 담긴 책!

담양뉴스 2018년 3월 7일자 1면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지는 2018년 2월14일자(제72호) 1면 「신년 기자간담회, 군정 주요방향 제시」 및 「최 군수, 6.13지방선거 '출마'」, 2월28일자(제73호) 4~5면 최형식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및 「최형식 군수 출판기념회 개최」, 3월7일자(제74호) 1면 「최형식 군수,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 제하의 기사에서 담양군수 입후보 예정인 현직 군수의 성과와 출마 압장 등을 여러 회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률)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담양뉴스 2018년 4월 18일자(제80호)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1
언론사	**주식회사 일일경북신문(경북일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85 3층 발행인 오주섭
심의대상기사	경북일일신문 2018년 4월 30일자 1면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2018년 5월 2일자 1면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2018년 5월 8일자 1면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5월 11일자 1면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제하의 기사
주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일일경북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경북일일신문〉 1면 하단에 〈별지〉를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8년 5월 8일자 1면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의 부제목(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 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경주시장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1면에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 등의 제목을 비롯해 해당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부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기사에 언급하였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나. 내용 : 2018년 4월 30일자 1면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2018년 5월 2일자 1면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2018년 5월 8일자 1면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5월 11일자 1면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경주시장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함께 객관적이지 못한 부정적 평가를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재심5** **(원결정 2018지선-자심61)**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일일경북신문(경북일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85 3층 발행인 오주섭
재심청구대상기사	경북일일신문 2018년 4월 30일자 1면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2018년 5월 2일자 1면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2018년 5월 8일자 1면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2018년 5월 11일자 1면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제하의 기사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주의사실 게재(2018지선-자심61)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재심청구인이 특정 경주시장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1면에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 등의 제목을 비롯해 해당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부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기사에 언급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관련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으나 모두 사실에 기반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 것이고, 기사별로 별개 사안을 다루었으므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목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심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대부분 원심결정 시 이미 고려된 사정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사별로 다른 사안을 보도한 것이므로 반복적으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기사내용상 모두 동일 사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신문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처가 땅 전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두차례 시도
산 49-10번지 인접거리 띄운 채 도로개설 돼 있어
이득 취할 의도 다분, 무리한 사업 추진 모두 무산

6.13 지방선거 경주 시장에 출마한 주낙영 예비후보 처가 땅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땅은 취락지구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다. 전부 야산이다.

하지만 더 악랄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옥죈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이 하나 더 불거졌다.

주 예비후보 처가 땅 49-10번지가 2010년 5월17일 소방도로인 소로 2-47로 고시됐다.

이 지번의 땅은 주 예비후보 배우자와 장모, 2명의 처남과 조카 공유로 돼있다. 이 결정 당시 산 49-10번지는 주민 소유 대지 8필지와 전부 인접해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용한리 마을 주민 소유인 인근 527-1번지 등 8필지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도시계획도로 계획 당시 계획 선은 이들 대지와 이격 거리를 두고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땅 소유주가 한 사람이어서 공람절차가 생략 됐고 인접대지 지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계획이 부산됐기 땀정이지 진행이 됐다면 이들 땅 소유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49-10번지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거나 매입을 해야 할 처지 놓였었다. 결국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됐다.

사진 왼쪽에 붉은 색을 칠해진 부분과 녹색 형광색이 칠해진 부분 다 합쳐서 산 49-10번지다.

당연히 도시계획 도로 선이 인접대지에 걸쳐 그어져야 하는데 녹색 부분이 칠해진 인접대지와는 거리를 뒀다. 공공성은 뒷 전이로 사실이 가득한 악질적인 투기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부분이다.

사진 파란색 부분은 본지가 보도했던 처가 땅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 된 (2018년 4월23일자 1면 본지 참조) 도시계획도로다.

사진 가운데 이 사업이 지난 2006년 무산되자 붉은색이 칠해진 부분과 함께 아예 대놓고 두 차례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진행 된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27일 포항시가 고시한 제2004-1081호 지형 도면 승인도를 보면 이 계획은 빠져있다.

또 사진 오른쪽 포항시 제2008-52호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에도 빨간색을 칠한 부분이 본지가 첫 번째로 의혹을 제기한 도시계획도로 결정 선이 있지만 이 역시 빠져 있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2010년당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노락색이 칠해진 부분이 소로 2-47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지주와 주민들 반대로 무산 됐다. 인근 소로2-39.2-40.2-43에대한 사업이 취소돼 사업비 2억원 가운데 기 사용된 6백만원을 제외한 1억8천4백만원이 반납처리 됐다.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론에 부딪히면서 도로개설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13년 용한리 취락지구에 소로2-39.2-40.2-43 도로개설을 4천만원을 들여 실시 설계를 끝냈다.

주 예비후보 처갓집 땅이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을 용한리는 지난 2001년 포항시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하는데 처가 땅인 산 49-8.9.10.13.14.15.10번지 등 7필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 땅에는 본지가 보도한대로 한차례 주 예비후보 처갓집 땅의 땅 산 49-8.9.10.13.14.15와 산 317.18번지 사이로 도시 계획도로가 결정됐다. 이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오주섭 대표기자

경북일일신문 2018년 4월 30일자 1면

보도 내용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한 주낙영 예비후보 처가 땅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땅은 취락지구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다. 전부 야산이다. 하지만 더 악랄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옥죈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이 하나 더 불거졌다. 주 예비후보 처가 땅 49-10번지가 2010년 5월 17일 소방도로인 소로 2-47로 고시됐다. 이 지번의 땅은 주 예비후보 배우자와 장모, 2명의 처남과 조카 공유로 돼 있다. 이 결정 당시 산 49-10번지는 주민 소유 대지 8필지와 전부 인접해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용한리 마을 주민 소유인 인근 527-1번지 등 8필지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

르고 있었다.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공람 절차를 거쳐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주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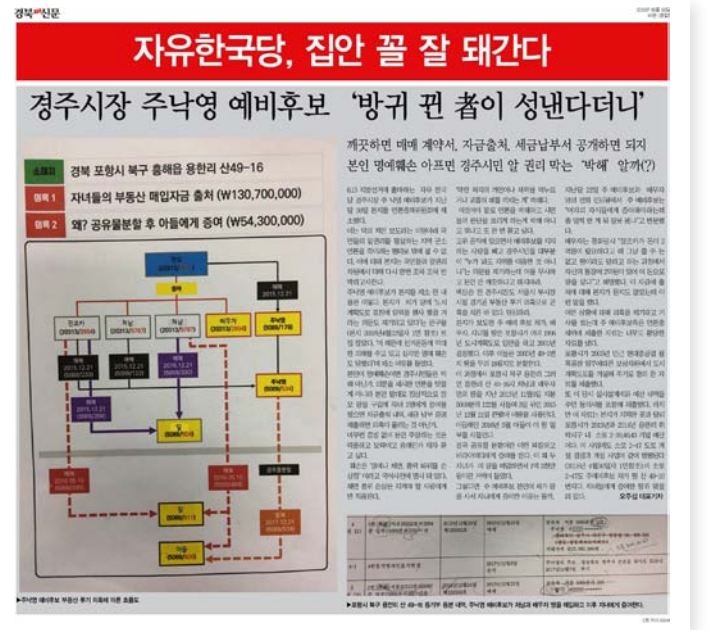
도시계획도로 계획 당시 계획 선은 이들 대지와 이격 거리를 두고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땅 소유주가 한 사람이어서 공람절차가 생략됐고 인접 대지 지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계획이 무산됐기 망정이지 진행이 됐다면 이들 땅 소유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49-10번지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거나 매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결국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됐다.

사진 왼쪽에 붉은 색을 칠해진 부분과 녹색 형광색이 칠해진 부분 다 합쳐서 산 49-10번지다. 당연히 도시계획 도로 선이 인접대지에 걸쳐 그어져야 하는데 녹색 부분이 칠해진 인접대지와는 거리를 뒀다. 공공성은 뒷전으로 사심이 가득한 악질적인 투기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부분이다. 사진 파란색 부분은 본지가 보도했던 처가 땅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된(2018년 4월 23일자 1면 본지 참조) 도시계획도로다. 사진 가운데 이 사업이 지난 2005년 무산되자 붉은색이 칠해진 부분과 함께 아예 대놓고 두 차례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진행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 27일 포항시가 고시한 제2004호-1061호 지형 도면 승인도를 보면 이 계획은 빠져있다. 또 사진 오른쪽 포항시 제2008-52호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에도 빨간색을 칠한 부분이 본지가 첫 번째로 의혹을 제기한 도시계획도록 결정 선이 있지만 이 역시 빠져 있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2010년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이 소로 2-47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지주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 인근 소로 2-39, 2-40, 2-43에 대한 사업이 취소돼 사업비 2억 원 가운데 기 사용된 6백만 원을 제외한 1억9천4백만 원이 반납처리 됐다.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론에 부딪히면서 도로개설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13년 용한리 취락지구에 소로2-29, 2-40, 2-43 도로개설용역비 5천만원을 들여 실시 설계를 끝냈다.

주 예비후보 처갓집 땅이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는 지난 2001년 포항시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처가 땅인 산 49-8,9,10,13,14,15,10번지 등 7필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 땅에는 본지가 보도한대로 한차례 주 예비후보 처갓집 명의 땅 산 49-8,9,10,13,14,15와 산 3,17,18번지 사이로 도시 계획도로가 결정됐다. 이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경북일일신문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깨끗하면 매매 계약서, 자금출처, 세금납부서 공개하면 되지
본인 명예훼손 아프면 경주시민 알 권리 막는 '박해' 알까(?)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49-16
의혹 1 자녀들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W130,700,000)
의혹 2 왜? 공유물분할 후 아들에게 증여 (W54,300,000)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일자 1면

보도 내용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者이 성낸다더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는 악의적인 보도라는 미명아래 국민들의 알권리를 말살하는 지역 군소 언론을 죽이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본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목 조목 반박하고자한다.

주낙영 예비후보가 본지를 제소한 내용은 이렇다. 본지가 처가 땅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을 거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문구를 (본지 2018년 4월 23일자 1면 참조) 트집 잡았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심각한 명예훼손도 당했다'며 제소 이유를 들었다.

본인이 명예훼손이면 경주시민들은 박해 아닌가. 의문을 제시한 언론을 탓할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정상적으로 장모 땅을 구입해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했으면 자금출처 내역, 세금 납부 증명 제출하면 의혹이

풀리는 것 아닌가.

아무런 증빙 없이 본인 주장하는 것은 억울하고 모략이고 음해인가 재차 묻고 싶다.

훼손은 '명예나 체면, 품위 따위를 손상함' 이라고 국어사전에 명시 돼 있다. 체면 품위 손상은 지켜야 할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치는 게' 박해다.

이것이야 말로 언론을 박해하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게 박해 아니고 뭐냐고 또 한 번 묻고 싶다.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경주시민들 대부분이 "누가 봐도 지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본인만 깨끗하다고 하지마라.

백상승 전 경주시장도 서울시 부시장 시절 경기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명심하라.

본지가 보도한 주 예비 후보 처가, 배우자, 자녀들 땅은 포항시가 이미 1996년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하고 2001년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2005년 49-1번지 땅을 무려 18필지로 분할한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 북구 용한리 산 49-16지 처남과 배우자 명의 땅을 지난 2015년 11월 6일 지분 5069분의 122를 사들여 3일 뒤인 2015년 12월 21일 큰딸이 이 땅을 사들인다. 이듬해인 2016년 5월 아들이 이 땅 일부를 사들인다.

결국 공유물 분할이란 이런 복잡하고 버라이어티하게 증여를 한다. 이 때 두 자녀가 이 땅을 매입하면서 1억 3천만 원이란 거액이 들었다.

그렇다면 주 예비후보 본인이 처가 땅을 사서 자녀에게 증여한 이유는 뭘까.

지난달 22일 주 예비후보와 배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 예비후보는 "어차피 자식들에게 증여해야 하는데 좀 일찍 한 게 뭐 잘못 됐냐"고 반문했다.

배우자는 통화당시 "장조카가 돈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 그냥 줄 수는 없고 땅이라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에 2억 원이 있어 이 돈으로 땅을 샀다"고 해명했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본지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기사를 썼는데 주 예비후보측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는 너무도 황당한 자료를 냈다.

포항시가 2005년 인근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입주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협의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 이 당시 실시 설계비와 예산 내역을 주민 동의서를 포함해 제출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본지가 지적한 곳과 달리 포항시가 2013년과 2014년 용한리 취락지구 내 소로 2-39,40,43 개설 예산이다. 이 사업에도 소로 2-47 도로 개설 결정과 개설 사업이 같이 병행된다 (2018년 4월 30일자 1면 참조). 이 소로 2-47도 주 예비후보 처가 땅 산 49-10번지다. 자녀들에게 증여한 땅과 맞물려 있다.

경북일일신문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

포항시 한솔 더 떠 국유지 분할 해 도로 편입(?)
7천여평 이르는 처가 땅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도시계획도로 결정.개설 시도 무산(?)
아예 대놓고 처가 땅 관통토록 도시계획선 그어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는 주낙영 예비후보가 자신의 배우자, 자녀, 처가 명의 땅에 부동산 왕국을 건설 하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 나고 있다.

의문 투성이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이다.

무려 7천여 평에 이르는 땅에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개설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주 예비후보측은 이 과정에서 의혹을 무마키 위해 '도로 사업계획'이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민 피해보상 합의서 서명 자료를 사진을 제출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모든 행동이 선출직에 출마한 시장 예비후보의 도덕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아래 따른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자체적으로 보도해 온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읍전리 49-1번지 일부와 49-1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결정을 두 차례나 시도했다 모두 사업이 무산됐다는 보도를 했다(본지 2018년 4월23일 1면 참조)

하지만 이번다 일시 읍전리 49-11번지에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이 포함시 예산으로 배정됐으나 주민들 반대로 무산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주민들 반대 이유는 "도로 개설이 된다해도 바로앞에서 진입하는 초입부분의 땅 지주인 무시씨만의 혜택을 본다"는 이유였다.

함부 도로가 개설된다해도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관습 도로가 개설 돼었는 데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주 예비후보 처가 땅인 포항시 흥해읍 읍전리 소로 2-30호선 도로 양쪽 모두 주 예비후보 배우자 명의의 49-11번지와 처가 명의 49-6번지를 관통하게 그어져 있다. 이 도로바로 옆에 처가 명의 49-2번지가 있다.

주민들 편에는 달천하고 주 예비후보 처가 땅인 49-11번지, 49-4번지, 49-5번지와 포함지역 유명인사 부인 명의의 525-13, 525-15, 525-11, 525-21번지 등 4필지 등 두 사람만 혜택을 볼게 불보듯 뻔했다.

더 더욱 이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포항시의 행동이다. 이 도로 입구부분인 읍전리 613-3번지는 재권부 땅으로 국유지다.

국유지를 분할 해 이 도로에 편입을 시킨 것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또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주섭 대표기자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8일자 1면

보도 내용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자녀. 처가 땅에 왕국 건설(?)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는 주낙영 예비후보가 자신의 배우자, 자녀, 처가 명의 땅에 부동산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 나고 있다.

의문 투성이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이다.

무려 7천여 평에 이르는 땅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주 예비후보측은 이 과정에서 의혹을 무마키 위해 '도로 사업개설이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민 피해보상 합의서 서명 자료를 제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행동이 선출직에 출마한 시장 예비후보의 도덕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49-1번지 일부와 49-1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결정을 두 차례나 시도했다 모두 사업이 무산됐다는 보도를 했다(본지 2018년 4월 23일. 5월 2일 1면 참조).

하지만 이보다 앞서 용한리 49-11번지에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이 포항시 예산으로 배정됐으나 주민들 반대로 무산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주민들 반대 이유는 "도로 개설이 된다하더라도 바닷가에서 진입하는 초입부분의 땅 지주인 두사람만이 혜택을 본다"는 이유였다.

향후 도로가 개설된다해도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관습 도로가 개설 돼있는데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주 예비후보 처가 땅인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소로 2-39호선 도로 양쪽 모두 주 예비후보 배우자 명의의 49-11번지와 처가 명의 49-4번지를 관통하게 그어져 있다. 이 도로 바로 옆에 처가 명의 49-5번지가 물려있다.

주민들 편의는 뒷전이고 주 예비후보 처가 땅인 49-11번지, 49-4번지, 49-5번지와 포항지역 유명인사 부인 명의의 525-13. 525-15. 525-11. 525-21번지 등 두 사람만 혜택을 볼게 불 보듯 뻔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포항시의 행동이다. 이 도로 입구부분인 용한리 613-19번지는 재경부 땅으로 국유지다.

국유지를 분할해 이 도로에 편입을 시킨 것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또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신문

데스크 노트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주낙영 예비후보 배우자 명의의 땅 복구 확정돼 산 11번지 11-14번지에도 사진 오른쪽처럼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주낙영 예비후보는 미래를 점지하는 능력자로 보인다.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그도 아니면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을 한다는 속담 마냥 처갓집 조상이 보살펴주는 것 같다는 부러움이 느껴진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땅마다 기가 막히도록 절묘하게 도시계획도로선이 지나가는 걸 보면 말이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네 곳이다. 네 곳이 다 어김없이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니 말이다. 후보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배우자가 유치원을 짓겠다며 경매로 낙찰 받은 경산시 백천동 166번지에 있

오주섭 대표기자

CM:0+21.23cm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11일자 1면

보도 내용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주낙영 예비후보는 미래를 점지하는 능력자로 보인다.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그도 아니면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을 한다는 속담 마냥 처갓집 조상이 보살펴주는 것 같다는 부러움이 느껴진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땅마다 기가 막히도록 절묘하게 도시계획도로선이 지나가는 걸 보면 말이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네 곳이다. 네 곳이 다 어김없이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니 말이다.

후보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배우자가 유치원을 짓겠다며 경매로 낙찰 받은 경산시 백천동 166번지에 있

는 옛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 내 2876㎡ 땅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약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후문이다. 대구지역 방송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소리 소문 없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보도된 내용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떠돌았지만 삭제가 됐는지 찾을 수가 없다.

매입 당시 이 지역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로 지정 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다 배우자가 매입한 이 땅은 도로가 없는 맹지였다.

본지가 지난달부터 보도한 주 예비후보 배우자, 자녀, 처남, 장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포항시 북구 용한리 산 49-1번지부터 49-18번지까지 무려 세 차례나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이 땅도 땅이거니와 주 예비후보 배우자와 오빠들이 상속받은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11번지와 분필이 된 산 11-14번지도 지난 2001년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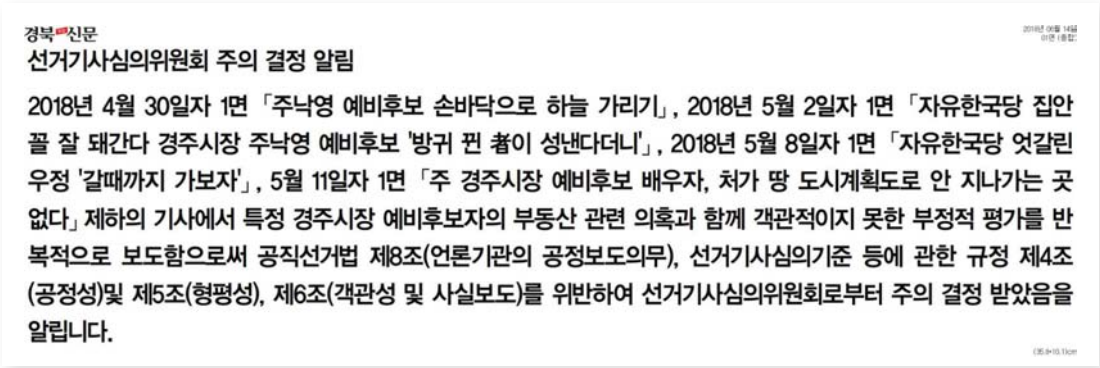
이미 분필이 된 산 11-14번지는 포항시가 전체 4천3백35만원8백 원에 매입을 했다.

이 두 곳은 지난 2001년 같은 해에 포항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안을 놓고 볼 때 이런 걸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옛 어른들이 표현했다면 과장된 것일런지. 본인들이야 왜냐고 이야기 하겠지만 보는 이들은 냄새가 폴폴 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일이다. 본 필자는 지난번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구절을 떠올리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했다. 공직의 몸을 단속하기 위한 제일 먼저 할 일의 선처방법인 사욕을 끊기에 힘쓰고 하나같이 천리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는 율기 6조 가운데 칙궁을 이야기 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을 알 수 없는 양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일까.

[결정 후 보도문]



경북일일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018년 4월 30일자 1면 「주낙영 예비후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2018년 5월 2일자 1면 「자유한국당 집안 꼴 잘 돼간다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2018년 5월 8일자 1면 「자유한국당 엇갈린 우정 '갈때까지 가보자'」, 5월 11일자 1면 「주 경주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처가 땅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가는 곳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경주시장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함께 객관적이지 못한 부정적 평가를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및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경북일일신문 2018년 6월 14일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2
언론사	**주식회사 한남일보** 경남 거제시 고현로9길 25 대표이사 반용근
심의대상기사	한남일보 2018년 5월 2일자 1면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2018년 5월 11일자 1면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2018년 5월 14일자 1면 「김태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UP 7대 공약 발표」, 2018년 5월 16일자 1면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2018년 5월 23일자 1면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 공약」, 2018년 5월 25일자 1면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2018년 5월 28일자 1면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제하의 기사
주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한남일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한남일보〉 1면 하단에 〈별지〉를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8년 5월 16일자 1면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의 부제목(청년창업육성 스테이션G 설립 Action Plan10 공약 발표)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관련 내용을 해당 예비후보자의 사진, 그래픽 등과 함께 1면에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하였다. 살피건대 위 심의대상기사들은 모두 특정 예비후보자에 관한 것으로 타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횟수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심의대상기사에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부각하는 사진 및 그래픽이 여러 차례 사용된 점, 기사가 게재된 지면과 게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심의대상기사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나. 내용 : 본지는 2018년 5월 2일자 1면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2018년 5월 11일자 1면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2018년 5월 14일자 1면 「김태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UP 7대 공약 발표」, 2018년 5월 16일자 1면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2018년 5월 23일자 1면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 공약」, 2018년 5월 25일자 1면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2018년 5월 28일자 1면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의 공약 내용을 사진, 그래픽과 함께 1면에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보도 내용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전 경남지사)가 28일 거제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3시 자유한국당 서일준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차 거제를 찾은 김 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웅 이순신 장군 473주년 탄신일(28일)을 맞아 구국의 고장 거제가 또 한 차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식을 마친 김 후보는 인근 찻집에서 지인들과 만나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경남도지사로 두 차례 출마할 때 모두 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기필코 당선돼 경남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조선이 돌아온다"고 밝히고 "지난 2선의 도지사 재임때는 그 어느 시기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활황을 맞았다"며 "도지사로 당선되면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지사는 "이곳 단체장과 협의, 거제 실정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이 이곳에 들리면 적어도 2~3일 쉬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도 5호선 통영까지의 연장을 비롯한 관광도로 개설에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남일보

2018년 05월 02일
01면 (종합)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거제 지인과 만난자리서 조선산업 부흥 자신감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전 경남지사)가 지난달 28일 거제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3시 자유한국당 서일준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차 거제를 찾은 김 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웅 이순신 장군 473주년 탄신일(28일)을 맞아 구국의 고장 거제가 또 한 차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식을 마친 김 후보는 인근 찻집에서 지인들과 만나 환담했다.

이자리에서 김 후보는 "경남도지사로 두 차례 출마할 때 모두 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이번 또 공교롭게도 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기필코 당선돼 경남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조선이 돌아온다"고 밝히고 "지난 2선의 도지사 재임때는 그 어느 시기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활황을 맞았다"며 "도지사로 당선되면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곳 단체장과 협의, 거제 실정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이 이곳에 들리면 적어도 2~3일 쉬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도 5호선 통영까지의 연장을 비롯한 관광도로 개설에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홍 기자

◀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전 경남지사)가 지난달 28일 거제를 방문했다.

(13.3*17.1)cm

한남일보 2018년 5월 2일자 1면

한남일보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바이오헬스+항노화 융합 플랫폼 구축
남해안 '코리안둘레길' 명품코스 조성, 해양치유자원 최대 활용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중심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와 양산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그리고 김해 중심의 '동남권 양방 항노화' 산업을 연계한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관광'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로 선정된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을 포함한 경남 전체를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치유, 요양 그리고 항노화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남 남부내륙권의 항노화 한방치유프로그램과 청정해양지역의 해양치유자원 그리고 양산의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김해의 '항노화 생산 집적단지'가 연계되어 융합효과가 극대화된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관광(medical tourism)과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중심의 보건관광(health tourism)을 포괄하여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호 후보는 "웰니스 관광과 항노화산업이 융합된 지중해식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은 경남 지역경

▲ 남해안 코리아둘레길 및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지도.

한남일보 2018년 5월 11일자 1면

보도 내용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중심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와 양산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그리고 김해 중심의 '동남권 양방 항노화' 산업을 연계한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관광'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로 선정된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을 포함한 경남 전체를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치유, 요양 그리고 항노화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남 남부내륙권의 항노화 한방치유프로그램과 청정해양지역의 해양치유자원 그리고 양산의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김해의 '항노화 생산 집적단지'가 연계되어 융합효과가 극대화된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관광(medical tourism)과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중심의 보건관광(health tourism)을 포괄하여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호 후보는 "웰니스 관광과 항노화산업이 융합된 지중해식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은 경남 지역경

제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웰니스 관광과 항노화산업의 융합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글로벌 헬스케어 고부가서비스 분야이다.

김태호 후보는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관광' 플랫폼 구축은 단순 관광산업과 연계가 아닌 항노화산업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까지 융합하여 경남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남해안 청정해역치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역사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남해안 코리아 둘레길 명품코스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 해안은 위도상 지중해 남쪽, 이탈리아 반도 이남과 비슷하며 경남의 바다는 거제도 남해도 가덕도 등 큰 섬으로 둘러싸여 동북아에서 드문 지중해식 구조이다.

'코리아 둘레길'은 문체부가 '만남, 치유, 상생, 평화'의 가치구현을 목표로 2016년 7월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코리아 둘레길'은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역사·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해안 코리아 둘레길은 총 4500km에 이르는 코리아 둘레길 중 부산·창원 경계~통영·거제 경계 등 경남구간 642.1km이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는 건강, 휴양 등과 관련된 관광자원들을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또 웰니스 관광 플랫폼은 웰니스 관광 뿐만 아니라 항노화·바이오헬스·의생명산업을 융합한 경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전략이다.

김 후보는 정부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더해 경남 남해안 전지역의 천연해양 치유자원을 추가하기 위해 '남해안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하고 항노화·바이오헬스·의생명 산업같은 신성장 산업을 결합시키는 시너지 프로젝트로 新 남해안중심시대를 공약했다.

한남일보

2018년 05월 14일
01면 (종합)

김태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UP 7대 공약 발표

신용보증기금 매년 100억 원 증액… 지원정책 등 강화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김태호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활력UP Plan 7'공약을 발표했다.

세부공약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용보증공급 대폭 확대 △팹랩(FAB LAB) 운영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확대4. △도지사 직속 중소상공인 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맞춤형 4단계 지원정책 강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 추진 △소상공인 전용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개발 등이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출연하는 10~40억 원의 출연금을 1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출연금의 15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팹랩(FAB LAB: Fabrication Laboratory. 제작실험실) 운영을 통해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 기업가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지사 직속 중소상공인 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창업-성장-정리-재창업'에 이르는 소상공인 맞춤형 4단계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 항공, 조선 등 경남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재산업 발전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하고 소상공인 전용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경남의 기초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튼튼해진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완성도 높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창출을 내걸었으나 현실은 17년 만에 사상 최고의 실업률, 청년체감 실업률은 무려 24%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ksh@hannamilbo.com

(12.0*26.2)cm

한남일보 2018년 5월 14일자 1면

보도 내용

김태호 후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UP 7대 공약 발표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한 '김태호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활력UP Plan 7'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공약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용보증공급 대폭 확대 △팹랩(FAB LAB) 운영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확대 △도지사 직속 중소상공인 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맞춤형 4단계 지원정책 강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 추진 △소상공인 전용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개발 등이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10~40억 원의 출연금을 1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출연금의 15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팹랩(FAB LAB: Fabrication Laboratory. 제작실험실) 운영을 통해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 기업가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공간을 제공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지사 직속 중소상공인 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창업-성장-정리-재창업'에 이르는 소상공인 맞춤형 4단계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 항공, 조선 등 경남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재산업 발전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전용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남의 기초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튼튼해진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완성도 높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창출을 내걸었으나 현실은 17년 만에 사상 최고의 실업률, 청년체감 실업률이 무려 24%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마추어리즘 정책은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일보

2018년 05월 16일
01면 (종합)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청년창업육성 스테이션G 설립
Action Plan10 공약 발표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15일 경남의 청년들이 큰 꿈을 꾸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김태호의 청년 큰 꿈 Action Plan 10'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스타트업 육성시설 스테이션G(경남형 스테이션F) 설립은 △대학생 공공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서민자녀 대학생·취업준비생 교육비 지원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포럼 운영 △글로벌 청년 해외인턴사업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추진 △고용우수기업 인증·고용 인센티브 지원 확대 △경남형 재형저축 경남행복일자리적금 5만 원+ 지원금 확대 △서민자녀 대학장학금 확대 지원 △청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등이다.

김 후보는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스타트업 육성시설인 '스테이션G'를 설립해 경남을 세계적인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테이션G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프랑스의 스테이션F를 모델로 만들어진다.

스테이션G는 분산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의 틀로 묶어 창업·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남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공공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경남도 지역내 서민자녀 대학생·취업준비생에게 교육비(도서 구입·학원비 등)를 지원해 학업·취업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일자리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지사와 일자리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의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 나가기 위해 김 후보는 "글로벌 청년 해외인턴사업을 확대하고 경남도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우량기업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는 "청년실업률은 11.6%에 이르고 청년 체감 실업률 24%, 취업준비인구는 69만 6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실업치를 기록하는 등 암울한 현실에 처해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주고 보듬어주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국 기자 kbg@hannamilbo.com

(11.9*26.1)cm²

한남일보 2018년 5월 16일자 1면

보도 내용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경남의 청년들이 큰 꿈을 꾸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김태호의 청년 큰 꿈 Action Plan10'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스타트업 육성시설 스테이션G(경남형 스테이션F) 설립은 △대학생 공공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서민자녀 대학생·취업준비생 교육비 지원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포럼 운영 △글로벌 청년 해외인턴사업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추진 △고용우수기업 인증·고용 인센티브 지원 확대 △경남형 재형저축 경남행복일자리적금 50,000+ 지원금 확대 △서민자녀 대학장학금 확대 지원 △청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등이다.

김 후보는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청년 스타트업 육성시설인 '스테이션G'를 설립해 경남을 세계적인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테이션G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프랑스의 스테이션F를 모델로 만들어진다. 스테이션G는 분산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의 틀로 묶어 창업·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남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공공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 내 서민자녀 대학생·취업준비생에게 교육비(도서 구입, 학원비 등)를 지원하여 학업·취업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지사와 일자리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의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 나가기 위해 김후보는 '글로벌 청년 해외인턴사업'을 확대하고, 경남의 대기업·중견기업 등 우량기업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년실업률은 11.6%에 이르고, 청년 체감 실업률 24%, 취업준비인구는 69만 6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실업치를 기록하는 등 암울한 현실에 처해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주고 보듬어주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내용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 공약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체계'로 교통비와 교통시간을 확 줄이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출퇴근·심야시간 맞춤형 버스노선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한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경남교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은 △동남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버스 도입 △경남도-부산시-시군 광역교통협의체 구성 △빅데이터 기반 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까지 손실보전과 교통카드, 환승교통시스템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창원↔김해' 간의 환승체계 문제부터 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루 기준 78만여 명이 창원↔김해↔양산 간 광역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히 '창원↔김해' 양방향 동일 생활권 광역교통 발생량은 60만 명으로 경남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풀리면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30분, 요금은 500원에서 7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1단계로 동부권의 '창원↔김해↔양산↔부산', '창원↔함안 구간 광역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이어 2단계는 서부권의 '진주↔사천', 3단계는 남해안권의 '통영↔거제'로 이어지는 '권역별 환승체계'를 도입해 '사통팔달'의 '경남교통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승버스노선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신규 수요지역과 외곽지역의 탄력노선 조정 등 기존 노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대중교통 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남일보

2018년 05월 23일
01면 (종합)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 공약

신규 수요지역 외곽지역 기존 노선 단계적 조정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체계"로 교통비와 교통시간을 확 줄이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출퇴근, 심야시간 맞춤형 버스노선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한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경남교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은 △동남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버스 도입 △경남도-부산시-시군 광역교통협의체 구성 △빅데이터 기반 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까지 손실보전과 교통카드, 환승교통시스템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창원↔김해'간의 환승체계 문제부터 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루 기준 78만 여명이 창원↔김해↔양산 간 광역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히 '창원↔김해' 양방향 동일 생활권 광역교통 발생량은 60만 명으로 경남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풀리면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30분, 요금은 500원에서 7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1단계로 동부권의 '창원↔김해↔양산↔부산', '창원↔함안 구간 광역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이어 2단계는 서부권의 '진주↔사천', 3단계는 남해안권의 '통영↔거제'로 이어지는 '권역별 환승체계'를 도입해 '사통팔달'의 '경남교통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승버스노선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신규 수요지역과 외곽지역의 탄력노선 조정 등 기존 노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대중교통 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국 기자 kbg@hannamilbo.com

(11.7*13.8)cm²

한남일보 2018년 5월 23일자 1면

한남일보

2018년 05월 25일
01면 (종합)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김태호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는 지난 24일 "농·수·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도시 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농수축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마을 공동화현상·지역사회침체가 우려된다"며 "생산, 제조, 체험 등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농수축산업의 6차산업화는 소득, 고용의 파급효과가 단일산업보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경남을 6차산업화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경남의 귀농인구는 약 3000명으로 전국 3위, 30~40대 청년의 비중은 43.1%로 6차 산업을 이끌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의 생산물과 식품산업, 관광산업 등을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산·양식업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첨단 복합양식센터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정밀진단기능을 강화한 축산·축산물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 어민, 축산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1993년 일본 지자체와 민자 기업, 사업자가 연계해 간선도로변이나 국도변에 휴게공간을 설치해 생산물 전시·홍보·판매·식사·휴식·숙박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한 로컬푸드 마트(길 위의 역)를 벤치마킹한 것.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생산규모 축소, 수입품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그리고 원산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자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로컬푸드 마트가 많다. 지금은 그 자체만으로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경남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생산물 직거래를 통한 판로확대는 물론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농업 생산 및 판로확대, 생산품 수출확대 및 학교급식연계 등 직거래 확대로 로컬푸드시스템 활성화를 돕고 농어촌 스마트 팜과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확산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도지사 직속 민간참여 농수축산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남의 농가소득은 2016년 기준 3424만 원으로, 농촌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50~6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도 62.9%수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2015년 기준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의 경우, 농촌과 도시가 4배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소득이 적은 농가에서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남의 성장촉진지역은 10개시군(밀양·거창·함양·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합천)이 선정돼 있으며 이 지역은 인구감소 위험률이 38.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따라서 농촌, 농업과 어촌, 어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남경제의 균형발전과 성장전략은 매우 시급하다. /강병국 기자

(24.2×15.5)cm²

한남일보 2018년 5월 25일자 1면

보도 내용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김태호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는 24일 "농·수·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도시 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농수축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마을 공동화현상·지역사회침체가 우려된다"며 "생산, 제조, 체험 등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농수축산업의 6차산업화는 소득, 고용의 파급효과가 단일산업보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경남을 6차산업화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경남의 귀농인구는 약 3,000명으로 전국 3위, 30~40대 청년의 비중은 43.1%로 6차 산업을 이끌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의 생산물과 식품산업,

관광산업 등을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산·양식업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첨단 복합양식센터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정밀진단기능을 강화한 축산/축산물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어민, 축산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어가 활성화를 위해 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어창업자금 주택구입 자금 저리 대출, 영농비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농·수·축산물 생산물 직거래와 지역관광을 돕기 위해 간선도로·국도변 로컬푸드 마트형 휴게소 운영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1993년 일본 지자체와 민자 기업, 사업자가 연계해 간선도로변이나 국도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생산물 전시·홍보·판매·식사·휴식·숙박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한 로컬푸드 마트(길 위의 역)를 벤치마킹한 것.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생산규모 축소, 수입품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그리고 원산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자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로컬푸드 마트가 많다. 지금은 그 자체만으로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경남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생산물 직거래를 통한 판로확대는 물론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농업 생산 및 판로확대, 생산품 수출확대 및 학교급식연계 등 직거래 확대로 로컬푸드시스템 활성화를 돕고 농어촌 스마트 팜과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확산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도지사 직속 민간참여 농수축산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남의 농가소득은 2016년 기준 3,424만 원으로, 농촌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50~6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도 62.9% 수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2015년 기준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의 경우 농촌과 도시가 4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을 정도로, 소득이 적은 농가에서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남의 성장촉진지역은 10개 시군(밀양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남해, 합천)이 선정돼 있으며, 이 지역은 인구감소 위험률이 38.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따라서 농촌, 농업과 어촌, 어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남경제의 균형발전과 성장전략은 매우 시급하다.

한남일보
2018년 05월 28일
01면 (종합)

▲ 지난 25일 김태호 후보는 박용안 도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30여분 간의 좌담회를 마친 후 서일준 시장후보를 비롯 자유한국당 거제지역 후보들과 함께 고현종합시장과 옥포중앙시장을 잇따라 찾아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당선되면 해외시장 조선 수주 직접 나서겠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25일 거제를 찾아 서일준 거제시장 후보 등 지역출마자들과 함께 표심을 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박용안 경남도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새로운 경남발전과 거제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사했다.

특히 김 후보는 "내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회담이 취소 됐다는 소식을 접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회담 일정의 중간역할을 했던 현 정부가 역풍을 맞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말이 너무 앞선다. 일자리 정책 등이 실패했다. 모두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이 시작됐는데 상대 후보(더불어민주당 김경수)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어 과연 그에게 경남의 미래를 맡길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에서 거제시가 조선업 위기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전 경남도지사 시절 해외로 직접 방문해 수주를 독려 하는 등 당시 운도 따랐지만 조선업 호황을 이끈 경험도 있다.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서일준 시장 후보와 함께 해외시장으로 조선업 수주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자유한국당 거제시장 후보는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조선업 위기를 비롯, 지역의 시급한 문제인 계룡산터널을 지방도로 승격, 소요되는 예산(약 1000억 원)을 국, 도비로 확보하는 등 지역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또 이날 박용안 도의원 후보는 김태호 후보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자유한국당 채종신, 조호현, 임태성, 신금자 시의원 후보들 및 지역 유권자 100여 명은 거제를 찾은 김태호 경남지사후보를 연호했다.

이어 김태호 후보는 장날을 맞은 고현재래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옥포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김대홍 기자

(12.1×26.3)cm

한남일보 2018년 5월 28일자 1면

보도 내용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가 25일 거제를 찾아 서일준 거제시장 후보 등 지역출마자들과 함께 표심을 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박용안 경남도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새로운 경남발전과 거제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사했다

특히 김 후보는 “내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회담이 최근 취소 됐다는 소식을 접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또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회담 일정의 중간역할을 했던 현 정부가 역풍을 맞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말이 너무 앞선다. 일자리 정책 등이 실패했다. 모두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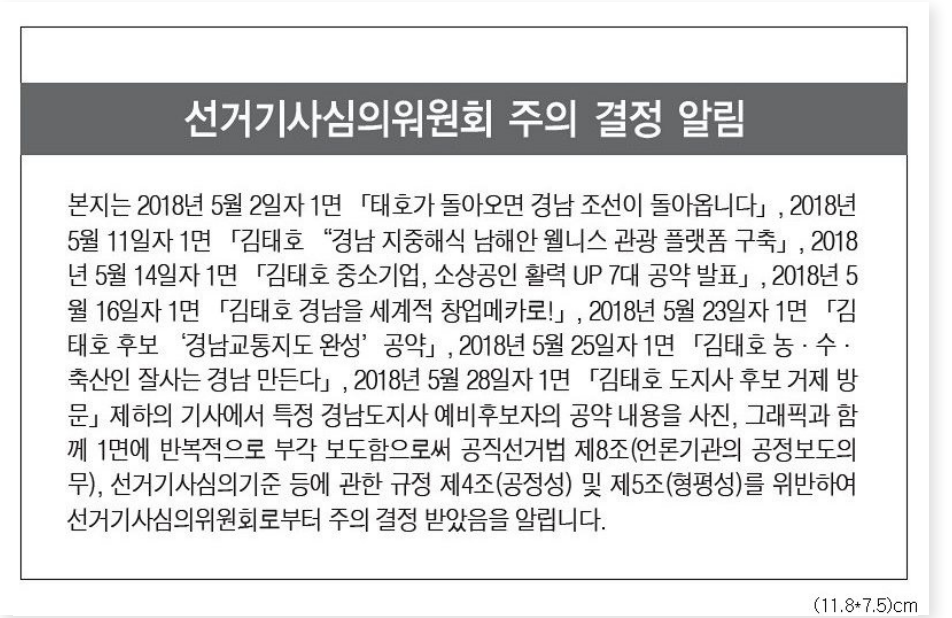
또 “최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이 시작됐는데 상대 후보(더불어민주당 김경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경남의 미래를 맡길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에서 거제시가 조선업 위기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전 경남도지사 시절 해외로 직접 방문해 수주를 독려하는 등 당시 운도 따랐지만 조선업 호황을 이끈 경험도 있다.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서일준 시장 후보와 함께 해외시장으로 조선업 수주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자유한국당 거제시장 후보는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조선업 위기를 비롯, 지역의 시급한 문제인 계룡산터널을 지방도로 승격, 소요되는 예산(약 1,000억 원)을 국, 도비로 확보하는 등 지역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또 이날 박용안 도의원 후보는 김태호 후보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자유한국당 채종신, 조호현, 임태성, 신금자 시의원 후보들 및 지역 유권자 100여 명은 거제를 찾은 김태호 경남지사후보를 연호했다.

이어 김태호 후보는 장날을 맞은 고현재래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옥포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지는 2018년 5월 2일자 1면 「태호가 돌아오면 경남 조선이 돌아옵니다」, 2018년 5월 11일자 1면 「김태호 "경남 지중해식 남해안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 2018년 5월 14일자 1면 「김태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UP 7대 공약 발표」, 2018년 5월 16일자 1면 「김태호 경남을 세계적 창업메카로!」, 2018년 5월 23일자 1면 「김태호 후보 '경남교통지도 완성' 공약」, 2018년 5월 25일자 1면 「김태호 농·수·축산인 잘사는 경남 만든다」, 2018년 5월 28일자 1면 「김태호 도지사 후보 거제 방문」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의 공약 내용을 사진, 그래픽과 함께 1면에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11.8*7.5)cm

한남일보 2018년 6월 8일자 1면

3. 경고 결정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
언론사	**주식회사 전주신문(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8 극동빌딩, 6층 대표이사 신영배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8년 2월 22일자 14면 「지방선거의 멋진 결과를 기대하며」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평화당 후보를 선택한다면 적당한 견제도 되고, 감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등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포함한 칼럼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일보

발행인칼럼

지방선거의 멋진 결과를 기대하며

신영배
대표이사

〈전주일보 2018년 2월 22일자 14면〉

보도 내용

지방선거의 멋진 결과를 기대하며

지난 13일부터 교육감과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의 존재가치가 재평가 될 전망이어서 여느 선거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는 축제처럼 치러져야 하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멋진 게임이 되어야한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선거를 치러왔고, 선거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아직도 불공정 선거라는 느낌은 여전한 것 같다.

실제로 현역 단체장은 후보등록 전까지 업무를 빙자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다른 후보들은 예비후보 운동기간 동안 공공장소 이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 현역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이다. 이 같은 불공정한 선거법 때문에 현역 단체장은 연속적으로 당선할 수 있는 공산이 매우 크다. 한마디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루는 것과 같다.

여기에 불공정 요소가 하나 더 있다. 선거가 시작된 이래 호남은 언제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동안 당명은 수차례 바뀌었어도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언제나 민주당이었다. 자유당이니, 공화당, 민정당 따위의 여당에게 표를 준 일은 거의 없다.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를 찍어야 살 수 있었던 독재정권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했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동안 호남의 유권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라는 막대기만 꽂아두어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선거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변화가 왔다. 민주당에서 갈려나간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정당선택의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호남인들은 보수정당과 성향이 다른, 개혁진보를 표방하는 새로운 깃발을 든 국민의당에 아낌없이 표를 주었다. 20대 총선은 민주당의 독주에 피로해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경각심을 준 선거였다.

그 결과 국회의원 39석을 차지하는 제3당이 탄생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맞추는 균형추가 되어 양당 정치구도를 3당 구도로 개편하는 이른바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

그런데, 안철수라는 국민의당 중심인물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안철수는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 출마했으나 보수의 밭에서 자란 본성이 드러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가까스로 3등을 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측근이 불법을 저질렀어도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수하들만 감옥에 보

냈을 뿐만 아니라 사상초유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보수를 표방하는 국회의원수 9석의 미니정당인 바른정당과 억지로 통합을 했다.

통합과정에서 보수정당과 섞일 수 없는 전북출신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었다. 생리가 맞지 않는 보수정당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이들에게 새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연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전북의 유권자들에게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또 다른 정당과 후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필자는 어쩌면 전북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지난 총선과 대선의 영향으로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올해 편성된 전북예산과 군산 GM문제 등에서 여실히 느끼고 있다.

또 새만금 공사에서 지역 업체와 협력하는 데 대한 가산점이 주어져 발주하는 공사마다 전북업체들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20대 국회 전북출신 의원들은 전북 예산이나 현안을 위해 맹렬한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주의를 말하는 자체가 우습지만 우리 전북이 처한 위치는 대범하게 넘어갈 형편이 아니다. 우선 군산의 현대조선이 조업을 중단했고, GM공장도 폐쇄를 단행했다. 전북 경제의 20% 이상이 허물어졌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는 6.13 지선에 대한 예측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민주당 출마 예상자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의회나 기초의회도 민주당 출마 예상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방의회조차 민주당이 완전독식을 하게 되면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끼리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의 밀실행정이 되어도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방의원은 민주평화당 후보를 선택한다면 적당한 견제도 되고 감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도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교육행정은 바르기만 한 것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바르고 폭넓은 경험과 능력이 증명된 인물이 전북교육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듯하다. 전북의 인재를 기르는 수장은 편협하지 않고 바르고 힘 있게 이끌 인물이 선택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
언론사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 대표이사 김찬수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8년 2월 26일자 19면 「바른미래당 다음달 일낸다」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경북 지역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약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지역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이라고 표현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도민일보

2018년 02월 26일 19면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바른미래당 다음달 일낸다

이창재 편집국 부국장

지방선거 실패시 총선구도 고전 예상… 인재영입 사활 한국당 유력 당직자들 일부 당적 이동설 솔솔 나돌아 일각, 보수심장 대구정치권 바람몰이 시나리오 주목

'바른미래당의 TK(대구경북) 약진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TK 약진 시나리오가 지역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보수 텃밭 TK에서 제1야당자리를 놓고 국회 의석상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으로 비견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총선구도에서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지역정가의 현 분석이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대구경북 시도당 공동위원장들인 유성걸 전 의원과 사공정규 공동위원장, 권오을 도당 위원장 등은 인재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과 남북 안보논란 등에 묻히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보수개혁 따뜻한 보수로의 바른미래당 통합 컨벤션 효과가 다소 미비한데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다음달 여야 공천정국이 본격 도래할 경우 지역정치권의 대변혁이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일단 보수심장 대구정치권의 바른미래당 바람몰이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이미 바른미래당 소속 현역 구청장들이 포진된 동구와 중구의 필승구도속에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중 절반 정도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거목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한 진정성 바람이다.

아직 바람이 일지 않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에 대한 지역의 대표성과 기득권을 지키는 온탕보다 차디찬 냉탕을 찾는 진정성에 대한 호감도와 동정여론이 지역 한국당 유력 당직자들의 맘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이들 중 일부가 한국당을 탈당,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이라는 예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이유다.

특히 다음달 한국당의 공천전이 본격화되면서 도출할 공천 갈등 국면속에 한국당을 이탈, 무소속 후보로 나설 인물들이 바른미래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돈다.

실제 한국당 공천권을 쥔 일부 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불화설이 나도는 남구와 달성군의 유력 주자들의 이름도 거명된다.

지역내 상당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보유한 이들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설 경우 한국당으로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형사진이다.

전략공천 운운론자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전략공천을 대거 쾌척한다면 바른미래당은 되레 호재가 된다는 예기다.

경선을 하자니 경선 후유증에 따른 탈락자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전략공천을 하자니 바른미래당에 호재를 줄 수 있어 이래저래 한국당의 고심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구보다 한국당 민심이 강한 경북의 경우 강도가 약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약진 바람몰이 신호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리와 진정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의 마당발 인재영입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는 바른미래당이 아직 시너지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공천정국이 본격 도래할 경우 잠재된 보수변혁 바람도 무시못한다며 "다당제하에서 치러질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일당독식 한국당 정치판을 견제할 유일한 개혁보수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2.4×15.9)cm

〈경북도민일보 2018년 2월 26일자 19면〉

보도 내용

바른미래당 다음달 일낸다

6·13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TK 약진 시나리오가 지역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보수 텃밭 TK에서 제1야당자리를 놓고 국회 의석상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으로 비견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총선구도에서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지역정가의 현 분석이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대구경북 시도당 공동위원장들인 류성걸 전 의원과 사공정규 공동위원장, 권오을 도당 위원장 등은 인재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과 남북 안보논란등에 묻히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보수개혁 따뜻한 보수로의 바른미래당 통합 컨벤션 효과가 다소 미비한데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다음달 여야 공천정국이 본격 도래할 경우 지역정치권의 대변혁이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일단 보수심장 대구정치권의 바른미래당 바람몰이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이미 바른미래당 소속 현역 구청장들이 포진된 동구와 중구의 필승구도 속에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중 절반 정도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기폭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한 진정성 바람이다.

아직 바람이 일지 않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에 대한 지역의 대표성과 기득권을 지키는 온탕보다 차디찬 냉탕을 찾는 진정성에 대한 호감도와 동정여론이 지역 한국당 유력 당직자들의 맘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이들 중 일부가 한국당을 탈당,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이유다.

특히 다음달 한국당의 공천전이 본격화되면서 도출할 공천 갈등 국면속에 한국당을 이탈, 무소속 후보로 나설 인물들이 바른미래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돈다.

실제 한국당 공천권을 쥔 일부 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불화설이 나도는 남구와 달성군의 유력 주자들의 이름도 거명된다.

지역내 상당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보유한 이들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설 경우 한국당으로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청사진이다.

전략공천 옹호론자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전략공천을 대거 펼친다면 바른미래당은 되레 호재가 된다는 얘기다.

경선을 하자니 경선 후유증에 따른 탈락자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전략공천을 하자니 바른미래당에 호재를 줄 수 있어 이래저래 한국당의 고심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구보다 한국당 민심이 강한 경북의 경우 강도가 약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약진 바람몰이 신호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리와 진정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의 마당발 인재영입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는 바른미래당이 아직 시너지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공천정국이 본격 도래할 경우 잠재된 보수 변혁 바람도 무시못한다며 “다당제하에서 치러질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일당독식 한국당 정치판을 견제할 유일한 개혁보수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
언론사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4층 대표이사 신상철
심의대상기사	일요신문 2018년 2월 18일자(1344호) 10~11면 「"지방선거 PK서도 여당 승리 보인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서울과 경기권의 70%, 호남·충청·경북·경남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는 역술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선거 PK서도

특집 연초부터 여의도는 요동치는데… 무술년 국운과 대통령 운세

문 대통령 작년부터 대운 앞으로 7년간 지속…여야 개헌 관련 정쟁 증폭 하반기 남북 왕래 금강산 관광 등 재개…이명박 올해 '쾅' 내년운은 좋아

여당 승리 보인다"

일요신문 2018년 2월 18일자 10~11면

보도 내용

"지방선거 PK서도 여당 승리 보인다"

단기 4351년, 서기 2018년. 무술년 개의 해가 밝았다. 올해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거세지는 국외 압박과 함께 6·13 지방선거와 31년 만의 개헌 움직임으로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진과 잦은 화재 사고로 소란스럽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맞을까. 무술년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역술가들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운세가 대운이라고 점쳤다. '일요신문'은 대한민국의 국운과 문재인 대통령의 운세를 유명 역술인인 백운산 역술가(한국역리학회 작명학연구위원회 중앙회장)와 김경혁 역술가(열린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 명리학 특임교수)의 도움으로 알아보았다.

두 역술가 모두 문 대통령의 운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백 역술가는 "올해의 대통령 운이 굉장히 좋다. 문 대통령이 지혜와 선심을 베풀 것이고, 백성(국민)이 평온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운은 '편인'(많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주는 것)이니, 무술년 운은 '대길발복운세'다. 작년부터 문 대통령에게 대운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 대운은 7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역술가도 "문 대통령의 사주는 수(水)와 목(木)의 기운이 두드러지고 힘이 있다. 사주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리더로서 조직을 장악하고 목표를 향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2016년부터는 타고난 강력한 힘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나 권력을 얻는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2017년에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데에는 운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역술가는 "그러나 상황 변화에 둔감하고, 어떤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진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대처 능력은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다"며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강해서 '황소고집''불통'이라는 평도 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관상은 전형적인 권력가의 상(相)이다. 이마와 광대뼈가 넓고 도톰한 모양으로 이는 권력과 명예를 상징한다. 또 추종 세력과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양악과 아래턱도 잘 발달해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얼굴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유난히 입을 꽉 다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욕망과 야심이 커 끝내 성취해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눈은 약간 돌출돼 감정에 따라 급격하게 눈동자의 형상과 기운이 변화하는데, 이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다.

올해 정치권은 지방선거와 개헌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앞두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새로운 4당체제가 시작되며 정치지형에 변화가 생겼다. 정치권에 회오리가

몰아치며 분열상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 역술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투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후반기부터는 소통하고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상으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쟁이 증폭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역술가는 "한국당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해 어려운 전망을 내비쳤다.

지방선거를 120일가량 앞둔 현 상황에서, 부산은 물론 인천과 같은 보수성향이 짙은 지역에서조차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는 등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백 역술가 역시 지방선거에 대해 여당의 승리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서울과 경기권의 70% 지역이 여당 승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호남과 충청도도 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이한 것은 경북과 경남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창올림픽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따랐다. 올해 국운이 좋기 때문에 6위권 내에 드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백 역술가는 "대통령의 운이 좋기 때문에 올림픽 성공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역술가는 평창올림픽의 실패를 우려했다. 그는 "올림픽의 초점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 맞춰진다면 본질이 흐려져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토(土)'는 모든 것의 기본이며 바탕이다. '토'의 기운이 강한 해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세계인의 축제'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외 관계도 올해 9월부터는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백 역술가는 후반기부터 남과 북의 왕래가 있을 것이며, 냉전을 유지하던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두 번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 역술가는 무역문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김 역술가 역시 내수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내수경기 회복의 열쇠는 '토'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으로 인한 경기에는) '토'의 기운과 상생이 되는 국가, 바로 미국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역술가는 최고 권력자(문 대통령)와 그를 둘러싼 지식인 그룹(청와대 참모 또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모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드넓은 대지(土)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만물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관용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역술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올해 운세는 좋지 못하다고 전망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내년부터는 운이 좋은 점을 미뤄볼 때 올해 구속되더라도 집행유예·무죄판결·특별사면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4
언론사	**디엠코리아 주식회사 (도민일보)**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본관1층 발행인 현재오
심의대상기사	도민일보 2018년 3월 5일자 18면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북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프로필, 사진 및 출마소식 등을 기획기사로 부각 보도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다

도민일보 2018년 3월 5일자 18면

보도 내용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만나다

민생투어로 '남행열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0일차를 맞아 상주와 문경을 방문, "누가 경북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는 도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더 열심히 현장에서 도민들과 만나겠다."고 굳은 다짐을 밝혔다.

지난 2월 27일 남 후보는 오전 담수회 상주지회 정기총회와 상주문화원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지역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중진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경북문화재단' 설립과 '문화부지사' 신설 공약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남 후보는 "경북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정신문화인 창(窓)"임을 강조하면서 "전통문화 보존과 더불어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전문적, 지속적으로 담당할 '문화부지사'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수도권에는 작은 시단위에도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해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에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경북문화재단'을 창립, 지역 문화의 장기 비전을 연구하고, 나아가 경북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한편, 남유진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경북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주요 공약으로 '문화부지사' 신설과 '경북문화재단' 창립 계획을 밝혀 타 후보들이 내 놓은 문화공약과 차별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어 남유진 후보는 상주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경북 백두대간의 산림자원을 활용, '세계산림박람회'를 유치해 산림휴양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상주 중앙시장 및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 일정으로 문경을 향해 목적지를 바꾼 남 후보는 가장 먼저 점촌JC에서 청년 리더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 규탄대회' 참석을 언급하면서 "작금의 원인이 된 탄핵정국 때는 정작 한마디도 못하던 중진 국회의원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곳에서 도지사가 되겠다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지적한 후 "경상북도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초라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청높이는 정치인이 진짜다. 경상북도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결국 최후의 판단은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저는 그저 더 열심히 도민들과 만나기 위해 한결같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유진 후보는, 문경 불교사찰 연합회 윷놀이 한마당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았다. 남 후보는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늘 오늘처럼 도민들이 살맛나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미리 덕담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남 후보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찾았다. 그는 영남대 행정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구미동창회 고문으로 인사말을 통해 "김관용 지사님으로부터 혹독한 목민관 수업을 27년간 받았고, 이제 그 뒤를 이을 경북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지사님께 받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북 발전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5
언론사	**디엠코리아 주식회사 (도민일보)**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본관1층 발행인 현재오
심의대상기사	도민일보 2018년 3월 7일자 20면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북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내용을 사진과 함께 기획기사로 부각 보도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2018년 3월 7일 수요일 기 획 제 2623호 도민일보

교육이 변해야 희망이 보입니다

교육감은 역사 이경희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다

교육적 난제와 시대적 소명 해결 위한 교육 지도자 필요
교육 행정 관행 타파, 유연 · 개방 조직 풍토로 혁신해야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고충 극복하는 대변혁 이루어야

도민일보 2018년 3월 7일자 20면

보도 내용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다

"교육적 난제와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 교육 및 행정 경험과 미래를 조망하는 전문적인 혜안은 물론, 투철한 교육관과 도전적 실천력을 갖춘 희망의 교육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경희 경상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이 후보는 "오늘날 학교안을 들여다보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심각한 고충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소신을 피력한다.

"교육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가겠다"는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출마의 변과 앞으로의 소신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Q 경북교육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폭력 등의 일탈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변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지금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 난제와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 및 행정 경험과 미래를 조망하는 전문적인 혜안은 물론, 투철한 교육관과 도전적 실천력을 갖춘 희망의 교육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Q 현재 경북이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오늘날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심각한 고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은 강요된 학업 스트레스, 크고 작은 안전사고, 학교 폭력과 미래 진로 선택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사들은 자존감 상실, 학생 생활지도와 과중한 행정적 업무 부담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의 진로문제 때문에 어쩌면 학생들과 선생님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충은 낱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모든 도민과 교육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풀어야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북

의 학생들을 학교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이 보듬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교육 행정 관행을 타파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풍토로 혁신해야 합니다.

Q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 안고 있는 고충을 극복하는 대변혁을 이루어야만 우리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학교 만들기 10대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교육 공동체의 세 가지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이 만성적 피로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사기와 역동성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교육목표나 개인적 가치 실현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10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진정한 지역 교육 자치 확대 ▲개방형 교육행정 시스템 도입 ▲미래형 학교 모델 도입 ▲교육급식 전면 확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맞춤형 진로교육 ▲위기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평등화 실현 ▲온종일 돌봄 보장 ▲가치 체험 학기제 도입 등입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학교 현장의 물리·심리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겪은 유례없는 지진과 연속된 여진으로 모든 지역의 주민들과 특히 학부모들께서 학교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경북이 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은?

지금까지 경북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명품교육 10년 동안 시·도교육청 비교 평가 등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교육공동체가 안고 있는 부담과 고통의 체감 지수는 더욱 심화되고, 성과위주와 입시중심의 역피라미드식 교육 정책으로 학교급간, 학교간, 지역간 교육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교육이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폐쇄적이고 경직된 교육행정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과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시스템은 물론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결코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가치로운 일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가치관 형성'을 경북 교육의 비전으로 삼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북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북도민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선 경북교육의 지도자는 경북의 혼을 담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유치원, 초·중등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 경북교육청의 장학사 및 장학관을 거치면서 새로운 교육 정책의 개발과 현장 적용으로 학교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온 혁신적인 교육 정책가, 포항교육장을 역임하면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 온 교육행정가, 경북에서 태어나 경북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경북의 혼을 담고 있는 미래형 교육지도자라고 자부합니다.

"학생다운 학생,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경북의 미래는 바로 희망 교육", "희망 교육은 바른 가치관 중심의 기초·기본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중심에 언제나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의 희망을 꽃피우겠습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6
언론사	**주식회사 선경일보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2 사장 배영래
심의대상기사	선경일보 2018년 3월 5일자 12면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여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내용을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경일보

12 www.sktimes.co.kr 선경일보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으로 본격 선거운동 돌입

여주시장 예비후보 이 충 우

선경일보 2018년 3월 5일자 12면

보도 내용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 낙선한 이후 꾸준하게 지역의 표밭을 일궈온 이충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6.13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캠프인 선거 사무실을 여주시 세종로 13(농협중앙회 여주지부 건너편)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여주시장 예비후보로 첫 발을 뛰는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충우 예비후보는 30여 년간 여주군청과 경기도청을 거치며 현장을 이끌었던 도시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여주의 발전에 있어 끝없는 정체의 반복이 안타까워 정체의 유리벽을 깨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고 4년 전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오며 지금까지도 낮은 자세로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해온 덕에 특별한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도 슬로건 한 줄 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실로 대변하며 지난 4년간 시민들 속에서 함께 느끼고 호흡하고 공유하여 얻어낸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여성복지, 경제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64개의 중점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 회견이 이루어 졌다.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밝힌 중점과제로는 십 수 년간 정체되어 있는 여주시의 인구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유치하며 24시간 보육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최고의 직업으로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경기도 최하위 보급률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에 심혈을 기울여 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인 여주 농산물과 도자기 등 여주의 모든 농·특산물을 여주시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여주농특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공동 브랜드로 관리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시에서 책임지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관심을 집중해 온 농업개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한 여주 농업의 고질병 해결책을 제시 하였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도 공무원 출신임을 밝히며 영어 단어를 인용한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로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서번트로 우리말로 해석 하자면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시민들과 계약한 임시직 공무원일 뿐이라며 늘 낮은 자세로 주민의 편에 설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9
언론사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 (충청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69 충청일보 빌딩 대표이사 이규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8년 3월 7일자 11면 「홍성열 증평군수의 고민」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증평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정보가 아닌 일부 군민들의 의견만을 근거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취재수첩]
홍성열 증평군수의 고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과 시·구 단위는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전에 돌입했고, 군 단위는 오는 4월 1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당선돼 3대 증평군수에 취임한 홍성열 증평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8년간 증평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고, 그 결과 증평군은 지난 수년간 자타가 인정할 만큼,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3선은 나가지 않겠노라는 약속이 그의 발목을 잡고있다.

약속을 중요시 여겨온 홍 군수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출마를 적극권유하고 있다.

그때마다 그는 과거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거절하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개인의 약속이행도 중요하지만, 많은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무시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신, 약속 모두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중의 하나다.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아무리 다수 군민이 출마를 권유하고 원한다 해도 그동안 줄곧 도덕을 중시하며 살아온 홍 군수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홍 군수가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다수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 또한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한 도리일것이다.

군수 출마 예정자를 비롯한 일부 군민의 비난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해도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증평군과 증평군민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주민들은 기대 할 것이다.

忠淸日報

2018년 03월 07일 11면 (지역)

홍성열 증평군수의 고민

취재수첩

곽승영
증평괴산주재 부국장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과 시·구 단위는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전에 돌입했고 군 단위는 내달 1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당선돼 3대 증평군수에 취임한 홍성열 증평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8년간 증평군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고 그 결과 증평군은 지난 수년간 자타가 인정할 만큼,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3선은 나가지 않겠노라는 약속이 그의 발목을 잡고있다.

약속을 중요시 여겨온 홍 군수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그때마다 그는 과거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거절하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약속이행도 중요하지만 많은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무시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신, 약속 모두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중 하나다.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아무리 다수 군민이 출마를 권유하고 원한다 해도 그동안 줄곧 도덕을 중시하며 살아온 홍군수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홍군수가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다수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 또한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한 도리일것이다.

군수 출마 예정자를 비롯한 일부 군민의 비난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해도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증평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주민들은 기대 할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홍군수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것같다. 하지만 이제 막 성장하며 자리 잡아가는 증평군의 발전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들은 "지금까지 청렴과 도덕을 바탕으로 군정을 펼쳐온 홍 군수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욱더 청렴하게 군정을 펼쳐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군,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군을 반드시 만들어 우리 증평군민에게 보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 군수를 지지하는 일부 군민들은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초보자, 비난과 유언비어 유포 등 구시대적 선거방식으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정치인, AI를 전염시키는 철새보다 못한 철새 정치인, 뚜렷한 목표와 소신 없이 그저 군수 한 번 되보는 것을 목표로 4년, 8년 내내 행사장에 얼굴을 내미는 정치인에게 이 무한경쟁 시대에 증평군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오랜 공직경험과 의정경험, 도덕성과 추진력, 지난 8년간 맺어진 중앙부처와의 인맥을 통해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펼쳐놓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홍성열 군수가 출마를 결심해줄 것"을 부탁했다.

충청일보 2018년 3월 7일자 1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1
언론사	**주식회사 일간뉴스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04-1 회장 권성덕
심의대상기사	뉴스경남 2018년 3월 19일자 5면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감시와 미행…동정론 확산」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싣는 등 해당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만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뉴스경남

2018년 03월 19일
06면 (사회)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감시와 미행…동정론 확산

서민 목욕탕 이용 사진 왜 수개월 지난 '지금' 비판 보도하나?

최근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 몇차례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비난여론보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시장은 겨의 바쁜 업무로 인해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 할때가 많고 일을 마치고도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다는 게 관행화처럼 돼 있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직원들의 경우, 당직 근무를 서면 보통 그 다음날 오전은 쉬고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하거나 당직을 선 다음날 오전은 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출근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공직 사회 통념보다 훨씬 지나친 감도로 나쁘게 몰아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이런 업무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지역 기자들의 이 시장에 대한 '무작정 쓰고 보자'는 식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이런 이유로 업무시간에 목욕탕에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행태의 저의가 자극히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시민들은 시장의 비리를 찾겠다며 1년 가까이 미행해 근무시간에 목욕탕을 갔다는 사실을 찾아 냈다면 당시에 즉시 보도를 하면 될 것을 민감한 여론조사를 앞둔 폭로성 보도는 정치적 사주를 받은 보도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A씨가 이 같은 보도를 일삼은 일부 기자들과 언론들에 대해 검찰 고소를 했다는 것.

이 시장이 고급사우나도 아니고 2000원짜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을 마치 엄청난 잘못인 양 보도한 것은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 보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서 이 시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보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진주지역 원로 언론인은 "신속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에서는 이런 보도는 드문 일이고 자칫 시장 선거 유권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을 고발한 시민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장선거 경선을 앞두고 기자들의 취재 수법이 정진당당하지 않고 교묘해지는, 불법사찰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같은 불법을 줄이기 위해서 고발하게 됐다"면서 "가뜩이나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일부 지역언론의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시장이 다니는 상평동 소재 작은 목욕탕이 알려지면서 어떤 곳인지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고, 지나는

A씨가 작성한 기자회견문

차량이 차를 세우고 구경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주변 주민들은 전했다.

선거특별취재팀

(22.7×13.1)cm

뉴스경남 2018년 3월 19일자 5면

보도 내용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감시와 미행…동정론 확산

최근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 몇차례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비난여론보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시장은 거의 바쁜 업무로 인해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 할 때가 많고 일을 마치고도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다는 게 관행화처럼 돼 있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직원들의 경우, 당직 근무를 서면 보통 그 다음날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하거나 당직을 선 다음날 오전은 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출근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공직 사회통념보다 훨씬 지나친 강도로 나쁘게 몰아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이런 업무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지역 기자들의 이 시장에 대한 '무작정 쓰고 보자'는 식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어떤 이유로 업무시간에 목욕탕에 갔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행태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시민들은 시장의 비리를 찾겠다며 1년 가까이 미행해 근무시간에 목욕탕을 갔다는 사실을 찾아 냈다면 당시에 즉시 보도를 하면 될 것을 민감한 여론조사를 앞둔 폭로성 보도는 정치적 사주를 받은 보도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A씨가 이 같은 보도를 일삼은 일부 기자들과 언론들에 대해 검찰 고소를 했다는 것.

이 시장이 고급사우나도 아니고 2,000원짜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을 마치 엄청난 잘못인 양 보도한 것은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 보도와 다를 바 없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서 이 시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보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진주지역 원로 언론인은 "신속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에서는 이런 보도는 드문 일이고 자칫 시장 선거 유권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을 고발한 시민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장선거 경선을 앞두고 기자들의 취재 수법이 정정당당하지 않고 교묘해지는, 불법사찰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같은 불법을 줄이기 위해서 고발하게 됐다"면서 "가뜩이나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일부 지역언론의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시장이 다니는 상평동 소재 작은 목욕탕이 알려지면서 어떤 곳인지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고, 지나는 차량이 차를 세우고 구경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주변 주민들은 전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5
언론사	**주식회사 거창중앙신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91 발행인 김정옥
심의대상기사	거창중앙신문 2018년 3월 22일자(제614호) 9면 「김석태 거창군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만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614호 | 2018. 3. 22. 거창중앙신문 정치 9

[Interview] 김석태 -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거창군제1선거구

김석태 거창군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거창에서 꿈을 키우고 거창의 꿈을 실현시킬 준비된 도의원, 군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힘이 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중앙신문 2018년 3월 22일자 9면

보도 내용

김석태 거창군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김석태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는 거창에서 25년 동안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경서교차로 대표로 지난 2일 거창군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며 자유한국당 도의원 공천을 신청 하고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김예비후보자는 우선 출마와 관련, "거창군 도의원이 제대로 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거 때 되면 나서고 거창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리 욕심으로 나서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창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거창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지역 언론인으로 25년 동안 한결 같이 달려 왔습니다. 거창을 잘 알기에 군민들의 불편이 보이고 거창을 사랑하기에 더 좋은 해결방안이 보인다."고 출마포부를 밝혔다.

Q 그동안 거창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습니까?

저는 이전에 서부경남 두란노아버지학교 대표 총무로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아버지학교 형제들과 함께 경남의 시·군, 진주교도소까지 아버지학교를 개설하며 아버지학교 운동을 하며 헌신과 섬김을 다 했습니다.

또,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산·경남협의회장으로 전국 300여 개의 지역신문과 교류하며 지역언론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거창군부부의 날 축제, 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군크리스마스트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지역축제를 개최하며 철저히 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탈바꿈 시키며 지역경제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를 통해 LG유플러스, 삼성,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경상남도개발공사등 대기업의 협찬도 이끌어 냈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청 등을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또 뛰어 전국연극제 중 최고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거창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박연대 경남도당 발기인으로 참여해 부위원장으로, 이후 미래희망연대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중앙정치 인맥을 쌓으며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제1기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 정치 인맥도 쌓았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 (주)토디팜코리아 남상농공단지 500억 원 투자 건과 관련해 거창군과 MOU체결 성사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거창의 현실에서 어르신들을 잘 섬길수 있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며 농·축산물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유통관리사로 전문적인 기초가 튼실 합니다.

Q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토디팜코리아 거창공장 설립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토지 1만5천평, 건평 7천 평, 고용창출 100명 이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거창구치소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거창군 전체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군민의 뜻을 물어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남도 예산 확보 농업·복지·문화예산 등 확보에 올인하여 현제 보다 30%이상 더 가져 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거창군이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풀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교육 하면 거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거창읍 대동로타리 사업의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을 거창군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켜 군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며, 찾고 싶은 도시 거창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째, 각 분야별 중앙정부,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거창군이 선정돼 많은 예산을 교부 받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고령가야의 역사적 고증을 통한 '거창이 고령 가야다'를 통한 가야사 복원으로 거창에 가야역사를 재조명하여 관광지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 그 밖에 거창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낭중지추(囊中之錐)'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을 가진 자는 언젠가는 그 재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의원도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참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거창에서 꿈을 키우고 거창의 꿈을 실현시킬 준비된 도의원, 군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힘이 되는 도의원

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거창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원하시면 김석태를 도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 김석태 출마예정자 프로필 •

학력 | 월천초등학교, 거창대성중·고등학교,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졸업

정당경력 |

전)친박연대 경남도당부위원장, 미래희망연대 경남도당 대변인, 새누리당 1기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상임위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조직총괄본부 경남특보,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

사회경력 |

현)경서교차로·아림정보통신·리뷰 대표, 거창소방서클린소방위원, 거창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월천초등학교총동문회이사, 월천체육회이사, 거창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위원회 총무

전)거창중앙신문 대표이사,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산·경남협의회장, 제17기민주평화통일거창군협의회 위원, 월천초등·창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상임이사, 2015대구컬러풀페스티벌 입찰평가심사위원장,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협의이혼상담위원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8
언론사	**주식회사 뉴아시아일보(아시아일보)**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1304호 발행인 권희민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8년 4월 2일자 9면 「政治人 이재정은 경기도교육감 不出馬가 정답이다」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출마하여야 한다는 단정적인 제목과 함께 부정적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시아일보

칼 럼

政治人 이재정은 경기도교육감 不出馬가 정답이다

문양휘 경기북부취재본부장

아시아일보 2018년 4월 2일자 9면

보도 내용

政治人 이재정은 경기도교육감 不出馬가 정답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달 18일 페이스북 개인방송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4년 전 같은 날 거취를 결정했다”며 “교육을 진보와 보수 등 이념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 민주시민,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실현하고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辯(변)을 밝혔다. 이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학부모들은 關心(관심)과 感興(감흥)이 없는 것 같다. 이는 이 교육감이 재임기간동안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원장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바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로부터는 '가짜진보! 불통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OUT(아웃)!'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자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교육감은 옛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제33대 통일부장관 재직 때는 김 전 대통령과 북한을 방문하는 등 김 전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평소 김 전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 대던 김 전대통령 문하인 출신 교육감이다.

이 교육감은 김 전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라도 하듯 취임초 경기북부교육청사 7개 회의실 중 1개를 김대중홀로 명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산 바 있으며, 정치인 이재정의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즉 정치인이상 이하도 아닌 인물이자,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은 예로부터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일컬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고, 한번 수립한 정책은 자주 바꾸지 말고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다.

이 교육감은 백년대계와 걸맞은 인물인지, 또한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일꾼을 함양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교육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설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준 높은 교육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교육당국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임 김상곤교육감과 이재정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를 지향하는 교육감들이다.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功, 過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은 진보교육감의 연임에 따른 일정부분 폐해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이는 정치인출신 이재정이 경기도 교육행정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 출신이라해서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자 순리가 아닌가 싶다. 지난달 29일 이재정 교육감이 의정부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교육감의 의정부시 방문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게 없다.

작금의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민락초등학교 및 호원동 산길통학로등 학생들의 학습권침해에 대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근심과 걱정의 수위가 가일층 점증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와 관련, 시민 A모씨는 "이 교육감이 의정부시를 방문했으면 열일을 제쳐놓고 민원이 들끓고 있는 교육현장을 방문했어야 하는 것 아니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바란다. 따뜻한 햇빛만 받으며 살아온 한평생, 교수, 장관, 국회의원 교육감 등 자타가 인정하는 경력은 대한민국의 상위 5%가 아닌가?

이젠 老欲(노욕)을 떨쳐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원로로 남아주길 바라며, 경기도 교육감은 젊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전문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을 위해 백번 옳다고 여겨지는데 이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9
언론사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46 3층 발행인 김형조
심의대상기사	일간경북신문 2018년 4월 2일자 6면 「이철우 의원, 신바람 경북 100대 공약 발표 “준비된 현장 도지사 면모로 정면승부”」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발표한 100대 공약의 내용을 전면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간경북신문 2018년 4월 2일자 6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1
언론사	**주식회사 일일경북신문(경북일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85 3층 발행인 오주섭
심의대상기사	경북일일신문 2018년 4월 2일자 11면 「"격이 다른 교육감 후보, 대한민국 보수 교육의 품격"」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신문

2018년 04월 02일 11면 (오피니언)

인 터 뷰 ▌김정수 경북교육감 후보

"격이 다른 교육감 후보, 대한민국 보수 교육의 품격"

▶김정수 경북교육감 후보

우 리 감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의 경 북 보 수교육감 단일후보 발표를 비난한다.

우 리 감 (우 리 교육감추대시민연합)이란 교육감 단일화 단체가 뒤늦게 만들어져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생소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참여하지도 않은 단일화 단체들을 잔뜩넣어 마치 먼저 만들어진 교추본, 이선본, 범사련 등의 단일화기구가 단일화되어 우리감이 만들어진 것처럼 포장하고, 객관성 없이 여론조사 상위권에 드는 후보를 임의로 선택하여 4개 지역 보수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뉴스1]이라는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이는 당연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기타 후보들의 단일화 의지마저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모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는 지난번에도 모 단체의 추대를 받고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라고 기사를 내어 기타후보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선관위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낸 기자를 고발할 것인지 단체를 고발할 것인지 후보자를 고발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겉으로는 후보단일화에 참여해 놓고는 속으로는 자기과시에 불과한 단체에 이끌려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라는 발표현장에 나가 부하뇌동하는 후보는 단일화를 논할 자격도 없다.

이런 신의 없는 행위를 하는 교육자, 교육감 후보가 당선된다면 교육계 또한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다.

단일 후보란 기사에 내심 미소를 지으면서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변명을 하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 수장의 자격이나 있을 것인가? 우리 보수진영 경북교육감 후보들은 이미 합의한 합의서가 있다. 교추본의 중재로 후보들이 합의한 합의서에 따르면 1차적으로 4월 20일 TV토론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 이후 선관위가 후보자들이 돈을 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고 해서 후보들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 회의에서 5월, TV 3사(KBS, MBC, SBS)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0.01%라도 이기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합의를 하루 아침에 뒤집어치고 한 후보는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자 시기를 앞당겨서 2월 14일까지 단일화를 하지고 떼를 쓰고 한 후보는 다른 단일화 단체에 나가 단일후보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우리감 또한 참여할 의사도 없는 단일화 단체를 넣어 과대포장한 죄는 법받아 마땅하다.

단체 성향에 맞는 후보를 발표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는다. 기자가 질문을 했듯이 지난 번 모 단체가 추대한 후보들을 중복 발표한 것에 대한 내막은 없는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들의 사주를 받지는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경북의 보수 교육감 후보자들은 5월 말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 공정성이 가장 담보된 TV 3사의 여론조사에 승복하기로 하였다.

진정으로 단일화를 이행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이런 엉터리 뉴스를 접하고 단일화 의지를 접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이런 뉴스를 만든 우리감과 이에 동조한 예비후보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17.8×17.7cm

경북일일신문 2018년 4월 2일자 11면

보도 내용

"격이 다른 교육감 후보, 대한민국 보수 교육의 품격"

우리감(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의 경북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발표를 비난한다.

우리감(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이란 교육감 단일화 단체가 뒤늦게 만들어져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생소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참여하지도 않은 단일화 단체들을 집어넣어 마치 먼저 만들어진 교추본, 이선본, 범사련 등의 단일화기구가 단일화되어 우리감이 만들어진 것처럼 포장하고, 객관성 없이 여론조사 상위권에 드는 후보를 임의로 선택하여 4개 지역 보수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뉴스1]이라는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이는 당연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기타 후보들의 단일화 의지마저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모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는 지난번에도 모 단체의 추대를 받고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라고 기사를 내어 기타후보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선관위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낸 기자를 고발할 것인지 단체를 고발할 것인지 후보자를 고발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겉으로는 후보단일화에 참여해 놓고는 속으로는 자기과시에 불과한 단체에 이끌려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라는 발표현장에 나가 부화뇌동하는 후보는 단일화를 논할 자격도 없다.

이런 신의 없는 행위를 하는 교육자, 교육감 후보가 당선된다면 교육계 또한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다.

단일 후보란 기사에 내심 미소를 지으면서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변병을 하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 수장의 자격이나 있을 것인가? 우리 보수진영 경북교육감 후보들은 이미 합의한 합의서가 있다. 교추본의 중재로 후보들이 합의한 합의서에 따르면 1차적으로 4월 20일 TV토론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 이후 선관위가 후보자들이 돈을 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고 해서 후보들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 회의에서 5월, TV 3사(KBS, MBC, SBS)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0.01%라도 이기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합의를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한 후보는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자 시기를 앞당겨서 2월 14일까지 단일화를 하지고 떼를 쓰고 한 후보는 다른 단일화 단체에 나가 단일후보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우리감 또한 참여할 의사도 없는 단일화 단체를 넣어 과대 포장한 죄는 벌받아 마땅하다.

단체 성향에 맞는 후보를 발표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는다. 기자가 질문을 했듯이 지난 번 모 단체가 추대한 후보들을 중복 발표한 것에 대한 내막은 없는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들의 사주를 받지

는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경북의 보수 교육감 후보자들은 5월말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 공정성이 가장 담보된 TV 3사의 여론조사에 승복하기로 하였다.

진정으로 단일화를 이행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이런 엉터리 뉴스를 접하고 단일화 의지를 접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이런 뉴스를 만든 우리감과 이에 동조한 예비후보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4
언론사	**주식회사 고령신문**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4길 6 발행인 김명숙
심의대상기사	고령신문 2018년 3월 19일자(제1080호) 1면 후보자 저술(「가야국의 중심, 고령」)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령신문 2018년 3월 19일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5
언론사	**주식회사 경동신문**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00 발행인 구직회
심의대상기사	경동신문 2018년 4월 6일자(제586호) 6면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두영택, 그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두영택, 그는 누구인가!

김정욱 사무총장
국기교육감시단

경동신문 2018년 4월 6일자 6면

보도 내용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두영택, 그는 누구인가!

두영택! 그때만 해도 내게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2016년 4월경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그를 보았다.

교육시민단체 활동경력이 일천한 필자에게는 뉴라이트니 어쩌니 하면서 과거 경력을 들먹일 때 그냥 평범하게 들렸다. 하지만 뒤끝 없어 보이고 솔직담백한 인물이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다. 다부진 투쟁력 같은 아우라가 느껴지기도 했다.

두 달 전쯤 2018년 지방선거의 교육감 후보를 찾다가 두영택이란 이름을 떠올리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각을 세워 싸울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간간히 들었던 두영택의 과거 경력이 생각났다. 전교조에 대항하려면 보수성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원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천에 옮긴 인물! 두·영·택! 갑자기 그의 이름이 기억에 떠올랐다.

두영택(대구 달성, 1961년생)은 교사경력 20년쯤 되던 2004년 경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할 정도였다. 그는 교사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친화력·조직력 등 장점이 많은 인물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 후 서울교총회장,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을 거쳐 2007년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를 맡았다.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상임대표라면 보통 자리가 아니다. 전국적인 보수운동의 최정상에서 핵심 주역으로 활동했다고 보아야 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MB정부 탄생의 산실이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시민사회운동 최정상 지도자였던 셈이니 그의 자부심이 어떠했을 지 짐작이 된다. 아마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났던 시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택의 이력서에는 주목할 타이틀이 눈에 띈다. 2008년경 '대한민국교원조합'이라는 교원노조를 만들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이념적인 전교조에 대항하기 위해 이익단체인 한국교총으로는 상대하기 버겁다는 걸 알았던 것일까? 그는 보수성향의 교사들을 조직하여 노조운동을 실천에 옮겼다.

교총맨으로 알려진 두영택이 노조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던 일은 지금까지도 한국교총에서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두영택은 "노무현 정부에서 교원노조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MB정부가 전교조를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태였다. 보수성향의 교원노조가 참여하여 균형감 있는 목소릴 낼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교총의 비판도 달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행보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지원을 받았던 MB정부와 무관치 않아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2009년경 두영택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4년간 봉직한 보통교육 현장마저 손을 접은 채 갑작스레 전남 광주로 내려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8년 총선에서 두영택은 비례대표 12번에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작 다음날 발표에는 이름이 빠졌다. 두영택에게는 가장 아픈 상처였을 것이다. "당신이 교사가 아니라 교수였다면…" 공천위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을 들었으니 오죽했을까.

두영택은 2009년에 서울고등학교 교감을 끝으로 24년의 교사생활을 마감하고 곧바로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이슈로 좌파지자체장들이 대거 탄생했고 교육계에도 좌파교육감들이 등장하여 치열한 이념전쟁이 교육계에서 진행되었지만 그는 광주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한창 젊은 나이인 40대에 전국적인 시민운동의 핵심으로 좌충우돌 활동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그였다. 뉴라이트를 팽한 MB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그만큼 깊었나 보다. 광주에 내려간 지 7년이 지난 2016년, 그는 한국교총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컴백했지만 세상은 많이 변해있었다. 과거 40대 시절의 두영택처럼 맹위를 떨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교육감선거에서 우파시민사회로부터 서울교육감 후보로 소환을 당한 것이다. 조희연을 필적할 서울교육감 후보를 물색하던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두영택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영택은 지금 칼을 갈며 천리를 뛰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57세이다. 기회만 오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먹이를 향해 뛰박질 할 젊음이 아직도 그에게는 남아있다.

지금으로서는 후보단일화가 그가 넘어야 할 산이다. 단일화를 통해 동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교총회장선거를 뛰면서 많이 피곤해진 그의 조직들이 일사분란하게 나설려면 교육감 단일화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조기 단일화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만만치 않은 광역선거를 준비해야 할 텐데… 서울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단일화가 예상 밖으로 늦춰지는 것이다. 단일화기구 난립으로 서울의 경우 언제 단일화 논의가 정상화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두영택! 그에게 우파 가치를 바로 세울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에 대한 꿈을 펼칠 기회가 2018년에는 주어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두영택은 전화통화에서 목소릴 높였다. "이번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많은 우파시민사회에서 정체성을 문제로 삼는다고 하는데… 저 두영택 만큼 일생을 통해 정체성이 확인된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필자도 인정한다. 전교조 반대를 내세우는 우파시민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만큼 확실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도 드물 것이다. 탄핵을 반대했던 강연 하나가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지경이니 말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7
언론사	**주식회사 경상매일신문사**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 발행인 배달원
심의대상기사	경상매일 2018년 3월 26일자 18면 「新 성장산업 육성으로 포항 미래 연다」, 2018년 4월 5일자 18면 「도시재생 미래 100년 이끌 '포항 건설'」, 2018년 4월 10일자 18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포항 조성 시민건강 보호 앞장」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북 포항시장에 재출마 예정인 현 시장의 성과를 부각하는 특집 기획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상매일신문

新 성장산업 육성으로 포항 미래 연다

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취임이후 '위기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라는 슬로건으로 보다 젊사는 포항 인센티고 품격한 포항 건설을 위해서 포항의 '업'을 이 성지켜 준비하는 기준대 5대 미래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회의등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강수록 이러한 리더십에 포항시의 돌보이는 미래 전략 5개, 핵심 산업을 이강덕 포항시장님께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市
이 시장, 5대 핵심산업 제시
로봇융합산업 등 집중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총력'"

포항시 미래전략 5대 핵심산업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성장산업 발굴 육성 |

▲ 바이오·산학산업 활동해의 '바젤'을 꿈꾸다

포항은 세계 3번째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하게 되어 산학벤처에 나설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미국과 일본도 컨덕된 자 몇 년 되지 않았다.

가속기는 노벨물리학상의 20%가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에서 나올 정도로 첨단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빛의 속도로 가속한 입자를 목표 물질에 타격시켜 살아있는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대하지만 희합단 장치다.

4세대 가속기 건립에 앞서 포항은 경상북도와 함께 NSA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Next generation Bio/Accelerator Project 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명칭으로 가속기를 활용한 산학개발의 다음 세대를 대비하자는 의미다.

우선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앞에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센터' 를 이르면 상반기 중 착공하여, 제약회사 연구소와 바이오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포스텍 융문기업인 유테렉스와 제약학연 등이를 해오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제넥신은 시흔 2조 원에 달하는 등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출장기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제약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하는 스위스 바젤시와 같은 '신약개발 클러스터' 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라인강변에 자리 잡은 바젤은 세계적인 제약도시이다. 인구 17만 명의 중소도시이지만, 세계 1위의 노바티스를 비롯해 세계 4위 로슈 등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있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다.

▲ 첨단신소재 산업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기속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과잉생산이 영향으로 성장의 한계에 달했고 주력산업이지 침체에 빠져 돌심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태다.

시는 포스코, 경북도와 함께 타이타늄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타이타늄은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해 국방, 항공, 의료, 플랜트 등 산업전반에 걸쳐 넓이 쓰이는 소재다. 강철과 비교하면 강도는 2.5배 강하지만, 무게는 43%로 월씬 가볍다. 무엇보다 공정단계별 부가가치가 강철의 40배에 달한다.

블루엘리 국가산업단지에 신소재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실용화센터를 건립하여 타이타늄 생태계조성에 박차적으로 나서겠다.

또한 지역 강관기업 제품의 품질향상과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수출 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강화 기반구축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에 강관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블루엘리 산단내 강관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강관 제조사들의 제품평가와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선 지역공약 사항인 '포항 철강산업 글로벌 경

포항시가 미래먹거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사람이 직접 시공하는 철강의 작업 환경을 극복하고 로보을 통한 제장구조물 시공의 효율성 확보하고 있다.

제약학연 '바젤'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전략산업을 기획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오면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사업을 본격화시킬 방침이다.

▲ 로봇산업 로봇도시 포항, 철강도시 포항의 미래

포항시는 일찍감지 로봇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사람이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위험성 및 작업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을 통한 해양구조물 시공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과, 제조산업에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국방안전로봇 프로젝트를 예정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 은 해상교량, 해저터널, 해양플랜트 등 해양구조물 건설과 개발에 투입되는 로봇을 개발한다. 현재 실증센터가 계획되어 3종의 로봇테스트 중에 있다. R 139억원이 투입되는 본사업이 완공되면 그간 인력으로 시공되거나 해외의 고가 장비를 임대해 이루어지는 국내의 수중공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갖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710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만 5일반산업단지에서 추진하는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도 자년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지고 본격 조성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현장에서 대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한다.

포항시는 로봇산업을 시의 동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따라, 지곡 R&D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로봇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철강도시 포항에 로봇도시의 옥갑을 입히고 있다며, 업계와 구축을 조속히 완료시켜 포항을 국내 심층로봇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다.

▲ 해양·에너지산업 내한민국 해양과 에너지의 전초기지 포항

해양 에너지산업도 미래전략 산업을 이노이다. 포항에 연구 위원한 탄력으는 데이지청 탄사와 석유가스 자원탐사 등 테디밉을 탑사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같생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물리탐사선이다.

포항사가 가능한 탐해호도 예정대로 건조되면, 국내 대학로 석유가스 정밀탐사와 한반도 해저지질 연구 등 포항이 우리나라 해양탐사의 핀 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에에 대한 대정된 고품질의 천부공정이 벤도나이트를 활용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면재 이약물과 화장품에 활용되고 있는 벤도나이트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원료개발이 이루어지면 연간 1천억원대 수입대체 효과와에 천무 일원에 동반한 K-뷰티, 푸드산업 등 신시장이 폭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출연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포항을 세계 대양탐권 연구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포항지질자원연구실증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해저탐사장비 시험등, 연구실험동을 구축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0년까지 3단계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석유탐사와 지질조사를 수행할 연구소가 조성되어 포항이 지질과 해양에너지 개발의 메카로 조성될 전망이다.

▲ ICT융복합 산업 3D프린팅과 SW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 한다

SW의 비중과 활용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된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대기업은 1위 애플을 비롯,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전부가 IT, SW 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경부도 SW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 SW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과기부가 2014년부터 부산, 판교, 경북 등 전국 7개 거점지역에 지역전략산업에 SW를 접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북센터는 지난 2015년 포항테크노파크내에 거점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역SW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까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구미, 칠곡 지역을 8k의 벨트를 이어 SW 관소기업 육성과 '매칭기술커뮤니티'의 개발을 하여 수출과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기다. 포항시는 철강과학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로 Post 철강시대를 할 대비해왔다는 평가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유도하는데 앞으로의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R&D 사업에 투자하여 왔으며, 그러한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미래대대를 위한 혁신의 산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호형 기자

경상매일신문 2018년 3월 26일자 18면

보도 내용

新 성장산업 육성으로 포항 미래 연다

이강덕 포항시장 취임이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라는 슬로건으로 보다 잘사는 포항 안전하고 쾌적한 포항 건설을 외치며 포항의 앞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항의 100년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철강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 시켜 지속성장을 야심차게 준비하는 가운데 5대 미래 新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갈수록 어려운 경기침체에 포항시의 돋보이는 미래 전략 5代 핵심 산업을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들어본다. [편집자 주]

바이오·신약산업 환동해의 '바젤'을 꿈꾸다

포항은 세계 3번째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하게 되어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미국과 일본도 건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가속기는 노벨물리학상의 20%가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에서 나올 정도로 첨단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빛의 속도로 가속한 입자를 목표 물질에 타격시켜 살아있는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대하지만 최첨단 장치다.

4세대 가속기 건립에 맞춰 포항은 경상북도와 함께 NBA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Next generation Bio/Accelerator Project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명칭으로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개발로 다음 세대를 대비하자는 의미다.

우선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옆에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센터'를 이르면 상반기 중 착공하여, 제약회사 연구소와 바이오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포스텍 동문기업인 ㈜제넥신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제넥신은 시총 2조 원에 달하는 등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제약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하는 스위스 바젤시와 같은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라인강변에 자리 잡은 바젤은 세계적인 제약도시이다. 인구 17만 명의 중소도시이지만, 세계 1위의 노바티스를 비롯해 세계 4위 로슈 등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있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다.

첨단신소재 산업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금속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과잉생산의 영향으로 성장의 한계에 달했고 주력산업마저 침체에 빠져 新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

태다.

시는 포스코, 경북도와 함께 타이타늄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타이타늄은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해 국방, 항공, 의료, 플랜트 등 산업전반에 걸쳐 널리 쓰이는 소재다. 강철과 비교하면 강도는 2.5배 강하지만, 무게는 43%로 훨씬 가볍다. 무엇보다 공정단계별 부가가치가 강철의 42배에 달한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신소재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실용화센터를 건립하여 타이타늄 생태계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또한 지역 강관기업 제품의 품질향상과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수출 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강화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내에 강관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블루밸리 산단내 강관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강관 제조사들의 제품향상과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선 지역공약 사항인 '포항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전략산업을 기획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오면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사업을 본격화시킬 방침이다.

사람이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작업 한계를 극복하고 로봇을 통한 해양구조물 시공의 효율성 확보하고 있다.

로봇신산업 로봇도시 포항, 철강도시 포항의 미래

포항시는 일찌감치 로봇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사람이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위험성 및 작업 한계를 극복하고 로봇을 통한 해양구조물 시공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과,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은 해상교량, 해저터널, 해양플랜드 등 해양구조물 건설과 개발에 투입되는 로봇을 개발한다. 현재 실증센터가 개소되어 개발된 3종의 로봇테스트 중에 있다. 813억 원이 투입되는 본사업이 완공되면 그간 인력으로 시공되거나 해외의 고가 장비를 임대해 이루어지는 국내외 수중공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710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에서 추진하는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도 작년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지고 본격 조성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현장에서 대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한다.

포항시는 로봇산업을 시의 新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지곡 R&D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로봇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철강도시 포항에 로봇도시의 색깔을 입히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시켜 포항을 국내 실증로봇산업의 전진기기로 만들 것이다.

해양·에너지산업 대한민국 해양과 에너지의 전초기지 포항

해양 에너지산업도 미래전략 산업중 하나이다. 포항에 영구 취항한 탐해2호는 해저지질 탐사와 석유가스 자원탐사 등 바다밑을 탐사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물리탐사선이다.

3D탐사가 가능한 탐해3호도 예정대로 건조되면, 국내 대륙붕 석유가스 정밀탐사와 한반도 해저지질 연구 등 포항이 우리나라 해양탐사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지역에 대량 매장된 고품질의 점토광물인 벤토나이트를 활용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의약품과 화장품에 활용되고 있는 벤토나이트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원료개발이 이루어지면 연간 1천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외에 한류 열풍에 동반된 K-뷰티, 푸드산업 등 신시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출연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포항을 세계 대양환경 연구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포항지질자원연구실증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해저탐사장비 시험동, 연구실험동을 구축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0년까지 3단계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석유탐사와 지질조사를 수행할 연구소가 조성되어 포항이 지질과 해양에너지 개발의 메카로 조성될 전망이다.

ICT융복합 산업 3D프린팅과 SW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한다

SW의 비중과 활용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대기업은 1위 애플을 비롯,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전부가 IT, SW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정부도 SW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 SW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과기부가 2014년부터 부산, 판교, 경북 등 전국 7개 거점지역에 지역전략산업에 SW를 접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북센터는 지난 2015년 포항테크노파크내에 거점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역SW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까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구미, 칠곡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이어 SW강소기업 육성과 핵심기술(커넥티드카) 개발을 하여 수출과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기다. 포항시는 첨단과학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로 Post 철강시대를 잘 대비해왔다는 평가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유도하는데 앞으로의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R&D 사업에 투자하여 왔으며, 그러한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新산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상매일신문

도시재생 미래 100년 이끌 '포항 건설'

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 뉴딜 주요 로드맵 발표
주거복지실현 등 4가지 혁신사업 목표
쇠퇴한 도시 재생활성화…경쟁력↑
지역특성 살린 문화 조성 등 전략 多
'중앙동 일원' 뉴딜 시범사업 추진
'상대동 젊음의 거리 조성' 등 계획
경제·사회·문화·환경 활성화 총력

>> 포항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 도시재생에 주요추진 사업은?

>> 포항시의 과제와 향후 계획은?

2018년 4월 5일자 18면

보도 내용

도시재생 미래 100년 이끌 포항건설

날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과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포항을 살리기 위해 포항시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포항을 어떻게 하면 특화된 도시로 살릴 수 있는지를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알아본다. <편집자 주>

포항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가지 목표로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와 새로운 도시의제를 수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포항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확장, 외곽지역 개발, 관공서 이전, 단일 산업구조에 따른 경제정체 등에 따라 도시 활력 저하와 도시환경 쇠퇴에 따라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한 도시의 재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이라는 비전으로 장소 및 지역경쟁력 확보와 지역역량 강화, 통합 경제재생, 매력 있는 역사문화 창조라는 4가지 목표로 기회와 희망이 현실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핵심가치로 추진하고 있다.

△전략1 해양 관련 잠재자원 활용 및 개발 △전략2 차별화된 해양컨텐츠로 내방객 극대화 △전략3 주민역량 강화 주민주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전략4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및 생활권 단위 시설 확충 △전략5 핵심시설 유치로 중심지 기능·경쟁력 강화 △전략6 일터·삶터·쉼터가 공존하는 통합재생 실현 △전략7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지역자산 활용방안 마련 △전략8 장소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문화기반 조성

도시재생에 주요추진 사업은?

시는 도시재생법 시행,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외곽지역 개발 및 도심 공동화 심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지난해 6월 완료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권역별 도시재생 방향, 추진방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으로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추진에는 중앙동 일원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주요사업에는

"청년창업허브 & 문화예술허브 & 스마트시티 조성" 일자리 창출과 청년유입, 더욱 젊어지는 도심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중앙동 일원을 청년창업허브 & 문화예술허브 &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핵심사업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원도심 전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동 일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도 선정 추가적으로 사업비 지원과 함께, 스마트 도시재생 컨설팅단(국토부)과 스마트시트 특별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북구청 부지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조성, △(구)중앙초 부지 활용한 문화예술허브 조성, △꿈틀로, 실개천거리, 육거리 일원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국비, 지방비, 민간 등 총 1,1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북구청 부지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는 3D프린트 등 공영장비를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공간, 오피스, 카페 등을 제공하는 「청춘 코워킹스페이스」와 청년들의 기술창업(ICT, 핀테크 등) 특화지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는 「청년창업 플랫폼」, 청소년 아지트로서 진로상담, 토론실, 공연실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공영지하주차장 및 스마트 복합문화광장 등을 조성한다.

(구)중앙초 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허브는 문화예술인력 양성, 창작공동작업장 제공, Start-up 육성 등을 담당하는 「문화예술 팩토리」와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시, 판매,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하는 한편, 공영지하주차장, 문화예술광장, 북구청 신축 이전, 공공임대주택(LH) 120호를 공급한다.

꿈틀로와 실개천거리, 육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창업공간으로 제공할 「공영임대상가」와 보행자 중심의 예술문화 창업로를 조성하는 한편, 스마트 아트 스트리트를 조성해 스마트주차, 비콘 기반 스마트 광고, 모바일 핀테크, 리빙랩 지원, 반응형 미디어 파사드, 바닥그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6월 말까지 활성화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토부의 국가지원사항이 최종결정 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범죄예방 셉테드 도입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의 기울일 계획이다. ①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②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③상대동 젊음의 거리 조성 ④도심해안변 워터폴 ⑤안심마을 조성(범죄예장 셉테드) ⑥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포항시의 과제와 향후 계획은?

성과를 위한 단기계획에서 미래도시를 대비한 장기적 비전과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으로 이미 선정된 중앙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시켜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으로 발전시키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한 포항의 읍면동을 점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승화시켜 공무원, 주민, 학교, 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전체적 의식향상을 통하여 물리적 도시환경뿐 아니라 성숙한 시민이 살아가는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발전이 목표이다.

특히 해외선진 유사 산업도시의 사례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경제적 위험성과 대응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교훈삼아 국정과제와 부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굴, 추진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활성화로 새로운 100년에 대비한 살기 좋은 미래도시 포항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포항 조성 시민건강 보호 앞장

무분동에 심어진 가로수

이강덕 포항시장

경상매일신문 2018년 4월 10일자 18면

보도 내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포항 조성 시민 건강 보호 앞장

봄철에 부는 바람과 함께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인 침묵의 살인자 분진을 잡기위해 포항시가 발 벗고 나섰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포항시 환경정책을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한다.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호흡과정에서 폐에 들어가면 폐 기능 저하와 폐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평가와 관련해 호흡기를 통해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호흡성분진'이라 정의하고 있다.

초미세먼지(PM2.5)는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입자가 작아 코점막이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계속 흡입하면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천식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폐포를 통해 혈관에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폐포는 폐의 기관지와 연결된 작은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호흡 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오고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장소다. 폐포와 연결된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초미세먼지로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식도를 거쳐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거나 눈의 표면에 붙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각막이 손상될 수도 있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포항시가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의 환경·예보기준의 강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低減) 방안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나쁨' 기준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건강보호에 나서는 등의 종합대책에 나섰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27일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미국과 일본의 수준인 일평균 35㎍/㎥으로 강화하고, 예보기준도 다음과 같이 강화됨에 따라 예보기준 '나쁨', '매우 나쁨' 일수가 15일에서 45일로, 주의보 발령일수 또한 연

간 5일에서 30일 이상으로 크게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예보기준 단계별 '비상 저감조치' 시행과 함께 교통, 산업, 홍보분야 등 분야별, 예보단계별 미세먼지 저감 실천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적 조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적 조치계획으로는 우선 미세먼지 예보기준(나쁨 기준) 및 주의보 발령(상황전파)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파방법으로는 관내 대기환경홍보전광판 3개소 전면에 지속 표출하며 포항시 홈페이지 및 팩스, SNS(페이스북, 밴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도 병행해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 금지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공단 주도로에 진공흡입청소차 2대와 물청소차 18대를 투입해 특별청소를 실시,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해 시내 도심의 도로 노면을 청소하고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변 노면청소 협조를 요청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체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철강관리공단 127개 사업장과 포항신항 수상화물취업 4개사,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등 대형공사장 31개소에 조업시간 조정 및 단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실천계획

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의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종합상황실(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경전광판과 연계해 경북 동부권역 측정소에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 상황을 관리하며, 측정소 8개소와 포스코 내 측정소 4개소 등을 활용해 지역별 상황대응과 함께 미세먼지 집중관리에 나선다.

또 신항만 수상화물하역장 5개소와 고철보관장 17개소, 아파트, 택지조성사업 등 대형 공사장 31개소, 연소시설 등 127개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시설 지도점검을 전국 지자체 최초 도입한 '이동식 미세먼지 자동측정 차량' 활용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공단 조성을 위해 공단 주요도로 1사 1도로 지정운영과 포스코 등 21개사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CLEAN ROAD) 자발적 협약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민·관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48백억 원을 투입해 3, 4소결집진설비 및 소결공장 탈질설비 설치와 발전소 탈질설비, 화성냉각기 신설, 밀폐형 석탄저장 시설설치, STS제강 전기집진기 설치 및 원료

야드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올해 320대에서 오는 2020년 500대로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기도 올해까지 50개소로 확대 설치하며 차량매연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을 지속 유도할 계획으로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명예환경감시원 20명을 운영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상시 감사를 강화하며 공공기관 자동차의 무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복지건강 향상을 위한 도시 숲 조성 사업

포항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복지건강 향상을 위해 포항GREEN-WAY를 비롯한 치유의 공간 도시숲 및 녹색벨트 조성, 병풍 수림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항Green-way프로젝트는 (구)포항역에서 효자역 폐철도부지에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4.3km의 산책로, 자전거길, 어울누리 숲, 기억 숲, 기차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조화로운 도시 숲과 녹색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또 종합운동장과 뱃머리 마을 일원 28만5000㎡에 국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는 '치유의 공간' 도시 숲은 공단내 오염물질의 도심유입을 차단하고 형산강 수변과 연계한 시민의 삶의 질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도근린공원 잔디광장 1만7800㎡에 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고 있는 공단과 주거를 분리하는 '숲 세권' 조성사업과 공단으로부터 환경적인 불편을 겪어왔던 인근 주민들의 녹색정주환경인 '숲 세권'을 부여하며 공단지역의 미세먼지, 소음과 악취 등을 차단해 쾌적한 도심 정주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에스프레소 한 잔 분량의 미세먼지를 흡수

최근 봄철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로 인해 도심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포항시가 가로수를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수 50,150본에 대하여 가로수 식재,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에스프레소 한 잔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1ha의 숲은 연간 총 168kg에 달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포함)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는 산림청 연구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2월부

터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목 보호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택·상가에서 가로수가 햇빛을 막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가지를 자르거나 이물질이 섞인 급수 작업을 해 고사하는 사례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복지건강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

포항시는 빅 데이터 기반의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측정소 8개소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간이측정기 20대를 설치하며 실시간 측정 및 측정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선다.

또 IoT 기후종합 상황센터를 구축해 미세먼지 등 환경정보를 통합해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위치별 맞춤형 상세대응요령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제공하며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과 세계보건기구(WHO) 선진국 수준의 청정 대기질 유지를 위해 포항 그린웨이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밝혔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1
언론사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4층 발행인 최정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8년 3월 30일자 3면 「서울 공천만큼은 안철수에게 맡겨라」, 2018년 4월 3일자 3면 「안철수의 승부수, 得이냐 失이냐」, 2018년 4월 4일자 3면 「안철수-장진영, 경선의 得과 失」, 2018년 4월 5일자 3면 「안철수-김문수 후보단일화?」, 2018년 4월 16일자 3면 「안철수-장진영, '아름다운 경선' 필요하다」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출마예정자에 대해 우호적인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민일보

2018년 03월 30일 0면 (오피니언)

서울 공천만큼은 안철수에게 맡겨라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압력을 받아온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결국 다음주 초에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개편대회 직후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만나 6·13 전국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안 위원장이 "내주 초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안 위원장이 그날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

당 관계자도 "안 위원장이 출마하겠다고 확실히 의중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같은 안 위원장의 발언을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 역시 "오랜 시간 숙고하다가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지켜본 뒤에 공식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지만 당의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두 공동대표의 거듭된 요청을 만날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당내에선 이미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젊은 서울시장'을 기치로 출사표를 던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28일 그 자리에서 유승민 대표의 등판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유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유 공동대표에게도 안 위원장과 함께 광역단체장에 출마는 이른바 '동반 출마'를 발안으로 대구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방안이 거론됐으나 유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유 대표는 "예정에 안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안 위원장이 '나 홀로' 지방선거의 총대를 메야하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그의 당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만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서울지역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야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서울지역 지지율을 견인해 줄 경쟁력 있는 후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실제 서울 노원을과 송파을 두 군데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오르내리는 인물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부분이 정치초년생인 '등보집' 이거나, 아니면 뛰기 좋아 하는 '예備'론이다. 그것도 아니면 고작 방송에서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같은 방송인 출신들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감동받은 인물은 단 한명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안철수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에 보탬이 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되려 안 위원장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사람들이 태반이다.

게다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들이나 서울시의원 및 각 구의원 후보들 역시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안 위원장은 결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의 경우 통합이전의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이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며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다. '선당후보' 정신으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않는다. 그로 인해 안철수 위원장이 그들 지역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구청장 및 시·구의원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건 아니다. 안 위원장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적어도 서울지역만큼이라도 그에게 모든 지역의 공천을 일임할 필요가 있다.

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인 만큼,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닐 것이다.

유승민 대표가 통합동력론을 제기한 지역위원장들을 겨냥해 "국민의당 출신이 거의 100%"라며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외려 변변한 경쟁력도 지니지 못했던서 출마를 고집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에게 "당을 망치는 행위"라며 출마 자제를 촉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121.0×17.7cm

시민일보 2018년 3월 30일자 3면

보도 내용

서울 공천만큼은 안철수에게 맡겨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압력을 받아온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결국 다음주 초에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개편대회 직후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만나 6·13 전국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안 위원장이 "내주 초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안 위원장이 그날 출마선언 하겠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

당 관계자도 "안 위원장이 출마하겠다고 확실히 의중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같은 안 위원장의 발언을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 역시 "오랜 시간 숙고하다가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지켜본 뒤에 공식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지만 당의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두 공동대표의 거듭된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당내에선 이미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젊은 서울시장'을 기치로 출사표를 던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어제 그 자리에서 유승민 대표의 등판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유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유 공동대표에게도 안 위원장과 함께 광역단체장에 출마는 이른바 '동반 출마'를 방안으로 대구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방안이 거론됐으나 유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유 대표는 "예전에 안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안 위원장이 '나 홀로' 지방선거의 총대를 메야하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그의 당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만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서울지역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줘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서울지역 지지율을 견인해 줄 경쟁력 있는 후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실제 서울 노원을과 송파을 두 군데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오르내리는 인물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부분이 정치초년생인 '듣보잡'이거나, 아니면 튀기 좋아 하는 '애들' 뿐이다. 그것도 아니면 고작 방송에서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같은 방송인 출신들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검증받은 인물은 단 한명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안철수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에 보탬이 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외려 안 위원장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사람들이 태반이다.

게다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들이나 서울시의원 및 각 구의원 후보들 역시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안 위원장은 결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의 경우 통합이전의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이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며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다. '선당후보' 정신으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않는다. 그로 인해 안철수 위원장이 그들 지역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구청장 및 시구의원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건 아니다. 안 위원장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적어도 서울지역만큼이라도 그에게 모든 지역의 공천을 일임할 필요가 있다.

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인 만큼,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닐 것이다.

유승민 대표가 동반등판론을 제기한 지역위원장들을 겨냥해 "국민의당 출신이 거의 100%"라며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외려 변변한 경쟁력도 지니지 못하면서 출마를 고집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에게 "당을 망치는 행위"라며 출마 자제를 촉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시민일보

2018년 04월 03일
03면 (오피니언)

안철수의 승부수, 得이냐 失이냐

아 침 햇 살

고 하 승 편집국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는 4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이는 유승민 공동대표가 당내의 잇따른 등판요구를 일축하면서 "기회가 되면 차기대권에 도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사실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자신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탓이다.

만약 선거에게조차 밀려 3위로 뒤처지는 날에는 차기 대선은 고사하고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당내의 잇따른 '선당후사' 요청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일에는 김관영·오신환·이언주·유의동·권은희·채이배·김수민 등 바른미래당 소속 30~40대 의원 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한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당후사의 과감한 희생이자 다당제를 실현시켜 한국 정치를 진일보시킬 정치혁명"이라며 "백척간두진일보의 심정으로 안 위원장이 선봉에 서서 현신하는 길에 나섰기에 여기 7명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원의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유승민 공동출마'를 거듭 요구하는 성명서를 당에 전달하기도 했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백의종군', '선당후사' 입장을 표명했던 안 위원장이었기에 차마 이런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따로 있다.

모든 것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기꺼이 출마를 결심한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승부수는 설사 시장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패착'이 아니라,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단이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낮은 정당지지율에 구인난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당 지도부 인책론이 불거져 나올 것은 볼 보듯 뻔하다. 하지만 안 위원장의 경우, 당의 요청을 수용해 희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설사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안 위원장에게는 면죄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초기 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판요청을 거부한 유승민 대표는 상당히 거센 당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권유지'를 위해 불출마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당권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안철수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대결구도에선 안 위원장이 박 시장에게 7년 전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한 과거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들이 '안철수 마케팅'을 감조하고 나선 것도 안 위원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고심 끝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카드로 내놓았지만 김 전 지사는 서울에 특별한 연고나 지지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어서 야권표의 분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안 위원장이 2위가 아니라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에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단숨에 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차기대권주자로 급부상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승패와 관계없이 당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등판론에 대해 "100% 가까이 국민의당 출신"이라며 "상당히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유승민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당내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것이 '선당후사'를 선택한 정치인과 '보신주의'를 선택한 정치인의 정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

(21.0×17.7)cm

시민일보 2018년 4월 3일자 3면

보도 내용

안철수의 승부수, 得이냐 失이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는 4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이는 유승민 공동대표가 당내의 잇따른 등판요구를 일축하면서 "기회가 되면 차기대권에 도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사실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자신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탓이다.

만약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로 뒤쳐지는 날에는 차기 대선은 고사하고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당내의 잇따른 '선당후사' 요청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제는 김관영·오신환·이언주·유의동·권은희·채이배·김수민 등 바른미래당 소속 30~40대 의원 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한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당후사의 과감한 희생이자 다당제를 실현시켜 한국 정치를 진일보시킬 정치혁명"이라며 "백척간두진일보의 심정으로 안 위원장이 선봉에 서서 헌신하는 길에 나섰기에 여기 7명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유승민 공동출마'를 거듭 요구하는 성명서를 당에 전달하기도 했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백의종군', '선당후사' 입장을 표명했던 안 위원장이었기에 차마 이런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따로 있다.

모든 것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기꺼이 출마를 결심한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승부수는 설사 시장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패착'이 아니라,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낮은 정당지지율에 구인난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당 지도부 인책론이 불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빤하다. 하지만 안 위원장의 경우, 당의 요청을 수용해 희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설사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안 위원장에게는 면죄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초기 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판요청을 거부한 유승민 대표는 상당히 거센 당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권유지'를 위해 불출마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당권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안철수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대결구도에선 안 위원장이 박 시장에게 7년 전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한 과거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들이

'안철수 마케팅'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안 위원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고심 끝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카드로 내놓았지만 김 전 지사는 서울에 특별한 연고나 지지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어서 야권표의 분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안 위원장이 2위가 아니라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에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단숨에 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차기대권주자로 급부상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승패와 관계없이 당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등판론에 대해 "100% 가까이 국민의당 출신"이라며 "상당히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유승민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당내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 '선당후사'를 선택한 정치인과 '보신주의'를 선택한 정치인의 정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

시민일보

2018년 04월 04일
03면 (오피니언)

안철수-장진영, 경선의 得과 失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내일(4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에는 그동안 기득권 양당이 맡아온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짚고, 양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가 거대 패권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내고,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점에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달 26일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당내에서는 이른바 '안철수-유승민 동반등판'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승민 공동대표는 물론 안 위원장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쪽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도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출마여부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라며 "고심 끝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내일(4일) 안 대표가 당내 등판요구를 수용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니, 당 공천관리위원회로서는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공직후보자추천 당규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경우 단수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라는 걸 어떻게 계량화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경쟁력'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안철수 사당화' 논란이 일고 있는 정당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단수의 후보자를 결정할 수도 있으나, '전략상 필요'라는 걸 판단하는 것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선을 실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선거는 어차피 이기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따로 있다. 과연 그런 선택이 선거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다.

즉 안철수 위원장이 경선 없이 후보로 추대되는 게 본선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장진영 변호사와 경선에서 승리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경선 반대론자들은 먼저 두 사람 '체급'의 차이를 들어 불필요한 경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단순히 정치 경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기 전에 실시한 8.27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된 바 있는데, 그 때에 장진영 변호사는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아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됐었다.

또 안철수 위원장의 '선당후사' 의미가 퇴색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선 필자 역시 공감할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이 출마를 결단한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낮은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당내에서 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했다. 차마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서울시장 출마라는 '독배(毒杯)'마시려는 마당에 경선을 하는 게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사당화' 논란과 '셀프공천' 논란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선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비한 점을 발견, 보완해 본선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경선투표까지 도입하면서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해 버리는 것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후보선출 방식이 연상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모쪼록 바른미래당 공관위의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21.0×16.4)cm

시민일보 2018년 4월 4일자 3면

보도 내용

안철수-장진영, 경선의 得과 失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내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에는 그동안 기득권 양당이 맡아온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짚고, 양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가 거대 패권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내고,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점에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달 26일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당내에서는 이른바 '안철수-유승민 동반등판'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승민 공동대표는 물론 안 위원장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쪽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도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출마여부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라며 "고심 끝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내일 안 대표가 당내 등판요구를 수용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니, 당 공천관리위원회로서는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공직후보자추천 당규에 따르면,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경우 단수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라는 걸 어떻게 계량화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경쟁력'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안철수 사당화' 논란이 일고 있는 정당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단수의 후보자를 결정할 수도 있으나, '전략상 필요'라는 걸 판단하는 것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선을 실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선거는 어차피 이기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따로 있다. 과연 그런 선택이 선거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다.

즉 안철수 위원장이 경선 없이 후보로 추대되는 게 본선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장진영 변호사와 경선에서 승리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경선 반대론자들은 먼저 두 사람 '체급'의 차이를 들어 불필요한 경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단순히 정치 경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기 전에 실시한 8·27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된 바 있는데, 그 때에 장진영 변호사는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아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됐었다.

또 안철수 위원장의 '선당후사' 의미가 퇴색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선 필자 역시 공감할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이 출마를 결단한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낮은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당내에서 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했다. 차마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서울시장 출마라는 '독배(毒杯)' 마시려는 마당에 경선을 하는 게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사당화' 논란과 '셀프공천' 논란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선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비한 점을 발견, 보완해 본선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결선투표까지 도입하면서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해 버리는 것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후보선출 방식이 연상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모쪼록 바른미래당 공관위의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시민일보

2018년 04월 05일
03면 (오피니언)

안철수-김문수 후보단일화?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장고 끝에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서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서울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우상호, 박영선 의원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보는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 되고 의미가 있다. 야권의 대표선수로 나선 안철수로 힘을 모아 주시라"고 호소했다.

같은 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와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연대는)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최기를 박았다.

그러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가.

6.13 지방선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정당 간 단일화가 되려면 후보를 내기 전에 나와야 된다"며 "서울시장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후보를 내놓고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문수 중도하차'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선가능성을 보고 1야당에서 후보를 내지, 연습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양당 모두 후보단일화 없이 '완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붙은 김문수 전 지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카드를 서울시장 후보로 검토했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인재난을 겪어왔다. 연이은 후보들의 거절은 탄핵대선 직후 정체돼있는 당 지지율과 이로 인한 낮은 당선 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김문수 카드'다. 그런 의미에서 김 지사는 일종의 '평 대신 닭'인 셈이다. 즉 경쟁력이 있어서 후보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라는 말이다.

따라서 김 전 지사가 출마하더라도 여당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대등한 위치에서 3자 구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 위원장의 양자 구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김 전 지사와 한국당이 중도하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층의 표가 안 위원장에게 몰릴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필자 역시 김 전 지사가 스스로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 총선 낙선 이후 정치적 존재감을 잃었던 김 전 지사에게 이번 서울시장 출마는 인지도 상승과 정치적 존재감 재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단 2등을 하거나 설사 3등을 하더라도 2위와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다.

반면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경우, 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정계은퇴를 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김 전 지사 개인에 대한 경쟁력 등을 감안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고집한다면 그건 스스로 정치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김 전 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집권세력 견제'를 명분으로 후보사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공식적인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후보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야 1대1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21.0×18.1)cm

시민일보 2018년 4월 5일자 3면

보도 내용

안철수-김문수 후보단일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장고 끝에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서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서울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우상호, 박영선 의원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이후 23년 만에 여야 3파전 구도로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안철수-김문수 단일화'를 통해 결국 여야 1대1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후보 단일화'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측이 모두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거듭 말하지만 야권연대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표는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 되고 의미가 있다. 야권의 대표선수로 나선 안철수로 힘을 모아 주시라"고 호소했다.

같은 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와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연대는)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가.

6·13 지방선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정당 간 단일화가 되려면 후보를 내기 전에 나와야 된다"며 "서울시장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후보를 내놓고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문수 중도하차'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선가능성을 보고 1야당에서 후보를 내지, 연습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양당 모두 후보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붙은 김문수 전 지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카드를 서울시장 후보로 검토했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인재난을 겪어왔다. 연이은 후보들의 거절은 탄핵대선 직후 정체돼있는 당 지지율과 이로 인한 낮은 당선 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김문수 카드'다. 그런 의미에서 김 지사는 일종의 '꿩 대신 닭'인 셈이다. 즉 경쟁력이 있어서 후보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라는 말이다.

따라서 김 전 지사가 출마하더라도 여당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대등한 위치에서 3자 구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 위원장의 양자구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김 전 지사와 한국당이 중도하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층의 표가 안 위원장에게 몰릴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필자 역시 김 전 지사가 스스로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 총선 낙선 이후 정치적 존재감을 잃었던 김 전 지사에게 이번 서울시장 출마는 인지도 상승과 정치적 존재감 재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단 2등을 하거나 설사 3등을 하더라도 2위와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다.

반면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경우, 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정계은퇴를 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김 전 지사 개인에 대한 경쟁력 등을 감안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고집한다면 그건 스스로 정치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김 전 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집권세력 견제'를 명분으로 후보사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공식적인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후보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야 1대1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시민일보

2018년 04월 16일
03면 (오피니언)

안철수-장진영, '아름다운 경선' 필요하다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장진영 전 국민의당 수석 최고위원 등이 오는 18일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 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안 위원장과 장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총 3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모두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경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당내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당의 등판요구를 수용해 출마하는 것인 만큼 경선 없이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른미래당 복진휴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관심이 많은 서울시장 경선 여부는 일단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부적격 후보'를 가려낸 뒤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추대'가 아니라 '경선'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국민의당 시절, 당원들에 의해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그가 아무런 결격사유 없이 '부적격 후보'로 분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경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민주정당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원칙론' 때문만은 아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결단에도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를 가운데 누가 나서더라도 안 위원장을 두 배 가량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이다. 반면 상대가 안 될 것으로 예상했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격차는 고작 5%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라면 설사 안 위원장이 후보로 추대되더라도 1위와의 격차가 심한 2위로 낙선하거나 아니면 3위로 낙선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안 위원장은 무수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임에도 '뭔가 불안하다'는 점이 한계이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안 위원장 주변에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경륜'있는 정치인들이 없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 거물급 영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말 뿐이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안철수 옆에 세우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현재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유권자의 28%가 넘는다. 더구나 이들의 투표율은 80%가 넘는다. 20대가 60%대, 30대가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키맨'인 셈이다.

그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정의화, 손학규, 김종인 등 안정감을 주는 인사들의 영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인재영입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안 위원장이 1등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2등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 않다.

국민들 뇌리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안 위원장의 어설픈 TV토론회에 대한 잔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안초딩'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따라 붙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아무리 '이제는 안철수가 달라졌어요'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 TV토론회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에게 각인된 '안초딩'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장진영 전 최고위원과의 경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경선을 통해 'TV토론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경우, 그게 동력이 되어 정의화, 손학규, 김종인 등 '경륜'있는 인사들의 인재영입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안 위원장이 '불안한 후보'가 아니라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2등을 넘어 1등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안 위원장의 출마를 상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며 "바른미래당을 위해서도, 안 위원장을 위해서도, 우리 당에 특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공감한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한다. 사실 유승민 공동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까지 모두 등판하면, 더 좋겠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바른미래당 바람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른 '안철수-장진영'의 아름다운 경선이다.

(21.0×18.1)cm

시민일보 2018년 4월 16일자 3면

보도 내용

안철수–장진영, '아름다운 경선' 필요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장진영 전 국민의당 수석 최고위원 등이 오는 18일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 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안 위원장과 장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총 3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모두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경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당내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당의 등판요구를 수용해 출마하는 것인 만큼 경선 없이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위원장의 출마선언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경

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른미래당 목진휴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관심이 많은 서울시장 경선 여부는 일단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부적격 후보'를 가려낸 뒤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후보는 '추대'가 아니라 '경선'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국민의당 시절, 당원들에 의해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그가 아무런 결격사유 없이 '부적격 후보'로 분류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경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민주정당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원칙론' 때문만은 아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결단에도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누가 나서더라도 안 위원장을 두 배 가량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이다. 반면 상대가 안 될 것으로 예상했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격차는 고작 5%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라면 설사 안 위원장이 후보로 추대되더라도 1위와의 격차가 심한 2위로 낙선하거나 아니면 3위로 낙선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안 위원장은 무수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임에도 '뭔가 불안하다'는 점이 한계이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안 위원장 주변에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경륜'있는 정치인들이 없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 거물급영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말뿐이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안철수 옆에 세우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현재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유권자의 26%가 넘는다. 더구나 이들의 투표율은 80%가 넘는다. 20대가 60%대, 30대가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키맨'인 셈이다.

그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정의화, 손학규, 김종인 등 안정감을 주는 인사들의 영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인재영입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안 위원장이 1등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2등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 않다.

국민들 뇌리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안 위원장의 어설픈 TV토론회에 대한 잔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안초딩'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따라 붙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아무리 '이제는 안철수가 달라졌어요'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 TV토론회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에게 각인된 '안초딩'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장진영 전 최고위원과의 경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경선을 통해 'TV토론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경우, 그게 동력이 되어 정의화, 손학규, 김종인 등 '경륜' 있는 인사들의 인재영입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안 위원장이 '불안한 후보'가 아니라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2등을 넘어 1등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안 위원장의 출마를 상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며 "바른미래당을 위해서도, 안 위원장을 위해서도 우리 당에 특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공감한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한다. 사실 유승민 공동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까지 모두 등판하면, 더 좋겠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바른미래당 바람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안철수-장진영'의 아름다운 경선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4
언론사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발행인 서창훈
심의대상기사	전북일보 2018년 4월 20일자 14면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재출마 예정인 현직 교육감에 대해서는 '3선을 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아집과 독선에 취해 오직 권력을 탐하는 꼴통의 모습일 뿐이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언급하면서 다른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진짜 진보' 등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全北日報

2018년 04월 20일 14면 (오피니언)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

NGO칼럼

김 영 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아집·불통·독선에 취해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건 '촛불정신' 과 정반대 모습"

어제는 4·19혁명 58주기였다. 늘 해왔던 대로 지역 어르신들과 선배, 몇몇 단체 동료들과 함께 남원 김주열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묘소는 허름하게 방치되어 오다가 새롭게 조성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이후 남원시와 전북도 주최의 기념행사도 열린다. 80년대에는 찾기도 어려웠던 묘역이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우린 늘 기념행사와 별도로 참배를 하고 묘역을 빠져나왔다. 왠지 의례적인 행사로 보여 거북해였기 때문이다. 참배 후 점심은 육모정 근처에서 먹으며 지역 민주화운동과 현안에 관해 담소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묘소에 들러 참배했다. 30년째 항상 있었던 일이다.

요즘 전북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짜가 진보와 진짜 진보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려 하고 있다. 이미영 선생님과 김승환 교육감이 대상이다. 진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소통과 연대, 시민의 힘에서 찾는다.

소영웅주의나 독선과 아집, 계급적, 정치적 색깔을 강조하는 극단적 모험주의와 맹동주의는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향하며 항상 그들의 편에 써서 싸우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도 소홀히 하지 않지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며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8년 전 처음 출발할 때는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다. 중립을 지킨 단체가 고립될 정도로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시는 김승환에 대해 잘 몰랐다. 광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학교에 다닌 과정, 건국대 졸업, 전북대 교수 임용 과정, 불행한 가족사 등 교육계의 수장으로 출마한 경우 당연히 검토해야 할 이력을 알지 못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것도 나중에 알았다. 출신(출생) 난에 익산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 용어는 진영 논리에 빠질 위험성 때문에 쉬이 쓰는 개념이 아니지만 김 교육감이 지난 8년이 모습이 '진보'라 한다면 난 차라리 진보이기를 거부하고 싶다. 진보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김승환식 사고와 행동 같은 진보를 본 적이 없다. 진보가 아니라 짜가인 것이다. 불통과 고립은 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3선에 나서려 한다. 3선을 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제왕적인 지역 교육 대통령이 3선을 획책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진보이기를 포기했단지 적폐로 되었거나 자신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에 취해 오직 권력을 탐하는 꼴통의 모습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제안서를 보면 일부 인사들이 또다시 민주진보와 촛불 혁명의 완수를 자용하여 추대위를 구성하며 옹립하려는 모양이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길에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진정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진보라 한다면 이제 현재의 김 교육감 체제를 극복하고 바꾸는 것이 진보의 길이다.

4·19혁명을 맞이하여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저 산의 늘 푸른 소나무이다." 라는 글이 떠오른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과거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현실이 참혹하게 느껴진다. 정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인가?

이분법적인 사고 틀에 갇혀 있으면 자꾸 한쪽 눈을 감게 된다. 보이는 한쪽 것만 믿으려 한다. 이 틀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시민이 보이고 다양성이 보이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촛불 정신과 김 교육감의 행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촛불 정신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 권위주의와 불통, 독선과 아집을 넘어 연대와 소통,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촛불의 정신이고 민주나 진보, 개혁세력이 추구하는 참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진보' 인 이미영 선생은 외면하면서 눈앞의 이해와 기득권 때문에 가짜를 옹립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유권자인 전북도민이 판단할 것이다.

(23.9×17.3cm

전북일보 2018년 4월 20일자 14면

보도 내용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

어제는 4·19혁명 58주기였다. 늘 해왔던 대로 지역 어르신들과 선배, 몇몇 단체 동료들과 함께 남원 김주열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묘소는 허름하게 방치되어 오다가 새롭게 조성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이후 남원시와 전북도 주최의 기념행사도 열린다. 80년대에는 찾기도 어려웠던 묘역이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우린 늘 기념행사와 별도로 참배를 하고 묘역을 빠져나왔다. 왠지 의례적인 행사로 보여 거북하였기 때문이다. 참배 후 점심은 육모정 근처에서 먹으며 지역 민주화운동과 현안에 관해 담소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묘소에 들러 참배했다. 30년째 항상 있었던 일이다.

요즘 전북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짜가 진보와 진짜 진보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려 하고 있다. 이미영 선생님과 김승환 교육감이 대상이다. 진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소통과 연대, 시민의 힘에서 찾는다.

소영웅주의나 독선과 아집, 계급적, 정치적 색깔을 강조하는 극단적 모험주의와 맹동주의는 진보의 참 모습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향하며 항상 그들의 편에 써서 싸우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도 소홀히 하지 않지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며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8년 전 처음 출발할 때는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다. 중립을 지킨 단체가 고립될 정도로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시는 김승환에 대해 잘 몰랐다. 광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학교에 다닌 과정, 건국대 졸업, 전북대 교수 임용 과정, 불행한 가족사 등 교육계의 수장으로 출마한 경우 당연히 검토해야 할 이력을 알지 못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것도 나중에 알았다. 출신(출생) 난에 익산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 용어는 진영 논리에 빠질 위험성 때문에 쉬이 쓰는 개념이 아니지만 김 교육감의 지난 8년의 모습이 '진보'라 한다면 난 차라리 진보이기를 거부하고 싶다. 진보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김승환식 사고와 행동 같은 진보를 본 적이 없다. 진보가 아니라 짜가인 것이다. 불통과 고립은 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3선에 나서려 한다. 3선을 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제왕적인 지역 교육 대통령이 3선을 획책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진보이기를 포기했던지 적폐로 되었거나 자신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에 취해 오직 권력을 탐하는 꼴통의 모습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제안서를 보면 일부 인사들이 또다시 민주진보와 촛불 혁명의 완수를 차용하여 추대위를 구성하며 옹립하려는 모양이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길에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진정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진보라 한다면 이제 현재의 김 교육감 체제를 극복하고

바꾸는 것이 진보의 길이다.

4·19혁명을 맞이하여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저 산의 늘 푸른 소나무이다." 라는 글이 떠오른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과거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현실이 참혹하게 느껴진다. 정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인가?

이분법적인 사고 틀에 갇혀 있으면 자꾸 한쪽 눈을 감게 된다. 보이는 한쪽 것만 믿으려 한다. 이 틀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시민이 보이고 다양성이 보이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촛불 정신과 김 교육감의 행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촛불 정신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 권위주의와 불통, 독선과 아집을 넘어 연대와 소통,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촛불의 정신이고 민주나 진보, 개혁세력이 추구하는 참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진보'인 이미영 선생은 외면하면서 눈앞의 이해와 기득권 때문에 가짜를 옹립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유권자인 전북도민이 판단할 것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5
언론사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제주도 제주시 도공로9–1 발행인 부임춘
심의대상기사	제주신문 2018년 4월 23일자 1면 「원희룡 바람 "미워도 다시 한 번"」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지사 선거출마 예정인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경력과 평가를 부각 보도한 반면, 문대림 후보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과 함께 무능하고 책임감 없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만을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신문

원희룡 바람 "미워도 다시 한 번"

광야에 선 '청렴 대 적폐' 카르텔의 한 판 승부
'민주당이냐, 원희룡 인물이냐' 놓고 격전 예상

오는 6월 민주당의 인기를 앞세운 적폐세력들의 몸은 오는가, 그 여부는 전적으로 도민들의 뜻에 달렸다.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에선 원희룡은 '미워도 다시한번', 문대림은 '민주당 바람'으로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바람은 과거 도지사들과 달리 일찍행정을 하지 못한 원희룡지사에 대한 심심함을 대미를 위해 내려놓고자 하는 도민들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민심이다. 원희룡이 그래도 제주의 자존심을 건 대선감의 짙은 인물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심재로 이번 6·13 전국동시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지도지사 제주도지사 등 몇몇 대선주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면서 시·도지사의 후보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4년 전 시대 변화의 열망을 타고 과거 제주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청렴한 제주의 새 시대를 연 공적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행정수장으로서 청렴하지만 그동안 도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반면 문대림은 도지사에 나설 정도의 마땅한 정치경력이 없고 청렴성도 없지만 민주당 공천으로 정9대 7개월 근무 경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바람을 타고 있다.

심재로 문대림은 제3대 도의회 4년 10대 도의회 2년을 지낸 의원직을 중도 사퇴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심사에서 조차 탈락했다.

이어 4년후인 지난 2014년 다시 재도전했지만 위성곤과의 경선에서 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비서관 약 270여 명 중의 한사람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으나 역시 7개월만에 다시 비서관직을 중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과거 저지른 온갖 비리의혹에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제주권력을 넘본다며 권력에만 눈이 먼 부늠하고 책임감 없는 정치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최고 갈등을 유발했던 강정 제주해군기지건설안하가와 관련한 해안변 절대보전지역해제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제주도민들에 대한 패륜적 권모술수의

원희룡 문대림

정치 행위로 제주공동체에 막대한 이익을 해칠던 그의 정치 경력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10대 도의회시절 도의회 의장직에 앉으면서는 우근민 도지사를 양아버지로 삼은 것은 도민 기만 행위로 도민 대의 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는 표적을 남겼다.

대군다나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폿개기 땅투기와 일명 '의혹의 성'으로 불리는 유리의 성 주식 부정 취득 의혹 등으로 비리의혹의 진엽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 선거전에서 나타날 부동산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부적절한 이성문제와 아에 연결된 취업비리 의혹, 양어장 인·허가 편법취득 의혹과 심다수 대리점 이권 개입 의혹은 단순한 도덕적 해명에서 끝날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 될 경우 그에는 때보다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은 엠과 전 정당과 관계없이 청렴한 인물론으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의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홀로 광야에 섰다. 따라서 오는 6월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이냐 원희룡이란 인물이냐'를 놓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임춘 기자 jejupress@jejupress.co.kr

제주신문 2018년 4월 23일자 1면

보도 내용

원희룡 바람 "미워도 다시 한 번"

오는 6월 민주당의 인기를 앞세운 적폐세력들의 봄은 오는가, 그 여부는 전적으로 도민들의 뜻에 달렸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에선 원희룡은 '미워도 다시한번', 문대림은 '민주당 바람'으로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바람은 과거 도지사들과 달리 밀착행정을 하지 못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섭섭함을 대의를 위해 내려놓고자 하는 도민들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민심이다. 원희룡이 그래도 제주의 자존심을 건 대선감의 젊은 인물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6·13 전국동시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지도지사, 제주도지사 등 몇몇 대선주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면서 시·도지사의 후보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4년 전 시대 변화의 열망을 타고 과거 제주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청렴한 제주의 새 시대를 연 공적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행정수장으로서 청렴하지만 그동안 도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반면 문대림은 도지사에 나설 정도의 마땅한 정치경력이 없고 청렴성도 없지만 민주당 공천으로 청와대 7개월 근무 경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바람을 타고 있다.

실제로 문대림은 제9대 도의회 4년, 10대 도의회 2년을 지낸 의원직을 중도 사퇴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심사에서조차 탈락했다. 이어 4년 후인 지난 2016년 다시 재도전 했지만 위성곤과의 경선에서 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비서관 약 270여 명 중의 한사람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으나 역시 7개월 만에 다시 비서관직을 중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과거 저지른 온갖 비리의혹에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팔이로 제주권력을 넘본다며 권력에만 눈이 먼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정치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최고 갈등을 유발했던 강정 제주해군기지건설인허가와 관련한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제주도민들에 대한 패륜적 권모술수의 정치 행위로 제주공동체에 막대한 이익을 해쳤던 그의 정치 경력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9대 도의회시절 도의회 의장직에 있으면서는 우근민 도지사를 양아버지로 삼은 것은 도민 기만 행위로 도민 대의 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는 표적을 남겼다.

더군다나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쪼개기 땅투기와 일명 '의혹의 성'으로 불리는 유리의 성 주식 부정 취득 의혹 등으로 비리의혹의 진열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 선거전에서 나타날 부동산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부적절한 이성문제와 이에 연결된 취업비리 의혹, 양어장 인·허가 편법취득 의혹과 삼다수 대리점 이권 개입 의혹은 단순한 도덕적 해명에서 끝날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 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은 얼마 전 정당과 관계없이 청렴한 인물론으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의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홀로 광야에 섰다. 따라서 오는 6월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이냐 원희룡이란 인물이냐'를 놓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6
언론사	**함양신문 주식회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3길 9-8 대표이사 임형섭
심의대상기사	함양신문 2018년 4월 16일자(제1215호) 3면 「서춘수 전 밀양시 부시장 군수후보 출마 기자회견 가져」 및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당원 300여명 동시 탈당의사 밝혀...」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함양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咸陽新聞 www.hamyangnews.com · 함양의 미래, 함양신문과 함께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3

서춘수 전 밀양시 부시장 군수후보 출마 기자회견 가져

"군민과의 약속 지킬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

무소속 서춘수 함양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함양읍 상림 원림홀 2층에서 지지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0여명의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소속으로 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춘수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 함양을 어떻게 만든 모든 상황에 대해 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변화와 도약을 갈망하는 군민들에게 저의 8개년 행정경험을 모두 바치겠다."며 "선비의 고장 우리 함양을 다시 함양답게, 함양 군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비상하는 함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고장으로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현미경 행정의 시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함께 갈사는 복지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사업 일반 ▲분열하고 통합하는 토론문화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설계를 6가지 지표로 삼고 함양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특혜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 계약 문제를 함양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위해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장 큰 문제인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 위원회에 직급별로 대표자들을 교체시키고 참여시켜 인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는 누가 돈 많이 뿌리고 표를 잘 끌어 모으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군민들을 위해 일을 잘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혜와 독점 없이 공고부 예산을 쉽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하기자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당원 300여명 동시 탈당의사 밝혀.

존경하는 함양 군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선을 통해 군수 후보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저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경선을 해서가 아니라 경선을 해야 하는 주요한 자질과 경선 결정의 과정 때문입니다. 당당한 면접을 받들고 심판을 받은 후 승리의 초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특정 후보를 위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자유한국당 함양지역 기개 본부 위원회 회장단 모임에서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전략공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한 기준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경선 방침을 정하였고, 당의 민주주의 절차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당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론 조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신관위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조사인지, 조작 가능성은 없었는지 공개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이런 형식 여론조사는 제3세력의 농단에 의해 등락에 맞게 놀아난다는 것을 모든 당원들과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8년전 그런 피해를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라 치더라 정치가 백번 양보하여 양보도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어떻게 당원들은 자존구 등원집을 팔고 따르겠습니까.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어 만삼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언론에 나온 이후에 대해 제대조차 못하는 후보보겠선방침을 정한 이유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경정을 내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강석진 의원에게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간 정치인 강석진이 아니라 인간 강석진이 좋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수 있도록 열세자였던 함양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것을 모든 당원들이 알고 함양군민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확장될 길 때와 나를 때의 심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수가 있습니까. 저는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사람 간에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신성한 정의를 운동했던 사람과 강석진 의원을 위해 한발로 뛰었던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습니까? 강석진 의원이 선거법으로 고발 되었을 때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

저는 강석진 의원에게 의혹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후보자들의 철저한 검증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아자 나오는 의혹들을 보고도 경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내 공사 수의계약 등 심증특혜를 받은 의혹이 언론에 폭로돼 도덕성 청렴성 등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보인 인물과의 경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함양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물로 보았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저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의 요청권 군민들이 다 아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결정적 증거한 사유가 나왔다면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우리 당에서 검증으로 걸러내야 상대 당에 당하지 않고, 또다시 군수의 불미스러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함양 군민과 당원들의 정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공천심사위원회는 내부 자정능력에서 심각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보수를 재건하고자 했던 김동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군민과 당원이 원치 않고 이미 승자를 정해 둔 듯한 경선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절대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저 서춘수는 이렇게 말실에서 이루진 의혹의 경선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정도의 길과도 다르며 또한 우리 당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런적 행위입니다. 이에 당원들과 군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던 3000여명의 당원과 함께 탈당하여 오직 함양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군민만 바라보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저 서춘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함양을 다시 도약 시킬 것입니다.

추가로, 3000명 이외에도 탈당 의사를 밝힌 분들이 계속해서 의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함양신문 2018년 4월 16일자 3면

보도 내용

서춘수 전 밀양시 부시장 군수후보 출마 기자회견 가져

무소속 서춘수 함양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함양읍 성림웨딩홀 2층에서 지지자 3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탈당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소속으로 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춘수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 함양을 어렵게 만든 모든 상황에 대해 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변화와 도약을 갈망하는 군민들에게 저의 40년 행정경험을 모두 바치겠다."며 "선비의 고장 우리 함양을 다시 함양답게, 함양 군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비상하는 함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고장으로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미경 행정의 시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1. 공정하고 정의로운 목표 2.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3. 함께 잘사는 복지 4.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사업 입안 5. 포용하고 통합하는 토론문화 6.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설계를 6가지 지표로 삼고 함양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특혜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 계약 문제를 함양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위해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장 큰 문제인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 위원회에 직급별로 대표자들을 로테이션으로 참여시켜 인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는 누가 돈 많이 뿌리고 표를 잘 끌어 모으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군민들을 위해 일을 잘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혜와 독점 없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정책만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 잘사는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선비의 고장에 걸맞은 청렴하고 품위 있는 함양을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본질은 변화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후보일 때와 군수일 때 다르지 않게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정 군민을 위해 봉사의 준비가 된 사람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고 반드시 약속한다."며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당원 300여명 동시 탈당의사 밝혀...

존경하는 함양 군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선을 통해 군수 후보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경선을 해서가 아니라! 경선을 해야 하는 후보의 자질과 경선 결정의 과정 때문입니다! 정당은 민심을 받들고 실천할 때 정당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특정 후보를 위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자유한국당 함양지역 7개 분과 위원회 회장단 모임에서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전략공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한 기준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경선 방침을 정하였고, 당의 방침이니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당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론 조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조사인지, 조작 가능성은 없었는지 공개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이런 밀실 여론조사는 적폐세력의 농단에 의해 목적에 맞게 놀아난다는 것을 모든 당원들과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8년 전 그런 피해를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정치가 썩었다지만 아직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어떻게 당원들은 지역구 위원장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어 민심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언론에 나온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못하는 후보와! 경선 방침을 정한 이유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강석진 의원에게 인간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간 정치인 강석진이 아니라 인간 강석진이 좋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열세지역인 함양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것을 모든 당원들이 알고 함양 군민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심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는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사람 간에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도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신성범 전의원을 운동했던 사람과 강석진 의원을 위해 맨발로 뛰었던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습니까! 강석진 의원이 선거법으로 고발 되었을 때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을!

저는 강석진 의원에게 의혹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후보

자들의 철저한 검증만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을 보고도 경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등 집중특혜를 받은 의혹이 언론에 폭로돼 도덕성, 청렴성 등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보인 인물과의 경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함양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물로 보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저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군민들이 다 아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결정적 중대한 사유가 나왔다면 당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우리 당에서 검증으로 걸러내야 상대 당에 당하지 않고, 또다시 군수의 불미스러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함양 군민과 당원들의 정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공천심사위원회는 내부 자정능력마저 상실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보수를 재건하고자 했던 참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군민과 당원이 원치 않고 이미 승자를 정해 둔 듯한 경선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절대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저 서춘수는 이렇게 밀실에서 이뤄진 의혹의 경선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정도의 길과도 다르며 또한 우리 당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야만적 행위입니다. 이에 당원들과 군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던 300여 명의 당원과 함께 탈당하여, 오직 함양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군민만 바라보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저 서춘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함양을 다시 도약시킬 것입니다.

추가로, 300여명 이외에도 탈당 의사를 밝힌 분들이 계속해서 의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3
언론사	**남해신문 주식회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68 2층 발행인 하진홍
심의대상기사	남해신문 2018년 4월 27일자(제1382호) 2면 「만67세 초선현역 김두일 의원의 메시지」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남해군(가선거구) 군의원 선거에 출마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데/스/크/칼/럼•

만67세 초선현역 김두일 의원의 메시지

남해군의회 김두일 의원…. 이는 어디까지나 본지의 독단적 판단이긴 하지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의원을 꼽으라면 필자는 그를 추천하고 싶다. 연륜사가 선정하는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시상제도가 있다면 필자는 단연코 김두일 의원을 감액이 추천할 것이다.

대의제의 꽃인 의회에서 10인의 군민대표 중의 한 사람인 그는 박영일 군정을 상대로 모두 12차례나 군정질문을 했다. 단연 1위다. 그가 지적한 군정의 문제점은 군수가 너무 독주를 해서는 안 되니 의회와 협치를 하자고 요구하거나 군수의 치적을 일부러 부풀려 선전하지 말라고 하거나 예산의 쓰임새를 보다 알차게 하라는 것이었다. 예산절감을 위한 실천으로 그는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국내외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의정활동 중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남 리탕론과 군민여론이 상충한다 싶을 땐 군민여론을 따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흔한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 짤을 간 짚고 넘어가는 의원이었다. 이 잉로 박영일 군수를 중심으로 하는 당 핵심권력으로부터는 시나브로 멀려났고 심지어는 심한 질시까지 받았다. 하지만 촛불에 밀려 당이 또 개정을 때에도,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을 꿋꿋하게 지킨 사람은 그였다. 자유한국당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 6명 중에 당을 지킨 사람은 그와 박미선 의원 뿐이었다. 그랬던 그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당의 공천을 받아 군수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큰 꿈을 주어왔다. 그러나 그는 공천심사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가 군수후보에게 합당된 100인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선과정 없이 자신을 전략공천해달라고 요구했던 처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필자는 그의 탈락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군수공천에서 탈락한 그가 선출직으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은 좁았다. 그는 이미 지난 선거에서 십천지역민들에게 딱 한 번만 하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그 약속을 뗄 수도 없었다. 선거구를 옮겨 출마하는 방법. 그밖에 없었다. 그의 선택은 지난 23일 군의원 가선거구(남해읍·서면)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출마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년간 군의원으로서 같은 당 소속인 박영일 군수의 행정집행과 정치능력을 '지켜보았다'"면서 박영일 군수가 더는 남해군행정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가 의정활동을 통해 관점기계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또한 그는 "이번 자유한국당 군수공천은 정의롭지 못한 공천", "명동하지 아니하는 정의는 불의를 충추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흔들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죽어가는 남해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그의 주장과 진로계획은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박영일 군수를 탈락시켜야 한다고 군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그는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기회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박영일 군정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곤란한 입장에 서한 사람은 박영일 군수예비후보와 그리고 지지층이 겹치는 군의원 가선거구의 자유한국당 공천예비후보자들이다.

"남해군이 나아간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연배세 초선현역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필자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남해신문 2018년 4월 27일자 2면

만67세 초선현역 김두일 의원의 메시지

남해군의회 김두일 의원…, 이는 어디까지나 본지의 독단적 판단이긴 하지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의원을 꼽으라면 필자는 그를 추천하고 싶다. 언론사가 선정하는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시상제도가 있다면 필자는 단연코 김두일 의원을 강력히 추천할 것이다.

대의제의 꽃인 의회에서 10인의 군민대표 중의 한 사람인 그는 박영일 군정을 상대로 모두 12차례나 군정질문을 했다. 단연 1위다. 그가 꼬집은 군정의 문제점은 군수가 너무 독주를 해서는 안 되니 의회와 협치를 하자고 요구하거나 군수의 치적을 일부러 부풀려 선전하지 말라고 하거나 예산의 쓰임새를 보다 알차게 하라는 것이었다. 예산절감을 위한 실천으로 그는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의정활동 중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당리당론과 군민여론이 상충한다 싶을 땐 군민여론을 따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흔한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 짚을 건 짚고 넘어가는 의원이었다. 이 일로 박영일 군수를 중심으로 하는 당 핵심권력으로부터는 시나브로 밀려났고 심지어는 심한 질시까지 받았다. 하지만 촛불에 밀려 당이 쪼개졌을 때에도,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을 꿋꿋하게 지킨 사람은 그였다. 자유한국당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 6명 중에 당을 지킨 사람은 그와 박미선 의원 뿐이었다. 그랬던 그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당의 공천을 받아 군수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큰 꿈을 꾸어왔다. 하지만 그는 공천심사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가 군수후보에게 할당된 100명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선과정 없이 자신을 전략공천해달라고 요구했던 처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필자는 그의 탈락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군수공천에서 탈락한 그가 선출직으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은 좁았다. 그는 이미 지난 선거에서 설천지역민들에게 딱 한 번만 하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그 약속을 깰 수도 없었다. 선거구를 옮겨 출마하는 방법, 그밖에 없었다. 그의 선택은 지난 23일 군의원 가선거구(남해읍·서면)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출마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년간 군의원으로서 같은 당 소속인 박영일 군수의 행정집행과 정치능력을 지켜보았다"면서 박영일 군수가 더는 남해군 행정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모두 그가 의정활동을 통해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또한 그는 "이번 자유한국당 군수공천은 정의롭지 못한 공천", "행동하지 아니하는 정의는 불의를 춤추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흔들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죽어가는 남해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그의 주장과 진로계획은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박영일 군수를 탈락시켜야 한다고 군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그는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기회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박영일 군정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사람은 박영일 군수예비후보와 그리고 지지층이 겹치는 군의원 가선거구의 자유한국당 공천예비후보자들이다.

"남해군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만67세 초선현역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필자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4
언론사	**주식회사 충북일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대표이사 강태억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8년 5월 2일자 8면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의 인생유전」 및 2018년 5월 4일자 9면 「정정순 후보의 외유내강」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장에 출마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력 등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충북일보

2018년 05월 02일 08면 (오피니언)

최종웅의 세상티평

소설가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의 인생유전

6·13지방선거 중에서도 유독 청주시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북의 도청 소재지란 의미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의 숫자나 비중 면에서 다른 시·군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의 경력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좋은 가문에서 출생해 일류학교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지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만은 흙수저 출신으로 삼류인생을 살아왔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힘든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가끔은 이변도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용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고, 성공한 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다. 황영호 후보의 삼류인생은 반농 출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덕성초를 졸업했으니 행정구역으로만 청주시였지 사실상 농촌이었다. 6·25 참전용사인 선친은 몸이 불편해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충북에서 정치를 하려면 청주중과 청주고를 졸업해야 선후배를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되는데 그는 이런 코스도 밟지 못했다.

그의 삼류인생은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된다.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니 사시나 행정고시에 도전할 만도 했으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넉살이 좋아야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보험회사도 그에 못지않은 직종이다.

그곳에서 영업소장과 노조위원장까지 지냈으니 산전수전은 물론 공중전까지도 겪은 것이다.

삼류인생을 전전하던 그의 삶이 도약하기 시작한 것은 청주시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였다. 청주시장 도전을 위한 경력관리라도 하듯 분과 위원장, 부의장, 의장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황영호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이 있는 곳에 그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청주시장 후보 반열에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마침내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공천을 따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무기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용이 되기 위해서는 승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삼류인생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황영호 후보가 과연 그 관문도 돌파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당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 아직도 박근혜 잔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다면 대오각성하려는 몸부림이라도 쳐야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서 누구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남태평양에는 드루킹이라는 구름 한 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비바람을 모아 태풍으로 성장해 한반도를 강타할지도 모른다.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그가 돌파해야할 두 번째 관문인 셈이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남북관계는 그에게 세 번째 관문이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한미관계는 급속히 냉각할 수 있고,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방선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분명하다.

황영호 후보가 돌파해야 할 네 번째 관문은 야당후보 단일화다. 지역 언론이 심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여 1대 1 구도를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관문은 6·13지방선거가 단순히 청주시장만 평가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는 것이다. 아무튼 5가지 변수 중에서 드루킹 사건만 빼고는 대체로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삼류인생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불굴의 잡초정신으로 도전한다면 파란을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을 것 같다.

(22.5×14.6)cm

충북일보 2018년 5월 2일자 8면

보도 내용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의 인생유전

6·13지방선거 중에서도 유독 청주시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북의 도청 소재지란 의미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의 숫자나 비중 면에서 다른 시·군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의 경력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좋은 가문에서 출생해 일류학교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지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만은 흙수저 출신으로 삼류인생을 살아왔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힘든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가끔은 이변도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용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고, 성공한 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다. 황영호 후보의 삼류인생은 빈농출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덕성초를 졸업했으니 행정구역으로만 청주시였지 사실상 농촌이었다. 6·25 참전용사인 선친은 몸이 불편해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충북에서 정치를 하려면 청주중과 청주고를 졸업해야 선후배를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되는데 그는 이런 코스도 밟지 못했다.

그의 삼류인생은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된다.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니 사시나 행정고시에 도전할 만도 했으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넉살이 좋아야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보험회사도 그에 못지않은 직종이다.

그곳에서 영업소장과 노조위원장까지 지냈으니 산전수전은 물론 공중전까지도 겪은 것이다.

삼류인생을 전전하던 그의 삶이 도약하기 시작한 것은 청주시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였다. 청주시장 도전을 위한 경력관리라도 하듯 분과 위원장, 부의장, 의장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황영호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이 있는 곳에 그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청주시장 후보 반열에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마침내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공천을 따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무기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용이 되기 위해서는 승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삼류인생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황영호 후보가 과연 그 관문도 돌파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당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 아직도 박근혜 잔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다면 대오각성하려는 몸부림이라도 쳐야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서 누구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남태평양에는 드루킹이라는 구름 한 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비바람을 모아 태풍으로 성장해 한반도를 강타할지도 모른다.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그가 돌파해야할 두 번째 관문인 셈이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남북관계는 그에게 세 번째 관문이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한미관계는 급속히 냉각할 수 있고,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방선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분명하다.

황영호 후보가 돌파해야 할 네 번째 관문은 야당후보 단일화다. 지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여 1대 1 구도를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관문은 6·13지방선거가 단순히 청주시장만 평가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는 것이다. 아무튼 5가지 변수 중에서 드루킹 사건만 빼고는 대체로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삼류인생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불굴의 잡초정신으로 도전한다면 파란을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충북일보

기고

김종관
충북ROTC충동우회 부회장

정정순 후보의 외유내강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게 나온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다. 이 시기 이런 분위기는 6·13지방선거를 치르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겐 호기다. 청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여러 후보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 청주시장 본선 후보 경쟁은 유행열·연철흠 후보를 포함해 5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한범덕, 정정순, 이광희 등 세 후보만 남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며칠 내 시민과 당원들의 전화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면면을 보면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누구 하나 후보로서 흠결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정정순 후보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 한 마디 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금수저'가 아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편안하게 교육받지 못했다. 그야말로 농촌에서 공부만 잘한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여섯 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다. 당시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초가집에서 여덟 식구가 복작복작 살았다. 겨울에는 새장을 만들어 참새를 잡았다. 봄이면 누나와 형을 좇아 나물을 뜯으러 다니기도 했다.

그는 18살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 뒤 승진을 거듭해 정규직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직급인 1급까지 올랐다. 재직 중 임을 할 때마다 얼마 리를 부하 직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협의하는 스타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행안부 근무 때는 '지방재정세제국장'이라는 요직에 발탁됐다. 비고시, 지방 아(2)대 출신으로는 처음이었다. 그 바탕에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친화력이 있으면서도 내면에 강인한 의지와 투철한 공직자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나는 그의 이런 외유내강 자세가 지금까지 그를 키워 온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힘은 그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더 크게 발휘되고 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주변 사람 수천 명의 입담을 성사시키면서 인맥과 잠재력을 드러냈다. 지난 청주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그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도 그런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 지역 전·현직 직능단체 대표 다수가 지지선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범덕, 이광희 후보도 나름 훌륭한 후보들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정정순 후보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잠룡'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충북일보 2018년 5월 4일자 9면

보도 내용

정정순 후보의 외유내강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게 나온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다.

이 시기 이런 분위기는 6·13지방선거를 치르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겐 호기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여러 후보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 청주시장 본선 후보 경쟁은 유행렬·연철흠 후보를 포함해 5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한범덕, 정정순, 이광희 등 세 후보만 남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며칠 내 시민과 당원들의 전화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면면을 보면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누구 하나 후보로서 흠결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정정순 후보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 한 마디 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금수저'가 아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편안하게 교육받지 못했다. 그야말로 농촌에서 공부만 잘한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여섯 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다. 당시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초가집에서 여덟 식구가 복작복작 살았다. 겨울에는 새장을 만들어 참새를 잡았다. 봄이면 누나와 형을 좇아 나물을 뜯으러 다니기도 했다.

그는 18살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 뒤 승진을 거듭해 정규직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

고 높은 직급인 1급까지 올랐다. 재직 중 일을 할 때마다 일머리를 부하 직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협의하는 스타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행안부 근무 때는 '지방재정세제국장'이라는 요직에 발탁됐다. 비고시, 지방 야간대 출신으로는 처음이었다. 그 바람에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친화력이 있으면서도 내면에 강인한 의지와 투철한 공직자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나는 그의 이런 외유내강 자세가 지금까지 그를 키워 온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힘은 그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더 크게 발휘되고 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주변 사람 수천 명의 입당을 성사시키면서 인맥과 잠재력을 드러냈다.

지난 청주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그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도 그런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 지역 전·현직 직능단체 대표 다수가 지지선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범덕, 이광희 후보도 나름 훌륭한 후보들이다. 히지만 내가 아는 정정순 후보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잠룡'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6
언론사	**대구경북일보 주식회사** 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 발행인 이종훈
심의대상기사	심의대상 대구경북일보 2018년 5월 11일자 11면 「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성명발표」 제하의 기사
주문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에 출마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경북일보

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성명발표

허위사실유포 엄중 대처 경고

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작 시도에 대해 사과와 응답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철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역사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에서 (이철우 후보의)'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는 때 일본 때문에 벗어난다'라는 발언은 가히 후보의 역사관을 의심케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분께 경상북도의 도정은 더더욱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게시하고 '#자유한국당','#이철우','#역사왜곡'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 밴드, 카페 등 SNS를 통해 곳곳에 전파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 후보가 문제 삼은 발언은 2017년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내용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철우','#역사왜곡'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 밴드, 카페 등 SNS를 통해 곳곳에 전파됐다.

오 후보가 문제 삼은 발언은 2017년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내용이다.

저는 그 해 1월 국회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CIA, ODNI,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등 국방·안보 관련 인사를 만나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을 괴롭힌다. 당신들 무기 가지다놓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느냐"며 "미국이 중국에게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경상북도의 '드루킹'인가!

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응답의 조치를 취하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에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역사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일본 때문에 벗어난다"라는 발언은 가히 후보의 역사관을 의심케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분께 경상북도의 도정은 더더욱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게시했다.

오 후보가 문제 삼은 발언은 2017년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내용이다.

저는 그 해 1월 국회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CIA, ODNI,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등 국방·안보 관련 인사를 만나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을 괴롭힌다. 당신들 무기 가지다놓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느냐"며 "미국이 중국에게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은 "중국이 심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이 10년 전에 자기들의 속국이었다가 일본 때문에 벗어났는데 이제 한을 다시 찾았다니 다시 돌아오라는 뜻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3월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주영환 장관에게 이 같은 미국 측 인사들의 견해를 전하며 중국의 속내를 잘 판단해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미국 측 인사의 견해를 제 개인의 생각인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하라고 말한 해프닝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이철우 위원은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우 의원의 오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에 저는 "오히려 제가 우원식 위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 또도 을 게 이해를 안 하고 그게 왜곡 전파되면 '이철우 위원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라고 거두로 함의한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이 오 후보가 페이스북 계시물에 직접 올린 국회 회의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회의 한 달 후인 4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알려주더라"고 말해 한·미 양국에서 논란이 됐고, 제가 전한 미국 정보계열 인사들의 분석이 미국 대통령 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가 마치 제가 '속국'의 역사관을 가진 양 허위로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SNS상에 게시하여 페이스북, 밴드 등을 통해 곳곳에 전파되도록 한 것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 명예를 훼손한 것임에 틀림없다.

저는 국회정보위원장을 지냈고 당 당의 사드 배치에 찬성해 기지 근처에 집까지 구입했으며 하셨들에게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강연을 해 온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중국에 달려가 국론을 분열시켜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성주까지 내려와 '사드 전자파에 내 뼈이 뒤져질 것 같아'라고 노래하며 촛을 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다르다.

'드루킹'사건을 통해 궁지에 몰린 여당의 광역지사 후보가 이제 대놓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통한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는데, 오 후보는 경상북도의 '드루킹'인가!

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1. 해당 게시글과 SNS로 유포된 글들을 신속하게 삭제하라

2. 오 후보는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라

3.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에 대해 상응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가 페이스북 계시글에 국회 회의록까지 첨부하며 "유권자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게시된 한 온라인 카페에 달린 댓글들을 덧붙인다.

읽어보면 도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회의록을 보고도 저를 의도적으로 허위 비방한 것에 대해 오 후보는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2018. 5. 10

자유한국당 경상북도지사후보 이철 우

대구경북일보 2018년 5월 11일자 11면

보도 내용

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성명발표

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작 시도에 대해 사과와 응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철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역사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에서 (이철우 후보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일본 때문에 벗어났다'라는 발언은 가히 후보의 역사관을 의심케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분께 경상북도의 도정은 더더욱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자유한국당', '#이철우', '#역사왜곡'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 밴드, 카페 등 SNS를 통해 곳곳에 전파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 후보가 문제 삼은 발언은 2017년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 해 1월 국회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CIA, ODNI,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등 국방·안보 관련 인사를 만나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을 괴롭힌다. 당신들 무기 가져다 놓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느냐"며 "미국이 중국에게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경상북도의 '드루킹'인가!

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응당의 조치를 취하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에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역사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일본 때문에 벗어났다"라는 발언은 가히 후보의 역사관을 의심케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분께 경상북도의 도정은 더더욱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게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역사왜곡'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 밴드, 카페 등 SNS를 통해 곳곳에 전파됐다.

오 후보가 문제 삼은 발언은 2017년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내용이다.

저는 그 해 1월 국회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CIA, ODNI,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등 국방·안보 관련 인사를 만나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을 괴롭힌다. 당신들 무기 가져다놓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느냐"며 "미국이 중국에게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은 "중국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이 100년 전에 자기들의 속국이었다가 일본 때문에 벗어났는데 이제 힘을 다시 찾았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뜻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3월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에게 이 같은 미국 측 인사들의 견해를 전하며 중국의 속내를 잘 판단해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미국 측 인사의 견해를 제 개인의 생각인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하라고 말한 해프닝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이철우 위원은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우 의원의 오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에 저는 "오히려 제가 우원식 위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 뜻도 옳게 이해를 안 하고 그게 왜곡 전파되면 '이철우 위원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라고 거꾸로 항의한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이 오 후보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올린 국회 회의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회의 한 달 후인 4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알려주더라"고 말해 한·미 양국에서 논란이 됐고, 제가 전한 미국 정보계열 인사들의 분석이 미국 대통령 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가 마치 제가 '속국'의 역사관을 가진 양 허위로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SNS상에 게시하여 페이스북, 밴드 등을 통해 곳곳에 전파되도록 한 것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 명예를 훼손한 것임에 틀림없다.

저는 국회정보위원장을 지냈고 당당히 사드 배치에 찬성해 기지 근처에 집까지 구입했으며 학생들에게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라는 강연을 해 온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중국에 달려가 국론을 분열시켜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성주까지 내려와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다르다.

'드루킹' 사건을 통해 궁지에 몰린 여당의 광역지사 후보가 이제 대놓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

공격과 흑색선전을 통한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는데, 오 후보는 경상북도의 '드루킹'인가!

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1. 해당 게시글과 SNS로 유포된 글들을 신속하게 삭제하라
2. 오 후보는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라
3.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가 페이스북 게시글에 국회 회의록까지 첨부하며 "유권자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게시된 한 온라인 카페에 달린 댓글들을 덧붙인다.

읽어보면 도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회의록을 보고도 저를 의도적으로 허위 비방한 것에 대해 오 후보는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2018. 5. 10.

자유한국당 경상북도지사후보 이 철 우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7
언론사	**디엠코리아 주식회사(도민일보)**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본관1층 발행인 현재오
심의대상기사	도민일보 2018년 5월 4일자 20면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을 만나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송군의원 선거에 재출마 예정인 현직 청송군의회 의원의 출마 관련 인터뷰를 사진과 함께 전면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도민일보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을 만나다

6·13지방선거 청송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공천 확정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송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천의 면접을 잘 보셔서 공천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으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면접을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군민들의 염려와 성원 덕분에 '기호 2-가'로 공천 받았습니다.

면접내용은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별소득 생각과 지난 4년간 의정활동 및 경험 그리고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청송군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와 의원님에 대한 여론이 좋습니다. 그런데 출마예정자 중 유일하게 예비후보등록을 안 하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게 주어진 임기인 4년일지라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에 명예 선거가 주(主)가 되어 제 소임에 소홀하게 될까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울러 선거가 과열되거나 장기화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제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은 선거를 차분히 싶습니다.

사실 당초에 군민들은 의원님이 여성비례대표였기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당찬 의정활동과 깔끔한 감투이나 적폐를 바로잡으려는 용기와 의지를 보고 의원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재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가장 시급한 자력한간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시내유통공사의 향후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공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내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할 것이며 쓸모없던 천지 건설과 관련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초소로 제계적일 공원으로서의 합정활용을 지키는 방향으로 분쟁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이 찾아오는 청송' 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약집표를 볼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는 많은 별칭과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디본회가장의 대모' '장애인의 어긴' '지은가인' 청송의 잔다르크' 등 예사롭지 않은데 주로 의원님의 어떤 활동을 때문입니까?

그렇게 불러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40년간 다분화가정의 아주머님들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마음을 나누고 소소한 것들까지 공유하며 생기다보니 그렇게 불러나 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 늘 관심 갖고 필요한 부분을 챙기려고 애쓰는 마음 그리고 지적장애인들과는 눈높이를 같이 하여 많이 다독여주고 사랑을 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했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송문화관광재단이나 청송시과유통공사, 진보문화관광시장 등의 문제점들을 남보다 지적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적도 생기고 영청 힘들었지만 군민들께서는 군민을 대신해 일정서서 싸우는 전사처럼 봐 주십니다.

시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 이후 지금까지 심 수개월 동안 많은 군민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몇몇 단사자들에 의해 많은 고충을 겪으신 것으로 압니다. 억울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청송시과유통공사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 질못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었고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일이 정당하고 올바른 일 이 확실하기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투고 대립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제가 가만히 참고 있으면 뭇바람만 일으키다말겠거나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기초의원으로서 보기 드물게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례발의는 기초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제가 단독 발의했던 조례는 5건으로 청송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행복조합설립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송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국 기초지자단체 최초로 청송군 마이스산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또한 청송군의회에서 유일하게 음력말전에 대해 당당하게 반대의견을 밝히고 청송군 음력반대연합대책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데, 혹시 선거를 염두에 두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겁단코 아닙니다. 청송은 산지가 85%인 산촌형 농촌으로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소중한 곳입 존인 아니라 대한민국의 허파이며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청송의 수려한 자연입니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인을 배제한 무분별한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산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청송의 자연적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약 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를 의식했다면 오히려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양측 표를 얻을 수 있으니 더 유리했겠지요.

어심으로서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없는데 현재 여론으로서는 어심지역구의원의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군민만 바라보며 앞실과 군민 앞에서 부끄럼 없이 정직하고 청렴하게 원칙과 소신을 철저히 지키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군민들로부터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는 현재 우리 청송군민들의 정치수준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씬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혈연 · 지연 · 학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 4년의 경험과 아름다 경험을 는 연구의 학습을 통해 누구보다 내 상있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개소식은 언제 하시는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5월 24일이 후보등록일입니다. 오전에 후보등록을 한 후 5월24일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마침 현동면 출신의 후보가 없고 나선거구 5개 면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사무실은 현동면에 둘 것입니다.

기획취재부 기자

도민일보 2018년 5월 4일자 20면

보도 내용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을 만나다

6·13지방선거 청송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공천 확정

Q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송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면접을 잘 보셔서 공천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으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면접을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군민들의 염려와 성원 덕분에 '기호 2-가'로 공천 받았습니다. 면접내용은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평소의 생각과 지난 4년간 의정활동 및 경험 그리고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Q 청송군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와 의원님에 대한 여론이 좋습니다. 그런데 출마예정자 중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게 주어진 임기인 6월말까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에 행여 선거가 주(主)가 되어 제 소임에 소홀하게 될까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울러 선거가 과열되거나 장기화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용한 선거를 치루고 싶습니다.

Q 사실 당초에 군민들은 의원님이 여성비례대표였기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당찬 의정활동과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를 바로잡으려는 용기와 의지를 보고 의원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재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사과유통공사의 향후 운영방향 및 경영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공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과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할 것이며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서의 청정청송을 지키는 방향으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이 찾아오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약발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의원님께는 많은 별칭과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다문화가정의 대모', '장애인의 애인', '작은거인', '청송의 잔다르크' 등 예사롭지 않은데 주로 의원님의 어떤 활동들 때문입니까?

그렇게 불러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년간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마음을 나누고 소소한 것들까지 공유하며 챙기다보니 그렇게 불리나 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 늘 관심 갖고 필요한 부분들 챙기려고 애쓰는 마음 그리고 지적장애인들과는 눈높이를 같이 하여 많이 다독여주고 사랑을 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송문화관광재단이나 청송사과유통공사, 진보문화관광형시장 등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적도 생기고 엄청 힘들었지만 군민들께서는 군민을 대신해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처럼 봐 주셨나 봅니다.

Q 사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 이후 지금까지 십 수개월 동안 많은 군민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몇몇 당사자들에 의해 많은 고충을 겪으신 것으로 압니다. 억울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청송사과유통공사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었고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일이 정당하고 옳은 일인 게 확실하기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투고 대립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제가 가만히 참고 있으면 헛바람만 일으키다 말겠거니 생각합니다.

Q 의원님은 기초의원으로서 보기 드물게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례발의는 기초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제가 단독 발의했던 조례는 5건으로 청송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협동조립설립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송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송군 마이스산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Q 의원님은 또한 청송군의회에서 유일하게 풍력발전에 대해 당당하게 반대의견을 밝히고 청송군 풍력반대연합대책위원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데, 혹시 선거를 염두에 두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단코 아닙니다. 청송은 산지가 83%인 산촌형 농촌으로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소중한 곳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허파이며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청송의 수려한 자연입니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을 배제한 무분별한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청송의 자연적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를 의식했다면 오히려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양측 표를 얻을 수 있으니 더 유리했겠지요.

Q 여성으로서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없는데 현재 여론으로서는 여성지역구의원의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군민만 바라보며 양심과 군민 앞에서 부끄럼 없이 정직하고 청렴하게 원칙과 소신을 철저히 지키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군민들로부터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청송군민들의 정치수준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혈연·지연·학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 4년의 경험과 아울러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누구보다 내실있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Q 개소식은 언제 하시는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5월 24일이 후보등록일입니다. 오전에 후보등록을 한 후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마침 현동면 출신의 후보가 없고 나선거구 5개 면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사무실은 현동면에 둘 것입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5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3 대표이사 방상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8년 4월 26일자 E02면 「"문화도시로 대변신…시민들 이제 의정부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특집기획섹션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에 재출마예정인 지자체단체장의 사진, 경력, 시장 재임 중 활동성과 등을 언급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문화도시로 대변신… 시민들 이제 의정부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안보와 군사도시란 인식은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의정부는 희망이 넘치고 문화창작 활동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대형 리조트 오픈, 융합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병용(63·사진)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은 의정부의 눈부신 성장에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수 출신으로 2010년 시장으로 당선돼 약 8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의정부에 있는 신흥대(현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내면서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그는 "수부도시 의정부의 발전이 곧 경기 북부의 성장이다. 시장이란 책임감이 다른 시·군보다 더 컸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었지만 보람차다"고 했다.

안 시장에게 시장을 지내며 기억 남는 일에 대해 묻자 "지난 8년은 의정부가 시민 편의적 도시로 바뀐 시간이었다. 이를 뒷받침했던 사업 진행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시장 재임 동안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전국 최초 직동·추동 근린공원 민자사업 추진 등을 했다. 해당 사업들은 앞으로 의정부를 먹여 살릴 사업들로 평가받는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정부시는 문화도시로 변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문화 소외지역인 의정부가 의정부 음악극 축제, 회룡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음식인 부대찌개를 상품화한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 시장은 "'책 읽는 도시'란 표어도 이 같은 노력 중 하나다. 의정부는 전국 최초로 전철역사를 활용한 가재울도서관, 미술전문도서관, 음악전문 도서관 등 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한창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정부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교통 인프라도 많이 개선됐다. 안 시장은 "의정부가 서울과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관문인 만큼 교통 인프라 구축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함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정부에는 서울 진입로인 호원 IC개설, 의정부 회룡 통합환승역사 준공, 국도 43번선 송산 도로 확장, 국도 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개설, 민락 신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

안 시장은 의정부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시민이 쉴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시내 천변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방치됐던 시내 천변을 시민 이용 중심적으로 바꿨다"며 "지금 의정부 천변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고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했다. 콘크리트 하천 바닥 정비, 하천을 뒤덮은 복개주차장 철거, 깨끗한 물 공급, 하수관 정비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됐다. 여기에 경기 북부 순환자전거 도로도 함께 개설했다. 안 시장은 "북부 5개 시·군과 서울을 자전거를 통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의정부 천변은 서울 및 인근 시·군에서 놀러 오는 국민 쉼터가 됐다"고 말했다.

"문화도시로 대변신… 시민들 이제 의정부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조선일보 2018년 4월 26일자 E02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7
언론사	**주식회사 산경일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발행인 송준길
심의대상기사	산경일보 2018년 5월 14일자 3면 「3각 뇌물의혹 드라마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제하의 논평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관련 상대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특정 예비후보자 대변인의 논평을 기사형태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産經日報

2018년 05월 14일
03면 (정치)

3각 뇌물의혹 드라마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논평]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염오봉 대변인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성폭력당과 댓글 조작당이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데 더해 이제는 뇌물청탁 의혹마저 터졌다. 성남시장 후보가 조폭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 운전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청에 취업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뇌물스캔들 의혹에 국민들은 한숨짓는다.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운전기사와 금전 거래 의혹이 터져나오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1년간 불법적인 운전서비스를 제공한 운전기사가 성남시청에 청탁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은수미 후보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1년만에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공무원 임용 경쟁률이 무려 100:1이 넘는 살인적 취업 지옥에 고통받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은수미 후보는 감히 지지를 호소하겠는가?

은수미 후보의 뇌물청탁 의혹 사건이 불거진 성남시청의 최고 책임자였던 현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도 그 내막을 밝혀야 한다.

거품과도 같은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께 이재명-은수미-조폭 3각 뇌물의혹 드라마를 4년간 시청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형규 기자 chg@sklbo.com

(15.3×10.2)cm

산경일보 2018년 5월 14일자 3면

보도 내용

3각 뇌물의혹 드라마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논평]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염오봉 대변인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성폭력당과 댓글조작당이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데 더해 이제는 뇌물청탁 의혹마저 터졌다.

성남시장 후보가 조폭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 운전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청에 취업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뇌물스캔들 의혹에 국민들은 한숨짓는다.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운전기사와 금전 거래 의혹이 터져나오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1년간 불법적인 운전서비스를 제공한 운전기사가 성남시청에 청탁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은수미 후보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1년 만에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공무원 임용 경쟁률이 무려 100:1이 넘는 살인적 취업 지옥에 고통받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은수미 후보는 감히 지지를 호소하겠는가?

은수미 후보의 뇌물청탁 의혹사건이 불거진 성남시청의 최고 책임자였던 현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도 그 내막을 밝혀야 한다.

거품과도 같은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께 이재명-은수미-조폭 3각 뇌물의혹 드라마를 4년간 시청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8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매일신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2 발행인 우정자
심의대상기사	경기매일 2018년 5월 23일자 4면 「홍승표 광주시장 후보 "수도권 스포츠 메카 조성"」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기도 광주시장 예비후보자의 공약을 보도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의 성명, 기호, 주요 경력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사진으로 함께 게재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매일

2018년 05월 23일
04면 (정치)

홍승표 광주시장 후보 "수도권 스포츠 메카 조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험 살려 경제 활성화 이루겠다"

자유한국당 경기 광주시장 홍승표 후보가(사진)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 연중 대회 및 연습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도 자산(資産)인 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지난 21일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자연환경을 더 이상 규제로만 보지 말고 활용 가능 방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공약의 취지"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우선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미집행 공원부지 등에 축구장·야구장 10~20개를 조성해 전국 유소년 대회와 성인대회 등을 연중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야구의 경우 리틀팀과 중·고등학교팀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경기 팀들이 구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비싼 땅값 때문에 구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매일 인근 경기지역으로 출장 연습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성인의 경우에도 축구·야구 동호회가 활성화 돼 있으나 구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광주시 규제지역에 야구·축구 전용 구장을 건립해 수도권 팀들에게 연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연중 각종 대회를 벌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종면 팔당물안개공원에 국제드론대회를 유치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분인 드론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며 무수한 대형 축제와 국제행사를 개최한 노하우를 살려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 인기도 높은 드론 국제대회를 열어 광주를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후보는 ▲오토캠핑장을 포함한 '레저·자연휴양림' 조성 ▲광동리 수계지역 대형 꽃단지 조성 ▲남한산성 성곽 홀로그램 조명 설치 ▲팔당변 자전거·바이크 상권 조성 ▲백자도요지 테마 개발 등을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말이면 많은 자전거·바이크 동호인들이 광주를 찾는다"며 "이들을 위한 전문 상권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 차정준기자

(20.6×13.7)cm

경기매일 2018년 5월 23일자 4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9
언론사	**주식회사 일일경북신문(경북일일신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85 발행인 오주섭
심의대상기사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1일자 1면 「만학도의 꿈, 준비된 지역 큰 정치 일꾼으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가 뒤늦게 학업을 마친 이색경력을 다루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의 사진, 상세 이력, 출마관련 입장 등을 1면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신문

6.13 지방선거 핫 잇슈

만학도의 꿈, 준비된 지역 큰 정치 일꾼으로…

경북도의원 포항 제3선거구 이칠구 예비후보 만학 화제
42살 고교 졸업, 대학입.편학, 대학원 석사과정 마쳐

경북일일신문 2018년 5월 21일자 1면

보도 내용

만학도의 꿈, 준비된 지역 큰 정치 일꾼으로…

6·13 지방선거에 경북도의원 포항 제3선거구(중앙. 두호. 환여동) 이칠구 예비후보가 마흔 살이 넘어 고등학교를 졸업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창시절 다 못 이룬 청운의 푸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늦깍이도 아닌 불혹에 자신의 아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회자 되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은 나이 들어 부끄러울 만도 한데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니 열정이 대단하다며 참일꾼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당시 교복 자율화에서 다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면 쑥스러울 만도 한데 다 이겨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야 말로 대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현재 대동고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일부 교사들은 당시 이 예비후보의 재학시절을 떠올리며 큰머리에 모자를 쓰고 등교하던 생각이 난다며 입을 모았다.

이 학교 교사는 학교 생활에도 충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원래라면 1978년에 대동고등학교를 동기생들과 같이 졸업을 해야 하지만 한순간 실수로 학교를 그만뒀다.

동기생들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흥해 중학교 시절 공부를 잘해 대동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입학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져 동기생들이 인재를 잃었다"며 학교 측과 동기생들이 많이 안타까워 했다고 그 시절을 떠올렸다.

이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애태워하던 이 예비후보는 42살이 되던 2002년에 3학년에 재입학 200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린대학교에 입학한다. 이 예비후보는 선린대학 경찰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경영학과까지 다닌다. 이후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다.

고등학교 재입학시기에는 이 예비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온 20년 이상 젊음과 열정을 쏟았다는 관광회사 CEO로서 사업에 전념하면서 고교를 졸업하는 집념을 보여 온 것이다 .

바로 2003년 대동고등학교를 졸업 할 무렵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시기다.

2006년 제5대 포항시의회에 진출한 이후 이 예비후보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계속된다.

시의원 재직시절로 낮에는 의정활동을 밤에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열정을 불태운다.

이 예비후보는 포항시의회 재5·6·7대 시의원으로 "지금까지 받아온 포항 시민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보은의 길이자 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할 옳은 길"이 도의원 출마라고 말한

다.

이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던 포항 심장부인 중앙·죽도·두호동이 점차 활력을 잃어 구도심으로 전락해 젊음과 열정을 불태우며 작지만 소중한 꿈을 이루게 했던 중앙·죽도·두호동을 선택했다"고 출마의사를 던졌다.

이 예비후보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정치,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유능한 정치, 늘 민의를 받드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넘나들며 경북도정과 포항시정을 아우르는 오작교가 되겠다"며 "검증된 불도저 일꾼 이칠구가 포항의 담대한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의원 출마기자 회견 당시 "지난해 발생한 11·15강진의 여파로 주민들의 지진 공포와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지난 12년 동안 3선 의원과 두 번에 걸쳐 의장의 기회를 준 흥해읍민들을 위해 언제, 어디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흥해 지진의 완전한 복구와 도시재건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고향 흥해에 대한 무한한 애정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3
언론사	**주식회사 담양곡성타임스**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49 발행인 한명석
심의대상기사	담양곡성타임스 2018년 5월 22일자 3면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독백기고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최 화 삼(민주당 담양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10일, 촛불의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1년동안 북한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이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물꼬를 트이게 했고, 탕평책으로 인한 지역인재 고른 등용, 국정농단 심판, 적폐청산, 5·18진상규명 및 재조명 등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과연 부패한 대로 부패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개선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복지정책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아직도 문재인정부가 풀어 나가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하기만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공 언 개월남 손에 촛불을 들고 염원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에 담양에서는 의미있는 동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6·13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당원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동참한 당원대회였기에 저도 빠짐 참석했습니다.

물론 담양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분루를 삼킨 저로서는 아쉬움이 컸지만, 민주당 입이기에 한걸음에 달려 갔습니다.

담양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직도 맡았습니다.

당원들이 똘똘 뭉쳐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2명, 군의원 8명의 후보 모두가 당선되어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도의원·군의원 모두가 당선되고 민주당 군수후보가 낙선한다면 이건 선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전하는 후보들이 함께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민주당 군수경선 과정에서 "바꾸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경쟁했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선 당시에 저를 적정해 주시는 분들이 경선을 불리하니 무소속으로 출마하자고 권유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40여년간 민주당을 지켜온 필수 민주당원입니다. 지든 이기든 뼈속까지 민주당원이라는 명분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군수 경선 때 바꾸자고 한 것은 '민주당 군수후보'가 되려는 본보를 두고 한 슬로건이였습니다. 경쟁자에게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였던 것입니다.

민주당 군수후보를 무소속이나 타정당 후보보고 바꾸자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날 민주당 후보 필승 결의대회때 선거대책 상임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면서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게 "바꾸자"고 한 말을 취소한다고 말하자 당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4년 후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의지도 결집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승자들의 자리가 얼마나 부럽고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40년지기 민주당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선거만이 아닙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또한 2년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시켜 큰 정치인으로 키워준 담양군민들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저도 문재인정부 성공과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곡성타임즈 2018년 5월 22일자 3면

보도 내용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최화삼_민주당 담양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10일, 촛불의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1년 동안 북한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이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물꼬를 트이게 했고, 탕평책으로 인한 지역인재 고른 등용, 국정농단 심판, 적폐청산, 5·18진실 규명 및 재조명 등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과연 부패할대로 부패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개선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복지정책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아직도 문재인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하기만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꽁꽁 언 겨울날 손에 촛불을 들고 염원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에 담양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6·13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당원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동참한 당원대회였기에 저도 쾌히 참석했습니다.

물론 담양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분루를 삼킨 저로서는 아쉬움이 컸지만, 민주당 일이기에 한걸음에 달려 갔습니다. 담양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직도 맡았습니다.

당원들이 똘똘 뭉쳐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2명, 군의원 8명의 후보 모두가 당선되어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도의원·군의원 모두가 당선되고 민주당 군수후보가 낙선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전하는 후보 11명이 함께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민주당 군수경선 과정에서 "바꾸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경쟁했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선 당시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경선은 불리하니 무소속으로 출마하자고 권유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40여년간 민주당을 지켜온 골수 민주당원입니다. 지든 이기든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는 명분이 저

에게는 컸습니다.

군수 경선 때 바꾸자고 한 것은 '민주당 군수후보'가 되려는 목표를 두고 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경쟁자에게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군수후보를 무소속이나 타정당 후보로 바꾸자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날 민주당 후보 필승 결의대회때 선거대책 상임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면서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게 "바꾸자"고 한 말을 취소한다고 말하자 당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4년 후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의지도 곁들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승자들의 잔치가 얼마나 부럽고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40년지기 민주당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선거만이 아닙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또한 2년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시켜 큰 정치인으로 키워준 담양군민들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저도 문재인정부 성공과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4
언론사	**담양뉴스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3길 7-5 발행인 장광호
심의대상기사	담양뉴스 2018년 5월 23일자 6면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면 관련기사)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지난해 10월, 촛불의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1년동안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이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물꼬를 트이게 했고, 탄광책으로 인한 지역인재 고른 등용, 국정농단 심판, 적폐청산, 5·18 진실규명 및 재조명 등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정부가 출범할 당시만해도 과연 부패없이 부패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개선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복지정책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아직도 문재인정부가 해야 나가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하기만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꼭 언 겨울날 손에 촛불을 들고 염원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에 담양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6·13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당원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동참한 당원대회였기에 저도 패의 참석했습니다.

물론 담양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분루를 삼킨 저로서는 아쉬움이 컸지만, 민주당 일이기에 한걸음에 달려 갔습니다.

담양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직도 맡았습니다.

당원들이 똘똘 뭉쳐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2명, 군의원 8명의 후보 모두가 당선되어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도의원·군의원 모두가 당선되고 민주당 군수후보가 낙선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전하는 후보 11명이 함께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민주당 군수경선 과정에서 "배우자"고 해놓고 야합하여 경쟁했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선 당시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경선은 불리하니 무소속으로 출마하자고 권유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40여년간 민주당을 지켜온 골수 민주당원입니다. 지든 이기든 백속까지 민주당원이라는 명분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군수 경선때 배우자고 한 것은 '민주당 군수후보'가 되려는 목표를 두고 한 솔로건이었습니다.

경쟁자에게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군수후보를 무소속이나 타정당 후보로 배우자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이날 민주당 후보 필승 결의대회 선거대책 상임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면서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게 "배우자"고 한 말을 취소한다고 말해자 당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4년 후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의지도 결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승자들의 잔치가 얼마나 부럽고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40년지기 민주당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선거만이 아닙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또한 20년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시켜 큰 정치인으로 키워준 담양군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문재인정부 성공과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5.

더불어민주당 담양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최 화 삼

〈담양뉴스 2018년 5월 23일자 6면〉

※ 기사내용 2018지선-자심73 참조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5
언론사	**주식회사 선경일보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2 발행인 김군식
심의대상기사	선경일보 2018년 5월 25일자 5면 「이충우 여주시장후보 지지선언문」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여주시장 선거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경일보

2018년 05월 25일
05면 (수도권)

이충우 여주시장후보 지지선언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금일(2018. 5.22.) 저 박남수(여주시장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이충우 여주시장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경선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입었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복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여주의 발전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마음속에 묻어두고 이충우 여주시장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저는 이충우 후보와 자유한국당 여주시장예비후보자로서 경선에서는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오랜세월 여주군청에서 공직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충우 후보는 그 누구보다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맡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충우 후보가 갖고 있는 도시, 건설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방행정에 대한 처리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공직경험으로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잘 북돋아 주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여주시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조직으로 재정비 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난 4년동안 여주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여주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적폐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여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자랑스런 여주시장 후보이자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적임자인 이충우 후보가 당선되도록 온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 남한강 중심도시로서 발전하여 여주목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6*10.6)cm²

보도 내용

이충우 여주시장후보 지지선언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금일(2018. 5. 22.) 저 박남수(여주시장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경선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입었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복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여주의 발전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마음속에 묻어두고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저는 이충우 후보와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예비후보자로서 경선에서는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오랜 세월 여주군청에서 공직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충우 후보는 그 누구보다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맡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충우 후보가 갖고 있는 도시, 건설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방행정에 대한 처리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공직경험으로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잘 북돋아 주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여주시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조직으로 재정비 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여주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여주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적폐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여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자랑스런 여주시장 후보이자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적임자인 이충우 후보가 당선되도록 온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 남한강 중심도시로서 발전하여 여주목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1
언론사	**주식회사 상산신문**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3길 27 발행인 김윤조
심의대상기사	상산신문 2018년 5월 24일자(제132호) 9면 「신순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려」, 「기초의원 선거 사무소 개소식 감동 현장」, 「신순화의 애절한 인사말」, 「신순화 장남 격려사」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상주시의원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동정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인사말, 후보자 가족의 격려사,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칼럼 등을 전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순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려

"시민의 말씀이면 자다가도 깬다"
"지게에 시민들 고충 실어 어려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주시의원바선거구의 유일한 여성후보인 신순화예비후보의 개소식이 5월 12일 오후 2시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위치한 2층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개소식은 국...

민의례와 격려사청남 픽뱉 격려사, 후보자 인사, 당선기원 이벤트 순으로 진행되어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신순화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 신순화는 주민을 봉사하는 각오로 시의원에 출마했었다. 그리 긴도 아닌 지난4년간 저 개를 지게 되었고 비로소 남은 장애를 신고 여기저기 뛰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며 눈물을 흘리자 이에 참석한 내빈과 방문자들 다수가 함께 우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또한 신순화후보는 "언로에서도 이러년부 운동이라고 기사화되고 시민들도 하나될 적 에기를 하는데 지게를 지고 하는 선거운동이 되상 보기 보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자 내빈들의 우려 같은 반응을 자아냈다.

다음 순서인 장남의 파명 격려사에서도 또 다른 감동을 연출하였다.

신순화 후보가 눈물의 격려사를 마친 아들을 안아주자 서로 얼굴 비비고 격려하는 모습에 참석한 시민들의 손수건을 적셨다.

이어 신후보는 "시민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제가 시민을 위하는 또과 같다 올은 것을 하기 위한, 장맞을 때만 같다가면서 "무소속이라 하여도 상주를 위하는 올인 선택이라면 장맞일 리 없지 않느냐"고 주장 했다. 누가 더 잘 할 사람인가를 판정하게 될 선택에 주신다면 결국 하나은 신순화라고 외쳤다.

윤태열 편집국장

▶학력
▷오성 우신초등학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야동복지학과 졸업

▶주요경력
▷전)경북민간 보육시설 연합회 상주지회 초대회장
▷전)상주초등학교 운영위원
▷전)한나라당 상주협의회 법사장위원
▷현)한미임상주지점 이사
▷현)상주교육발전협의회 위원
▷현)여명경이진단 여인아집 대표

| 편집인 칼럼 |

기초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감동 현장

윤태열 편집국장

30여년 언론 활동의 보람을 재삼 느낀다.

12일 오후 상주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을 찾았다.

2층 200평의 선거사무소는 당일 참석한 유권자, 친인척 등 300여명으로 북적일 정도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첫 눈에 띈 이색적인 광경은 정면 벽에 의례적인 개소식 축하화환이 없었고 그 자리 바로에는 같게 참석한 23kg 의 지게에 후보자들의 피켓과 장화, 시민의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었고 지게의 주인인 출마자가 의외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신순은 여느 후보자 개소식과 같았지만 틀이한 것은 후보자 아들의 어머니(후)에 대한 용기를 불어주는 격려사와 어머님에 대한 회동에 따라 후보자 모 아들은 부끄러움인 눈물바다를 이루는가 하면 이같에 참석한 대다수 시민들은 저마다 손수건을 적시면서 감동을 표현했다.

이어 후보자의 인사말에 앞서 아버 선거운동이라는 명기처럼 후보자는 지게가 힘면 나의는 도구가 아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마음속 깊이 시민을 섬기면서 시민께 약속드리는 모든 어려운 민을 책가 대신하고 같 수 있다면 설 있으로 시민을 향한 '지게를 진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고 또소했다.

이같이 진심된 현장에서 독자의 가정자의 가슴에 살은 것은 지금까지와 예년같이 언론 생활을 지속할 오랜시간 동안 경시장을 다녀보았지만 여느 곳이은 의례적으로 지역 기관장, 단체장, 유지 등등 소개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는데 이날 개소식만 큼은 참석인사 소개는 생략한 후 지역 언론인들의 가치를 높이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이색적인 참석 언론인들만을 소개해 너무도 '가슴깊이' 후도함을 느낄수 있었다.

이같이 진심된 개소식 행사를 보면서 부디 바라 건데 오늘 행사를 치른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하겠다는 각 분야 후보 모두는 시민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인식해 그 항상 식을 가진 구년구덕을 두루살펴면서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킬 각 분야을 이려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원 당부드린다.

후보자의 격려사 마지막 대목을 살펴 본다.

엄마.....

지게 메고 다니는과 밥이 똥통 부을 때까지 뛰고 또 뛰니라 힘들지?

엄마, 아팠으며 더 많은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할테는 멋진 시의원이 되시길 상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어머니의 아들로써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엄마.....사랑합니다.

이 일간지 스런하고 순수한 외침인가 평자 새삼 흐거운 눈물이 빠한다니.

신순화의 애절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시민사랑캠프 개소식을 찾아 주신 여러분, 신순화 정중한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저 신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런 저오하여 저희스럽게 저게를 지게 되었고 비오는날은 장화를 신고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서도 이세 언거운동이라고 기사화되고 시민들도 하나될 적이면 저 에기를 하나봅니다.

그래도 보면 저게를 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보통일은아닌 게 확실하네요.

그런데 이제선거운동이라는 말하면 지게를 지는 물리적인 행동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닙... 지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의원 정도 하려면 마음속 깊이, 시민을 위한 '먼시하는 마음의 지게'도 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지게에 제시는 여러분.

- 지게를 지고 있는 겉모습의 신순화는 잊으시고 시민과 한신이라는 마음의 지게를 지고 있는 신순화로 개입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라 함은 시민을 향한 충정은 기본입니다.

저신의 입에 일하도 표기할 적도가 되어야 합니다.

'존엄에 깊은 유효과 시의사유을 바르지 못하고서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절대 바른 말이아니기 때문입니다.

적 손을 잡아 주시며 격려 하시는 시민을 만날 때 마다 '저는 행한 게으로 각오를 합니다. 해일까요?

힘내라는 시민의 격려는 또 다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는 더 잘 하라는 또 다른 의미의 강력한 명령인 것을 저 신순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의 요원을 받을 때마다 더 큰 마음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여러분!

이처럼 저가 가진 마음은 시민에 대한 저 뜨한 각속이며 제가 가는 길은 여러분을 섬기는 '지게를 진 삶' 입니다. 시민을 향한 한 신순화의 충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손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큰힘 올려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입후보자 중에 경력, 일하다 주게, 젊음 등 갖 뛰어난 장점기세고 있어은 사람은 많으나 공약, 표옥, 복지 비아 등 두루 경험한 전문가는 저 신순화가 유일합니다.

저는 복지 분야에서 30여 년 현장에서 뛰기 굳은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닦인하기 힘든 시간과 경험입니다.

그 긴 세월 제은 경험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혁답을 적시해 줍니다.

그 해답으로 기존 자원을 활용한 놀업도시 맞춤 복지센터입 제도이 구축해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가 그가 원하는 것을 듣고 연구해에 비전시 실천하는 맞춤형 복지 를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놀업도시인 상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상주 부분도님들과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 신순화!

젊은 감이 살기 좋은 농촌도시를 위한 보람!

상주의 가치를 올려가 위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과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직접 힘이 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한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부 -신- 하겠습니다.

시민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제가 시민을 위하는 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순화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잘 할 겁니다.

상존시민 여러분!

시민의 말씀이면 자다가도 깨는 신순화가 있! 답 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 장남 격려시

안녕하세요. 저는 신순화 후보의 큰아들 정욱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현지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희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으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신을 가장 고생하신 제 주변는 여자로써의 인생보다 남들에게 베풀고 생기면서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30여 년간 상주에서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어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어머니께, 때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또한 엄마로써의 신순화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가난했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선수행 하셨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말 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한번 결정하신 것은 끝 까지 이루고 노력을 결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자식들도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으로써의 어머니 신순화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른 말씀한, 그리고 젊세분에게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저희 어머니 신순화은 지게에만 오래 지내온 어머니로 우리 상주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분들 의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까?

따라서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이 자리를 빌어 꼭 드리고 싶은 말이있습니다.

엄마.....

지게 메고 다니는과 밥이 똥통 부을 때까지 뛰고 또 뛰니라 힘들지?

엄마, 아팠으며 더 많은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할테는 멋진 시의원이 되시길 상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어머니의 아들로써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엄마.....사랑합니다.

한 일간지 스런하고 순수한 외침인가 평자 새삼 흐거운 눈물이 빠한다니.

상산신문 2018년 5월 24일자 9면

보도 내용

신순화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려

상주시의원 마선거구의 유일한 여성후보인 신순화 예비후보의 개소식이 5월 17일 오후 2시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위치한 2층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개소식은 국민의례와 격려사(장남 특별 격려사), 축사, 후보자 인사, 당선기원 이벤트 순으로 진행되어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신순화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 신순화는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시의원에 출마하였다. 그런 각오 아래 자연스럽게 지게를 지게 되었고 비오는 날은 장화를 신고 여기저기 뛰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며 눈물을 흘리자 이에 참석한 내빈과 방문자들 다수가 함께 우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또한 신순화 후보는 "언론에서도 이색선거운동이라고 기사화되고 시민들도 하나둘 제 얘기를 하는데 지게를 지고 하는 선거운동이 막상 보기보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자 내빈들의 우레 같은 박수를 자아냈다.

다음 순서인 장남의 특별 격려사에도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내었다.

신순화 후보가 눈물의 격려사를 마친 아들을 안아주자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모습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수건을 적셨다.

이에 신후보는 "시민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제가 시민을 위하는 뜻과 같다. 옳은 것을 하기 위한, 잘못된 때란 없다"면서 "무소속이라 하여도 상주를 위하는 옳은 선택이라면 잘못될 리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 했다. 누가 더 잘 할 사람인가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다면 결국 해답은 신순화라고 하였다.

[편집인칼럼]
기초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감동 현장

30여년 언론 활동의 보람을 새삼 느낀다.

17일 오후 상주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을 찾았다. 2층 20여명의 선거사무소는 당일 참석한 유권자, 친인척 등 300여명으로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첫 눈에 띈 이색적인 광경은 정면 벽에 의례적인 개소식 현수막이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곱게 장식된 20kg의 지게에 후보자의 피켓과 장화, 시민의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었고 지게의 주인인 출마자가 의외로 여성이라는 점이다.식순은 여느 후보자 개소식과 같았지만 특이한 것은 후보자 아들의 어머니(후보)에 대한 용기를 불어주는 격려사 때 아들의 애절한 외침에 따라 후보자와 아들은 부둥켜안고 눈물바다를 이

루는가 했는데 이곳에 참석한 대다수 시민들은 저마다 손수건을 적시면서 감동을 표현했다.

이에 후보자의 인사말에 앞서 이색 선거운동이라는 평가처럼 후보자는 지게가 짐만 나르는 도구가 아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마음속 깊이 시민을 섬기면서 시민께 약속드리는 모든 어려운 짐을 제가 대신지고 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을 향한 '지게를 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이 진실된 현장에서 필자의 가장자리 가슴에 와 닿은 것은 지금까지 30여년간의 언론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많은 행사장을 다녀보았지만 어느 곳이든 의례적으로 지역 기관장, 단체장, 유지 등을 소개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는데 이날 개소식만큼은 참석인사 소개는 생략한 후 지역 언론인들의 가치를 높이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이색적인 참석 언론인들만을 소개해 너무도 가슴깊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같이 진실된 개소식 행사를 보면서 부디 바라건대 오늘 행사를 치른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을 대신하겠다는 각 분야 후보 모두는 시민이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사회전반의 구석구석을 두루 살피면서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킬 각 분야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강구해야 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후보자의 겨려사 마지막 대목을 살펴 본다.

엄마….

지게 메고 다니느라 발이 퉁퉁 부을 때까지 뛰고 또 뛰느라 힘들지? 엄마. 아들로써 더 많은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는 멋진 시의원이 되시길 상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한 외침인가. 필자 새삼 뜨거운 눈물이 북받친다.

신순화의 애절한 인사말, 신순화 장남 격려사

– (기사 내용 생략) –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2
언론사	**주식회사 순창신문사**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발행인 김명수
심의대상기사	순창신문 2018년 5월 30일자(제877호) 9면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교육감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며 후보자의 저술을 그대로 인용한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임재호 / 순창국제화연구회 초대회장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순창군과 20년이란 오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 그 시절 IMF가 할퀴고 지난 산골마을 후미진 시골 어느 동네에서 초등학생이 외국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한다. 그 자랑은 곧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자생적 민간 국제교류단체인 순창국제화연구회가 추진한 일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1998년 11월 이 단체의 고문으로 위촉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이 단체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글로벌을 향한 사람과 사람들"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자료집에 기고한 김후보의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세계를 모르고는 살 수 없고, 지역을 모르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내 지역 속에서만 옴츠려고 있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세계에 뛰어들따라도 자신의 지역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을 때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끝없는 경쟁에서 이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바람은 지역간의 장벽과 국가간의 장벽을 차례 차례 그 것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 지구촌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일상어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인간 삶의 변화의 속도가 그 만큼 빠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화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의 두 계기를 던져 주고 있다. 국제화의 흐름에 적응하면 우리는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제화는 우리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격랑으로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화는 지역과 국가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인간이 인간화라는 하나의 이상을 향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순창군은 갑고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보 세가 약해져 가는 지역이다. 인구 역시 줄임없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 때, 지역민의 자긍심을 길러주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줄 참신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8년 2월 6일 순창군 공무원들과 지역 인사들의 자발적 모임체인 '순창국제화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때에 연구회가 그 닻을 높게 올렸다.

순창군 지역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화의 주역이 되어 보자는 의지가 이 모임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태동하였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있다. 그만큼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연구회 회원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의 지향 점은 순창군민으로서 세계를 알고, 세계에 순창군을 알려 보자는 것이었으리라. 시간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이 해 낸 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회원들은 꾸준히 연구 활동과 체험활동을 해 왔다.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에서방방 강의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외국 홈스테이 등 많은 사업을 벌여 왔다.

연구회의 활동성과가 가록으로 남게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을 향한 사람과 사람들'에는 연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것은 두고두고 순창군만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고, 순창의 후손들에게는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기억될 것이다.

본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창신문 2018년 5월 30일자 9면

보도 내용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순창군과 20년이란 오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 그 시절 IMF가 할퀴고 지난 산골마을 후미진 시골 어느 동네에서 초등학생이 외국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한다. 그 자랑은 곧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자생적 민간 국제교류단체인 순창국제화연구회가 추진한 일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1998년 11월 이 단체의 고문으로 위촉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이 단체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글로벌을 향한 사람과 사람들"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자료집에 기고한 김 후보의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세계를 모르고는 살 수 없고, 지역을 모르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내 지역 속에서만 움츠리고 있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세계에 뛰어들더라도 자신의 지역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을 때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끝없는 경쟁에서 이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바람은 지역간의 장벽과 국가간의 장벽을 차례차례 그 것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 지구촌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일상어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인간 삶의 변화의 속도가 그 만큼 빠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화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의 두 계기를 던져 주고 있다. 국제화의 흐름에 적응하면 우리는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제화는 우리에게 헤어 나올 수 없는 격랑으로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화는 지역과 국가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인간이 인간화라는 하나의 이상을 향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순창군은 길고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로 세가 약해져 가는 지역이다. 인구 역시 끊임없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 때, 지역민의 자긍심을 길러주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줄 참신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8년 2월 6일 순창군 공무원들과 지역 인사들의 자발적 모임체인 '순창국제화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때에 연구회가 그 닻을 높게 올렸다.

순창군 지역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화의 주역이 되어 보자는 의지가 이 모임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태동하였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있다. 그만큼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연구회 회원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의 지향점은 순창군민으로서 세계를 알고, 세계에 순창군을 알려보자는 것이었으리라. 시간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이 해낸 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회원들은 꾸준히 연구 활동과 체험활동을 해 왔다.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어사랑방 강의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외국 홈스테이 등 많은 사업을 벌여 왔다.

연구회의 활동성과가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을 향한 사람과 사람들'에는 연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것은 두고두고 순창군만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고, 순창의 후손들에게는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기억될 것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3
언론사	**주식회사 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7 발행인 박병모
심의대상기사	시민의소리 2018년 5월 28일자(제883호) 1면 「장휘국 교육감 후보 '3선 피로도' 심상찮다」 및 2면 「장휘국, 자기만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자에 대해 '3선 피로도', '노욕의 정치인', '청렴도 꼴찌' 등 부정적 평가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휘국 교육감 후보 '3선 피로도' 심상찮다

핵심측근 권력화, 학력저하, 청렴도 꼴찌, 교육의 이념화…'새 판' 열망 거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건 흘러간 옛말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말라진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그는 또다시 '교육 권력'을 잡겠다고 나섰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더하면 12년이다. 법적으론 허자가 없다하더라도 장기집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위원 8년까지 합하면 20년간을 교육계에서 전횡가 권은 셈이다.

"교육 소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3선 도전에 욕가월부 보를 달고 싶지는 않다.

혁신, 진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장 후보는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선된 최영태 전남대교수가 진짜 진보민주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를 제치고 전남의 장석웅 교육감 후보와 손을 잡고 진보라고 외친다.

장 후보가 과거와는 달리 선명성 있게 진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올드하게 보인다. 젊고 성실하고 상냥하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많은 세월을 먹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이즘에서 불편남으면 하는 일부 교사들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선거에 뛰어들었으니 "노욕의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장 후보는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등에 많은 일을 했다고 강변한다.

"나이가 무슨 대수냐"는 소리다. 그러면서 박근혜 · 이명박 정부와 싸우면서 혁신교육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9년 동안 내 해놓은 게 뭐냐"고 딱 부러지게 말하라면 망설인다.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이다.

우선 학력저하를 들 수 있다. 과거 광주아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70년이상의 세대들은 그걸 자랑으로 삼았다.

산업구조가 하락하고 광역정부부터 예산과 인사에서 소외받고 홀대를 많이 해왔던 호남으로서는 어찌 보면 '제1의 벽'을 뚫라 저면 광주출신 학생들의 실력존이었다.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고시를 합격하고 국가의 봉맨으로서 입신양명하기에는 적정시절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게 호남인의 자존심이었고 믿는 구석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실력증주는 9년 전 장휘국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미묘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장 후보 말대로 인성교육이 뛰봔점재서 학생들이 올바게 자라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도 아니고 과것도 아닌 어정쩡한 학교교육이 되어 버렸다.

나라으로 떨어진 학교교육이 하도 우스울던지 상대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질문이 없는 교실"이 아니라 "잘자는 교실"로 변하고 있다고 꼽으셔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장 후보는 혁신을 외쳐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꼴찌를 달리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촌지를 없앤 게 자신의 치적이라고 내세우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 박현도 기자

▶건면으로 이어집니다

시민의소리 2018년 5월 28일자 1면

장휘국, 자기만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3선 도전, 청렴도 꼴찌 등 부적정인 여론 속 기득권 야합 비난

장휘국 후보가 지난 21일 전남도교육감 장석웅 후보,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후보와 함께 '호남권 민주진보 교육감'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연대를 통해 자신만의 '민주', '진보' 후보임을 공헌하려는 모양새다.

장 예비후보는 2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와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 이라는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후보" 윤을 입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지난 8년간 광주시 교육행정을 이끌어오면서 스스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행정에 대한 비전과 평가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면서 장 예비후보를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특히 3선 도전이라는 부정적인 여론과 맞물려 샌드위치 취임에 끼어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 · 진보'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정치 공학적 이합, 선거연대를 펼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 15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는 서울공원문 공장에서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광주에서는 장휘국 예비후보, 최영태 예비후보가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는 시민주대위의 단일후보가 된 최영태 후보를 쏙 빼놓고 전남도, 전북도 교육감 후보들을 대동해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이라고 자칭하며 퀴 후보와 선을 그었다.

최소한 민주후보라면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합에을 의향이 있느냐 제안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휘국 예비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최영태 후보는 입장이 다를거라고 보고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이 선언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남감한 측면이 있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진정한 민주진보후보라면 뜻이 비슷한 후보들과 의견을 공유해 봐야할게 아닌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30인 민주진보 후보이고, 내재지는 민주진보 후보가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폰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사실 이번 후보들은 모두 진보성향의 후보들로 교육정책에서 세큼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본다. 정책 차이도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누구는 민주진보후보이며, 누구는 아닌 것처럼 연대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기득권의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시민은 "교육 '혁신'을 운운하는데 3선 도전에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교육정책보다 정치적인 선거연대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이미 광주자여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혁신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독자노선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장 교육감이 내세우고 있는 '민주', '혁신'이라는 타이틀에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 김다이 기자

▶1면에서 이어집니다

청렴도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음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를 정치적 논리로 몰아가려는 장 후보의 논리도 궁색하기 그지 없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이를 지적보면서 진보라고 자처 하지 말든지, 아니면 현실을 겸이 인식하고 반성을 하던지 정책반스 텟스를 취해야 했다.

그래야 학생들 앞에서 뱃뚯하고 신뵈 받을 수 있는 교육수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얼룹려진 몸을 주워 담을 순 없다.

그렇다면 장 후보는 앞으로의 교육행정을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갖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엠마 전 열린 광주시 교육감 후보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현 교육감 최고는 너무 편텐츠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물론 상대후보의 공격에 휩쓸려다 보니 제대로 된 답변과 함께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아 없었을 게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호흡을 맞춰 잘 해보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코앞에 결망 사회를 기반으로 한 만큼, 적어도 시대정신과 시대감각에 겉맞는 컨버전스형 융 · 복합적 교육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고인물이 아닌 새로운 교육의 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장 후보에게 기대 보다는 우려를 하게 된 근저에는 현재 광주시교육청내 핵심라인에는 핵심 측근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데 있다.

이미 권력화 된 상태에서 그들만을 위한 업무 몸에 광주교육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광교육은 봉괴되고 호남의 영혼들은 타 지역 자사고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주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치적 이념으로 덧칠하려는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아무런 희망과 비전을 담보할 수 없다.

장 후보의 3선 피로도는 광주교육을 새로운 블로 짜아 한다는 열망과 무관치 않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 후보.

| 사진=광주시교육청

시민의소리 2018년 5월 28일자 2면

보도 내용

장휘국 후보의 '3선 피로도' 심상찮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건 흘러간 옛말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달라진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그는 또다시 '교육 권력'을 잡겠다고 나섰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더하면 12년이다.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장기 집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위원 8년까지 합하면 20년간을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셈이다.

'교육 소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3선 도전에 왈가왈부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혁신, 진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장 후보는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선된 최영태 전남대교수가 진짜 진보민주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를 제치고 전남의 장석웅 교육감 후보와 손을 잡고 진보라고 외친다.

장 후보가 과거와는 달리 선명성 있게 진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올드하게 보인다. 젊고 싱싱하고 상큼하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많은 세월을 먹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물러났으면 하는 일부 교사들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선거에 뛰어들었으니 '노욕의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장 후보는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등에 많은 일을 했다고 강변한다.

"나이가 무슨 대수냐"는 소리다. 그러면서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싸우면서 혁신교육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8년 동안 내 해놓은 게 뭐냐"고 딱 부러지게 말하라면 망설인다.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이다.

우선 학력 저하를 들 수 있다. 과거 광주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7080이상의 세대들은 그걸 자랑으로 삼았다.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인사에서 소외받고 홀대를 당해왔던 호남으로서는 어찌보면 '제1의 백'을 들라 치면 광주 출신 학생들의 실력뿐이었다.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고시를 합격하고 국가의 동량으로서 입신양명하기에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게 호남민의 자존심이었고 믿는 구석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실력광주는 8년 전 장휘국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마침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장 후보 말대로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서 학생들이 올곧게 자라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학교교육이 되어 버렸다.

나락으로 떨어진 학교교육이 하도 우스웠던지 상대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잠자는 교실'로 변하고 있다고 씁쓰레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장 후보는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꼴찌를 달리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촌지를 없앤 게 자신의 치적이라고 내세우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청렴도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음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를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장 후보의 논리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이를 지켜보면서 진보라고 자처하지 말든지, 아니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을 하던지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했다.

그래야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교육수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다.

그렇다면 장 후보는 앞으로의 교육행정을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갖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얼마 전 열린 광주시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현 교육감 치고는 너무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물론 상대후보의 공격에 쩔쩔매다 보니 제대로 된 답변과 함께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야 없었을 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호흡을 맞춰 잘해보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초연결망 사회를 기반으로 한 만큼, 적어도 시대정신과 시대감각에 걸맞는 컨버전스형 융·복합적 교육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고인물이 아닌 새로운 교육의 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장 후보에게 기대 보다는 우려를 하게 된 근저에는 현재 광주시교육청내 핵심 라인에는 핵심 측근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데 있다.

이미 권력화 된 상태에서 그들만을 위한 업무 땜에 광주교육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은 붕괴되고 호남의 영재들은 타 지역 자사고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주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치적 이념으로 덧칠하려는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아무런 희망과 비전을 담보할 수 없다.

장 후보의 3선 피로도는 광주교육을 새로운 틀로 짜야 한다는 열망과 무관치 않다.

장휘국, 자기만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연대를 통해 자신만이 '민주', '진보' 후보임을 굳혀가려는 모양새다.

장 예비후보는 2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와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후보' 옷을 입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지난 8년간 광주시 교육행정을 이끌어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면서 장 예비후보를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특히 3선 도전이라는 부정적인 여론과 맞물려 샌드위치 휴일에 끼어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진보'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정치공학적 야합, 선거연대를 펼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 15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는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광주에서는 장휘국 예비후보, 최영태 예비후보가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는 시민추대위의 단일후보가 된 최영태 후보를 쏙 빼놓고 전남도, 전북도 교육감 후보들을 대동해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이라고 자청하며 최 후보와 선을 그었다.

최소한 민주후보라면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함께할 의향이 있느냐 제안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휘국 예비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최영태 후보는 입장이 다를거라고 보고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이 선언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난감한 측면이 있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진정한 민주진보 후보라면 뜻이 비슷한 후보들과 의견을 공유해 봐야 할 게 아닌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3인만 민주진보 후보이고, 나머지는 민주진보 후보가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사실 이번 후보들은 모두 진보성향의 후보들로 교육정책에서 색깔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본다. 정책 차이도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누구는 민주진보 후보이며, 누구는 아닌 것처럼 연대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기득권의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시민은 "교육 '혁신'을 운운하는데 3선 도전에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지 믿음이 안 간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교육정책보다 정치적인 선거연대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이미 광주지역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혁신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독자노선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장 교육감이 내세우고 있는 '민주', '혁신'이라는 타이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7
언론사	**주식회사 담양곡성타임스**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49 발행인 한명석
심의대상기사	담양곡성타임스 2018년 5월 29일자(제472호) 5면 「정당정치가 필요한 이유」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고

정당정치가 필요한 이유

박 철 홍(더불어민주당 담양지구선거대책위상임위원장)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사전적 풀이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형태 즉 국민에 의한 정치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인 '데모크라시'에서 나왔습니다. 즉 아테네는 일정한 성년 남자가 되면 그들 모두가 모여 토론하고 투표으로 도시를 다스리는 대표를 뽑았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로 구성되어있었고 그중 하나인 아테네는 인구가 몇 만 단위로 작았기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규모가 비대해져 몇천만 혹은 몇억 단위에 이르는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 한 공간에 모여 토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에 사회가 전문화, 분업화를 이룸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하기에도 바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의회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입법하고, 의사 결정에 주권자인 국민이 따르는 형태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간접 민주제 또는 대의제(代議制,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정치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붙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현대국가는 정당 국가며 국가 주권의 지위에 현실적으로는 정당 주권이 한단할 다"는 K.로벤스타인의 지적처럼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과정에 있어 진보적인 대중의 의견을 집약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며, 대중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하고 이들과 결집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대중 또는 이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고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권력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현대국가의 성격을 정당 국가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이명박 · 박근혜 보수정당에 정권이 가 있었고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가는 엉망이 되었고 최악는 탈어라면 갔습니다.

다행히 현명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귀대 어국내지 않게 우리 민족 최대숙원인 천정공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고 있으면서 취임 1년이 지나서도 50% 가까이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이래 가장 높은 50%이상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입니다.

이는 현재 집권당이 민주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음에 얻어내야한다는 주민명령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가 우리 담양이 '안철속의 지속발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즉 현대국가는 정당국가체제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무소속이나 타 정당의 검증안된 아마추어 후보들에게 표를 주어서 실패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에 하나 그런 후보들을 우리대표로 뽑는다면 그들로인해 우리지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할 시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문재인정부는 경제분야에 전념할 것입니다.

향후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 남은임기와 함께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하여 국회를 통일시켜 강력한 추진력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길이 문재인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생각이 같은 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민주당에 행사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면 여러분 자녀들 삶도 바뀝니다. 담양이래도 바뀝니다. 담양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 점 잘 판단하시어 담양의 '안정속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주셨음 합니다.(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양곡성타임스 2018년 5월 29일자 5면〉

보도 내용

정당정치가 필요한 이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사전적 풀이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형태 즉 국민에 의한 정치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인 '데모크라시'에서 나왔습니다. 즉 아테네는 일정한 성년 남자가 되면 그들 모두가 모여 토론하고 추첨으로 도시를 다스리는 대표를 뽑았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로 구성되어있었고 그중 하나인 아테네는 인구가 몇 만 단위로 적었기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된 정치체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규모가 비대해져 몇천만 혹은 몇 억 단위에 이르는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 한 공간에 모여 토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에 사회가 전문화·분업화를 이룸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하기에도 바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의회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일임하고, 의사 결정에 주권자인 국민이 따르는 형태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간접 민주제 또는 대의제(代議制,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정치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현대국가는 정당 국가며 국가 주권의 지위에 현실적으로는 정당 주권이 진입했다"는 K.뢰벤스타인의 지적처럼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과정에 있어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며, 대중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함과 아울러 결집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대중 또는 이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고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현대국가의 성격을 정당 국가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당에 정권이 가 있었고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가는 엉망이 되었고 적폐는 쌓아져만 갔습니다.

다행히 현명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무능한 정

권을 물리친 무혈촛불혁명을 이룩하여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민족 최대숙원인 전쟁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고 있으면서 취임 1년이 지나서도 80% 가까이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이래 가장 높은 50% 이상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입니다.

이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을때 얻어내야한다는 주민 명령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가 우리 담양이 '안정속의 지속발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현대국가는 정당국가체제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무소속이나 타 정당의 검증 안 된 아마추어 후보들에게 표를 주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후보들을 우리대표로 뽑는다면 그들로 인해 우리지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문재인정부는 경제문제에 전념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문재인대통령 남은 임기와 함께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하여 국론을 통일시켜 강력한 추진력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점이 문재인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생각이 같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민주당에 행사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면 여러분 자녀들 삶도 바뀝니다. 담양미래도 바뀝니다. 담양 유권자여러분들도 이 점 잘 판단하시어 담양의 '안정속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주셨음 합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8
언론사	**주식회사 담양군민신문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 대표이사 최광원
심의대상기사	담양군민신문 2018년 5월 20일자(제396호) 5면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 고

40년지기 민주당,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최 화 삼

민주당 담양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10일, 촛불의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년동안 북한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이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물고를 트이게 했고, 탕평책으로 인한 지역인재 고른 등용, 국정농단 심판, 적폐청산, 5·18진실규명 및 재조명 등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과연 부패합대로 부패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개선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복지정책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아직도 문재인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하기만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꽁꽁 언 겨울날 손에 촛불을 들고 염원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에 담양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6·13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당원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동참한 당원대회였기에 저도 꽤히 참석했습니다.

물론 담양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분루를 삼킨 저로서는 아쉬움이 컸지만, 민주당 일이기에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담양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직도 맡았습니다.

당원들이 똘똘 뭉쳐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2명, 군의원 8명의 후보 모두가 당선되어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도의원·군의원 모두가 당선되고 민주당 군수후보가 낙선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전하는 후보 11명이 함께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민주당 군수경선과정에서 "바꾸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경쟁했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선 당시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경선은 불리하니 무소속으로 출마하자고 권유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40여년간 민주당을 지켜온 골수 민주당원입니다. 지금 이기는 뺏속까지 민주당원이라는 명분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군수 경선때 바꾸자고 한 것은 '민주당 군수후보'가 되려는 목표를 두고 한 슬로건이였습니다.

경쟁자에게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였던 것입니다.

민주당 군수후보를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로 바꾸자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날 민주당 후보 필승 결의대회때 선거대책 상임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면서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게 "바꾸자"고 한 말을 취소한다고 말해 당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4년 후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의지도 곁들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승자들의 잔치가 얼마나 부럽고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40년지기 민주당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또한 2년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시켜 큰 정치인으로 키워준 담양군민들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저도 문재인정부 성공과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군민신문 2018년 5월 20일자 5면〉

※ 기사내용은 2018지선-자심73 참조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9
언론사	**주식회사 문화매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발행인 최수진
심의대상기사	문화매일신문 2018년 6월 11일자 4면 「"지하철 유치 광명시민이 이깁니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의원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공약에 관해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사진, 기호, 경력 등이 포함된 홍보 이미지를 함께 게재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매일

"지하철 유치 광명시민이 이깁니다"

김동철 광명시의원 후보 이색 선거 '눈길'

평화민주당 김동철 광명시의원 후보(하안3·4동 소하1·2동)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이색적인 방법으로 기호 4번을 외치며 광명시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10일 6.13 지방선거에서 "내가 사는 동네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그 일꾼은 지역 현안을 잘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한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끝을 보는 강력한 추진력과 5대 시의원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본인만의 노하우로 지방정부의 부패를 막고 감시할 수 있는 깨끗한 시의원이 되겠다며 지역주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 자신이 시의원시절 추진했던 하안동, 소하동 지하철 유치를 기필코 성공시키겠으며 △하안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정책지원 △ 구름산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이주대책 교육 복지 문화 부분등 조속한 마무리 △ 일직동 본동 신설에 대한 대비 행정 문화 등 복합센터 구축과 치안확보 강화 등 크고 작은 현안에 발 벗고 뛸 수 있는 자신을 뽑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는 △ 새로이 조성된 광명 역세권 아파트단지 자녀교육 안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복지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아 자신이 공약한 사안들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몰표를 주어 당선시켜 달라 호소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광명/김미성 기자

〈문화매일 2018년 6월 11일자 4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90
언론사	**주식회사 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편로4번길 19-8 2층 발행인 박병모
심의대상기사	시민의소리 2018년 6월 4일자(제884호) 3면 「이용섭 투트랙 선거운동 호평」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후보자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민의소리 정치현장 24시 2018년 6월 4일~10일 3

이용섭 투트랙 선거운동 호평

'주요 현안 현장 투어'
'광주행복 1번가 플랫폼' 개설

주요 현안 챙겨 취임하면 100일내 해법 제시…네거티브 선거 자제

〈시민의소리 2018년 6월 4일자 3면〉

보도 내용

이용섭 투트랙 선거운동 호평

광역단체장이 임기를 마칠 때는 흔히들 치적을 내세운다. 자신이 광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묻는다. 시장을 한 번 더 하면, 이른바 '재선 출마'를 해도 괜찮겠냐고 말이다.

시민들은 이렇게 응답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러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 막판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현직 시장권력의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만 셈이다.

거기에는 그가 그리도 내세웠던 자동차, 에너지, 문화라는 3대 정책들이 제대로 가시화된 게 없었다는 데서다.

특히 광역단체장이 굳이 해야 하느냐는 여론 속에 출판기념회를 감행했고, 그때 윤 시장은 야심찬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미국의 글로벌 의료 투자기업 '메드라인'이 광주에 들어오면 3천억대의 투자유치가 이뤄진다고 선언하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극찬하던 '광주형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어쩌랴.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것도 윤 시장이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갔을 때 경제부시장이 슬그머니 발표를 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웃음거리만 샀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재선을 위해 거짓공약을 발표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시민 반응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윤 시장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다.

윤 시장의 선거공약은 사실이 아닌 허구로 드러나면서 4년 전, 광주시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을 때와 오버랩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내리찍어 전략 공천한 윤장현 당시 후보와 이용섭과의 단일화로 후보가 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의 대결이 볼만 했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박빙 속에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던 두 후보 가운데 윤 후보를 택했다. 행정경험이 없어 미숙하지만 깨끗하게 시정을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에서였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윤 시장은 초반 2년 반 동안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광주발전은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었고, 측근비리도 발생했다.

3년 차에 들어서야 행정을 조금 알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자신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자동

차, 에너지, 문화 3대 축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던 실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윤 시장의 4년을 반추하면서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시장에게 표를 주었던 당시를 되돌아보며 씁쓰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을 뽑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광주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후보로 이용섭을 택했다. 중앙부처 경험이 풍부한 '행정의 달인'을 지지했을 게 분명하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으로 내세운 투 트랙 전략인 '주요 사업현장 투어'와 '광주행복 1번가 플랫폼'이 이색선거로 각광을 받고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는 자신이 광주시장에 당선되면 취임이후 100일 이내에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각오로 투어에 나섰다.

우선 광주천 상류인 용연정수장에서 양동시장을 거쳐 영산강까지 19km를 걸으며 광주천을 무등산과 함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

동구 지원배수지 시민힐링쉼터 현장과 남구 송암공단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센터, 북구 첨단산단,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와 평동 포사격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자신이 트레이드마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구의 아이플렉스(IPLEX) 광주를 방문해서 입주기업 임원과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광주연구개발 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가 건립될 첨단 3지구 개발예정지도 빠짐없이 챙긴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될 광산구 빛그린산단 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에서 개최된 '자동차부품산업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 광주자동차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기에는 광주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동·서·남·북·광산 등 5개 구청과 소방서, 경찰청,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이 더불어 함께 행정을 펼친다. 가칭 '시민불편해소위원회'를 통해서다.

이런 '주요 현안 집중 점검 투어'는 이 후보가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 후 매주 1차례 이상 발표한 '1자리 2용섭의 12대 정책공약' 발표를 마무리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이 후보는 주요한 광주 현안사업 현장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이른바, '대안 중심 행정'을 펼치는 것도 성에 안차서 그런지 별도로 '광주행복 1번가 플랫폼'을 만들었다. 지금껏 400여건 이상 민원이 들어왔다.

50대가 주를 이룬다. 분야별로는 복지환경, 교통문제, 관광문화, 도시개발, 행정개선 순위로 의견이 다양하다.

광주시민이 겪는 소소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법적 소송을 통하지 않고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주소(http://bit.ly/ivyuncle)나 온라인 고객센터(카카오톡 '@광주행복1번가' 친구추가)를 통해 의견을 쉽게 제안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주요 현안 현장 투어'와 '광주행복 1번가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처럼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을 찾아 인지도를 높이는 지지율 제고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했기 때문이다.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직접 소통하는 '체계적·입체적인 선거운동 모델'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선거 패러다임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청와대 행정관 근무경력을 문제 삼아 네가티브성 공격을 당한 사실을 아프게 반성한다. 그래서 고소·고발 건도 취하했다.

5·18때 총칼 앞에서 주먹밥을 먹고 위기를 극복한 광주공동체 정신을 오롯이 이어간다는 뜻에서다.

특히 민주당 경선 문제점도 지적했다. 5·18때 추미애 대표가 5·18기념식에 참여한 뒤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이런 말을 했다.

광주시의 민심이 유독 둘로 갈라진 데는 민주당 경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화합과 통합의 민주성지가 되기 위해 5·18통합 위원회를 만들겠단다.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91
언론사	**주식회사 열린순창**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로 25 발행인 임양호
심의대상기사	열린순창 2018년 5월 24일자(제394호) 22면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회고」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교육감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며 후보자의 저술을 그대로 인용한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고·투고

김승환, 순창군과 인연 20년 회고

임재호(순창국제화연구회 초대회장)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순창군과 20년 넘게 오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 그 시절 IMF가 할퀴고 지난 산골마을 후미진 어느 동네에서 초등학생이 외국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한다.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자생적 민간 국제교류단체인 순창국제화연구회가 추진한 일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1998년 11월 순창국제화연구회의 고문으로 위촉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순창국제화연구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글로벌을 향한 사람과 사람들"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때를 회상하며 자료집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세계를 모르고는 살 수 없고, 지역을 모르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내 지역 속에서만 움츠리고 있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세계에 뛰어들더라도 자신의 지역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을 때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끝없는 경쟁에서 이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바람은 지역 간의 장벽과 국가 간의 장벽을 차례차례 그 것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 지구촌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일상에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인간 삶의 변화의 속도가 그 만큼 빠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화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의 두 계기를 던져 주고 있다. 국제화의 흐름에 적응하면 우리는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제화는 우리에게 헤어 나올 수 없는 격랑으로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화는 지역과 국가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인간이 인간화라는 하나의 이상을 향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순창군은 길고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도 세가 약해져 가는 지역이다. 연구 역시 갈림길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 때, 지역민의 자긍심을 갖버주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줄 참신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8년 2월 6일 순창군 공무원들과 지역 인사들의 자발적 모임체인 '순창국제화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때에 연구회가 그 닻을 높게 올렸다. 순창군 지역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화의 주역이 되어 보자는 의지가 이 모임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태동하였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있다. 그만큼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연구회 회원들은 밤을 흘리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의 지향 점은 순창군민으로서 세계를 알고, 세계에 순창군을 알려 보자는 것이었으리라. 시간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이 해 낸 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회원들은 꾸준히 연구 활동과 체험활동을 해 왔다.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어사랑방 강의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외국 홈스테이 등 많은 사업을 벌여 왔다.

연구회의 활동성과가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을 향한 사람과 사람들'에는 연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것은 두고두고 순창군만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고, 순창의 후손들에게는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기억될 것이다. (후략)』

〈담양군민신문 2018년 5월 20일자 5면〉

※ 기사내용은 2018지선-자심82 참조

4. 주의 결정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
언론사	**주식회사 내외일보** 서울 구로구 경인로 3길 61 광장빌딩 4층 대표이사 이희찬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8년 2월 13일자 6면 「[기고문] 광명시의회 7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광명시의원 재임 중의 의정활동 노력 및 성과와 경기도의원 출마사실에 대해 작성한 기고문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내외일보

기 고 문

광명시의회 7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김익상 시의원

이의년한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의원이 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늘이 캄캄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

아15일정안 하루에 18시간이상 4년치의 속기록을 정독해본서,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조례 및 법률까지 찾아가며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시군의 모든 조례를 광명시의 조례와 비교하면서 우리시에 없는 조례를 확인했었다. 이런 과정을 공부하다보니 광명시의 아 2000여개의 조례를 자연스럽게 읽게되고 공부를 하게 되었던 기억이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례안발의,예산 및 결산심의,업무보고,시정질문등에서 업무나 준비를 하는나에 따라 집행부의 집이 달라지는 것 같다.

초선때에는 4년동안 오전 8~9시에 출근해서 오후 밤 늦게까지 365일을 의회에서 일을 했고,토요일, 일요일날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다.

아침일찍 출근해서 행정 일은 지방지 10개정도를 매일 보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의 자료에 해당되는 것을 읽고 스크랩하는 것 이였다.

스크랩을5년째 하고 있다.

그 스크랩자료가 현재 약 600개의 파일이 넘었고 의정활동에 가장 큰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매일 업무보고때자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최소한 당선된지 1년정안은 행사장 참석을 최소화했었다.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원칙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역점적으로 노력 했었다.

▲의회 상임위 원회 인터넷생방송 공개 관련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때에는 같은당소속의원이 반대로 벽에 부딪혔고, ▲시장 및 시의장 등의 판공비 공개조례를 개정할 때도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때론 회도 내면서 계속해서 추진 했었다. 결국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안 되는 의회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을 공개하도록 했고, 시장판공비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 계수조정 공개▲각종 위원회 회의를 녹음하여 속기라야 시홈페이지에 공개▲원여보고서 홈페이지 공개▲시의원 국외여행 예산외지 등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시장 및 시의원 공약 홈페이지 공개▲각종 의결 및 부표시 공개 부표▲의원행동강령제정 등 행정의 투명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해왔다.

제7대의회에서는 의장선거 시에 같은 당소속의 원의 해당행위라도 같은 당의원을 제외하고 타당의원과 손을 잡고의장이 되면서 의회의 첫 단추는 잘 못 끼어지게 됐다.의장은 16일만에 같은당소속의원들로부터 불신임 당했고 그 이후 의회는 계속해서 파행의 연속이였다.

나는 광명시의회 민주당원내대표를 하면서 의회의 파행을 막지 못하고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혜심이 되었고 의회를 화합하도록 리드하지 못한 아주 큰 잘 못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상대당이 공격을 해도 내가 고개를 숙였다면, 대응하지 않았다면, 어떻을까?라는 후회를 한다.

파행속에서도 민주당의원들은 굿굿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이 제출한 조례가 즐겁이 부결되었다(무려 9건이상이 부결).

그리고 시정질문, 10분자유발언을 준비해서 하려고하면,시정질문도 파행이 되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10분자유발언을 신청해도 의장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물며 시장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까지도 못 하게 정지시킨 사례도 있었다.

그당시의 광명시의원는 무소불위,군사독재시절보다더 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환경에서도 고개숙이지 않고 끊임없이 시정질문을 준비했고,시정행부를 견제했다.

그러고 아무리 좋음이 부결되어도 조례안은 계속해서 제출했다.다수에게 고개숙이지 않은 댓가는 아주 컸다

그 결과 시정질문,조례안 통과도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의원이 됐다.

위기말기를 보내면서 심의도 중요하지만 의원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정책선도역성, 협력성,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 많은 자질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고 가장 중요하고 제게 필요했던 것은 감정의 조절,통합의 철제,품위유지라는 생각이다.

어느 책에 선출직 중에 제일 위험한 의원은 "무식하고, 용감하고, 고집이 세고 ,수치심을 모르고, 염심히 하는 의원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최소한 그런 의원은 되지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난 8년간 광명시의회에서 혁신했던 경험을 삼아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해서 경기도의 보편적복지를 추구하고 16년간 한국당이 잡고 있는 경기도청을 혁신하기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불의에 굽히지 않고 진실되게 의정활동하는 그런 의원이 많기를 기대해본다.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다.

〈내외일보 2018년 2월 13일자 6면〉

보도 내용

[기고문]
광명시의회 7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약 8년 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의원이 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늘이 캄캄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 약 15일 동안 하루에 18시간 이상 4년치의 속기록을 정독하면서,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조례 및 법률까지 찾아가며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시군의 모든 조례를 광명시의 조례와 비교하면서 우리 시에 없는 조례를 확인했었다. 이런 과정을 공부하다보니 광명시의 약 200여 개의 조례를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었던 기억이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발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질문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

초선 때에는 4년 동안 오전 8~9시에 출근해서 오후 밤늦게까지 365일을 의회에서 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했던 일은 지방지 10개 정도를 매일 보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의 자료에 해당되는 것을 읽고 스크랩하는 것이었다.

스크랩을 8년째 하고 있다.

그 스크랩 자료가 현재 약 60여 개의 파일이 넘었고 의정활동에 가장 큰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매일 업무보고책자, 예산서, 행정사무감사책 등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최소한 당선된지 1년 동안은 행사장 참석을 최소화했었다.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역점적으로 노력했었다.

▲의회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공개 관련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때에는 같은당 소속의원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고, ▲시장 및 시의장 등의 판공비 공개조례를 개정할 때도 벽에 부딪쳤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때론 화도 내면서 계속해서 추진했었다. 결국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안되는 의회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을 공개하도록 했고, 시장판공비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 계수조정 공개 ▲각종 위원회 회의를 녹음하여 속기하여 시홈페이지에 공개 ▲용역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시의원 국외여행 예산, 일정 등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시장 및 시의원 공약 홈페이지 공개 ▲각종 의결 및 투표시 공개 투표 ▲의원행동강령제정 등 행정의 투명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해왔다.

제7대 의회에서는 의장선거 시에 같은 당소속의원의 해당행위(?)로 같은 당의원을 제외하고 타당의원과 손을 잡고 의장이 되면서 의회의 첫 단추는 잘못 꿰어지게 됐다. 의장은 16일 만에 같은 당소속 의원들로부터 불신임당했고 그 이후 의회는 계속해서 파행의 연속이었다.

나는 광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의회의 파행을 막지 못하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핵심이 되었고 의회를 화합하도록 리드하지 못한 아주 큰 잘못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상대당이 공격을 해도 내가 고개를 숙였다면, 대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를 한다.

파행속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제출한 조례가 줄줄이 부결되었다(무려 약 20여 개가 부결).

그리고 시정질문, 10분 자유발언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시정질문도 파행이 되어서 못 한 경우도 있고,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해도 의장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물며 시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까지도 못하게 정지시킨 사례도 있었다.

그 당시의 광명시의회는 무소불위,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환경에서도 고개숙이지 않고 끊임없이 시정 질문을 준비했고, 시집행부를 견제했다.

그리고 아무리 줄줄이 부결되어도 조례안은 계속해서 제출했다(다수에게 고개숙이지 않은 댓가는 아주 컸다).

그 결과 시정질문, 조례안 통과도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의원이 됐다.

임기말기를 보내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의원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정체성, 도덕성, 청렴성,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많은 자질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고 가장 중요하고 제게 필요했던 것은 감정의 조절, 행동의 절제, 품위유지라는 생각이다.

어느 책에 선출직중에 제일 위험한 의원은 “무식하고, 용감하고, 고집이 세고, 수치심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의원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최소한 그런 의원은 되지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난 8년간 광명시의회에서 혁신했던 경험을 삼아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해서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16년간 한국당이 잡고 있는 경기도청을 혁신하기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불의에 굽히지 않고 진실되게 의정활동하는 그런 의원이 많기를 기대해본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
언론사	**주식회사 내외일보** 서울 구로구 경인로 3길 61 광장빌딩 4층 대표이사 이희찬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8년 2월 21일자 16면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새로운 광진구의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진구청장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기사를 16면(최종면)에 상당한 분량으로 게재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내외일보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새로운 광진구의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광진구청장 출마 기자회견, 광진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

광진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

김선갑 광진구청장

기자회견

〈내외일보 2018년 2월 21일자 16면〉

보도 내용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새로운 광진구의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은 풀뿌리 지방정치로부터

국정·시정·구정 3정을 모두 섭렵한 능력자

김선갑 위원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에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전파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현장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비전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 광진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치면서 시정, 구정에 직접 참여하고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출발해 서울시정과 국정 운영을 모두 경험한 지역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고 말하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서울시와 정부, 국회의 연계와 협치를 이끌어 내고 광진 현안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광진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전파하는 '혁신가형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믿음의 정치, 행정능력을 갖춘 구정 운영의 적임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8년 연속 수상, 서울기자연합회 주최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지방행정의 예산·정책통!

김 위원장은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되고 민선 단체장이 탄생한지 22년이 지났으며,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고 가능성의 시간이었지만 아쉽게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광진에도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라며,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를 모으고 자원과 역량을 총집결 하고,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제와 정책으로 과감히 승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고단한 삶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정이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선갑은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신뢰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8년 연속으로 시민단체가 선정한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치인

의 중요 덕목은 '신뢰'라는 신념으로 광진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매진해온 결과입니다."라며 구민에게 공을 돌렸다.

김선갑은 열악한 광진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조차 해결 못하는 게 광진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책연구위원장, 서울살림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43조원이 넘는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을 꼼꼼히 다뤄본 김선갑이야말로 광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확충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라고 재정 확충에 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선갑은 고단한 서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 사회주택, 중장년층 전담 정책 등 김선갑은 양극화 해소와 서민생활형 혁신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자치구간 균형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김선갑의 정책 경험과 역량은 다양한 구정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돌보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고 말하며, 정책 전문가의 면모도 부각시켰다.

김선갑은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된 구청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 등 자치분권의 최일선 활동가로 뛰었던 김선갑의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개헌과 자치발전 국정운영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제 광진구민을 위한 특별한 '지방정부 모델'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갈 것입니다"고 준비된 구청장임을 강조했다.

구민생활은 더 편리하게, 행정은 더 유능하게

김선갑이 약속하는 광진 비전과 실천 전략

김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저성장, 일자리 부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 곳곳에 무너졌던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도전해서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김선갑은 '내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풍요로운 광진구'라는 비전 아래 광진의 미래를 담대하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김선갑과 함께 광진은 제4차 산업의 모델 도시로 거듭납니다.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 주변의 우수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이들 거점을 잇는 '첨단 업무 및 지식산업 복합벨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중곡, 군자,

구의, 자양 등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주차장, 복지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살기좋은 주거환경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도시계획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선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구정 참여 주체들과 풀뿌리 민주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행정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즉각 대응하는 기민한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고품격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별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해 평생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서울 동북권의 첨단업무 복합도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복지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대·계층별 촘촘한 복지망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소득주도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곱째,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광진, 문화 예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건강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재능, 물품, 점유 공간 등을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내 우수한 대학과 연계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장은 "모든 세대와 계층, 이념을 초월한 '통합과 소통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구민주권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구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
언론사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6층 대표이사 은기원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8년 2월 12일자(1241호) 2~3면 「[2018 설특집] 2018 광역단체장 17개 시도 판세, 민주12 한국3 민평1 무1」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정당별 광역단체장 당선자 수를 단정적으로 예측한 제목을 사용하고, '(우상호 의원이) 운동권 정치인·세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충남·충북·세종 지역에서) 누가 되든 여당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세종시는 민주당 이춘희 현 시장이 무난하게 재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요서울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17개 시도 중 최대 12개 안팎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6곳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으로 분당 후 바른정당과 합당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광역단체장 승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오이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평당이 한 석을 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8 설특집

[2018 광역단체장 17개 시도 판세] 민주12 한국3 민평1 무1

여 9곳 수성 기본, 수도권+PK에서 최소 3곳 '자산'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민주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9곳이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 이 전남지사는 총리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됐고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박탈당해 현재 7곳을 지키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8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직을 던져 경남도지사는 공백상태다. 원 지사는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남아 있어 6곳이 한국당 출신 단체장이다.

서울·경기·인천: '싹쓸이냐' vs '이삭줍기냐'

수도권 판세는 전국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평론가들은 집권 여당의 완승을 점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의 뜻을 밝힌 가운데 '86세대' 우상호(서대문갑·3선)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원만한 리더십을 발휘한 데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부의장을 맡아 운동권 정치인·세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지도·경력 면에서 박 시장에 밀린다는 점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운 민병두 의원(동대문을·3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박 시장에게 패한 바 있는 박영선(구로을·4선) 의원, 강남이 지역구인 전현희(재선) 의원 등 은 인지도·비문·경력 탓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크호스'로는 문재인 정부 첫 정치인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초선·57)의 출마 여부다. 서울시장 후보군 중 확실한 친문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출마를 선언할 경우 경선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홍정욱 전 의원(초선·48)은 불출마 뜻을 밝혔다가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정부 청와대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황교안 전 총리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 후보 강세속에 명확한 출마의 뜻을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 본선전뿐 만아니라 민주당 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경기도의 경우 현 지사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당 후보가 될 공산이 높은 가운데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누가 여당 후보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지사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선에서는 당 조직에서 앞서는 대통령 최측근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재선)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인지도와 조직 싸움에 누가 승자가 될지가 관심사다. 최근 도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당권으로 돌아서면서 두 인사 중 누구와 손잡을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이 후보가 될 공산이 높은 가운데 여당에서는 친문 박남춘(남동갑·재선) 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초선·57),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바른당 출신 이학재 의원(서구갑·3선), 국민의당 출신 문병호 전 의원(부평갑·재선)중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야가 희비 교차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인천이지만 현 시장이 친박 색채가 강해 여권 후보의 낙승이 점쳐진다.

부울경·대구경북: '수성이냐' vs '탈환이냐'

과거 자유한국당 텃밭이던 영남권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TK보다 PK지역이 흔들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 현역인 한국당 서병수 시장이지만 친박 색채에 낮은 지지율로 당 안팎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세연 의원(금정구·3선)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친홍 인사인 이종혁 전 의원도 도전장을 내밀 태세다. 민주당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오거돈 전 장관 양강 구도로 좁혀진 상황이다. 김 장관은 수차례 출마의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오 전 장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낸다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경남의 경우 홍 대표가 물러나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가운데 여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한국당에서는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초선)과 친홍 인사인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초선), 경남 최다선인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5선)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경우 문대통령 고교 및 대학 동문인 공민배 전 시장, '대통령 복심' 김경수 의원(김해을·초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 의원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이 혼재돼 있는 울산의 경우 김기현 현 시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여당 후보로는 문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가 유력한 여당 후보다. 진보진영 후보가 난립할 경우 여당 후보다는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권영진 한국당 시장이 재선에 나섰다. 경선 경쟁자로 곽대훈 의원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김재수 전 농림부장관, 이재만 전 최고 위원등 거론되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임대윤 전 동구청장이

한국당 7곳 수성 적신호, 경기·인천·부산·경남 '흔들'

〈일요서울 2018년 2월 12일자(1241호) 2~3면〉

일요서울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현역 시장에 비해 인지도나 중량감이 떨어지면서 '김부겸 차출론'과 홍의락(대구북을·재선) 의원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김 행자부 장관은 신년 여론조사에서 현 권 시장과 가상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돼 '불출마 입장'에도 불구하고 차출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북의 경우 '보수의 심장'으로 한국당 후보 간 다툼이 치열하다. 김광림(경북 안동·3선), 이철우(경북 김천·3선), 박명재(경북 포항남구·울릉군,재선) 의원과 남유진 구미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성조 한체대 총장 등 김관용 경북지사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해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반면 여당 후보로는 최근 청와대를 나온 오중기 전 행정관이 유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후보로는 권오을 최고위원(경북 안동·3선)이 뛰고 있다.

광주·전남 민주 '우세 속' 전남 박지원 출마 '변수' 부상

호남에선 민주당 강세속에 민주평화당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차출'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남지사의 경우 이낙연 총리 차출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가운데 여당과 민평련 양강전이 될 공산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재선)의 출마가 중앙당 만류로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평련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4선) 출마가 점쳐져 '빅매치'도 가능하다.

반면 광주·전북은 윤장현 시장·송하진 지사가 집권 여당에 현역 프리미엄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민평련 정동영(전북전주시병·4선), 유성엽(전북정읍고창·3선),조배숙(전북익산·4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분명한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막판 '정동영 차출론'에 대한 정 의원의 결심 여부가 변수다.

광주의 경우 민주당 윤장현 현 시장에 맞서 같은당에서는 강기정(광주북갑·3선),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광주광산을·재선),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광주동남을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출마의 뜻이 없던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3선)이 민평당으로 당을 옮겨 출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천정배(광주서구을·6선)' 차출론'이 변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주선 국회부의장(광주동남을·5선),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4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충남북·세종 '여(與) 3인방' 건재, 대전은 '혼전'

충남·충북·세종은 여당 후보가 득세다. 충남의 경우 '포스트 안희정'을 두고 양승조 의원(천안병·4선)과 복기왕 아산시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3파전 양상이다. 박 전 대변인이 안 지사의 최측근으로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인구 1, 2위를 달리고 있는 양 의원과 복 시장이 충남표를 분할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가 되든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당에서는 이명수·홍문표 의원 중 한 명이 나설 전망이지만 명확한 출마 입장을 비치진 않고 있다.

충북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이시종 지사가 경선과 본선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오제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에서는 박경국 전 행안부1차관, 신용한 청주시장 출마선언을 했거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경력 면이나 중량감에서 밀린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은 민주당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재직 내내 재판을 받다 임기말에 직을 박탈당해 여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가운데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4선),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영순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의원, 박성효 전 대전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민주당 이춘희 현 시장이 무난하게 재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최문순' 독주에 제주 '원희룡' 행보 주목

강원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과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대항마로 거론된다. 제주지사는 바른미래당의 원희룡 지사의 거취에 따라 구도가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여차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우남 전 의원,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에서는 김방훈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원 지사가 한국당으로 복당할 경우 '무공천' 가능성도 있다.

일요서울

보도 내용

[2018 설특집]
2018 광역단체장 17개 시도 판세, 민주12 한국3 민평1 무1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17개 시도 중 최대 12개 안팎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6곳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으로 분당 후 바른정당과 합당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광역단체장 승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오히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평당이 한 석을 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9곳이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

이 전남지사는 총리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됐고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박탈당해 현재 7곳을 지키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

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8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직을 던져 경남도지사는 공백상태다. 원 지사는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남아 있어 6곳이 한국당 출신 단체장이다.

서울·경기·인천

'싹쓸이냐' vs '이삭줍기냐'

수도권 판세는 전국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평론가들은 집권 여당의 완승을 점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의 뜻을 밝힌 가운데 '86세대' 우상호 의원(서대문갑·3선)이 주목받고 있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원만한 리더십을 발휘한 데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부의장을 맡아 운동권·정치인 세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지도·경력 면에서 박 시장에 밀린다는 점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운 민병두 의원(동대문을·3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박 시장에게 패한 바 있는 박영선 의원(구로을·4선), 강남이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재선) 등은 인지도·비문·경력탓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크호스'로는 문재인 정부 첫 정치인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초선·57)의 출마 여부다. 서울시장 후보군 중 확실한 친문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출마를 선언할 경우 경선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홍정욱 전 의원(초선·48)은 불출마 뜻을 밝혔다가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정부 청와대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황교안 전 총리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 후보 강세속에 명확한 출마의 뜻을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 본선전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경기도의 경우 현 지사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당 후보가 될 공산이 높은 가운데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누가 여당 후보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지사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선에서는 당 조직에서 앞서는 대통령 최측근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재선)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인지도와 조직 싸움에 누가 승자가 될지가 관심사다. 최근 도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당권으로 돌아서면서 두 인사 중 누구와 손잡을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이 후보가 될 공산이 높은 가운데 여당에서는 친문 박남춘 의원(남동갑·재선),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초선·57),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바른당 출신 이학재 의원(서구갑·3선), 국민의당 출신 문병호 전 의원(부평갑·재선)중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야가 희비 교차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인천이지만 현 시장이 친박 색채가 강해 여권 후보의 낙승이 점쳐진다.

부울경·대구경북

'수성이냐' vs '탈환이냐'

과거 자유한국당 텃밭이던 영남권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TK보다 PK지역이 흔들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 현역인 한국당 서병수 시장이지만 친박 색채에 낮은 지지율로 당안팎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세연 의원(금정구·3선)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친홍 인사인 이종혁 전 의원도 도전장을 내밀 태세다.

민주당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오거돈 전 장관 양강 구도로 좁혀진 상황이다. 김 장관은 수차례 출마의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오 전 장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낸다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경남의 경우 홍 대표가 물러나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가운데 여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한국당에서는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초선)과 친홍 인사인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초선), 경남 최다선인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5선)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경우 문 대통령 고교 및 대학 동문인 공민배 전 시장, '대통령 복심' 김경수 의원(김해을·초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 의원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이 혼재돼 있는 울산의 경우 김기현 현 시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여당 후보로는 문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가 유력한 여당 후보다. 진보진영 후보가 난립할 경우 여당 후보다는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권영진 한국당 시장이 재선에 나섰다. 경선 경쟁자로 곽대훈 의원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김재수 전 농림부장관, 이재만 전 최고 위원등 즐비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임대윤 전 동구청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현역 시장에 비해 인지도나 중량감이 떨어지면서 '김부겸 차출론'과 홍의락 의원(대구북을·재선)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김 행자부 장관은 신년 여론조사에서 현 권 시장과 가상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돼 '불출마 입장'에도 불구하고 차출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북의 경우 '보수의 심장'으로 한국당 후보 간 다툼이 치열하다. 김광림(경북 안동·3선), 이철우(경북 김천·3선),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구 울릉군·재선)과 남유진 구미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성조 한체대 총장 등 김관용 경북지사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해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반면 여당 후보로는 최근 청와대를 나온 오중기 전 행정관이 유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후보로는 권오을 최고위원(경북 안동·3선)이 뛰고 있다.

광주·전남 민주 '우세 속'

전남 박지원 출마 '변수' 부상

호남에선 민주당 강세속에 민주평화당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차출'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남지사의 경우 이낙연 총리 차출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가운데 여당과 민평련 양강전이 될 공산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재선)의 출마가 중앙당 만류로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평련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4선) 출마가 점쳐져 '빅매치'도 가능하다.

반면 광주·전북은 윤장현 시장·송하진 지사가 집권 여당에 현역 프리미엄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민평련 정동영(전북전주시병·4선), 유성엽(전북정읍고창·3선), 조배숙(전북익산·4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분명한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막판 '정동영 차출론'에 대한 정 의원의 결심 여부가 변수다.

광주의 경우 민주당 윤장현 현 시장에 맞서 같은당에서는 강기정(광주북갑·3선),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광주광산을·재선),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광주동남을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출마의 뜻이 없던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3선)이 민평당으로 당을 옮겨 출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천정배(광주서구을·6선) 차출론'이 변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주선 국회부의장(광주동남을·5선),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4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충남북·세종 '여(與) 3인방' 건재,

대전은 '혼전'

충남·충북·세종은 여당 후보가 득세다. 충남의 경우 '포스트 안희정'을 두고 양승조 의원(천안병·4선)과 복기왕 아산시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3파전 양상이다. 박 전 대변인이 안 지사의 최측근으로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인구 1, 2위를 달리고 있는 양 의원과 복 시장이 충남표를 분할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가 되든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당에서는 이명수·홍문표 의원 중 한 명이 나설 전망이지만 명확한 출마 입장을 비치진 않고 있다.

충북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이시종 지사가 경선과 본선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오제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에서는 박경국 전 행안부1차관, 신용한 청주시장 출마선언을 했거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경력 면이나 중량감에서 밀린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은 민주당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재직 내내 재판을 받다 임기말에 직을 박탈당해 여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가운데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4선),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영순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의원, 박성효 전 대전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민주당 이춘희 현 시장이 무난하게 재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최문순' 독주에

제주 '원희룡' 행보 주목

강원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으로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과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대항마로 거론된다. 제주지사는 바른미래당의 원희룡 지사의 거취에 따라 구도가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여차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우남 전 의원,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에서는 김방훈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원 지사가 한국당으로 복당할 경우 '무공천' 가능성도 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경북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3 서라벌빌딩 2층 대표이사 정진욱
심의대상기사	경북연합일보 2월 19일자 2면 「'여론 1위' 이철우, 도지사 선거 1강 독주 체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관련 9개 여론조사 결과 이철우 입후보예정자가 모두 1위라고 하였으나 9개 중 3개 여론조사의 출처만 밝혔으며, 3개 여론조사 중에서도 일요서울·유앤미리서치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 내 후보 적합도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독자로 하여금 이철우 입후보예정자가 전체 입후보예정자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여론조사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연합일보

2018년 02월 19일
02면 (정치)

'여론 1위' 이철우, 도지사 선거 1강 독주 체제

9개 기관 여론조사 '9전 전승'
김광림·박명재 2위 그룹 형성
한국당 지지층 후보 적합도 34%

경북도지사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지금까지는 느릿느릿 행보를 해왔던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설날 연휴를 지나면 빨라질 전망이다.

설 연휴 이후 각 당의 지방선거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어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때문에 설을 지나고 나면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해 첫날 신년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 차례 홀고 지나갔지만 설날을 전후로 설 특집 여론조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올들어 발표된 대구·경북지역 9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철우 의원이 9전 전승을 기록해 사실상 1강 체제로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1강 2중 3약의 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으로 보면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가운데 이철우 의원의 강세에 김광림·박명재 의원이 2위 그룹을 형성해 바짝 추격 착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김광림·박명재 의원이 2위와 3위 자리를 수시로 바꿔가며 등지를 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후보들간 연대설이 나오는 등 다양한 소문들이 지역 정가에 나돌기 시작했다.

게다가 판세가 다소 불리해진 후위 그룹 출마자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공세도 불이 붙었다.

벌써부터 뜨겁게 달궈질 선거전 보다 본 선거 이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언론까지 가세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일삼다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여론조사 기관별 분석을 보면 '뉴스1'이 '엠브레인'과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경북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의원이 여야 후보군을 통틀어 지지도 1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의원은 1위를 달리고 있고, 김광림 의원(13.9%), 박명재 의원(12.1%)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도 이철우 의원이 1위를 기록하고 2, 3위 박명재 의원과 김광림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의 후보 적합도에서 자유한국당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철우 의원이 31.2%로 김광림 의원 16.4%, 박명재 의원의 12.9%를 큰 격차로 딸돌렸다.

13일 보도된 일요서울·유앤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철우 의원은 1등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내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이 의원은 32.4%의 지지를 받아 2위인 박명재 의원(18.0%)을 큰 폭으로 따돌렸다.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도는 이철우 의원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명재 의원이 18.2%, 김광림 의원이 16.9%를 기록했다.

앞리고 뉴스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경북도지사 전체 후보자 가운데서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철우 의원이 25.3%로 1위를 차지했고 김광림, 박명재 의원이 각각 2, 3위에 자리 잡았다.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를 보면 이철우 의원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 의원이 25.7%를 얻으며 1위 자리를 고수했고, 박명재 의원이 20.4%로 2위를, 김광림 의원이 18.5%로 3위를 차지했다.

김영덕 기자 kyd@kbyn.co.kr

(16.2*7.0)cm

〈경북연합일보 2018년 2월 19일자 2면〉

보도 내용

'여론 1위' 이철우, 도지사 선거 1강 독주 체제

경북도지사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느릿느릿 행보를 해왔던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설날 연휴를 지나면 빨라질 전망이다.

설 연휴 이후 각 당의 지방선거 경선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어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때문에 설을 지나고 나면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해 첫날 신년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 차례 훑고 지나갔지만 설날을 전후로 설 특집 여론조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올 들어 발표된 대구·경북지역 9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철우 의원이 9전 전승을 기록해 사실상 1강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1강 2중 3약의 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으로 보면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가운데 이철우 의원의 강세에 김광림·박명재 의원이 2위 그룹을 형성해 바짝 추격 작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김광림·박명재 의원이 2위와 3위 자리를 수시로 바꿔가며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후보들간 연대설이 나오는 등 다양한 소문들이 지역 정가에 나돌기 시작했다.

게다가 판세가 다소 불리해진 후위그룹 출마자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공세도 불이 붙었다.

벌써부터 뜨겁게 달궈질 선거전 보다 본 선거 이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언론까지 가세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일삼다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여론조사 기관별 분석을 보면 '뉴스1'이 '엠브레인'과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경북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의원이 여야 후보군을 통틀어 지지도 1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의원은 1위를 달리고 있고, 김광림 의원(13.9%), 박명재 의원(12.1%)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도 이철우 의원이 1위를 기록하고 2,3위 박명재 의원과 김광림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의 후보 적합도에서 자유한국당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철우 의원이 31.2%로 김광림 의원 16.4%, 박명재 의원의 12.9%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13일 보도된 일요서울·유앤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철우 의원은 1등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내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이 의원은 32.4%의 지지를 받아 2위인 박명재 의원(18.0%)을 큰 폭으로 따돌렸다.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도는 이철우 의원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명재 의원이 18.2%, 김광림 의원이 16.9%를 기록했다.

알리고 뉴스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경북도지사 전체 후보자 가운데서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철우 의원이 25.3%로 1위를 차지했고 김광림, 박명재 의원이 각각 2,3위에 자리 잡았다.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를 보면 이철우 의원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 의원이 25.7%를 얻으며 1위 자리를 고수했고, 박명재 의원이 20.4%로 2위를, 김광림 의원이 18.5%로 3위를 차지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
언론사	**주식회사 경안일보** 경북 안동시 경동로 829 대표이사 강병주
심의대상기사	경안일보 2월 14일자 1면 「김광림 도지사후보 적합도 1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특정 경북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김광림 입후보예정자가 1위라고 제목에 표현하였으나, 그 근거로 정당별 후보자 적합도만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자유한국당 후보자 적합도 조사의 경우 1위와 2위의 격차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김광림 자유한국당 입후보예정자가 전체 입후보예정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거나 자유한국당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표본오차 한계 밖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여론조사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안일보

613 지방선거를 예측한다… 경상북도 도지사·교육감

김광림 도지사후보 적합도 1위

(자유한국당) (22.9%)

이철우 17.1%·박명재 16.0%·남유진 9.4% 順

민주 오중기 10.5%·이상걸 7.8%·김영태 7.5%

〈경안일보 2018년 2월 14일자 1면〉

보도 내용

김광림 도지사후보 적합도 1위

이철우 17.1%·박명재 16.0%·남유진 9.4% 順
민주 오중기 10.5%·이삼걸 7.8%·김영태 7.5%

경안일보는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도지사와 교육감 출마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도지사후보 적합도에서 김광림 예비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적합도에서는 오중기 예비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또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자 적합도에서는 안상섭 예비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는 경상북도 도민에게 지지하는 정당과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자 적합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자 적합도, 경북교육감 후보자 적합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물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북도민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 적합도에서 자유한국당 63.5%, 더불어민주당 15.0%, 가칭 바른미래당 7.0%, 정의당 0.8%, 민주평화당 0.5%, 없음 8.0%, 기타 3.2%, 모름 2.0%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기반이 일부 분산된 결과를 볼 수 있으나 경북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새누리당의 분신인 자유한국당에게 63.5%의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광림 현 국회의원 22.9%, 이철우 현 국회의원 17.1%, 박명재 현 국회의원 16.0%, 남유진 전 구미시장 9.4%, 김영석 현 영천시장 5.3%, 김장주 현 경북도 행정부지사 2.6%, 없음 15.8%, 기타모름 11.0%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10.5%,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차관 7.8%, 김영태 현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위원장 7.5%, 기타모름 38.7%, 없음 35.4% 순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상섭 현 경북교육연구소장 10.2%, 권전탁 전 경상북도 교육정책국장 9.2%, 임인배 전 국회의원 8.3%, 임종식 전 경상북도 교육정책국장 8.2%, 이찬교 현 경북무상급식추진본부 상임대표 7.0%, 김준호 현 경상북도 교육정책국장 6.5%, 이경희 전 포항교육장 6.2%, 없음 29.0%, 기타모름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안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경북리서치에 의뢰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

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유선ARS전화 조사,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 2.0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4%P이며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경북 지역 174개 국번별 0000-9999까지 생성 후 램덤 전화, 통계보정방법은 2017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선거구별 가중치 부여(셀가중)를 적용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9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3층 발행인 이상원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8년 3월 9일자 10면 「"8년간 행정력 성공은 34만 시민·공직자들 덕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광명시장 재임 중 성과와 경기도지사 출마각오 등을 사진과 함께 전면 기사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신문

■ 광기대 시장에 묻는 8년간 광명 시정

베드타운 광명시, 성장과 미래 꿈꾸는 도시로…

"8년간 행정력 성공은 34만 시민·공직자들 덕분"

〈경기신문 2018년 3월 9일자 10면〉

보도 내용

베드타운 광명시, 성장과 미래 꿈꾸는 도시로…

"8년간 행정력 성공은 34만 시민·공직자들 덕분"

양기대 시장에 듣는 8년간 광명 시정

광명동굴로 베드타운이었던 광명시를 국내외에 알린 양기대 광명시장이 경기도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물론 경선을 치를 더불어민주당 여타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는 낮다. 하지만 광명시민 10명 중 8명은 양 시장의 남다른 추진력과 행정력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혹자들은 말한다. "인지도는 분명 낮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그의 행정력만큼은 단연코 1등"이라고. 작은 도시 광명시를 떠나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자기 한 몸 기꺼이 불사를 준비가 된 양 시장의 지난 8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광명시장 보낸 지난 8년의 시간에 대한 소회는

총선에서 두 번 낙선하고 2010년 광명시장에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다. 8년의 시간은 전형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이었던 광명시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덕분에 지금 광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34만 시민과 1천여 명의 광명시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광명시와 시민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함께 이루는 과정이 정말 행복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될 때 61.1%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또 지난해 말 진행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의 83.3%는 "양기대가 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주셨다.

시민들이 실제로 광명시가 변화하는 과정, 도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겪게 되면서 팬이 많이 늘었다.

과분하지만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해 온 것을 인정받는 거 같아 보람을 느낀다.

Q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광명시가 지금 이만큼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광명동굴 덕분이다.

40년간 버려진 폐광이었는데 지금은 연간 12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가 됐다.

개발 과정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 동굴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신비로움에 매료돼 지금까지 오게 됐다.

초창기 무료로 개방하다가 지난 2015년 4월 유료화로 전환해 재개장했는데, 2년 반 만에 약 360만 명이 방문했다.

초기 투자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억 원의 수입도 올려 광명시의 채무를 갚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지난해에만 일자리 512개를 창출하는 등 광명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100대 관광지', '한국 관광의 별'에 뽑히고,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실리는 등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뿌듯하다.

Q KTX광명역세권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과 향후 발전 계획은

KTX광명역세권은 170만㎡(58만 평)이나 된다. 그런데 시장 당선 전까지 허허벌판이었다. 기가 막혔다. 광명역세권을 개발하지 않으면 광명시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래서 이곳에 대형유통기업을 유치했다. 세계 최대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들어오고 이케아 1호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개장해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권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심했다. 시장(市長)을 모형으로 만들어 화형식까지 할 정도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일일이 만나 상생을 논의했다.

결국 이들간 상생협약을 이끌어냈고 영업시간 제한, 주요농산물 등 판매품목 제한, 비즈엑스포 개최,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만들어냈다. 역세권 활성화와 대형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에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올해 도심공항터미널이 업무를 시작했고, 상반기 중 관광호텔도 들어선다. 또한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클러스터, 영상미디어와 한류문화의 메카 광명미디어아트밸리까지 완성되면 KTX광명역세권은 대한민국의 교통·의료·쇼핑·미디어의 중심지로 또 한 번 도약할 것이다.

Q 남북관계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싶어서였다. 광명동굴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인 2015년 말부터 KTX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조성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북한이 관심 가질 영역이 경제이고, 통일 전이라도 남북이 철도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당시는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한·중관계까지 경색돼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품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지나가게 될 중국의 단둥과 훈춘, 러시아 이르쿠츠크 등 거점 및 경유 도시와 협약을 맺으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왔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남북관계도 해빙모드로 전환돼 그간 뿌려왔던 씨앗이 성장할 환경이 조성됐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요하게 해낼 생각이다.

Q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 어느 단계까지 왔나

유라시아 평화철도는 KTX광명역에서 일산대곡~파주 문산~도라산역~개성까지 연결하는 78.3㎞의 고속철도를 말한다.

2014년 북한이 중국과 단둥~신의주~평양~개성으로 이어지는 고속철 협약을 맺었다. 북핵과 사드 등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지만, 언젠가 이 프로젝트는 추진될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명에서 개성까지 유라시아 평화철도 노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프랑스 국영철도회사인 SNCF와 평화철도 노선 구간에 대한 역세권 분석 공동사업도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쿤밍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광명시가 추진하는 평화철도 사업을 설명하면서 개성 방문을 제안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Q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 각오와 함께 광명시장으로 일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광명시가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그것을 한계라 생각하지 않고 광명시를 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다.

광명동굴이 대표적이고 저출산과 돌봄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아이안심돌봄터'나 '청년일자리정책' 등이 그렇다. 지금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광명시에만 머물렀다면 시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명시장으로 일한 8년은 도전과 실천, 성공의 DNA를 심어줬고, 스스로 역량을 검증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광명시가 그랬던 것처럼 경기도도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중교통 문제, 청년일자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것을 풀 사람이 필요하다.

본인에겐 광명시에서 8년간 일하며 터득한 일머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현황을 풀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 방법을 알고 있다.

광명시에서 이룬 성과와 검증된 역량, 미래비전 등 저만의 장점을 갖고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지사가 되려고 한다. 나라다운 나라, 경기도다운 경기도가 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광명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8년 동안 제가 도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 덕이다. 그 지지와 격려 잊지 않겠다. 광명시에서 이룬 여러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광명시, 경기도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일하겠다. 끝까지 믿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0
언론사	**주식회사 경도신문**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53, 2층 발행인 신근하
심의대상기사	경도신문 2018년 3월 6일자 3면 「"변화와 혁신, 잘사는 안성 설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성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선언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대판 김정호다', '인생 역전을 일궈낸 사람이다', '청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등 우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도신문

2018년 03월 06일
03면 (정치)

민주당 우석제, 안성시장 출마 선언

"변화와 혁신, 잘사는 안성 설계"

우석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안성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안성시 장기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을 포기한 시민들을 위해 천만 촛불의 빛으로 5불(불행, 불평등, 불신, 불안, 지속 불가능) 사회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6대째 안성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린 안성토박이로서 외진 시골의 소로부터 시내의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파악하고 있는 세밀함도 갖추고 있는 현대판 김정호다.

그는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가난이 생활이었던 흙 수저 출신으로 노동자, 전기보조 기사, 택시기사 등 평범하지 않은 인생 경험을 겪으며 인생 역전을 일궈낸 사람이다.

빈곤의 미로에 갇혀버린 청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청년을 위한 미래비전을 누구보다도 면밀하다.

또한 그는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가난이 생활이었던 사람이기에 청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밝은 미래비전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다.

박금용기자

(11.7*12.7)cm²

〈경도신문 2018년 3월 6일자 3면〉

보도 내용

민주당 우석제, 안성시장 출마 선언

“변화와 혁신, 잘사는 안성 설계”

우석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안성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안성시 장기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을 포기한 시민들을 위해 천만 촛불의 빛으로 5불(불행, 불평등, 불신, 불안, 지속 불가능) 사회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6대째 안성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린 안성토박이로서 외진 시골의 소로부터 시내의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파악하고 있는 세밀함도 갖추고 있는 현대판 김정호다.

그는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가난이 생활이었던 흙수저 출신으로 노동자, 전기보조기사, 택시기사 등 평범하지 않은 인생 경험을 겪으며 인생 역전을 일궈낸 사람이다.

빈곤의 미로에 갇혀버린 청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청년을 위한 미래비전은 누구보다도 면밀하다.

또한 그는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가난이 생활이었던 사람이기에 청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밝은 미래비전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1
언론사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 대표이사 김찬수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8년 3월 8일자 19면 「주민 없는 지방선거」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도민일보

2018년 03월 08일
19면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주민 없는 지방선거

이창재
편집국 부국장

일부 후보자들 주민보다
특정당 공천받기에만 급급
보수텃밭이자 표밭 대구
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
결과 대한 책임 유권자 몫
진정한 옥석 고르기 필요

대구의 강남 수성구를 명품 교육의 도시로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수성구청장에 출마한 모 대구시의원이 한 유력지의 여론조사로 출마를 접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소 황당한 얘기지만 골찌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에 주변 지지자들이 돌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당사자의 해명은 이해가 가지않는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판기념회도 가졌고 주민들을 위해 과감히 몸을 던진 그의 집념은 제대로된 평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던져 버렸다. 1등이 함들거라는 그의 체념은 다소 이해되지만 자신의 정치를 모면키위해 결국 주민을 버린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눈높이를 낮추며 대구시의원 3선을 꿈꾸는 그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자못 궁금하다.

또 다른 수성구청장 출마자 얘기다. 그는 최근 교통관련 대구시 기관장을 사임하고 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불출마를 전제로 연임한지 4개월 만이다

그의 출마변 역시 주민을 위한 봉사의 지가 방점이다. 그는 이미 몇번이나 구청장직 선거 경험이 있다. 문제는 보수텃밭이자 표밭인 한국당(전 새누리당) 공천 경선전 출마가 전부라는데 있다.

아직도 젊은 후보인 그는 늘 경선 참여에서 저울질 하다 끝내곤 했다. 주민들의 당당한 심판보다는 당선가능성이 모두인 것 처럼 비쳐져 안타깝기만하다. 주민없는 특정당 공천받기만 매달려서 아쉽다는 얘기다. 몇번의 선거 동안 주민과의 소통과 봉사의지가 계속 전달됐다면 한국당 공천은 필요없을 것이다. 주민공천으로 당당히 구청장직 도전에 나오는 활력찬 그의 모습이 보고 싶다.

한국당 북구의 모 국회의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그는 지난 5일 국회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에 인구편차가 257%나 되는 괴물 시의원 선거구를 탄생시켜 주민들의 비판세례를 받고있다. 지역 초선의원으로 핵심 당직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차기 총선 재선을 예약해 둔 그는 선거구획정안을 책임지는 정개특위위원으로서 주민보다는 당을 선택했다.

괴물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은 한국당에서 구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이기 위한 꼼수의 결과라는게 정가의 분석이다.

그는 이미 지난 2월 인구 19만의 북구갑에 시의원 3명, 25만의 북구을에 시의원 2명을 배분하는 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주민없는 지방선거는 한국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 때문이다. 이같은 등식이 없으면 일당독식의 공천보다는 주민 공천이 힘을 받을 것이다. 당을 떠나 주민공천 후보자가 많아야 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구을 당협위원장으로 대구경북을 보루로 정치인생 재기를 꿈꾸고 있다.

지역이 낳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흥 대표처럼 보수심장 지역 발판이 아닌 진정한 보수를 위해 전국을 누비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지역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한 기대치를 남기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지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결국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주민들의 옥석 고르기가 진정 필요할 때다.

(22.3*14.9)cm

〈경북도민일보 2018년 3월 8일자 19면〉

보도 내용

주민없는 지방선거

대구의 강남 수성구를 명품 교육의 도시로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수성구청장에 출마한 모 대구시의원이 한 유력지의 여론조사로 출마를 접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소 황당한 얘기지만 꼴찌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에 주변 지지자들이 돌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당사자의 해명은 이해가 가지않는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판기념회도 가졌고 주민들을 위해 과감히 몸을 던진 그의 집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던져 버렸다. 1등이 힘들거라는 그의 체념은 다소 이해되지만 자신의 창피를 모면키위해 결국 주민을 버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눈높이를 낮추며 대구시의원 3선을 꿈꾸는 그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자못 궁금하다.

또 다른 수성구청장 출마자 얘기다. 그는 최근 교통관련 대구시 기관장을 사임하고 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불출마를 전제로 연임한지 4개월 만이다

그의 출마변 역시 주민을 위한 봉사의지가 방점이다. 그는 이미 몇번이나 구청장직 선거 경험이 있다. 문제는 보수텃밭이자 표밭인 한국당(전 새누리당) 공천 경선전 출마가 전부라는데 있다.

아직도 젊은 후보인 그는 늘 경선 참여에서 저울질하다 끝내곤 했다. 주민들의 당당한 심판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모두인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기만하다. 주민없는 특정당 공천받기만 매달려서 아쉽다는 얘기다. 몇번의 선거 동안 주민과의 소통과 봉사의지가 계속 전달됐다면 한국당 공천은 필요없을 것이다. 주민공천으로 당당히 구청장직 도전에 나오는 활력찬 그의 모습이 보고 싶다.

한국당 북구의 모 국회의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그는 지난 5일 국회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에 인구편차가 257%나 되는 괴물 시의원 선거구를 탄생시켜 주민들의 비판세례를 받고있다. 지역 초선의원으로 핵심당직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차기 총선 재선을 예약해 둔 그는 선거구획정안을 책임지는 정개특위위원으로서 주민보다는 당을 선택했다.

괴물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은 한국당에서 구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이기 위한 꼼수의 결과라는게 정가의 분석이다.

그는 이미 지난 2월 인구 19만의 북구갑에 시의원 3명, 25만의 북구을에 시의원 2명을 배분하는 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주민없는 지방선거는 한국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 때문이다. 이같은 등식이 없으면 일당독식의 공천보다는 주민 공천이 힘을 받을 것이다. 당을 떠나 주민 공천 후보자가 많아야 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구을 당협위원장으로 대구경북을 보루로 정치인생 재기를 꿈꾸고 있다.

지역이 낳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홍 대표처럼 보수심장 지역 발판이 아닌 진정한 보수를 위해 전국을 누비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지역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한 기대치를 남기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지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결국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주민들의 옥석 고르기가 진정 필요할 때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2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신문사** 경북 경주시 원화로 389 미림빌딩 5층 발행인 박준현
심의대상기사	경북신문 2018년 2월 28일자 19면 「경북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선택이 중요한 이유」 제하의 사설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치적 성향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신문

2018년 02월 28일
19면 (사설/칼럼)

경북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선택이 중요한 이유

경북교육감 후보들의 윤곽이 대충 드러나고 있다. 27일 현재 예비후보등록을 한 인사는 임종식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장, 이경희 건강한학교만들기운동본부 대표, 권전탁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공동대표,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장 등 6명이다.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중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장 정도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보수나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처럼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난립하자 도민들과 교육계 인사들은 온통 보수단일화 여부에 쏠려있다.

유권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하기 전에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학습해야 한다. 그런 이 후 자신의 생각과 처지를 견주어 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본인과 자녀들의 교육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한다.

보수가 최고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는 영어로 'Freedom'이라 번역되고, 진보가 강조하는 '자유'는 'Liberty'로 번역된다. Freedom은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 시장중심주의'를 뜻하고, Liberty는 '정부를 통한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을 통한 평등의 추구'를 의미한다. 교육정책면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선명하다. 보수는 몇몇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며 비용면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을 견지한다. 반면 진보는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개념을 적극 도입하려한다. 그래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급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이 비록 하향평준화 일지라도 우열을 인정하기 보다는 평준화를 선호한다.

경북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은 당연히 보수적이다. 엘리트 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재들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감은 인맥과 줄서기가 중요시 되는 일반 정치인과는 달리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후보 단일화는 우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후보들부터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을 포기하는 일부터 시작돼야한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2명의 후보가 남아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가 후보등록 시점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다.

또한 현시점부터는 30, 40대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당장 자녀들이 교육현장에 있고 각종정책의 대상자도 수혜자도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조금 무거운 사안으로 여겨지겠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대해 곰씸이보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를 보편적인 보통 아이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 인재로 키울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다.

(14.9×14.8)cm

〈경북신문 2018년 2월 28일자 19면〉

보도 내용

경북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선택이 중요한 이유

경북교육감 후보들의 윤곽이 대충 드러나고 있다. 27일 현재 예비후보등록을 한 인사는 임종식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장, 이경희 건강한학교만들기운동본부 대표, 권전탁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공동대표,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장 등 6명이다.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중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장 정도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보수나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처럼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난립하자 도민들과 교육계 인사들은 온통 보수단일화 여부에 쏠려있다. 유권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하기 전에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학습해야 한다. 그런 이후 자신의 생각과 처지를 견주어 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본인과 자녀들의 교육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보수가 최고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는 영어로 'Freedom'이라 번역되고, 진보가 강조하는 '자유'는 'Liberty'로 번역된다. Freedom은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 시장중심주의'를 뜻하고, Liberty는 '정부를 통한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을 통한 평등의 추구'를 의미한다. 교육정책면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선명하다. 보수는 몇몇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며 비용면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을 견지한다. 반면 진보는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개념을 적극 도입하려한다. 그래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급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이 비록 하향평준화 일지라도 우열을 인정하기 보다는 평준화를 선호한다. 경북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은 당연히 보수적이다. 엘리트 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재들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감은 인맥과 줄서기가 중요시 되는 일반 정치인과는 달리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후보 단일화는 우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후보들부터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을 포기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2명의 후보가 남아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가 후보등록 시점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다.

또한 현시점부터는 30,40대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당장 자녀들이 교육현장에 있고 각종정책의 대상자도 수혜자도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조금 무거운 사안으로 여겨지겠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대해 곱씹어보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를 보편적인 보통 아이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 인재로 키울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7
언론사	**안산정론신문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 22 4층 발행인 변억환
심의대상기사	안산정론신문 2018년 2월 28일자 6면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안산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내용을 전면에 걸쳐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이 사람이 사는 법

이황일 행복회 안산시지회장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
할아버지는 3.1 만세운동
아버지는 유신 반대운동
목숨 바쳐 불의에 항거

그리스의 산토리니처럼
대부도를 발전시켜야
"

〈안산정론신문 2018년 2월 28일자 6면〉

보도 내용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다.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다. 전국 단위의 단체로 안산에는 시지회가 있다. 2대 광복회 안산시지회장으로 선임된 이왕길회장이 연임에 성공, 3대 지회장으로 현재 재임하고 있다. 이회장은 최근 언론사에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왕길 회장을 만나 광복회에 참여하게된 특별한 가족사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안산시장에 출마하려는 이유에 대해 들었다. 지난 26일 상록구에 있는 광복회 사무실에서 이회장을 인터뷰했다.

만세운동하다 젊은 나이에 숨진 할아버지

이왕길 회장은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조상들은 서울 사람이 아니다. 이회장의 할아버지인 이종환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1919년 그의 나이 29세가 되던 해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앞장섰다. 단천군민과 천도교민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일본경찰이 있는 주재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나이 29세의 꽃다운 젊은이였다. 이회장의 할아버지 이종환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독립운동을 한 할아버지 때문에 그는 지금 광복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회장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처럼. 2007년도에 2대 지회장을 맡은 이후 현재 3대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숨진 아버지

이왕길 회장 집안은 강골집안이다. 할아버지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일본 경찰에 의해 사망했는데, 아버지는 야당인 신민당의 정치인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졌다. 역시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다. 1972년 유신시대가 시작될 무렵 유신 반대운동을 하던 이회장의 부친은 당시 수사기관에 잡혀간 후 며칠만에 사망했다. 당시 나이 59세.

"아버지 성격이 강골이었다. 유신헌법이 발표되지 마자 그것이 잘못됐다면서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한 것이다. 즉시 경찰에 잡혀갔고, 경찰에 잡혀간 지 3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이회장은 고등학생이었다. 이회장은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면서 부검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은 이회장 부친의 시신을 부검했다.

"아버지 시신을 부검하는데 경찰이 아들인 나도 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몸싸움을 벌여서 아버지의 시신 부검하는 장면을 보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이회장의 부친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돼서 현재 민주공원에 안장돼 있다. 그리고 이회장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안산에 정착

이왕길 회장은 서울 사람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다. 그러던 그가 안산에 정착하게 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안산시장의 요청으로 안산에 내려와서 정착하게 됐다. 2007년부터 안산시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아서 활동했다. 그가 활동할 당시 안산의 생활체육이 크게 성장했다. 경기도 생활축전에서도 전체 6위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회장은 안산에 내려올 당시에는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보는 안산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산이 좋다고 한다.

"다시 서울 가서 살라고 하면 가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안산에 내려오고 싶지 않았는데, 13년째 살다보니 안산이 너무 좋다. 교통도 편하고 바다도 가깝고, 사람들도 좋고, 이제는 안산을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할 것 같다."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이회장은 직·간접적으로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서 이회장에게 왜 안산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지를 물었다. 이회장은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래에 안산이라는 도시가 침체돼 있다. 인구가 줄고 있고, 도시는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안산은 중병이든 환자와 같다. 안산이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기존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로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 정치에 덜 물든 사람. 세상경험은 많지만 정치는 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안산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을 통해서 안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안산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힘들고 험한 길을 걸었던 나의 할아버지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서 도전하려 한다."

대부도를 그리스의 산토리니처럼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왕길 회장은 대부도를 그리스의 섬 산토리니처럼 해양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유명한 휴양지인 그리스의 산토리니처럼 대부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산토리니는 과거 우리가 엽서에서 많이 보아온 관광명소다. 하얀 골목, 파란 교회당, 빨간 담장… 마을 너머 작은 섬 위로 해가 지고 붉은 빛은 바다를 검게 물들인 뒤 하얀 마을 위에 내린다. 풍차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깨를 기댄 연인들의 모습이 있는 곳. 당나귀를 타는 사람들의 여유가 있는 곳이다.

대부도는 산토리니와 같은 섬으로 발전시킬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가깝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섬의 규모도 적당하고, 동양최대의 승마랜드가 있는 것도 장점이다. 산토리니에 당나귀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대부도에는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스토리의 전개도 가능하다. 대부도를 그리스의 섬 산토리니처럼 휴양도시로 발전시킬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회장은 좌우명을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진리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평소 가슴에 새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18
언론사	**주식회사 전북타임스신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 동원빌딩 5층 발행인 송민순
심의대상기사	전북타임스 2018년 3월 6일자 16면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에게 주목"」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김제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선언 내용을 전면에 걸쳐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 기 획 전북타임스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에게 주목"

오병헌 더불어민주당 자력공동체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제시장 출마 선언

김제에 무료도서관 개관 등 고향 향한 애정 남달라
'무보수 시장' 공약 내걸어… 투철한 봉사정신 강점
"수익 창출되는 특수작물 통해 연소득 사천만원 농업인 양성할 것"
복지진흥원 운영 등 실천하는 노인 공경… 인재양성에도 관심

무보수 시장 약속 당 등 공약업로

김제시 대한번군을 복지진흥원 원장으로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

〈전북타임스 2018년 3월 6일자 16면〉

보도 내용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에게 주목"

오병헌 더불어민주당 지역공동체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제시 대한반딧불 복지진흥원장)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김제시장 출마의사를 선언했다. 오병헌 부위원장은 2018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지역공동체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으며, 김제시를 위해 무엇을 더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준비된 김제시장 오병헌 후보

김제시장 출마와 관련, 오병헌 부위원장은 자신은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은 "김제시 벽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덕암학원과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산업대학원을 거치며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고 말했다.

현재는 "김제시 반딧불 복지진흥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36개 초등학교 뮤지컬 공연과 간식으로 모든 학교에 제빵을 전달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청소년의 지식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제시청 주변에 무료도서관을 개관했고 요촌동 반딧불 진흥원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병헌 쉼터가 마련돼 있다"며 "고향을 향한 저의 애정과 열정에 관심을 모아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보수 시장 약속 등 공약발표

오병헌 부위원장은 출마선언과 함께 지역발전 공약도 밝혔다.

김제 시민들은 "힘들어 못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을 찾자!"며 김제시를 떠나고 인구 급감으로 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해 텅텅 비어가는 건물이 우후죽순 생기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무보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또 "수익이 창출되는 특수작물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선정, 재배와 관리 수매, 유통까지 시가 직접 주관해 연소득 사천만 원 이상의 부유한 김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김제시민 자녀들이 내실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누구라도 고향에 돌아와 아기 울음소리 나는 김제시를 만드는 안락하고 행복한 터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역공동체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제시의 실정을 중앙당에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고, 깨끗한 오병헌 무보수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시 대한반딧불 복지진흥원 원장 오병헌

그는 현재 김제시 대한반딧불 복지진흥원 원장이다.

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 "오래 전부터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 도리라고 생각해 모교인 김제시 벽량초등학교와 덕암학원 연합동문회장을 맡아 인재양성에 매진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전문 요양원 등을 직접 운영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도 반딧불 교육복지 진흥원을 운영하면서 효의 실천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나는 김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제시가 직접 추진해야 할 행정적인 사항들이 더 많고 개인의 역량으로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김제시장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이에 자신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무보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2
언론사	**주식회사 미디어인(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 13길12 도남수선화상가 다동 407호 발행인 남우엽
심의대상기사	뉴스제주 2018년 3월 7일자 5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쟁력, 김우남 보단 문대림」, 7~8면 「문대림 예비후보 "제대로 제주 만들겠다"」 및 「문 예비후보 "3대 무상복지 반드시 실현"」 및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 성 논란에 일침」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제목 등에 특정 후보가 정당 내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언급하고, 뒤이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2개면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8조(여론조사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뉴스제주 정치 5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쟁력, 김우남 보단 문대림

신 영철 이전 상반평단 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적합도
실분대상에 경쟁입 의원 복지자 오차범위 실천 양상 보여

[뉴스제주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24.2%, 김우남 23.0%, 박희수 3.8%, 장기택 1.9%...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뉴스제주 2018년 3월 7일자 5면〉

뉴스제주
제 100 호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정치 7

문대림 예비후보 "제대로 제주 만들겠다"

원희룡 지사 향해선 "제주도정은 중앙 진출 위한 실험대상 아냐" 비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월 25일 "지난 4년 불통으로 관철된 원희룡 도정을 심판하고 제주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외쳤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엔 수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관덕정 앞 광장이 가득차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서 있자 기자회견 사회를 맡았던 박원철 제주도의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에서 광장 내로 내려와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의 서두는 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관덕정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 "제주 민초들이 뜨거운 몸짓으로 변혁을 꿈꿨던 곳이자 제주 역사가 격동할 때마다 민의가 응집했던 자리기에 이곳을 찾은 이유도 제주의 미래가 바람 앞에 서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과거 4년 전 이 자리에서 출마선언 하면서 협치와 소통을 자신있게 외쳤지만 소통 대신 불통이 판치고 있다"며 "원 도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중앙만을 바라본다는 말이 그래서 제주 정서와 거리가 먼 측근과 선거공신들로 도정 주요자리를 채운 것이냐"며 "이제 불통과 독주의 시작이었다"고 비난했다.

문 예비후보는 "특시 본인의 안위를 위해 제주도가 필요했던 건 아니냐. 중앙무대를 향한 발판이 아닌데서 제주도를 '여며나가' 외쳤던 건 아니냐"며 원 지사가 4년 전 관덕정에서 출마선언 때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지적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당시 5년 내에 경제규모를 2조 원대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 공약이었고, 청정과 공존을 외쳤지만 지하수는 오염됐고 중산간은 개발로 내몰렸다"며 "그 결과가 참담부 총합평가에서 받은 F학점로 2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새로로 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시작하면 제가 제주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촛불광장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었듯 이곳 관덕정에서 첫째도 도민, 둘째도 도민, 셋째도 도민, 도민이 먼저인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자신을 가리켜 "문재인을 아는 분"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점에 제가 있다"며 "야인 문재인을 지금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뛰어왔고, 대통령과 함께 마라톤을 했다"고 소개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온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주를 '지유, 자치, 청정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10가지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가 제시한 10가지 공약은 ▲동북아 인권선도 ▲감청주민 특별사면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공동체 회복 ▲연방제 수준으로 강화 ▲4.3 배보상 문제 완전 해결 ▲3대 무상복지(의료, 출산, 교복) 실현 ▲미래산업특구 조성 ▲분야별 환경총량제와 단계적 계획허가제 추진 ▲문화자치시대 개막 ▲2% 청년예산 할당 ▲마을공동체 혁신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도민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화하는데 대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단체 도지사 경선후보들에게 "우리는 한 팀이다. 끝까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체 경선에서 제가 이기면 후보님들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제가 지면 단선단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후보안 것처럼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출정식 마지막 말로 "친구이자 이웃이자 며슴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며 "제주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제주도를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문 예비후보 "3대 무상복지 반드시 실현"

75세 이상 어르신 의료, 여성 출산, 교복비 무상 지원 계획
분야별 환경총량제와 단계별 계획허가제에 대한 구상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월 25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가진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어르신과 출산여성, 학생들에 대한 '3대 무상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의 3대 무상복지 공약은 ▲75세 이상 어른을 위한 무상 의료 혜택 ▲출산 여성을 위한 비용 지원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 등이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기자단 측에선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읍내 버스비까지 5대 무상복지를 구상했지만 예산 문제로 3가지로 줄였다"며 "우선 무상의료에 대해선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약 3만명에게 125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약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주도다.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된 것이라며 "지금의 제주를 영글어 온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파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무상 출산과 교복에 대한 예산은 대략 300억 원 정도 된다"며 "무상 출산의 경우는 타 시도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이라 제주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교복비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3대 무상복지를 실현시

News Jeju

〈뉴스제주 2018년 3월 7일자 7면〉

8 정치
뉴스제주
제 100 호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키는데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해선 원희룡 지사가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손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예산이 80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자 노선은 공영이 운영하고, 흑자 노선을 민간에게 맡기면 250억 원 정도가 남는다. 이를 잘만해 실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 지키겠다는 원 지사, 왜 방치하나"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아난 자신이 내건 공약 중 '분야별 환경총량제'와 '단계별 계획허가제'에 대한 질의에도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환경총량제는 이미 원 도정에서 제시했는데, 아직 총량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 정책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분야별로 총량을 산출해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허가제에 대해선 토지정책을 용도관리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계획허가제는 이미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군부독재 동안 토지정책을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다보니 용도변경 과정에서 상당한 우발이익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그런 우발이익을 0에서 로비하게 되는 토지관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면 폐지할 순 없겠지만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계획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계획이 없는 곳엔 개발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엔 투명하게 도민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교통과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엔 대규모 개발을 당분간 중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긴 하다. 하나 국토부와 법제처에 확인해보니 법적 근거없이 추진된 것였다. 우선자로제에 대한 법적검토를 부과하지 못한 건 그 때문이라며 원희룡 도정이 너무 무책임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원 도정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내 8곳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에서 넘쳐 났어 전부 증설 사업하거가 났지만 아직도 단 한곳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과연 도지사가 반대한장에 없다나 있었고 설득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청정 자연의 오염을 방치하는 도지사가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한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문 예비후보는 "이번 정권에서 배상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제주에도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 이해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화해와 상생의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정부는 광주와 안산 지역에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제주에서도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추진했었으나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 성 논란에 '일침'

"꽃자왈도 아닌 1만평 부지에 5200평 개발, 도의회 동의절차 아냐"
"공무원법에 따른 감사직 사임일 뿐, 관광진흥기금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지방이전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일 오후 2시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 나섰다.

(주)유리의성에 대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정면 반박에 나서며 입을 열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월 25일 오후 2시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유리의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함부로 말로 차지 말라"며 의혹 제기를 엄추라고 충고했다.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성은 제 친구의 혼이 담겨 있는 터고 지금도 수십 명의 도민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라며 '(의혹제기가)제주의 정치수준을 퇴행적으로 만들려는 아주 나쁜 의도로 읽혀져 본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1만 평이라고 부풀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1만 평 조금 넘는 부지에 5200평을 개발한 것이어서 도의회 동의절차도 밟는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재산신고에 따른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매매 재산등록을 하면서 꼬박꼬박 신고를 해 왔고, 세금도 냈다"며 "절대로전지역 변경 동의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당시 MB정부와 각을 세울 때, 이것 때문에 검찰로부터 석 달이나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자신을 가리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엮으면서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정상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비판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감사직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감사직 사퇴한 걸 가지고 '뚝딱'하지 못하니까 사임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조조에 보면 지방의원 겸직 금지조항이 나온다. 의원은 해당 사안이 아니어서 겸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 내용을 정확히 신고했고, 보고했고, 세금도 냈다"며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겸직 금지대상에 포함돼 법대로 감사직을 사임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이 재산신고 절차에서 2억 원 가량이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의혹을 제기한)그 분은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명문대학 정치학과 출신이다. 지방자치법만 찾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단 1원의 관광진흥기금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마치 큰 죄인으로서 관광진흥기금이나 받아먹는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제가 아래대통에 함께 나서면서 제주정치 수준을 낮추고 싶지 않아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리의성 해당 부지가 '꽃자왈'이었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 일대는 채석장이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때의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일 꽃자왈이었다면 당시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한 마디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의혹 제기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예비후보는 "평소에 제주도민 주체의 향토자금으로 개발해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건 좋지 않다"며 "지금 당장 그만두길 엄숙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뉴스제주 2018년 3월 7일자 8면〉

보도 내용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쟁력, 접전 속 문대림 승

설 명절 이전 상반됐던 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적합도
설문대상에 강창일 의원 빠지자 오차범위 접전 양상 보여

[뉴스제주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24.2%, 김우남 23.0%, 박희수 3.8%, 강기탁 1.9%...

문대림 예비후보가 초접전 오차범위 내에서 김우남 예비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주는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3월 1일에서 2일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4%,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문대림 예비후보는 김우남 예비후보의 지지율인 23.0%보다 1.2%p 앞선 24.2%를 기록했다. 이어 박희수 예비후보는 3.8%, 강기탁 예비후보는 1.9%를 보였으며,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다는 대답은 10.3%였다.

당 내 후보 적합도 결과는 앞서 보도된 2번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제주도 내 언론 3사(제주의소리, KCTV제주방송, 제주일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문대림 예비후보가 30.5%, 김우남 예비후보는 17.6%의 적합도를 보였다. 지난 2월 10일 한국갤럽에 의뢰된 조사결과다.

반면 2일 뒤 2월 14일엔 또 다른 도내 언론 3사인 제주신보와 제주MBC, 제주CBS가 (주)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월 11일~12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김우남 예비후보가 25.5%, 문대림 예비후보는 22.6%로 나와 오히려 김우남 예비후보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여론조사 보도 시점이 불과 2일밖에 차이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건, 설문대상에 강창일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선 문대림이나 김우남 예비후보 외에 강창일 국회의원이 17.2%의 적합도를 보였다. 김우남 예비후보의 지지도를 강창일 의원이 가져간 셈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에 한국갤럽의 데이터는 코리아리서치의 데이터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뉴스제주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값은 코리아리서치의 데이터와 비교할 때 유의하다.

설 명절 이전에 실시된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선 김우남 예비후보가 문대림 예비후보보다 2.9%p 앞섰으나, 설 명절 이후엔 문대림 예비후보의 지지세가 반등하면서 김우남 예비후보를 1.2%p차로 앞질렀다.

이러한 문대림 예비후보의 추월은 원희룡 지사와의 대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원희룡 지사와의 4자 대결에서도 1.8%p차로 이겼다. 반면, 김우남 예비후보는 원희룡 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문대림 예비후보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보인다. 허나 오차범위 이내 초접전 양상이어서 실제 대결에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가 36.8%나 되기 때문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들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대결로 전개될 양상이다.

연령별 지지도를 보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40대에게서 30.1%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20대는 18.9%, 30대는 22.2%, 50대는 26.6%, 60대 이상은 21.9%다.

반면 김우남 예비후보는 50대에게서 30.7%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12.4%, 30대 23.7%, 40대 21.2%, 60대 이상은 25.0%다.

또한 전체 응답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503명 중 31.7%는 문대림을, 30.7%는 김우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문대림 예비후보가 김우남 예비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극 투표층은 보다 더 문대림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이번 선거에서 적극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738명)의 28.4%는 문대림 예비후보를 선택했고, 25.7%는 김우남 예비후보를 선택했다.

문대림 예비후보 "제대로 제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지난 4년 불통으로 판쳤던 원희룡 도정을 심판하고 제주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외쳤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관덕정 일대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엔 수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관덕정 앞 광장이 가득차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서 있

자 기자회견 사회를 맡았던 박원철 제주도의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에서 광장 내로 내려와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의 서두는 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관덕정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 "제주 민초들이 뜨거운 몸짓으로 변혁을 꿈꿨던 곳이자 제주 역사가 격동칠 때마다 민의가 응집했던 자리"라며 "이곳을 찾은 이유도 제주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과거 4년 전 이 자리에서 출마선언 하면서 협치와 소통을 자신있게 외쳤지만 소통 대신 불통이 판치고 있다"며 "원 도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중앙만을 바라본다는 말이 그래서 제주 정서와 거리가 먼 측근과 선거공신들로 도정 주요자리를 채운 것이냐"라며 "이게 불통과 독주의 시작이었다"고 비난했다.

문 예비후보는 "혹시 본인의 안위를 위해 제주도가 필요했던 건 아니냐, 중앙무대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서 제주도를 '어머니'라 외쳤던 건 아니냐"며 원 지사가 4년 전 관덕정에서 출마선언 때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지적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당시 5년 내에 경제규모를 25조 원대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 공약이었고, 청정과 공존을 외쳤지만 지하수는 오염됐고 중산간은 개발로 내몰렸다"며 "그 결과가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받은 거꾸로 2등"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제대로 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시작하면 제가 제주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촛불광장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었듯 이곳 관덕정에서 첫째도 도민, 둘째도 도민, 셋째도 도민, 도민이 먼저인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자신을 가리켜 "문재인을 여는 문"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점에 제가 있다"며 "야인 문재인을 지금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뛰어왔고,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소개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온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주를 '치유, 자치, 청정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10가지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가 제시한 10가지 공약은 ▲동북아 인권선도 ▲강정주민 특별사면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공동체 회복 ▲연방제 수준으로 강화 ▲4.3 배·보상 문제 완전 해결 ▲3대 무상복지(의료, 출산, 교복) 실현 ▲미래산업특구 조성 ▲분야별 환경총량제와 단계적 계획허가제 추진 ▲문화자치시대 개막 ▲1% 청년예산 할당 ▲마을공동체 혁신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도민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화하는데 대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후보들에게 "우리는 한 팀이다. 끝까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당내 경선에서)제가 이기면 후보님들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제가 지면 당선된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후보인 것처럼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출정식 마지막 말로 "친구이자 이웃이자 머슴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며 "제주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제주도를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문 예비후보 "3대 무상복지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가진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어르신과 출산여성, 학생들에 대한 '3대 무상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의 3대 무상복지 공약은 ▲75세 이상 어른을 위한 무상 의료 혜택 ▲출산 여성을 위한 비용 지원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 등이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기자단 측에선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원래 버스비까지 5대 무상복지를 구상했지만 예산 문제로 3가지로 줄였다"며 우선 무상의료에 대해선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4만 3000명에게 125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약 66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주도다.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된 것"이라며 "지금의 제주를 영글어 온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파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무상 출산과 교복에 대한 예산은 대략 200억 원 정도 된다"며 "무상 출산의 경우는 타 시도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이라 제주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교복비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3대 무상복지'를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해선 원희룡 지사가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손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예산이 850억 원 가량 소요된다.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자 노선은 공영이 운영하고, 흑자 노선을 민간에게 맡기면 250억 원 정도가 남는다. 이를 절약해 실현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정 지키겠다는 원 지사, 왜 방치하나"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이 내건 공약 중 '분야별 환경총량제'와 '단계별 계획허가제'에 대한 질의에도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환경총량제는 이미 원 도정에서 제시됐는데, 아직 총량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 정책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분야별로 총량을 산출해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허가제에 대해선 토지정책을 용도관리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계획허가제는 이미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군부독재 동안 토지정책을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다보니 용도변경 과정에서 상당한 우발이익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그런 우발이익을 쫓아서 로비하게 되는 토지관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면 폐지할 순 없겠지만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계획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계획이 없는 곳엔 개발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엔 투명하게 도민의 철저한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교통과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엔 대규모 개발을 당분간 중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긴 하다. 허나 국토부와 법제처에 확인해보니 법적 근거없이 추진된 거였다. 우선차로제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한 건 그 때문"이라며 원희룡 도정이 너무 무책임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원 도정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내 8곳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에서 낡아 있어 전부 증설 사업허가가 났지만 아직도 단 한군데서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과연 도지사가 반대현장에 얼마나 있었고 설득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청정 자연의 오염을 방치하는 도지사가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한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문 예비후보는 "이번 정권에서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제주에도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화해와 상생의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정부는 광주와 안산 지역에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제주에서도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추진했었으나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 성 논란에 '일침'

(주)유리의성에 대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정면 반박에 나서며 입을 열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2시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유리의 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며 의혹 제기를 멈추라고 충고했다.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 성은 제 친구의 혼이 담겨 있는 터고 지금도 수십 명의 도민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라며 "(의혹제기가) 제주의 정치수준을 퇴행적으로 만들려는 아주 나쁜 의도로 읽혀져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11만 평이라고 부풀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1만 평 조금 넘는 부지에 5200평을 개발한 것이어서 도의회 동의절차도 밟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재산신고에 따른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매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꼬박꼬박 신고를 해 왔고, 세금도 냈다"며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당시 MB정부와 각을 세울 때, 이것 때문에 검찰로부터 석 달이나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자신을 가리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엮으면서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비판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 성 감사직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감사직 사퇴한 걸 가지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임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원 겸직 금지조항이 나온다. 의원은 해당 사안이 아니어서 겸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 내용을 정확히 신고했고, 보고했고, 세금도 냈다”며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겸직 금지대상에 포함돼 법대로 감사직을 사임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이 재산신고 절차에서 2억 원 가량이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의혹을 제기한) 그 분은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명문대학 정치학과 출신이다. 지방자치법만 찾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단 1원의 관광진흥기금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의원 신분으로서 관광진흥기금이나 받아먹는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제가 아귀다툼에 함께 나서면서 제주정치 수준을 낮추고 싶지 않아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리의 성 해당 부지가 ‘곶자왈’이었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 일대는 채석장이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때의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일 곶자왈이었다면 당시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한 마디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의혹 제기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예비후보는 “평소엔 제주도민 주체의 향토자금으로 개발해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건 좋지 않다”며 “지금 당장 그만두길 엄숙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3
언론사	**주식회사 제주매일** 제주시 월광로 37 대표이사 황용진
심의대상기사	제주매일 2018년 3월 15일자 14면 「"다시, 마을 그리고 돌봄을 말하자"」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매일

2018년 03월 23일
14면 (오피니언)

‖ 아침광장 ‖

"다시, 마을 그리고 돌봄을 말하자"

이 선 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0년 전 읽었던 조한혜정 교수의 '다시, 마을이다'라는 책을 다시 읽는 중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아이들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이웃과 마을이 있었기에 간간이 행복했고, 따뜻한 말, 친밀한 감정, 신뢰의 눈길이 힘이 되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야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이 가슴을 쳤다.

최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시 삼도2동의 얘기다. 북초등학교 내에 있는 '김영수도서관'을 새로이 단장하면서 마을 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아이 돌봄 문화공간을 마련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또 얼마 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관으로 제주형 돌봄공동체인 수눌음 육아에 대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마을단위의 돌봄시스템을 정착시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원도심 재생 노력 불구 희망 불투명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다시 마을과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세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한때 허름한 옷, 거친 피부, 촌스러운 말투가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서울말을 배워야만 교양인이 되는 듯 했고, 잡지에 유행인 새 옷을 사는데 열중했다.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떠나 고층의 아파트로 이사하고 유행하는 가구를 들이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다. 경제 침체 · 청년 실업 · 양극화는 심해졌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연애 · 결혼 ·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가 등장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졌다.

도시를 상징하는 아파트로 인해 골목과 마당이 없어지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마저 사라졌다.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보다는 경쟁과 비교만이 남았다. 더 이상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야 말았다.

원도심은 더욱 심각하다. 과거의 명성만 남겨진 원도심이 급작스럽게 도시재생을 한다며, 원도심의 옛 것에 가치가 있다며, 과거 어르신들의 남루한 삶의 증거들이 남겨진 오래된 골목을 걷는 원도심 투어를 한다고 난리법석이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의 대상과 재료, 문화관광의 아이템이 되어갔지만 정작 골목의 주인들인 원도심 주민은 동네의 꿈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희망은 불투명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사는 문명은 예부터 이어져왔던 것이다. 조한혜정 교수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력하고 소통하며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되고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중심의 시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사회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이제라도 사라지고 있는 돌봄과 소통의 영역을 마을에서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돌봄의

'돌봄과 소통' 마을에서 다시 찾아야

복원을 원도심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을에서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면서 동네가게도 차려보고 마을기업도 만들면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정책의 진정한 본질일 것이다.

주민들이 매일 모여 마을 일을 토론하고, 마을 축제와 잔치를 함께 기획하며 즐거워하고, 마을 역사와 소식을 기록하느라 주민 누구나가 기자나 글쟁이가 되고,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노래하며 서로 위안과 행복을 나누는 마을을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마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사회의 원천이다.

(24.0×15.5)cm

〈제주매일 2018년 3월 23일자 14면〉

보도 내용

"다시, 마을 그리고 돌봄을 말하자"

10년 전 읽었던 조한혜정 교수의 '다시, 마을이다'라는 책을 다시 읽는 중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아이들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이웃과 마을이 있었기에 간간이 행복했고, 따뜻한 말, 친밀한 감정, 신뢰의 눈길이 힘이 되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야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이 가슴을 쳤다.

최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시 삼도2동의 얘기다. 북초등학교 내에 있는 '김영수도서관'을 새로이 단장하면서 마을 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아이 돌봄 문화공간을 마련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또 얼마 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관으로 제주형 돌봄공동체인 수눌음 육아에 대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마을단위의 돌봄시스템을 정착시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다시 마을과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세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한때 허름한 옷, 거친 피부, 촌스러운 말투가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서울말을 배워야만 교양인이 되는 듯 했고, 잡지에 유행인 새 옷을 사는데 열중했다.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떠나 고층의 아파트로 이사하고 유행하는 가구를 들이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다. 경제 침체·청년 실업·양극화는 심해졌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가 등장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졌다.

도시를 상징하는 아파트로 인해 골목과 마당이 없어지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마저 사라졌다.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보다는 경쟁과 비교만이 남았다. 더 이상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야 말았다.

원도심은 더욱 심각하다. 과거의 명성만 남겨진 원도심이 급작스럽게 도시재생을 한다며, 원도심의 옛것에 가치가 있다며, 과거 어르신들의 남루한 삶의 증거들이 남겨진 오래된 골목을 걷는 원도심 투어를 한다고 난리법석이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의 대상과 재료, 문화관광의 아이템이 되어갔지만 정작 골목의 주인들인 원도심 주민은 동네의 꿈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희망은 불투명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사는 문명은 예부터 이어져왔던 것이다. 조한혜정 교수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력하고 소통하며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되고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중심의 시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사회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이제라도 사라지고 있는 돌봄과 소통의 영역을 마을에서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돌봄의 복원을 원도심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을에서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면서 동네가게도 차려보고 마을기업도 만들면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정책의 진정한 본질일 것이다.

주민들이 매일 모여 마을 일을 토론하고, 마을 축제와 잔치를 함께 기획하며 즐거워하고, 마을 역사와 소식을 기록하느라 주민 누구나가 기자나 글쟁이가 되고,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노래하며 서로 위안과 행복을 나누는 마을을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마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사회의 원천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4
언론사	**주식회사 홍성신문**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26 대표이사 윤두영
심의대상기사	홍성신문 2018년 3월 19일자(제1591호) 21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 및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냉정히 평가해야」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홍성군기초의원 비례후보 출마예정자 및 홍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홍성신문

2018년 03월 19일 21면 (오피니언)

괴물들이 사는 나라

최루미
홍성군기초의원비례출마예정자
더불어민주당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심한 장난과 말썽을 부린 아이가 방에 갇히며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연일 터지는 성폭력 사건을 접하며, 진정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차에 이 그림책이 생각났다.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충남도민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 그리고 나는 배신과 무기력감을 느꼈다. 요즘 #Me Too로 이어진 고발을 보면, 대부분이 갑과 을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이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돈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윗사람, 아랫사람이란 수직적 인간관계와 권력(權力,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의 남용은 우리 사회를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팽배한 실망감은 이번 6·13 지방선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그래서 난 정치 관심도 없고, 투표도 안 해.'... 하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주인인 국민이 한눈을 팔거나, 놓치면 중심을 잃고 다른 길로 접어들기 십상이다. 결국 국민이 깨어있을 때만 대리인은 제 몫의 일을 할 수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금의 일들을 교훈삼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부름을 잘 수행할 견손하고 정의로운 대리인을 선출하고 감시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정치가·철학자·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였다.

신영복선생님의 '처음처럼'이란 구절이 떠오르는 요즘, 초심을 갖기는 쉬워도, 초심을 잃지 않기는 어려운 법. 선거이후에도 대리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인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한 때이다.

〈홍성신문 2018년 3월 19일자 21면〉

보도 내용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심한 장난과 말썽을 부린 아이가 방에 갇히며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연일 터지는 성폭력 사건을 접하며, 진정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 그림책이 생각났다.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충남도민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 그리고 나는 배신과 무기력감을 느꼈다. 요즘 #Me Too로 이어진 고발을 보면, 대부분이 갑과 을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이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돈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윗사람, 아랫사람이란 수직적 인간관계와 권력(權力,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의 남용은 우리 사회를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팽배한 실망감은 이번 6·13지방선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그래서 난 정치 관심도 없고, 투표도 안 해.'… 하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주인인 국민이 한눈을 팔거나, 놓치면 중심을 잃고 다른 길로 접어들기 십상이다. 결국 국민이 깨어있을 때만 대리인은 제 몫의 일을 할 수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금의 일들을 교훈삼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부름을 잘 수행할 겸손하고 정의로운 대리인을 선출하고 감시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정치가·철학자·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였다.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란 구절이 떠오르는 요즘, 초심을 갖기는 쉬워도, 초심을 잃지 않기는 어려운 법. 선거이후에도 대리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인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한 때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0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일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 6 발행인 신항철
심의대상기사	경기일보 2018년 3월 27일자 23면 「경기도 4.0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일보

2018년 03월 27일
23면 (오피니언)

경기도 4.0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경기시론

양 근 서
경기도의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보다 더욱 궁금한 것은 이후의 변화상이다. 변화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이 이뤄질 것인가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여느 때와 달리 중요한 이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흐름이 경제 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행정에서는 정부 4.0이라는 새로운 정책 비전의 등장이다. 지능, 혁신, 소통, 통합이 4.0 시대의 키워드라면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기도 4.0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여야 한다. 우선 적용할 분야는 지방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이다. 채무제로를 자랑하는 지방정부의 재정균형정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때가 왔다. 이미 미국의 대통령후보였던 샌더스 등이 매료됐던 현대화폐이론(MMT)은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에 보다 적극적인 화폐 발행과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 광풍을 한바탕 치른지라 현대의 화폐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1971년 달러화 가치를 금과 연계하는 것을 포기하는 브랜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이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마음대로 통화를 창조하고 있다. 기분 내키는대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종이돈도 모자라 지금은 숫자로 된 디지털 화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화폐 발행주체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신용의 크기와 지속성만 다를뿐이지 개인은 물론 기업과 단체, 지방정부, 국가 등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다. 강원도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통화정책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역화폐로 강원사랑 상품권 830억원을 발행하여 이 가운데 530억 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도 자원봉사나 기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 수준의 인구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 경기도가 신용을 보증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더욱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정부담은 거의 없으면서 경기도 지방정부의 신용으로 수천억 원의 지역화폐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경제에서 순환된다고 생각해보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대자본 중심의 미국식 소비 및 유통구조를 소규모 자영업자 중심의 유럽식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부정부패 방지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언젠가 미국이 아프리카에 1인당 3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인 컨설턴트 몫, 각종 중간 수수료, 활동비, 행정비용 빼고 현지 도달 원조금액은 1인당 6센트에 불과했다. 부정부패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정은 이렇게 새 나간다. 이를 잡으려면 모든 재정지원에 따른 지출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정산하고 검증하면 예산 낭비 사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도 혁신할 수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는 기존의 온라인 투표 앱 '액티브 시티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것으로 여론조사는 물론 도시내 차량속도 제한, 버스노선 계획, 자전거도로 신설 여부 비정치적 사안을 결정한다. 문제는 블록체인의 원리가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인 분권을 담을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이다. 차기 경기도지사로 블록체인 거버넌스형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19.4×15.9)cm²

〈경기일보 2018년 3월 27일자 23면〉

보도 내용

[경기시론]
경기도 4.0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보다 더욱 궁금한 것은 이후의 변화상이다. 변화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이 이뤄질 것인가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여느 때와 달리 중요한 이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흐름이 경제 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행정에서는 정부 4.0이라는 새로운 정책 비전의 등장이다. 지능, 혁신, 소통, 통합이 4.0 시대의 키워드라면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기도 4.0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여야 한다. 우선 적용할 분야는 지방정부의 재정 및 동화정책이다. 채무제로를 자랑하는 지방정부의 재정균형정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때가 왔다. 이미 미국의 대통령후보였던 샌더스 등이 매료됐던 현대화폐이론(MMT)은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에 보다 적극적인 화폐 발행과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 광풍을 한바탕 치른 지라 현대의 화폐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1971년 달러화 가치를 금과 연계하는 것을 포기하는 브랜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이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마음대로 통화를 창조하고 있다. 기분 내키는대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종이돈도 모자라 지금은 숫자로 된 디지털 화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화폐 발행주체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신용의 크기와 지속성만 다를뿐이지 개인은 물론 기업과 단체, 지방정부, 국가 등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다. 강원도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통화정책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역화폐로 강원사랑 상품권 830억 원을 발행하여 이 가운데 530억 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도 자원봉사나 기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 수준의 연구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 경기도가 신용을 보증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더욱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정부담은 거의 없으면서 경기도 지방정부의 신용으로 수천억 원의 지역화폐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경제에서 순환된다고 생각해보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대자본 중심의 미국식 소비 및 유통구조를 소규모 자영업자 중심의 유럽식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부정부패 방지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언젠가 미국이 아프리카에 1인당 3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인 컨설턴트 몫, 각종 중간 수수료, 활동비, 행정비용 빼고 현지 도달 원조금액은 1인당 6센트에 불과했다. 부정부패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정은 이렇게

새 나간다. 이를 잡으려면 모든 재정지원에 따른 지출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정산하고 검증하면 예산 낭비 사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도 혁신할 수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는 기존의 온라인 투표앱 '액티브 시티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것으로 여론조사는 물론 도시내 차량속도 제한, 버스노선 계획, 자전거도로 신설 여부 비정치적 사안을 결정한다. 문제는 블록체인의 원리가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인 분권을 담을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이다. 차기 경기도지사로 블록체인 거버넌스형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2
언론사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대표이사 변재운
심의대상기사	국민일보 2018년 3월 27일자 26면 「미세먼지 대책 패러다임 바꿔야」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민일보

2018년 03월 27일
26면 (오피니언)

기고

미세먼지 대책 패러다임 바꿔야

최조웅
서울시의원

올해 초 시민들을 괴롭혔던 미세먼지 문제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어제 오늘 또다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람이 불거나 비라도 오면 오염물질이 희석되거나 씻겨내려가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대책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대책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대책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유발에 있어 교통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동안 서울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시내버스가 내뿜는 매연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와이셔츠를 하루만 입어도 목 부분이 시커멓게 되는 것 또한 일상이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정책에 한계가 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내놓았고,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무료 지원을 시행한 바 있으나 곧바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것은 하루 50억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결국 두 달도 안 돼 이 정책을 폐기하고 지난달 27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칙을 주고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필자는 이것보다는 민간 소유의 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하기 위한 권한을 서울시가 확보하는 게 더욱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나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정도다.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 분야에 중점을 둔 대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 서울시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10.1×34.4)cm

〈국민일보 2018년 3월 27일자 26면〉

보도 내용

미세먼지 대책 패러다임 바꿔야

올해 초 시민들을 괴롭혔던 미세먼지 문제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어제 오늘 또다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람이 불거나 비라도 오면 오염물질이 희석되거나 씻겨내려가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대책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대책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대책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유발에 있어 교통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동안 서울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시내버스가 내뿜는 매연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와이셔츠를 하루만 입어도 목 부분이 시커멓게 되는 것 또한 일상이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정책에 한계가 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내놓았고,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무료 지원을 시행한 바 있으나 곧바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것은 하루 50억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결국 두 달도 안 돼 이 정책을 폐기하고 지난달 27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

자에게 벌칙을 주고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필자는 이것보다는 민간 소유의 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하기 위한 권한을 서울시가 확보하는 게 더욱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나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정도다.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 분야에 중점을 둔 대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 서울시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3
언론사	**주식회사 전남일보**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사장 이재욱
심의대상기사	전남일보 2018년 3월 28일자 19면 「지방분권개헌 국회가 답할 차례」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2018지선-재심2** (원결정 2018지선-자심33)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전남일보**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사장 이재욱
재심청구대상기사	전남일보 2018년 3월 28일자 19면 「지방분권개헌 국회가 답할 차례」 제하의 기고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주의 결정(2018지선-자심33)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라남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은 해당 기고문 게재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기고문 게재 가능 기간에 대해 문의한 결과 선거일전 60일전까지는 게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게재한 것이므로 주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호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기고문 게재를 명백히 금하고 있으며, 재심청구인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全南日報

2018년 03월 28일
19면 (오피니언)

지방분권개헌 국회가 답할 차례

의정 단상

강성휘
전남도의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환영, 제1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똑같이 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딴 이야기를 한다. 야당도 책임있는 국민의 정당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부터 하고 보는 태도는 고쳤으면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요한 조문이 포함되었다. 제1조 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중앙집권국가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수도권에만 인구의 절반이 산다. 권력도, 일자리도 다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거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1등 국민이고, 나머지는 2등 국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정부들도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만들어 정책을 펼쳐 왔지만 신통치 않았다. 1949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는 지방자치법이 있지만 지방분권, 즉 지방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법률적 근거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는 총론적인 방향이 지방분권국가인데 개헌안에서 향후 국가운영의 방향을 지방분권국가 지향으로 분명히 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방분권국가 설정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그냥 '정부'라고 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불러 은연중에 지방을 중앙보다 급이 낮은 하부단위로 격하하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일개 단체에 불과한 것처럼 부르던 것을 바로 잡아 '지방정부'로 바꾸로, 집행부라 부르는 것은 '지방행정부'로 바꿔 제출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사법,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일을 하는데도 일개 단체 취급을 해 온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관행을 극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분권 내용에서는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자주조직권을 확대한 점,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은 주민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도록 명시해 자치행정권을 강화한 점,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한 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목, 세율, 징부방법 등을 지방이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범위가 기존 "법령의 범위에서" 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시행령을 통한 지방통제 부분이 빠진 점은 좋으나 결국 법률로서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할 수 있고,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반 자치세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점은 자치권의 제약이 온존될 소지가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개헌안에 특이한 점은 법률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제가 개헌안에 반영된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보다 강화하는 점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법률과 제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이 문제다. 개헌과 함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에 주민의 참여가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개별적인 법률과 제도가 함께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대통령이 국회 숀방을 하면서 개헌안을 제출할 것에 대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연장 음모라며 4년 연임제를 비판한다. 일을 하려면 방법을 찾고, 일을 안 하려면 구실을 찾는다. 정부를 비방하려는 구실을 찾는 모양이다. 그러나 용색하다. 개헌안 내용 중에 합의되는 것은 논란을 삼지 말고, 권력구조, 선거구제, 총리추천제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협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1948년 7월 제헌헌법 이후 70년 만에 손을 본다. 개헌안이 정쟁과 갈등을 넘어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을 담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7*15.1)cm²

〈전남일보 2018년 3월 28일자 19면〉

보도 내용

지방분권개헌 국회가 답할 차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환영, 제1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똑같이 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딴 이야기를 한다. 야당도 책임있는 국민의 정당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부터 하고 보는 태도는 고쳤으면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요한 조문이 포함되었다. 제1조 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중앙집권국가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수도권에만 인구의 절반이 산다. 권력도, 일자리도 다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거기에 사는 것

만으로도 1등 국민이고, 나머지는 2등 국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정부들도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만들어 정책을 펼쳐 왔지만 신통치 않았다. 1949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는 지방자치법이 있지만 지방분권, 즉 지방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법률적 근거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는 총론적인 방향이 지방분권국가인데 개헌안에서 향후 국가운영의 방향을 지방분권국가 지향으로 분명히 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방분권국가 설정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그냥 '정부'라고 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불러 은연중에 지방을 중앙보다 급이 낮은 하부단위로 격하하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일개 단체에 불과한 것처럼 부르던 것을 바로 잡아 '지방정부'로 바꾸로, 집행부라 부르는 것은 '지방행정부'로 바꿔 제출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사법,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일을 하는데도 일개 단체 취급을 해 온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관행을 극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분권 내용에서는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자주조직권을 확대한 점,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은 주민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도록 명시해 자치행정권을 강화한 점,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한 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목, 세율, 징부방법 등을 지방이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범위가 기존 "법령의 범위에서" 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시행령을 통한 지방통제 부분이 빠진 점은 좋으나 결국 법률로서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할 수 있고,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치세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점은 자치권의 제약이 온존될 소지가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개헌안에 특이한 점은 법률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제가 개헌안에 반영된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보다 강화하는 점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법률과 제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이 문제다. 개헌과 함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에 주민의 참여가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개별적인 법률과 제도가 함께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대통령이 국외 순방을 하면서 개헌안을 제출할 것에 대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연장 음모라며 4년 연임제를 비판한다. 일을 하려면 방법을 찾고, 일을 안하려면 구실을 찾는다. 정부를 비방하려는 구실을 찾는 모양이다. 그러나 옹색하다. 개헌안 내용 중에 합의되는 것은 논란을 삼지 말고, 권력구조, 선거구제, 총리추천제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협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1948년 7월 제헌헌법 이후 70년 만에 손을 본다. 개헌안이 정쟁과 갈등을 넘어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을 담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6
언론사	**주식회사 경상매일신문사**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85 발행인 배달원
심의대상기사	경상매일 2018년 4월 3일자 18면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치 실천 목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북 포항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만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상매일신문

[인터뷰] 박해자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치 실천 목표"

영일대해수욕장·환호공원, 포항 랜드마크로 조성…多 시정정책 개발 등 적극 참여 계획

〈경상매일신문 2018년 4월 3일자 18면〉

보도 내용

[인터뷰] 박해자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치 실천 목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포항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박해자 예비후보(두호·환여)의 출마의 변과 시의원에 당선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Q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나?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희망하거나 신청한 후보들이 연일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그 동안 펼쳐온 소통, 배려, 봉사 활동을 알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는 국내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급속히 전환되는 상황인 만큼 국내 정치에 닥쳐오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우리 지역의 정치 환경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포항은 특히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진보성향의 정권 시절에도 보수의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보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통계의 딜레마를 경험해 온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보수 프레임만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변화의 바람이 민심 속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조심스런 변화의 바탕에는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의식을 하향 평균화시켰고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의 부도덕성에 한몫 했다는 뼈아픈 자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유권자는 주민이 공감하며 소통하고 싶고 전문성, 투명성, 추진력을 갖추고 봉사의식으로 자신들을 대변하는 후보를 필요로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진입이 매우 힘들고 장벽이 높은 척박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현실의 바탕에는 성역할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해 활용하는 네트워크쉽에서 남성에 비해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 라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체득한 소통력과 리더쉽, 학업을 통해 얻은 전문성, 직업인으로서 익힌 조직 장악

력,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다져진 탁월한 업무추진력 등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여성정치신인이다.

박 후보는 포항에서 태어나 유서 깊은 영흥초교를 다니고 죽도시장에서 생업을 했던 부모님의 삶을 보고 서민들의 애환을 몸소 느끼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청소년 시절에는 포항여중 학생회장과 포항여고 학도호국단 연대장(현 학생회장)을 맡아 리더쉽을 길렀다. 또 RCY(적십자) 봉사활동은 장래 봉사의 길로 나서도록 인격의 틀을 갖추는 기회가 됐다.

이후 서울에 상경해 숙명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의 경영학 전공이란 가업을 잇거나 유학 등 특별한 지위를 갖추기 위한 계획이 없다면 가정에서 허락을 잘 하지 않은 분야였다.

열린 사고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셨던 부모님의 배려로 학업을 마치고 직장인들의 로망이었던 국민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다. 직장 생활에서 조직과 인력관리 업무를 맡아서 경영자 수업을 차근차근 밟으며 미래에 기업, 조직, 단체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꾸어 나갔다.

이후 혼기가 된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동향의 좋은 배필을 만나 새로운 인생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포항지역사회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배용재 변호사이다.

그는 고향인 포항에서 초, 중, 고교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된 이후 지방검찰청 지청장까지 승진했다. 재직 중에도 그는 지역민들의 사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많이 한 이력으로 지역사회에 정평이 나 있다.

Q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한 계기는?

박해자 후보는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지금의 정치활동 기반을 다지기라도 하듯이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여성학을 전공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인권, 여성복지, 가정법률, 사회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지식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았다.

이후 이러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외에도 남편이 운영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가사소송을 전담하면서 법률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봉사자'의 소명을 자각하게 됐으며 일하는 여성의 대변자로서 헌신하며, 공정사회, 양성평등, 시민행복 등의 가치를 높이고 확산하는데 적극 앞장서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합류하게 됐다.

이후 200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포항지부가 결성되자 부소장으로 운영을 맡아 오다 2010년에는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가사, 민사, 형사 사건 등 전반의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송, 생활법률 교육 등을 무료로 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시대를 맞아 융화가 절대적 가치인 가정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가족법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대안활동을 계속 해 왔다. 박 후보는 그동안 대

한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송이 필요한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무료 변호사 선임도 앞장 서서 주선해오고 있다.

사회활동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공정사회 실현 등을 선도하는 단체인 (사)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포항지부 17대 회장에 취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권리가 균등해지고,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대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 '포항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가정생활을 건전하게 영위하며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Q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저는 75년 전통의 포항여고에서 40년 전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한 여고생의 소박한 책임감과 초심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동문들의 단합과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념으로 지난 2006년부터 14년 동안 동창회 부회장으로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역량 있고 꿈 있는 어린 후배들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골고루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선거구인 두호, 환호지역은 주로 바닷가를 끼고 생업을 하는 자영업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이에 착안해 포항시의원에 당선되면 영일대해수욕장, 환호해맞이공원 주변의 횟집, 카페 등 포항지역에서 가장 활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가진 특성을 활용해 이를 활성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서비스와 4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의 소유주로서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돼 푸르미봉사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조합 회원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며 소통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산림인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관련 솔루션 회의, 지역치안협의체 운영 주체인 보안협력위원 활동, 경미범죄 심사 등 치안협의 구축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운영해온 상담소에서 바우처를 이용해 저소득아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문성을 발휘하며 사회적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꼼꼼함을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한 시정정책의 개발 및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존'을 조성해 생동감 있고 생산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Q 시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마지막으로 포항시의원으로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유해온 각종 자격증이 말해주듯이 제가 가진 전문성이야말로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시켜 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도구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사, 한국이고그램 전문강사,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치매예방관리사, 미술심리 및 상담, 노인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정파괴, 사회심리 격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저의 전문성을 활용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봉사, 복지행정의 확대, 여성 장애우 등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맞춤형 복지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봉사기관의 활동 확대를 통해 행정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더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선순환적 구조의 정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는 등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더욱 실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8
언론사	**종합일보 주식회사(경인종합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19번길 46-5 명진빌딩 1층 발행인 신현각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8년 4월 16일자 3면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양주시장에 재출마 예정인 현 시장의 성과를 부각하는 특집 기획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인종합일보

신 성장, 새 지평, 스마트(SMART-Hub) 양주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이성호 양주시장

양주시가 기존의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한다.

시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옥정신도시 입주를 통한 인구증가와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구간 연장, GTX-C노선 연장 검토, 구간-포천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 등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 로드맵인 「양주시 202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 성장, 새 지평, 스마트(SMART-Hub) 양주

양주시는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선진적인 역할과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황 진단, 시민 의견조사, 대내외 전망과 시사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양주시 2025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대외적 비전으로 '신 성장, 새 지평, 스마트(S.M.A.R.T -Hub)' 양주'를 제시했다.

또, 양주시를 크게 5개 동부 2, 서부, 남부, 북부의 생활권역으로 분리해 각 생활권역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하나로 담아내는 등 동·서지역간, 도시지역-비도시지역간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모색했다.

특히, 도시공간구조상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공존의 도시(Harmony in Diversity)"로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혁신하는 체계를 구축, 새로운 지평을 여는 5개 목표를 수립했다.

◆ 목표1 Sustainable-Hub :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허브도시
◆ 목표2 Major-Hub : 대규모 주거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을 창출하는 거점허브도시
◆ 목표3 Art-Hub :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향유를 창출하는 예술허브도시
◆ 목표4 Relexable-Hub : 맹폼 도시 조성을 통해 여유와 여가를 창출하는 복지허브도시
◆ 목표5 Techno-Hub :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허브도시

생태휴양도시 권역(sustainable) : 북부생활권

은현면, 남면 지역이 속하는 북부생활권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해 있고 구암, 남면, 상수, 검준, 도하 등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신흥 주변 농촌체험마을과 감악산, 효촌지수지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기존 산업의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와 혁신, 산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체험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원관광 조성 등 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북측한 고속도로망으로 인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도와 지방도 등 간선도로를 통한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과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고 현재 왕복 2차로 이하로 되어있는 지방도의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해물질 사업장 관리, 악취에 따른 시민 피해 해소를 위해 축사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현대화 시설사업과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악취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또나 공사지침 등 생태계 단절지점에 대한 자원가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생태축 복원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공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평생 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도시 권역(Art-Hub) : 남부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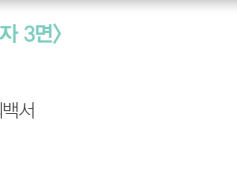
장흥면이 속하는 남부생활권은 송추·일영유원지, 북한산국립공원, 농촌체험마을 등 풍부한 자연관광자원과 함께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등 경기북부 예술문화관광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주시는 문화-자연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연결수단과 브랜드화를 통해 장흥면을 수도권 대표 일일관광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순환형 철도망을 구축(교외선 재개통)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에 하나인 양주-동두천 -연천 간 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더 파스트 장흥 인터내셔널 문화허브 조성사업을 통해 양주시(장흥)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문화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예술가를 발굴·양성하는 등 문화예술-교육-문화산업-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예술가 직각 발굴과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곧고 싶은 예술 길 조성을 통한 관광객의 도보 편리성을 향상으로 도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전원형복합도시 권역(Relaxable-Hub) : 서부생활권

백석읍과 광적면이 속하는 서부생활권은 광석지구, 백석신도시 등 도시지역과 함께 자연농촌경관의 비도시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중저밀도의 전원형 공간과 함께 복지, 교육, 체육문화, 관광 등 복합적 기능이 어우러진 경기북부 대표 전원형복합도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장기 방치된 광석 택지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에서 정지구에 대한 유휴부지의 단기적 활용방안과 낙후 주변지역 활성화 정비 방안을 동시에 수립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과 국지도 39호선(가납-상수, 장흥-광적)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당에 대한 특별중심의 인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생활체육공원 일대에 학생종합인천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산면 일대에 음식거리와 수변테크를 조성하는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활력 넘치는 체험 및 휴양공간으로 장비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성장중심 권역(Major-Hub) : 동부생활권 1

회천동에 속하는 동부생활권은 란교신도시의 1.2배, 위례신도시의 1.7배에 달하는 옥정·회천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인프라와 함께 도심기능을 강화해 인구유입을 창출하는 신성장 중심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연내 착공과 함께 옥정지구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포천) 조기 건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신도시 접근성을 향상하는 한편 구도심 빈집개점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익시설 확충, 노후 산업단지 외 쇠퇴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센터(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IP 비상벨 등의 ICT 기술을 반영하는 등 방범, 교통, 재난관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양주시의 역사문화도시로의 위상 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등 역사문화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룬 양주 천만송이 한일홈 축제와 회암사지 왕실축제,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의 성공적인 계최를 바탕으로 양주의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 전통, 배경 등 차별화된 콘텐츠의 개발과 강화 등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 브랜드로 승화 시킬 수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신성장중심 권역(Techno-Hub) : 동부생활권 2

양주동이 속하는 동부생활권역은 양주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존산업과 4차산업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양주시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경기북부의 행정적, 경제적 중심인 양주시는 지난해 유치한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제조업과 IT가 융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해 인공지능, 3D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북부지역 신성장산업의 거점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기북부 제조업 혁신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경기북부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을 추진해 경기북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섬유산업을 디지털 업체과 웨어러블 섬유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지식 산업화하기 위해 인근 시군과 함께 섬유패션 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친환제조업을 스마트제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제품 혁신지원센터 건립과 기존 특화산업과 디지털, IT와 융합·연계한 청년혁신창업을 지원할 양주 디지털콘텐츠, 사업 디자인·기획 창업을 지원하는 DDB(Design to Business) 공유경제 플랫폼을 설치·운영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인접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조성하고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주시는..

남북교류, 국방개혁 등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수용할 계획적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양주시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부-서부-북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환상형 가로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새로움하기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별 복지관 건립,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을 통해 여성·아동·장애인·노인을 아우르는 가족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건강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복력 있는 건강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주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일반고 우수교원 확충과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참여체심시, 교육공동체 캠페폰 구축, 평생학습도시 정체성 확립과 근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지정·확충 등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본주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성호 양주시장은 "오는 2025년 인구 40만명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장기 발전전략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제시된 과제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주시민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양주, 삶고 싶은 양주, 품격도시 양주를 조성해 최고의 감동도시로서 변모를 걸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선 기자/jonghapnews.com

〈경인종합일보 2018년 4월 16일자 3면〉

보도 내용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양주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한다.

시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옥정신도시 입주를 통한 인구증가와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연장, GTX-C노선 연장 검토,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 등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 로드맵인 「양주시 202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 성장, 새 지평, 스마트(S.M.A.R.T-Hub) 양주

양주시는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선진적인 역할과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황 진단, 시민 의견조사, 대내외 전망과 시사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양주시 2025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대외적 비전으로 '신 성장, 새 지평, 스마트(S.M.A.R.T-Hub) 양주'를 제시했다.

또, 양주시를 크게 5개(동부 2, 서부, 남부, 북부)의 생활권역으로 분리해 각 생활권역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하나로 담아내는 등 동·서지역간, 도시지역·비도시지역간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모색했다.

특히, 도시공간구조상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공존의 도시(Harmony in Diversity)'로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혁신하는 체계를 구축, 새로운 지평을 여는 5개 목표를 수립했다.

생태휴양도시 권역(sustainable) : 북부생활권

은현면, 남면 지역이 속하는 북부생활권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해 있고 구암, 남면, 상수, 검준, 도하 등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신천 주변 농촌체험마을과 감악산, 효촌저수지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기존 산업의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와 혁신, 산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체험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원관광 조성 등 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부족한 고속도로망으로 인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도와 지방도 등 간선도로를 통한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과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

고 현재 왕복 2차로 이하로 되어있는 지방도의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해물질 사업장 관리, 악취에 따른 시민 피해 해소를 위해 축사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현대화 시설사업과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악취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로나 공사지점 등 생태계 단절지점에 대한 자원가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생태축 복원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평생 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도시 권역(Art-Hub) : 남부생활권

장흥면이 속하는 남부생활권은 송추·일영유원지, 북한산국립공원, 농촌체험마을 등 풍부한 자연관광자원과 함께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등 경기북부 예술문화관광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주시는 문화·자연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연결수단과 브랜드화를 통해 장흥면을 수도권 대표 일일관광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순환형 철도망을 구축(교외선 재개통)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의 하나인 양주~동두천~연천 간 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더 퍼스트 장흥 인터내셔널 문화허브 조성사업을 통해 양주시(장흥)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문화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예술가를 발굴·양성하는 등 문화예술·교육·문화산업·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예술가 적극 발굴과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걷고 싶은 예술 길 조성을 통한 관광객의 도보 편리성을 향상으로 도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전원형복합도시 권역(Relaxable-Hub) : 서부생활권

백석읍과 광적면이 속하는 서부생활권은 광석지구, 백석신도시 등 도시지역과 함께 자연·농촌경관의 비도시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중저밀도의 전원형 공간과 함께 복지, 교육, 체육문화, 관광 등 복합적 기능이 어우러진 경기북부 대표 전원형복합도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장기 방치된 광석 택지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유휴부지의 단기적 활용방안과 낙후 주변지역 활성화·정비 방안을 동시에 수립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과 국지도 39호선(가납~상수, 장흥~광적)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광적생활체육공원 일대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산리 일대에 음식거리와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활력 넘치는 체험 및 휴양공간으로 정비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성장중심 권역(Major-Hub) : 동부생활권 1

회천동에 속하는 동부생활권은 판교신도시의 1.2배, 위례신도시의 1.7배에 달하는 옥정·회천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인프라와 함께 도심기능을 강화해 인구유입을 창출하는 신성장 중심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연내 착공과 함께 옥정지구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포천) 조기 건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신도시 접근성을 향상하는 한편 구도심 빈집·빈점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익시설 확충, 노후 산업단지와 쇠퇴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센터(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IP비상벨 등의 ICT 기술을 반영하는 등 방범, 교통, 재난관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양주시의 역사문화도시로의 위상 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등 역사문화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룬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와 회암사지 왕실축제,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양주의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 전통, 배경 등 차별화된 콘텐츠의 개발과 강화 등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 브랜드로 승화 시킬 수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 육성할 예정이다.

신성장중심 권역(Techno-Hub) : 동부생활권 2

양주동이 속하는 동부생활권역은 양주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존산업과 4차산업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양주시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의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

경기북부의 행정적, 경제적 중심인 양주시는 지난해 유치한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제조업과 IT가 융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해 인공지능, 3D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북부지역 신성장산업의 거점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기북부 제조업 혁신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경기북부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을 추진해 경기북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섬유산업을 디지털 염색과 웨어러블 섬유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지식 산업화하기 위해 인근 시군과 함께 섬유패션 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통제조업을 스마트제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제품 혁신지원센터 건립과 기존 특화산업과 디자인, IT와 융합·연계한 청년혁신창업을 지원할 양주 디지털팩토리, 사업 디자인·기획 창업을 지원하는 D2B(Design to Business) 공유경제 플랫폼을 설치·운영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인접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조성하고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주시는…

남북교류, 국방개혁 등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수용할 계획적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양주시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부~서부~북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환상형 가로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에 따른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별 복지관 건립,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을 통해 여성·아동·장애인·노인을 아우르는 가족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건강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주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일반고 우수교원 확충과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참여제 실시, 교육공동체 플랫폼 구축, 평생학습도시 정체성 확립과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지정·확충 등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본주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성호 양주시장은 “오는 2025년 인구 40만명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장기 발전전략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제시된 과제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주시민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양주, 살고 싶은 양주, 품격도시 양주를 조성해 최고의 감동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39
언론사	**주식회사 뉴아시아일보(아시아일보)**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1304호 발행인 권희민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8년 4월 18일자 16면 「신 성장·새 지평…스마트(S.M.A.R.T-Hub) 양주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양주시장에 재출마 예정인 현 시장의 성과를 부각하는 특집 기획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시아일보

16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특집 아시아일보

신 성장·새 지평… 스마트(S.M.A.R.T-Hub)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아시아일보 4월 18일자 16면〉

※ 기사내용은 2018지선-자심38 참조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0
언론사	**보령사랑신문 주식회사(보령신문)** 충남 보령시 구장터로14 삼원빌딩 3층 발행인 김영석
심의대상기사	보령신문 2018년 4월 11일자(제1253호) 2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들」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출마예정자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들

박종철 칼럼

박 종 철
논설주간

대한민국 대표 정치철새가 충남도지사에 도전했다. '피닉제'로 불리는 바로 이인제다. '피닉제'란 불사조라는 뜻의 '피닉스'와 이인제의 '제'를 합친 표현이다. 별명에 걸맞게 이씨는 통일민주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국민신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무소속,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을 두루 거쳤다.

이인제는 필요에 따라 이 같이 당적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여야 이동도 가리지 않은 인물로 유명하다. 충남의 마지막 정당으로 남아있던 '선진통일당'을 새누리당에 들어 바친 것도 이인제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시대적인 소명과 충청발전'을 외쳤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박근혜정부가 본격 출범했으나 첫 내각은 물론 '박근혜 파워엘리트 50인'에도 충청권 인사는 단 한사람도 끼지 못했다.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다"고 노래한 이인제의 허황된 꿈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

선진통일당의 전신인 자유선진당을 이끌던 이회창은 2012년 5월20일 당을 떠났다. 이인제가 새누리당에 합류하기 5개월 전이다. 이회창이 탈당할 당시 자유선진당은 상황이 어려워 존폐 위기에 처했으나 그는 이랑곳 하지 않았다. 그리고 탈당과 함께 박근혜 지지를 선언했다. 이회창 역시 "대선 승리를 통해 충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구호에 그쳤다.

5.16 쿠데타의 주역이자 충청권 '핫바지론'을 손에 쥐고 정치를 즐긴 김종필은 제 19대 대선을 통해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산다."고 목에 핏발을 세웠다. 김종필의 이 같은 화상을 보면서 필자는 당시 구역질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노정객 김종필과 철새 이인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회창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과거를 돌아봤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추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들이 충청권에 남긴 것은 또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결과는 이들의 추태와 노욕과 충청인에 대한 우롱 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권력의 포로가 된 이인제는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기생을 자처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해석이다.

〈보령신문 2018년 4월 11일자 2면〉

보도 내용

[박종철 칼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들

대한민국 대표 정치철새가 충남도지사에 도전했다. '피닉제'로 불리는 바로 이인제다. '피닉제'란 불사조라는 뜻의 '피닉스'와 이인제의 '제'를 합친 표현이다. 별명에 걸맞게 이씨는 통일민주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국민신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무소속,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을 두루 거쳤다.

이인제는 필요에 따라 이같이 당적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여야 이동도 가리지 않은 인물로 유명하다. 충남의 마지막 정당으로 남아있던 '선진통일당'을 새누리당에 들어 바친 것도 이인제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시대적인 소명과 충청발전'을 외쳤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박근혜정부가 본격 출범했으나 첫 내각은 물론 '박근혜 파워엘리트 50인'에도 충청권 인사는 단 한사람도 끼지 못했다.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다"고 노래한 이인제의 허황된 꿈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

선진통일당의 전신인 자유선진당을 이끌던 이회창은 2012년 5월 20일 당을 떠났다. 이인제가 새누리당에 합류하기 5개월 전이다. 이회창이 탈당할 당시 자유선진당은 상황이 어려워 존폐 위기에 처했으나 그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리고 탈당과 함께 박근혜 지지를 선언했다. 이회창 역시 "대선 승리를 통해 충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구호에 그쳤다.

5.16 쿠데타의 주역이자 충청권 '핫바지론'을 손에 쥐고 정치를 즐긴 김종필은 제19대 대선을 통해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산다."고 목에 핏발을 세웠다. 김종필의 이같은 화상을 보면서 필자는 당시 구역질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노정객 김종필과 철새 이인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회창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과거를 돌아봤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추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들이 충청권에 남긴 것은 또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결과는 이들의 추태와 노욕과 충청인에 대한 우롱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권력의 포로가 된 이인제는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기생을 자처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충청의 얼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해석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2
언론사	**주식회사 송백(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발행인 최영기
심의대상기사	전남매일 2018년 4월 12일자 19면 「청년 구직 포기자 제로화 대안 필요」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남매일

2018년 04월 12일 19면 (오피니언)

기고

청년 구직 포기자 제로화 대안 필요

심철의
광주시의원

필자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꾸준하게 제시해 왔고 정책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좋은 정책 제안을 하더라도 낙후된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여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 증대 방안을 요구하나 그마저도 어려워 인력채용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 취업률은 낮아지고, 청년들의 구직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청년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 18년 1월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0만1천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커지면서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하는 것이다. 반면 특정 직종에는 청년 구직활동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사, 공단, 공공기업 등 준공무원 직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채용인원 감소 및 공기업 채용비리로 인해 청년들의 상실감을 더 커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갈수록 어려워

계속적인 청년 구직활동이 줄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1월 20일에 "1.25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후속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 민간부문이 합심하여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에게 정부에 정책이 얼마나 피부로 와 닿을지 의문이다. 정부에 청년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지속적인 청년일자리와 연계되어 구직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청년 구직자는 다양한 경험과 스펙을 쌓으며 구직활동을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보통 3개월 수습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 외는 3개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2년 계약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되나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조차 없는 회사도 많아 청년취업자는 다시 구직활동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비경제 활동인구가 된다.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만 청년 취업자가 비정규직 및 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광주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근무한 청년 취업자가 최종 정규직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전환되지 못하여 계약 종료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광주 공공기관에 채용 조건을 보면 수습기간 3개월 및 12개월 계약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적격자에 한해서 정규직 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채용 전부터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입사한 청년구직자에게 정규직 전환 평가는 큰 부담감이다.

당연히 취업 후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적당하다면 충분히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채용 전부터 정규직 임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을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광주 공공기관에 문제만은 아니며, 어느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오늘날에 청년 취업자에 모습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에서는 향후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채용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뢰받는 채용 제도 급선무

필자는 청년 고용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앞장서서 채용에 투명성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관이 주도하는 일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며, 채용 후 취업자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업에 채용절차를 공유하고 제도화하여 고용안정과 신뢰 있는 채용절차를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등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신뢰받는 채용제도가 정착된다면 구직활동 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23.2×16.3)cm

〈전남매일 2018년 4월 12일자 19면〉

보도 내용

청년 구직 포기자 제로화 대안 필요

필자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꾸준하게 제시해 왔고 정책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좋은 정책 제안을 하더라도 낙후된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으며, 열약한 지방재정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여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 증대 방안을 요구하나 그마저도 어려워 인력채용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 취업률은 낮아지고, 청년들의 구직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청년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 18년 1월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0만 1천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커지면서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하는 것이다. 반면 특정 직종에는 청년 구직활동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사, 공단, 공공기업 등 준공무원 직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채용인원 감소 및 공기업 채용비리로 인해 청년들의 상실감을 더 커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갈수록 어려워

계속적인 청년 구직활동이 줄고 청년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1월 20일에 "1.25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 민간부문이 합심하여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피부로 와 닿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지속적인 청년일자리와 연계되어 구직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청년 구직자는 다양한 경험과 스펙을 쌓으며 구직활동을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보통 3개월 수습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 외는 3개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2년 계약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되나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조차 없는 회사도 많아 청년취업자는 다시 구직활동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비경제 활

동인구가 된다.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만 청년 취업자가 비정규직 및 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무이다. 최근 광주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근무한 청년 취업자가 최종 정규직 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전환되지 못하여 계약 종료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광주 공공기관의 채용 조건을 보면 수습기간 3개월 및 12개월 계약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적격자에 한해서 정규직 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채용 전부터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입사한 청년구직자에게 정규직 전환 평가는 큰 부담감이다.

당연히 취업 후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적당하다면 충분히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채용 전부터 정규직 임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을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광주 공공기관의 문제만은 아니며, 어느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오늘날에 청년 취업자의 모습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에서는 향후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채용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뢰받는 채용 제도 급선무

필자는 청년 고용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앞장서서 채용의 투명성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관이 주도하는 일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며, 채용 후 취업자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업에 채용절차를 공유하고 제도화하여 고용 안정과 신뢰 있는 채용절차를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신뢰받는 채용제도가 정착된다면 구직활동 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3
언론사	**종합일보 주식회사(경인종합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19번길 46-5 명진빌딩 1층 발행인 신현각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8년 4월 23일자 16면 「"수원 시민의 정부 '4가지 복지 시민권' 강화할 것"」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선거에 재출마 예정인 현직 지자체 단체장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특집 기사를 전면에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인종합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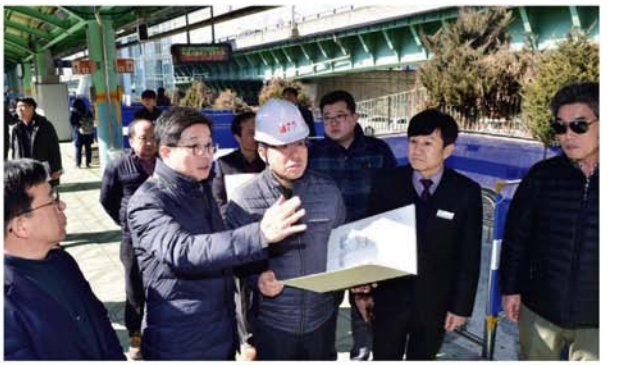
16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특 집 제 2275 호 경인종합일보

"수원 시민의 정부 '4가지 복지 시민권' 강화 할 것"

인/터/뷰

염 태 영 수원시장

본보는 올해 신년화두를 '일산연풍(日新年豊)'으로 정하고 시민 행복과 수원시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1. 올해 신년사에서 복지시민권을 언급했다. 4가지 복지시민권은?

-복지는 우리 시정가 지향한 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 침체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었다.

수원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시가 복지하는 복지시민권은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으로 복지시민권은 노동복지권, 주거복지권, 교육복지권, 육아복지권 등 4개 복지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똑똑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안전한 먹이 환경 조성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해 비례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속 투입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시행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방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또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우리의 교육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음교육분동에의 보상받으며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갖춰 나가겠다.

반간 가정아빈이집을 배정해 국·공립아빈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육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지방분권을 위해 일정서 오셨다. 이상적인 지방분권은 어떤모인가?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시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며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지방분권 선도사례 자임하며 앞장을 서야은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넛댄 것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 공천이 쥐낙 막강해 정청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청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2할 자치' '지방분권 개헌' 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고, 지금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3.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일정은?

-지난달 26일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열었다.

올림픽 사상 최초으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이 평통올림픽을 뛴화 올림픽으로 이끌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평화의 싹을 피웠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상징' 이 된 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난 뒤 뿜아갈 곳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월 23일 국내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선언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오로지 스포츠 정신으로 '빙판위의 우생순'을 꿈꾸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함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을 가려 한다.

올 하반기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되면 선수들은 지난달 26일 기본식을 한 수원복합체육시설 내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은 수원시민이 법는 역사법을 폭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원시 인구가 124만에 옛이다.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5~6만 명이 많지만, 광무원 수는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체감하진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매우를 법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 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관련법이 개정돼 대도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 노동, 주거, 교육, 육아복지권 수호
> 수원시 복지 패러다임 확장
>
>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 위해
> 개헌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
>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 관련법 개정 위해 역량 집중
>
> 수원시-화성시 소통으로
> 군공항 이전문제 상생 해결
>
> 지난해 일자리목표 초과달성
> 올해도 더 좋은 일자리 만들것

5. 인구절벽이 눈 앞에 다가왔는데 수원시의 대책은?

-현재 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2015년 기준) 우리시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 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다.

우리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출산·입양 지원금을 확대했고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 지원, 임신부 건강평가기 등 30여 개에 이르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 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존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을 수립했다.

'생각있는 일·쉼·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수원' 을 비전으로 하는 청존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의 3대 목표 영역은 '일자리', '주거', '일쉼·교육'이다. 일자리 격차와 쉼에 대한 두려움·림방이 없고, 청춘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6. 군공항 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현재 관결문 보면 화성시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의 이익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아닌 국방부 감정을 위한 국가사무라고 명시했다.

그럼 수원시와 화성시, 시로가 상생발전 할 수있는 최선의 접략은 무엇일까. 이는 서로를 입고 이해하는 것, 바로,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소통의 첫걸음은 대화다.

모두의 안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시작으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폭넓은 관점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는 감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성시도 함께 참여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상호 소통의 장을 비롯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화성시와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소한의 감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림감해 상생발전하는 가장 모범적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7. 일자리창출에도 매진해왔는데, 그동안 추진성과는?

-수원시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 1944억(예프 3만 6000개)를 통해원년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빈신 6기 일자리 창출 목표가 17만 개였는데, 2017년 말까지 93.1%를 달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시민경제 안정화의 지름길이다.

올해도 수원형 제·일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신중년 디딤돌 등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

8. 시민에게 한 말씀

-2018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다.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 나갈 것이다.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

이는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다.

날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았다는 의미다.

모든 시민이 세 희망을 품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겠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정 참여를 바라며, 소원성취하시는 2018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

대담 : 김정헌 편집국장
정리 : 이승우 기자

〈경인종합일보 2018년 4월 23일자 16면〉

보도 내용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 시민의 정부 ‘4가지 복지 시민권’ 강화 할 것”

본보는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하고 시민 행복과 수원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올해 신년사에서 복지시민권을 언급했다. 4가지 복지시민권은?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었다. 수원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시가 제시하는 복지시민권은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으로 복지시민권은 노동복지권, 주거복지권, 교육복지권, 육아복지권 등 4개 복지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해 미래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시행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망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또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우리의 교육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갖춰 나가겠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육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Q 지방분권을 위해 앞장서 오셨다. 이상적인 지방분권은 어떤것인가?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시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며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며 열정을 쏟아온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

라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워낙 막강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사명이고, 지금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Q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일정은?

지난달 26일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열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이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이끌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평화의 싹을 틔었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상징'이 된 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난 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월 23일 국내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선언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오로지 스포츠 정신으로 '빙판 위의 우생순'을 꿈꾸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함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 올 하반기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되면 선수들은 지난달 26일 기공식을 한 수원복합체육시설 내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Q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원시 인구가 124만여 명이다.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5~6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체감하진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관련법이 개정돼 대도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Q 인구절벽이 눈 앞에 다가왔는데 수원시의 대책은?

전국 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2015년 기준) 우리시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다. 우리 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출산·입양 지원금을 확대했고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 지원, 임산부 건강챙기기 등 20여 개에 이르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품격있는 일·쉼·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의 3대 핵심 영역은 '일자리', '주거', '돌봄·교육'이다. 일자리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절망이 없고, 청춘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Q 군공항 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헌재 판결을 보면 화성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의 이익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아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라고 명시했다. 그럼 수원시와 화성시, 서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 바로,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소통의 첫걸음은 대화다.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시작으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폭넓은 관점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는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성시도 함께 참여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화성시와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소한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상생발전하는 가장 모범적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일자리창출에도 매진해왔는데, 그동안 추진성과는?

수원시는 지난해 일자리 4만 1944개(목표 3만 6000개)를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목표가 17만 개였는데, 2017년 말까지 93.1%를 달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 안정화의 지름길이다. 올해도 수원형 새-일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신중년 디딤돌 등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

Q 시민에게 한 말씀

2018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다.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갈 것이다.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 이는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응원하는 의미다. 모든 시민이 새 희망을 품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겠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정 참여를 바라며, 소원성취하시는 2018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7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매일신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2 발행인 우정자
심의대상기사	경기매일 2018년 4월 23일자 8면 「월요편지」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매일

2018년 04월 23일
08면 (인물)

월요편지 | 민성숙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 307번째 편지로 '기미독립선언문' 전문을 보내드린 후 퍽 오랜 시간 토요편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강원도교육감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며 준비해 온 시간은 조금 오래 됐습니다만 정말 이 길을 가야하는지, 제 자신이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이 것이 저의 욕심은 아닐런지, 그러저러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제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돼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조용히 집중하며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랑하는 송이가 갑자기 제 품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생겼고, 세상에는 제 뜻대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락은 하늘이 정하는 일이고 저는 다만 저의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한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4월 16일, 4년 전 304명의 아이들이 저 하늘의 별이 된 날,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엄마의 심정으로 유투브 영상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8년 6.13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저의 선거사무실(주소 : 춘천시 후만로 75(후평동)/ 위치 : 춘천시 후평동 인공폭포 앞/ 제 손 전화 : 010-[illegible])에서 여러분을 만나 많이 듣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식 행사를 포함한 개소식을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 합니다. 편한 시간에 오셔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오롯이 강원도 교육을 걱정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일 년 간 사전 장군봉과 넓고 아름다운 서편들판에서 채취하고 아홉 번 덖어서 제가 직접 만든 향기로운 꽃차와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많이 듣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강원도 교육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오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21. 亞川 민성숙 올림.

(15.2*13.7)cm²

〈경기매일 2018년 4월 23일자 8면〉

보도 내용

월요편지

민성숙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 307번째 편지로 '기미독립선언문' 전문을 보내드린 후 퍽 오랜 시간 토요편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강원도교육감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며 준비해 온 시간은 조금 오래 됐습니다만 정말 이 길을 가야하는지, 제 자신이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이것이 저의 욕심은 아닐는지… 그러저러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제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돼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중단하고 조용히 집중하며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랑하는 송이가 갑자기 제 품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생겼고, 세상에는 제 뜻대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락은 하늘이 정하는 일이고 저는 다만 저의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한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4월 16일, 4년 전 304명의 아이들이 저 하늘의 별이 된 날,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엄마의 심정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8년 6.13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의 선거사무실에서 여러분을 만나 많이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식 행사를 포함한 개소식을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 합니다. 편한 시간에 오셔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오롯이 강원도 교육을 걱정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일 년 간 서면 장군봉과 넓고 아름다운 서면들판에서 채취하고 아홉 번 덖어서 제가 직접 만든 향기로운 꽃차와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많이 듣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강원도 교육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오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21. 亞川 민성숙 올림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8
언론사	**주식회사 경인매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803호 대표이사 김형근
심의대상기사	경인매일 2018년 4월 20일자 4면 「선거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京仁每日 2018년 04월 20일 04면 (정치)

논평

선거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세계가 경악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내 일은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온전히 되지 않은 채 합동영결식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통령까지 안전이 모든 국민의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날 경기도 교육혁신연대가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 후보선출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8,686분의 선거인단이 등록하실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경기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 어떤 것도 내일의 합동영결식과 병행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학생이 주역인 교육계 선거에 나선 후보로서 별이 되어 떠난 학생들보다 선거가 먼저 일수는 없습니다.

이에 16일 오전 11시부터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를 하루만 연기해 줄 것을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정식 제안한 결과 금일 오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에 낭중지추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중히 건의 드렸습니다.

최근 저 이성대는 중요한 기자회견도 포기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판단입니다.

이성대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10.0×17.0)cm²

〈경인매일 2018년 4월 20일자 4면〉

보도 내용

선거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세계가 경악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내일은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온전히 되지 않은 채 합동영결식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통령까지 안전이 모든 국민의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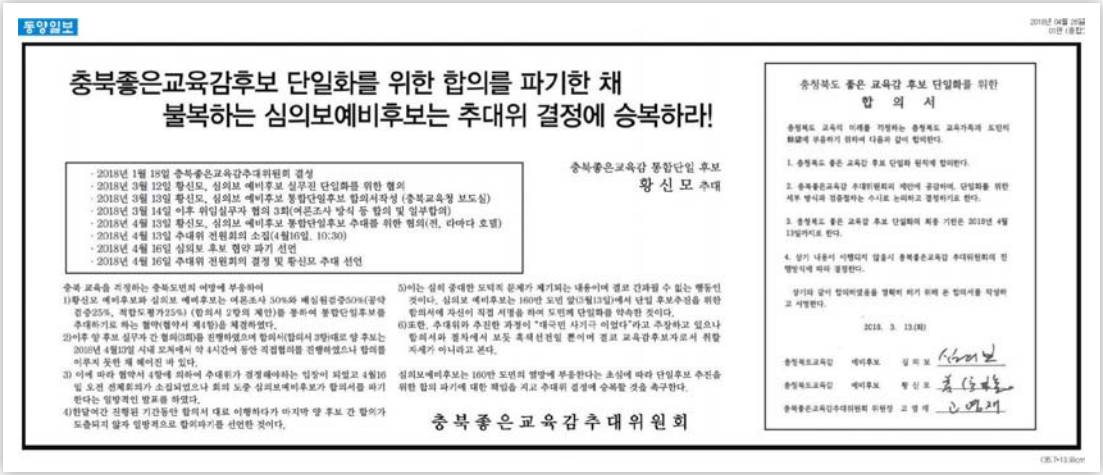
우연히 같은 날 경기도 교육혁신연대가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 후보선출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8,686분의 선거인단이 등록하실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경기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 어떤 것도 내일의 합동영결식과 병행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학생이 주역인 교육계 선거에 나선 후보로서 별이 되어 떠난 학생들보다 선거가 먼저 일수는 없습니다. 이에 16일 오전 11시부터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를 하루만 연기해 줄 것을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정식 제안한 결과 금일 오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에 낭중지추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중히 건의 드렸습니다. 최근 저 이성대는 중요한 기자회견도 포기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판단입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0
언론사	**주식회사 동양미디어(동양일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발행인 유영선
심의대상기사	동양일보 2018년 4월 26일자 1면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제하의 의견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충북교육감 후보단일화에 대한 특정 단체의 입장 및 해당 단체가 특정 예비후보자를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양일보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 2018년 1월 18일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결성
· 2018년 3월 12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실무진 단일화를 위한 협의
· 2018년 3월 13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통합단일후보 합의서작성 (충북교육청 보도실)
· 2018년 3월 14일 이후 위임실무자 협의 3회(여론조사 방식 등 합의 및 일부합의)
· 2018년 4월 13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통합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협의(전, 라마다 호텔)
· 2018년 4월 13일 추대위 전원회의 소집(4월16일, 10:30)
· 2018년 4월 16일 심의보 후보 협약 파기 선언
· 2018년 4월 16일 추대위 전원회의 결정 및 황신모 추대 선언

충북좋은교육감 통합단일 후보
황 신 모 추대

충북 교육을 걱정하는 충북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1)황신모 예비후보와 심의보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50%와 예심원점수50%(공약 점수25%, 적합도 평가25%) (합의서 2항의 제안)를 통하여 통합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하는 협약(협약서 제4항)을 체결하였다.
2)이후 양 후보 실무자 간 협의(3회)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합의서 3항)대로 양 후보는 2018년 4월13일 시내 모처에서 약 4시간에 동안 직접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진 바 있다.
3) 이에 따라 협약서 4항에 의하여 추대위가 결정해야하는 입장이 되었고 4월16일 오전 선거회의가 소집되었으나 회의 도중 심의보예비후보가 합의서를 파기한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4)합당역간 진행된 기간동안 합의서 대로 이행하다가 마지막 양 후보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5)이는 심히 중대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이며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160만 도민 앞(13일)에서 단일 후보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여 도민께 단일화를 약속한 것이다.
6)또한, 추대위와 추진한 과정이 "대국민 사기극 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서와 결과에서 보듯 촉새선전일 뿐이며 결코 교육감후보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심의보예비후보는 160만 도민의 열망에 부응한다는 초심에 따라 단일후보 추진을 위한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대위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

충 북 좋 은 교 육 감 추 대 위 원 회

충청북도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 의 서

충청북도 교육의 미래를 기정하는 충청북도 교육가족과 도민의 화합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충청북도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한다.

2. 충북좋은교육감 추대위원회의 제안에 공감하며, 단일화를 위한 세부 방식과 경중절차는 수시로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한다.

3. 충청북도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최종 기한은 2018년 4월 13일까지로 한다.

4.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시 충북좋은교육감 추대위원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2018. 3. 1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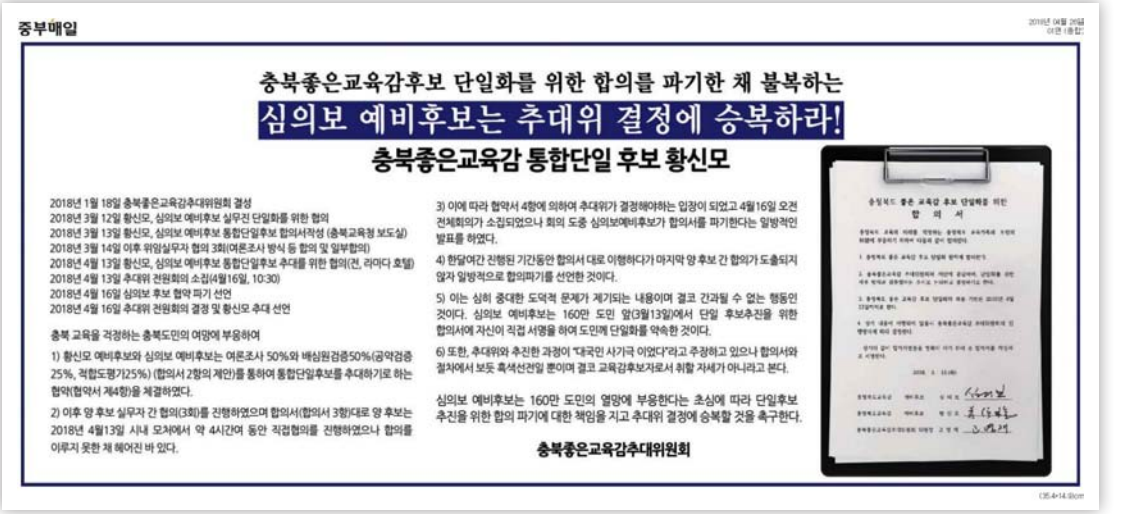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심 의 보

충청북도교육감 예비후보 황 신 모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위원장 고 명 재

〈동양일보 2018년 4월 26일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1
언론사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6번길 22 발행인 이 정
심의대상기사	중부매일 2018년 4월 26일자 1면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제하의 의견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충북교육감 후보단일화에 대한 특정 단체의 입장 및 해당 단체가 특정 예비후보자를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부매일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 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충북좋은교육감 통합단일 후보 황신모

2018년 1월 18일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결성
2018년 3월 12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실무진 단일화를 위한 협의
2018년 3월 13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통합단일후보 합의서작성 (충북교육청 보도실)
2018년 3월 14일 이후 위임실무자 협의 3회(여론조사 방식 등 합의 및 일부합의)
2018년 4월 13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통합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협의(전, 라마다 호텔)
2018년 4월 13일 추대위 전원회의 소집(4월16일, 10:30)
2018년 4월 16일 심의보 후보 협약 파기 선언
2018년 4월 16일 추대위 전원회의 결정 및 황신모 추대 선언

충북 교육을 걱정하는 충북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1) 황신모 예비후보와 심의보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50%와 배심원검증50%(공약검증 25%, 적합도평가25%) (합의서 2항의 제안)를 통하여 통합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하는 협약(협약서 제4항)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양 후보 실무자 간 협의(3회)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합의서 3항)대로 양 후보는 2018년 4월13일 시내 모처에서 약 4시간여 동안 직접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진 바 있다.

3) 이에 따라 협약서 4항에 의하여 추대위가 결정해야하는 입장이 되었고 4월16일 오전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으나 회의 도중 심의보예비후보가 합의서를 파기한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4) 한달여간 진행된 기간동안 합의서 대로 이행하다가 마지막 양 후보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5) 이는 심히 중대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이며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160만 도민 앞(3월13일)에서 단일 후보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여 도민께 단일화를 약속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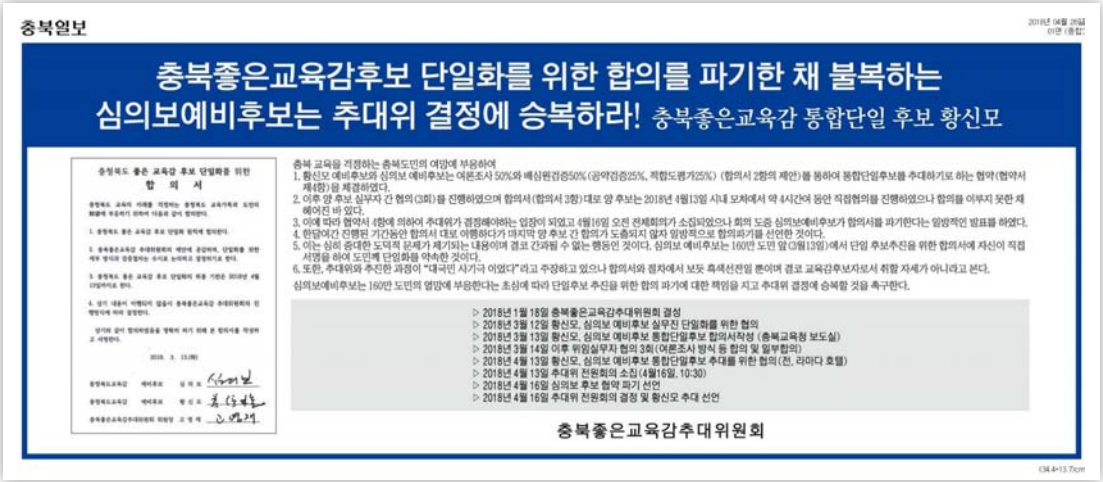
6) 또한, 추대위와 추진한 과정이 "대국민 사기극 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서와 절차에서 보듯 흑색선전일 뿐이며 결코 교육감후보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160만 도민의 열망에 부응한다는 초심에 따라 단일후보 추진을 위한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대위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중부매일 2018년 4월 26일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2
언론사	**주식회사 충북일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대표이사 강태억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8년 4월 26일자 1면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제하의 의견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충북교육감 후보단일화에 대한 특정 단체의 입장 및 해당 단체가 특정 예비후보자를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충북일보

충북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충북좋은교육감 통합단일 후보 황신모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충북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1. 황신모 예비후보와 심의보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50%와 배심원검증50%(공약검증25%, 적합도평가25%) (합의서 2항의 제안)를 통하여 통합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하는 협약(협약서 제4항)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양 후보 실무자 간 협의(3회)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합의서 3항)대로 양 후보는 2018년 4월13일 시내 모처에서 약 4시간여 동안 직접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진 바 있다.
3. 이에 따라 협약서 4항에 의하여 추대위가 결정해야하는 입장이 되었고 4월16일 오전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으나 회의 도중 심의보예비후보가 합의사를 파기한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4. 한달여간 진행된 기간동안 합의서 대로 이행하다가 마지막 양 후보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5. 이는 심히 중대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이며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160만 도민 앞(3월13일)에서 단일 후보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여 도민께 단일화를 약속한 것이다.
6. 또한, 추대위와 추진한 과정이 "대국민 사기극 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서와 정차에서 보듯 흑색선전일 뿐이며 결코 교육감후보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심의보예비후보는 160만 도민의 엄망에 부응한다는 초심에 따라 단일후보 추진을 위한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대위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

▷ 2018년 1월 18일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결성
▷ 2018년 3월 12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실무진 단일화를 위한 협의
▷ 2018년 3월 13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통합단일후보 합의서작성 (충북교육청 보도실)
▷ 2018년 3월 14일 이후 위임실무자 협의 3회 (여론조사 방식 등 합의 및 일부합의)
▷ 2018년 4월 13일 황신모, 심의보 예비후보 통합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협의 (전, 라마다 호텔)
▷ 2018년 4월 13일 추대위 전원회의 소집 (4월16일, 10:30)
▷ 2018년 4월 16일 심의보 후보 협약 파기 선언
▷ 2018년 4월 16일 추대위 전원회의 결정 및 황신모 추대 선언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충북일보 2018년 4월 26일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8
언론사	**디엠코리아 주식회사(도민일보)**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본관1층 발행인 현재오
심의대상기사	도민일보 2018년 5월 9일자 20면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양주시장에 재출마 예정인 현직 양주시장의 성과를 사진과 함께 전면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신 성장, 새 지평, 스마트 허브 양주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변모 꾀한다

Smart Lifeware Valley

〈도민일보 2018년 5월 9일자 20면〉

※ 기사내용은 2018지선-자심38 참조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0
언론사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125 6층 발행인 윤규현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8년 5월 10일자 1면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의혹 및 수사 진행상황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남매일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동승 전진대회'에 참석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 왼쪽은 추미애 대표, 오른쪽은 민홍철 의원.

경찰, 2천700만원 후원금 낸 정황 포착
대선 전부터 기사 9만건 댓글작업 확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9일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이 기간에도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2천7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점을 도 포착, 사건이 확전될 조짐이다.

김모 씨가 대선 7개월 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대해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경찰은 댓글 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한 기사 1만 1천여 건을 제외한 드루킹 등이 대선 전 최대 1만 5천건 가량의 기사에 대한 댓글작업을 돕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동승 전진대회'에 참석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 왼쪽은 추미애 대표, 오른쪽은 민홍철 의원.

경찰, 2천700만원 후원금 낸 정황 포착
대선 전부터 기사 9만건 댓글작업 확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9일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이 기간에도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2천7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점을도 포착, 사건이 확전될 조짐이다.

김모 씨가 대선 7개월 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대해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경찰은 댓글 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한 기사 1만 1천여 건을 제외한 드루킹 등이 대선 전 최대 1만 5천건 가량의 기사에 대한 댓글작업을 돕

〈경남매일 2018년 5월 10일자 1면〉

보도 내용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9일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이 기간에도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2천7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정황도 포착, 사건이 확전될 조짐이다.

김모 씨가 대선 7개월 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대해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경찰은 대선 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한 기사 7만 1천여 건을 제외하면 드루킹 팀이 대선 전 최대 1만 9천건 가량의 기사에 대한 댓글작업을 통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선 전부터 활동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암호가 걸린 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대선 7개월 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댓글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기사에 동일작업 반복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관련 대화방에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댓글 활동 결과를 드루킹에게 보고한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기사 댓글에 대한 매크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불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경수·노회찬 의원에게 전달 시도

김모 씨가 여권의 핵심인 김경수 의원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공모 회원 200여 명에게 2천7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정황을 확인하고, 후원금 전달 여부 및 자금의 불법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USB에는 김 의원 후원 안내 문서와 '정치후원금 명단'이 엑셀 파일로 담겨 있고, 해당 후원 안내 문서엔 김 의원 후원회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공모 회원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내 파일 중에 경공모 핵심 멤버 200여 명이 2천700만 원을 모아 김 후보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김경수 후보 측은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드루킹 김모 씨는 또 2016년 3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겠다며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돈을 모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 따르면 당시 드루킹은 회원들과의 채팅방에서 "누렁이(노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추가로) 모금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2
언론사	**주식회사 서천신문**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 발행인 강신설
심의대상기사	서천신문 2018년 4월 27일자 3면 「노박래후보 여론조사 '1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천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천신문

노박래후보 여론조사 '1위'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음해 불구 주민신뢰 '확인'

노후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민만 보고 가겠다"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천군수 선거에서 노박래(자유한국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노박래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결과가 주민들이 지역사업자 A씨가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음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보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천군수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4일 뉴스스토리, 서천신문(20일)과 이전(2월)보도된 서해신문에서 발표되었다.

뉴스스토리 보도는 3자 가상대결에서 노박래(자유한국당)34.1%, 박노찬(더불어민주당)28.7%, 김기웅(무소속) 25.6%순으로 나타났고 노박래(자유한국당)33.9%, 유승광(더불어민주당)28.3%, 김기웅(무소속)26.1%순이었으며 노박래(자유한국당)33.8%, 김기웅(무소속)27.5%, 조이환(더불어민주당)25.4% 순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여론조사 보도는 노박래(자유한국당)28.9%, 김기웅(무소속) 22.1%, 박노찬(더불어 민주당)16.6%, 조이환(민주당)12.7%, 유승광(민주당)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박래후보가 김기웅후보와 박노찬후보+조이환후보+유승광후보 등 민주당 후보 전원이 경합한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신문 여론조사 결과는 노박래(자유한국당)29.7%, 김기웅(무소속)20.6%, 박노찬(민주당)10.7%, 유승광(민주당)10.0% 순으로 나타났다.

노박래 후보는 "정치음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6만 군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군민만 보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열 기자

〈서천신문 2018년 4월 27일자 3면〉

보도 내용

노박래후보 여론조사 '1위'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천군수 선거에서 노박래(자유한국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노박래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결과가 주민들이 지역사업자 A씨가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음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보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천구수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4일 뉴스스토리, 서천신문(20일)과 이전(2월) 보도된 서해신문에서 발표되었다.

뉴스스토리 보도는 3자 가상대결에서 노박래(자유한국당) 34.1%, 박노찬(더불어민주당) 28.7%, 김기웅(무소속) 25.6% 순으로 나타났고 노박래(자유한국당) 33.9%, 유승광(더불어민주당) 28.3%, 김기웅(무소속) 26.1% 순이었으며 노박래(자유한국당) 33.8%, 김기웅(무소속) 27.5%, 조이환(더불어민주당) 25.4% 순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여론조사 보도는 노박래(자유한국당) 28.9%, 김기웅(무소속) 22.1%, 박노찬(더불어민주당) 16.6%, 조이환(민주당) 12.7%, 유승광(민주당) 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박래 후보가 김기웅 후보와 박노찬 후보+조이환 후보+유승광 후보 등 민주당 후보 전원이 경합한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신문 여론조사 결과는 노박래(자유한국당) 29.7%, 김기웅(무소속) 20.6%, 박노찬(민주당) 10.7%, 유승광(민주당) 10.0% 순으로 나타났다.

노박래 후보는 "정치음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6만 군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군민만 보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3
언론사	**김해뉴스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8 나비프라자 7층 발행인 안병길
심의대상기사	김해뉴스 2018년 4월 25일자(제370호) 3면 「"도지사 되면 김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추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도지사 되면 김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추진"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김해 장유 거주 "김해는 제2고향"
"경남 재도약·김해·도민에 헌신"

"김해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다시 일으켜세워준 제2의 고향입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23일 김해시 외동 김해뉴스 사옥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해와의 남다른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그는 봄비가 오는 중에도 김해지역을 찾아 지인·유권자들과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10년 국무총리직에서 지명되었다가 자진사퇴한 이후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김해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해는 저에게는 너무도 고맙고,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19대 총선에서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맞붙는 당시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를 따돌리고 김해을 국회의원으로 재선됐다. 2014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5년 3월 돌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당시 불출마 선언으로 저를 지지하던 많은 지역민들이 실망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에 빠를 붙겠다는 각오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경남도지사가 되면 김해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아직도 김해 장유 관동동의 3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 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불출마 이후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부산-마산간 복선전철과 관련한 농경지 보상, 부영임대아파트 문제 등 김해지역 현안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김해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해신공항 문제의 경우 근본적인 소음대책이 없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이 떠안습니다. 우리 당에서 김해에어국제시티 개발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김해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어 김해의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밝은 미래를 열 청사진'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부던 감로 잡못 수술하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해지역 경제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김해는 78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둥지를 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기업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나쁩니다. 정부차원의 산업활성화와 고용대책 등은 미흡합니다. 경남도차원에서 기업 희생과 혁신 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근대화의 동력이었던 경남이 해양산업과 국제비즈니스, 해양관광 도시로 반드시 발돋움하려면 특별법 제정도 시급합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도전과 좌절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내면을 한층 성숙시키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남을 반드시 살리고, 김해시민과 경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며 "도지사가 되면 야당은 물론 거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등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경남을 반드시 재도약 시키겠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가 23일 김해시 외동 김해뉴스 사옥에서 자신이 구상 중인 김해와 경남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나리 기자

〈김해뉴스 2018년 4월 25일자 3면〉

보도 내용

"도지사 되면 김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추진"

"김해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다시 일으켜세워준 제2의 고향입니다."

김태호(55)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23일 김해시 외동 김해뉴스 사옥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해와의 남다른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그는 봄비가 오는 중에도 김해지역을 찾아 지인·유권자 등과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10년 국무총리서리로 지명되었다가 자진사퇴한 이후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김해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해는 저에게는 너무도 고맙고,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19대 총선에서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맞붙는 당시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를 따돌리고 김해을 국회의원으로 재선됐다. 2014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5년 8월 돌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당시 불출마 선언으로 저를 지지하던 많은 지역민들이 실망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경남도지사가 되면 김해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아직도 김해 장유 관동동의 3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불출마 이후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부전~마산간 복선전철과 관련한 농경지 보상, 부영임대아파트 문제 등 김해지역 현안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김해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해신공항 문제의 경우 근본적인 소음대책이 없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이 떠안습니다. 우리 당에서 김해에어국제시티 개발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김해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어 김해의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밝은 미래를 열 청사진'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무딘 칼로 잘못 수술하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해지역 경제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김해는 78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둥지를 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기업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나쁩니다. 정부 차원의 산업활성화와 고용대책 등은 미흡합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기업 회생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근대화의 동력이었던 경남이 해양산업과 국제비즈니스, 해양관광 도시로 반드시 발돋움하려면 특별법 제정도 시급합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도전과 좌절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내면을 한층 성숙시키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남을 반드시 살리고, 김해시민과 경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며 "도지사가 되면 야당은 물론 거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등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경남을 반드시 재도약 시키겠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6
언론사	**주식회사 함안뉴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대표이사 조용찬
심의대상기사	함안뉴스 2018년 4월 30일자 12~13면 「함안출신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인터뷰」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창원시장 예비후보자의 인터뷰를 사진과 함께 전면 기사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함안출신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인터뷰

"경남의 심장, 창원개혁에 모든 것을 걸겠다"

미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오직 기댈 곳은 국민밖에 없어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김성태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중앙당 시·도당 당직자, 당원들이 함께 했다.

출정식에는 광역단체장 및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자가 참가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자는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자를 비롯해 경기 수원·성남·용인·고양 등이 해당된다.

조진래(52) 창원시장 후보는 이날 "경남도와 창원시장 선거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라며 "보수가 비록 벼랑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보수 대단합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천장을 받은 소감에 대해 묻자,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면서 "오직 두려운 것은 국민이고, 오직 기댈 곳은 국민 밖에 없다는 것을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평소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함안군 법수면 응암 출신인 조 후보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거쳤다. 이후 18대 국회의원,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경남개발공사 사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 탄탄하게 경륜을 쌓아왔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3부와 기업CEO 경험까지 갖춘 경남의 훌륭한 자원이다.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 국방과 안보, 자유 경제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중간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남과 창원은 우리가 기필코 지켜내야 할 보수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보수가 비록 벼랑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보수 대단합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보수의 새 가치를 걸고 참 가치를 설득하고 이행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지향점은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저는 그것의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야만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더는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수혁신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떤지요.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남의 심장인 105만 대도시 창원과 당(黨)의 미래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창원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산업화와 문화관광, 3·15민주정신이 살아있는 산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창원의 경제와 가치는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창원 개혁'에 모든 것을 걸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를 돌아보면 '개혁'과 '혁신'이 화두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고 정직한 미래를 지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며,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지난 3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공교육이 죽고, 학원비에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며,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개혁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민했습니다. 해답은 원칙과 상식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두려운 것은 국민이고, 오직 기댈 곳도 국민밖에 없다는 것을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낍니다."

▶ 지금 창원의 경제상황은 어떠합니까.

"창원은 GM창원공장과 진해 STX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감소와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행정력을 집중하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창원시만 최소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신세계 스타필드는 찬반대립으로 극심하게 의견이 갈리고, 육군대학 부지활용과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을 바꾸지 못하면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란 허언에 불과합니다."

▶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마산해양항노화관광 기업도시' 지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으로 해양항노화와 관광을 융합하여 마산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제조업이 없으면 서비스업도 없습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는 별개로 창원시만의 새로운 기업지원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GM 창원공장의 안정적인 경영과 정상궤도 진입은 시급한 과제이며, STX조선해양의 부가가치는 5700억원으로 조선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존속시켜야 합니다."

▶ 창원시장에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까.

"105만 창원시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창원·마산·진해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청년실업 극복, 골목상권 부활, 어린이·여성·장애인·어르신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울러 일자리 만드는 경제성장에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자영업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 그것이 실천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창원의 미래세대에 투자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을, 중년에게는 여유를,

〈함안뉴스 2018년 4월 30일자 12~13면〉

보도 내용

[인터뷰] 함안출신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김성태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중앙당 시·도당 당직자, 당원들이 함께 했다.

출정식에는 광역단체장 및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자가 참가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자는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자를 비롯해 경기 수원·성남·용인·고양 등이 해당된다.

조진래(52) 창원시장 후보는 이날 "경남도와 창원시장 선거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라며 "보수가 비록 벼랑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보수 대단합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천장을 받은 소감에 대해 묻자,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면서 "오직 두려운 것은 국민이고, 오직 기댈 곳은 국민 밖에 없다는 것을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평소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함안군 법수면 응암 출신인 조 후보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거쳤다. 이후 18대 국회의원,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경남개발공사 사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 탄탄하게 경륜을 쌓아왔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3부와 기업CEO 경험까지 갖춘 경남의 훌륭한 자원이다.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 국방과 안보, 자유 경제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중간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남과 창원은 우리가 기필코 지켜내야 할 보수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보수가 비록 벼랑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보수 대단합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보수의 새 가치를 걸고 참 가치를 설득하고 이행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지향점은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저는 그것의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야만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더는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수혁신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Q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떤지요.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남의 심장인 105만 대도시 창원과 당(黨)의 미래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창원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산업화와 문화관광, 3·15민주정신이 살아 있는 산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창원의 경제와 가치는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창원 개혁'에 모든 것을 걸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를 돌아보면 '개혁'과 '혁신'이 화두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미래를 지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Q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며,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지난 3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공교육이 죽고, 학원비에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며,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개혁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민했습니다. 해답은 원칙과 상식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두려운 것은 국민이고, 오직 기댈 곳도 국민밖에 없다는 것을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낍니다."

Q 지금 창원의 경제상황은 어떠합니까.

"창원은 GM창원공장과 진해 STX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감소와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밋

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행정력을 집중하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창원시만 최소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신세계 스타필드는 찬반대립으로 극심하게 의견이 갈리고, 육군대학 부지활용과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을 바꾸지 못하면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란 허언에 불과합니다."

Q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마산해양항노화관광 기업도시' 지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으로 해양항노화와 관광을 융합하여 마산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제조업이 없으면 서비스업도 없습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는 별개로 창원시만의 새로운 기업지원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GM창원공장의 안정적인 경영과 정상궤도 진입은 시급한 과제이며, STX조선해양의 부가가치는 5700억 원으로 조선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존속시켜야 합니다."

Q 창원시장에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까.

"105만 창원시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창원·마산·진해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청년실업 극복, 골목상권 부활, 어린이·여성·장애인·어르신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만드는 경제성장에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자영업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 그것이 실천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창원의 미래세대에 투자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을, 중년에게는 여유를, 어르신께는 복지가 우선 되는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 조진래는 창원시의 쟁점사업과 민생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Q 의령·함안·합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의령·함안·합천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인 저 조진래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105만 메가시티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인접 지역인 창원시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저 조진래에게도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조진래는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원 개혁'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직 국민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감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반드시 당선되어 창원을 대한민국 개혁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창원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창원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경남지사 선거까지 힘을 보태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늘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지역의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활짝 핀 대한미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1
언론사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6층 발행인 최정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8년 5월 23일자 3면 「새로운 도전은 무지개빛 희망」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역술인의 우호적인 인물평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민일보

새로운 도전은 무지개빛 희망

녹유 선생의 인물평

임대윤

청춘의 푸릇한 꿈 가로막는
산처럼 높은 벽을 깨트리자

〈김해뉴스 2018년 4월 25일자 3면〉

보도 내용

새로운 도전은 무지개빛 희망

임대윤(관운장같은 눈빛속에 유비같은 유함의 소유자), 배운 공부가 아닌 집념과 끈기가 만든 내공의 멋있는 결실이며, 똑똑하지 않은 부지런은 스쳐 갈 수있는 인연과도 끈끈한 정을 나누며 말로 하지 않은 솔선수범 행동은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라는 믿음을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려는 불꽃 열정에는 기름이 부어지며 할수있다 자신감은 포기를 모르던 값진 보상이다. 땀으로 이룬 바다같은 사람됨은 편견과 오해의 색안경을 벗어내야 보여지며 작은일에 주는 뜻밖의 선물 같은 감동이 호형호제 의리를 쌓아간다. 편하지 않은 불편함과 대적했던 용기는 소박한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부끄럽지 않았다.

이야기의 결말은 감동의 박수를 받아낸다. 입술 물었던 시련은 보석으로 변하는 시기이며 등 돌렸던 차가운 외면이 먼저손을 잡아주는 응원군으로 바뀐다. 시원해 보이는 이마는 고마움을 기억하며 식구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뜻하며 끝이 길어지는 코의 생김새는 환갑 나이가 지나야 하늘의 뜻을 받는다는 표시이다.

타박의 쓴소리에 들어주는 귀는 거짓과 진심을 구분하며 굳게 닫은 입술은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지켜주는 호탕함 자체로 감성을 울려낸다.

소신에는 배짱과 자존심을 지켜내며 아닌 것에 대한 반대고집은 꺽이지 않은 선비정신의 기개이다. 여름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존재감이 빛을 발해주니 절치부심 기회이며 상상이 현실이되는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은 무지개빛 희망이다. 어디로 갈 줄 모르던 민심은 색다름을 택하니 이름은 소문을 타고 진정성은 발없이 퍼져간다.

예상했던 고생길은 얼굴의 꽃이피며 환대와 반갑다. 악수를 받아내니 걸음에는 신이 실려지며 틀리지 않았다.

확신은 축배의 잔을 드는 영광되고 보람찬 순간에 어깨 높아지는 기쁨에 취할 수 있다. 혼자라는 각오로 쓸쓸히 걷던 섭섭함을 지워내야하며 외로운 싸움과 고독함과 시기질투는 단단함을 완성했던 성장의 과정이다.

잠시잠깐 위기는 용장들의 지혜를 빌려야 쉬워지며 반가운 소식이 왠지모를 불안감을 쓸어내니 웃음 감춰야하는 통쾌한 반전을 불러낸다.

허락받지 못하는 수고에는 쉼표찍는 여유로 시간에 의지하자. 대문 두드리는 손님은 지극정성 애뜻함

과 무릎끊는 용기로 한편이라는 공감대를 이루어내자. 질이 다른 노력은 으뜸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내고 걱정부터 앞서는 자리에 주인이 될 수 있다.

실수를 포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는 아프지 않은 이별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자. 주고받자. 유혹은 믿을 수 없다.

거절로 일관해야하며 알지못하는 배움에 고개숙이는 겸손과 솜씨 부리지 않은 처음을 지켜내자. 만지고 보여지는 목표에도 풀리지 않는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며 버려야할 것에 가지를 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좋다, 방심은 화사한 분위기에 먹장구름을 불러내니 꺼진불도 다시보는 섬세함을 가져보자. 가르침과 조언은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칠성시장 포장마차 북성로 불고기 골목에서 가난을 알기에 서민의 주머니사정을 헤아리며 소탈한 이미지에 중년신사가 누구라도 격식없는 대화로 진짜가 무었인지? 청춘의 푸릇한 꿈을 가로막는 산처럼 높은 벽을 깨트리자. 뜨거움을 호소하는 이에게 관심과 시선을 마주해보자. 적벽대전의 풍향을 아는 장수처럼 담대한 임대윤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7
언론사	**주식회사 홍주일보사(홍주신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9 율산빌딩 4층 대표이사 한관우
심의대상기사	홍주신문 2018년 5월 31일자 1면 「군수 후보 지지도, 최선경 후보 38.6% '선두' 김석환 후보 37.4%, 채현병 후보 12.2% 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홍성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특정 후보자가 '선두'라고 언급하고, 후보 지지도 결과 그래프의 후보자간 차이를 부정확하게 표시하였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군수 후보 지지도, 최선경 후보 38.6% '선두'
김석환 후보 37.4%, 채현병 후보 12.2% 순

도의원 1선거구, 조승만(민) 41.0%, 이상근(한) 35.8%, 김기현(무) 8.6%
도의원 2선거구, 김경숙(민) 28.1%, 이종화(한) 40.2%, 채승신(미) 19.3%

홍성군수 후보 지지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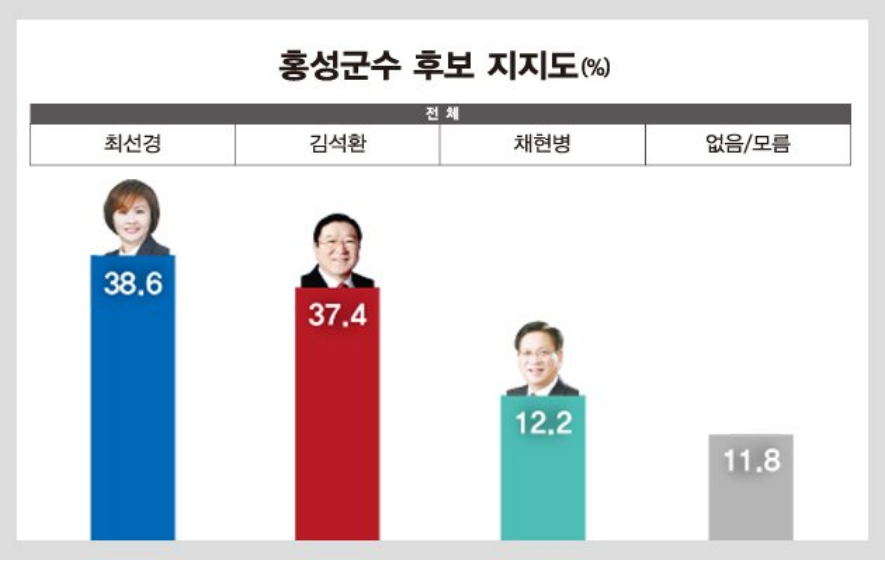
〈홍주신문 2018년 5월 31일자(제538호) 1면〉

보도 내용

군수 후보 지지도, 최선경 후보 38.6% 선두 김석환 후보 37.4%, 채현병 후보 12.2%순

도의원 1선거구, 조승만(민) 41.0%, 이상근(한) 35.8%, 김기현(무) 8.6%
도의원 2선거구, 김경숙(민) 28.1%, 이종화(한) 40.2%, 채승신(미) 19.3%

6·13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충남방송이 지난 28일 발표한 홍성군수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최선경(49) 후보가 38.6%로 선두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김석환(73) 후보가 37.4%, 바른미래당 채현병(69) 후보 12.2%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답변은 11.8%로 나타났다.



1위와 2위는 오차범위인 1.2%포인트 차이지만 첫 출마한 40대의 여성군수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선 현 직군수를 앞질렀다는데 여론의 향배 등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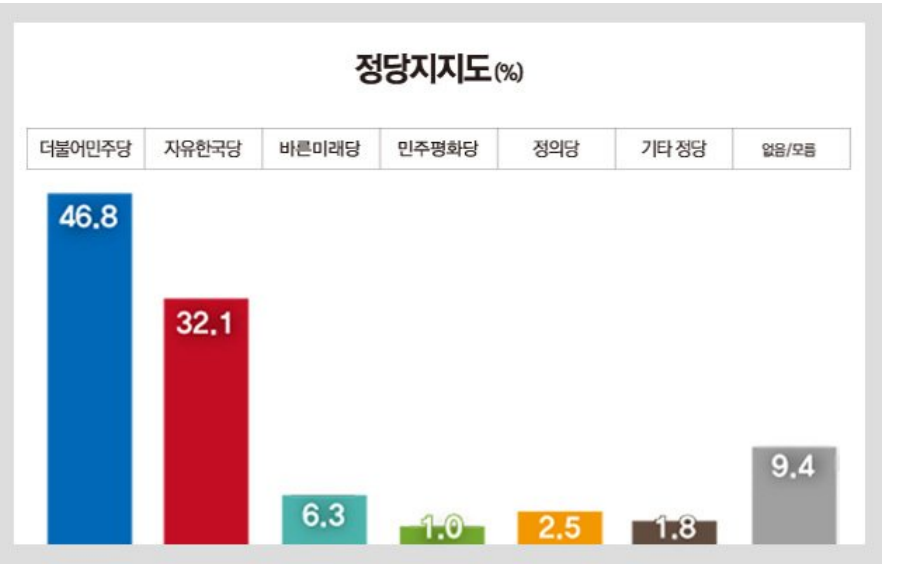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최선경 후보가 19세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비교적 젊은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김석환 후보는 50대부터 70세 이상에 이르는 고연령층에서, 채현병 후보는 50대에서 가장 높은 17.6%대의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기초의원 가, 다 선거구에선 김석환 후보가 앞섰고, 나 선거구에선 최선경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 채현병 후보는 다 선거구 광천 외 지역에서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김석환 후보가 53.7%로 가장 높았고, 최선경 후보가 28.2%, 채현병 후보가 12.4%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최선경 후보가 55.1%로 가장 높았고, 김석환 후보가 22.5%, 채현병 후보가 12%를 보였다. 지방선거 관심 층의 군수 지지도는 최선경 후보가 41.1%, 김석환 후보가 39.5%, 채현병 후보가 11.7%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8%, 자유한국당이 32.1%, 바른미래당 6.3% 순이었다. 정당별 후보들의 지지도를 보면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홍성군의 충남도의원 선거는 제 1선거구인 홍성읍과 홍북읍, 금마, 갈산, 구항면 등 2개 읍·3개 면이다. 충남도의원 1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후보가 41%, 자유한국당 이상근 후보 35.8%, 무소속 김기현 후보 8.6%를 기록했다. 조승만 후보와 이상근 후보 간 지지도는 5.2%P 차이다.

충남도의원 2선거구는 광천읍과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면 등 1개 읍·5개 면인데, 자유한국당 이종화 후보 40.2%, 더불어민주당 김경숙 후보가 28.1%, 바른미래당 채승신 후보는 19.3%로 나타났다. 김경숙 후보와 이종화 후보 간 격차는 12.1%P 차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남방송이 (주)리서치뷰에 의뢰해 홍성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유무선전화(통신사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50%, RDD 유선전화 50%)로 실시했고, 가중 값 산출은 2018년 4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비례의 셀 가중, 가중 값 적용 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셀 가중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6%이며, 응답률은 4.7%다. 질문내용 및 조사결과는 충남방송 홈페이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9
언론사	**대전투데이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발행인 김현정
심의대상기사	대전투데이 2018년 6월 1일자 1면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 TV토론회로 지지율 상승하나」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발언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1면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투데이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 TV토론회로 지지율 상승하나

6·13 지방선거

〈대전투데이 2018년 6월 1일자 1면〉

보도 내용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 TV토론회로 지지율 상승하나

6·13지방선거가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시장에 출마한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가 신선한 정책공약과 TV토론 등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남 후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최근 TV토론 등을 통해 참신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를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부산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풍부한 행정경험과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SK텔레콤 사장을 역임한 CEO로서의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침체된 대전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적임자임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남 후보는 최근 방송토론에서 입담 좋은 후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지난 5월 30일 KBS 대전총국에서 열린 대전시장 후보들간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토론에서 남 후보는 "정치 싸움 좀 그만하자.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며 "대전은 지하 매설물이 많아 지하 저심도 공법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트램 방식의 6분의 1에 불과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한 뒤 향후 경제적 부흥을 이뤄낸 뒤 지하철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BRT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남 후보는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다.

남 후보는 "허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3.3㎡당 930만 원에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해주면서 해당 건설업체는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허 후보가 당시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유성구를 청렴도 전국 최하위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남 후보는 지난 5월 28일 대전MBC 주최 토론회에서도 허 후보를 겨냥해 유성구청장 재직 당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위기 등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한편 남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에 앞서 지난 5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경제를 부활시킨 열정과 경기도 경제도약으로 검증받은 능력을 대전에 헌신하는, 대전의 첫 경제시장이 되고자 한다"면서 "대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전의 경제를 쇠퇴기에 빠트리고 낙마한 시장의 소속정당 후보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시작을 외치고 있다. 지금 대전은 기만적인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혁신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 후보는 "자치분권시대에 더욱 더 막중해진 권한과 책임, 역할이 부여되는 지방정부를 구성하

는데 있어서 중앙종속형이었던 구시대를 종언하며 지역에 내재된 힘을 창조적으로 끌어내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로 한 이 시기에 국정지지도에 편승한 대통령마케팅으로 '묻지마 투표'를 강압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전광역시장 후보가 족지결손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과 그 이전에 장애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것, 또한 분양가 특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조차 없고 합동토론회도 기피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무능한 제1야당 대전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도무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1야당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대전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북 색깔론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경제문제를 내세우며 허둥대는 모습이 같은 야당으로서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대전시장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시민의 평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확장성도 없고 관리형 행정가 이외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거나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남 후보는 "대전을 혁신하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이러한 대전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경제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여당이다 해서 예산 구걸하는 앵벌이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지혜를 모아 창의력으로 당당히 국비와 민자, 외자를 끌어오는 혁신경영 시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남충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민 A씨(도마동·52)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대전보다 규모가 큰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부지사로서 경제활성화를 이뤘고, 특히 대기업 통신사 CEO로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남 후보의 정책공약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0
언론사	**주식회사 산경일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여의도동 동아빌딩 발행인 송준길
심의대상기사	산경일보 2018년 5월 30일자 4면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 주요 공약」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사진, 기호 등이 포함된 홍보 이미지를 함께 게재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 주요 공약

강남구를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광역복합 환승센터, 세텍(SETEC)부지 복합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강남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의 연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남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산업 집약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한 청년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과도한 세금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문화예술·관광의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문화 인프라를 연계하여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인 창작거리'를 만들고 세계

문화인의 순례지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다양한 예술적인 건축물이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강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이 많고 노년층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분들이 체감하는 빈부격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클 것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만큼이나 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층별로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구민의 권익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가치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구 재정은 감소하고 재건축·재개발과 주요 SOC 시설투자 억제 등의 역차별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강남구의 세금이 강남구민을 위해 먼저 쓰여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나라재산을 관리해 온 제가 강남구민의 재산관리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産經日報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 주요 공약

세계 속 명품도시로 업그레이드, 구민 권익 우선 등

◇강남구를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광역복합환승센터, 세텍(SETEC)부지 복합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강남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의 연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남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산업 집약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한 청년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과도한 세금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문화예술 · 관광의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문화 인프라를 연계해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인 창작거리'를 만들고 세계 문화인의 순례지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다양한 예술적인 건축물이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강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이 많고 노년층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분들이 체감하는 빈부격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클 것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만큼이나 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층별로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구민의 권익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가치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구 재정은 감소하고 재건축·재개발과 주요 SOC 시설투자 억제 등의 역차별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강남구의 세금이 강남구민을 위해 먼저 쓰여질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나라재산을 관리해 온 제가 강남구민의 재산관리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2 장영철

장영철의 '10대 약속'

1. 한국 경제의 뜨거운 심장, '초일류 강남'!
2. 상권이 살아나는 '활기찬 강남'!
3. 교통이 시원하게 뚫린 '사통팔달 강남'!
4. 노후 아파트 재건축으로 재탄생할 '명품 강남'!
5. 한류 중심, 세계적인 '문화 · 관광 특구 강남'!
6. 따뜻한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 강남'!
7. 획기적인 보육 · 교육 환경 개선으로 '명문 강남'!
8. 백세 시대를 선도하는 '건강 강남'!
9. 치안 · 재난 걱정 없는 '안전 강남'!
10.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강남, 청렴 강남'!

〈산경일보 2018년 5월 30일자 4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4
언론사	**청송영양신문 주식회사**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442-1 대표이사 권동준
심의대상기사	청송영양신문 2018년 5월 30일자(제112호) 8면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군의원 후보 '심민종'」 및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무소속 군의원 후보 '이광호'」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청송군의원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 2인의 출마 소감 전문을 홍보 이미지와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마의 소감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군의원 후보 '심민종'

정직과 믿음이 있는 우리 농민 대표!

2-나 심민종

저 심민종은 진보면 고현리에서 태어나 신촌초등, 진성중, 진보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농산물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진보의 상권도 죽고 있어 무척이나 힘듭니다. 우리 지역이 갈수록 IMF 때보다 더 힘들어 지고 있어 저 심민종이 지역의 조그만 밑알이 되고자 군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인근 자동차 주차 공간이 없어 지역경제가 더 죽고 있습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2차선도로와 우시장터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재주시장과 함께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에 석회성 성분이 너무 많아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K-Water와 협의해 고도 정수시설을 갖춰 독성이 없는 맑은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수계자금 및 수변구역의 돈은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의 개개인 몫임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소상히 조사하여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지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청송사과의 값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 마트, 홈쇼핑, 한국 식품연맹 등으로 MOU를 체결하여 모든 농산물을 고급을 받고 잘 팔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도 임대 농기계를 논이나 밭까지 직접 갖다 주고 가져 가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센타에서 액비(호소제)를 생산해서 각 농가로 무상 지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책자형 공보물에 소상히 밝히겠으며, 작지만 강한 청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2-나 심민종을 믿고 도와 주십시오. 군의원 본연의 업무인 행정관청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하며 군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영양신문 2018년 5월 30일자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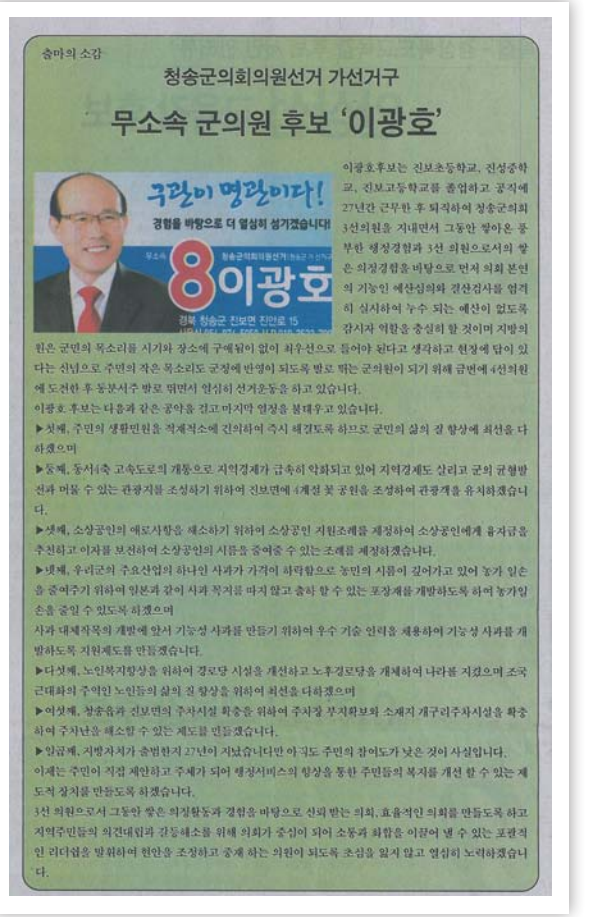
보도 내용

장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군의원 후보 '심민종'

저 심민종은 진보면 고현리에서 태어나 신촌초등, 진성중, 진보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농산물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진보의 상권도 죽고 있어 무척이나 힘듭니다. 우리 지역이 갈수록 IMF 때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어 저 심민종이 지역의 조그만 밀알이 되고자 군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 인근 자동차 주차 공간이 없어 지역경제가 더 죽고 있습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2차선도로와 우시장터에 주차 타워를 만들어 객주시장과 함께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 지방 상수도에 석회성 성분이 너무 많아 우리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K-Water와 협의해 고도정수시설을 갖춰 독성이 없는 맑은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 수계자금 및 수변구역의 돈은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의 개개인 몫임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상히 조사하여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전국 최고의 청송사과의 값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 마트, 홈쇼핑, 한국 식품연맹 등으로 MOU를 체결하여 모든 농산물을 고금을 받고 잘 팔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도 임대 농기계를 논이나 밭까지 직접 갖다 주고 가져가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기술센터에서 액비(호소제)를 생산해서 각 농가로 무상 지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책자형 공보물에 소상히 밝히겠으며, 작지만 강한 청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2-나 심민종을 믿고 도와 주십시오. 군의원 본연의 임무인 행정관청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하며 군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마의 소감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무소속 군의원 후보 '이광호'

이광호후보는 진보초등학교, 진성중학교, 진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27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여 청송군의회 3선의원을 지내면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과 3선 의원으로서의 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누수 되는 예산이 없도록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지방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시기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최우선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발로 뛰는 군의원이 되기 위해 금번에 4선의원에 도전한 후 동분서주 발로 뛰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후보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걸고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의 생활민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여 즉시 해결토록 하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동서4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의 균형발전과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보면에 4계절 꽃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을 추천하고 이자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시름을 줄여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군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사과가 가격이 하락함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어 농가 일손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사과 적과를 따지 않고 출하 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하여 농가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과 대체작목의 개발에 앞서 기능성 사과를 만들기 위하여 우수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기능성 사과를 개발하도록 지원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경로당을 개체하여 나라를 지켰으며 조국근대화의 주역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섯째, 청송읍과 진보면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확보와 소재지 개구리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7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주체가 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립과 갈등해소를 위해 의회가 중심이 되어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포괄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여 현안을 조정하고 중재 하는 의원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송영양신문 2018년 5월 30일자 8면〉

보도 내용

청송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무소속 군의원 후보 '이광호'

이광호 후보는 진보초등학교, 진성중학교, 진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27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여 청송군의회 3선의원을 지내면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과 3선 의원으로서의 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누수 되는 예산이 없도록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지방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시기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최우선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발로 뛰는 군의원이 되기 위해 금번에 4선의원에 도전한 후 동분서주 발로 뛰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후보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걸고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 첫째, 주민의 생활민원을 적재적소에 건의하여 즉시 해결토록 하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둘째, 동서4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의 균형발전과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보면에 4계절 꽃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 셋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을 추천하고 이자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시름을 줄여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넷째, 우리군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사과가 가격이 하락함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어 농가 일손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사과 꼭지를 따지 않고 출하 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하여 농가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과 대체작목의 개발에 앞서 기능성 사과를 만들기 위하여 우수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기능성 사과를 개발하도록 지원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다섯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경로당을 개체하여 나라를 지켰으며 조국 근대화의 주역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 여섯째, 청송읍과 진보면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확보와 소재지 개구리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일곱째,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7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주체가 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받는 의회,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립과 갈등해소를 위해 의회가 중심이 되어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포괄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여 현안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의원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6
언론사	**주식회사 제주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 발행인 부임춘
심의대상기사	제주신문 2018년 5월 31일자 1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대세 굳히기 돌입(변경 전 제목: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당선 굳히기)」 및 「당선되는 후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변경 전 제목: 원희룡 후보 당선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제목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당선 굳히기 돌입

본지 여론조사 결과…문대림 후보와 큰 격차

무소속 원희룡 44.5%, 민주당 문대림 37.5%

녹색 고은영, 사상최초 제1야당 제치는 이변

표심, 중앙인맥보다 '소통-갈등 해결'과 '청렴'

원희룡 후보 당선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

소통-갈등 해결 능력 보여야

중앙정부 고립 능력도 고민

선택 6.13 아름다운

〈제주신문 2018년 5월 31일자(초판) 1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대세 굳히기

당선되는 후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

본지 여론조사 결과…문대림 후보와 큰 격차
무소속 원희룡 44.5%, 민주당 문대림 37.5%
녹색 고은영, 사상최초 제1야당 제치는 이변
표심, 중앙인맥보다 '소통·갈등 해결'과 '청렴'

선택 6·13 아름다운

〈제주신문 2018년 5월 31일자(실제 배포된 수정본) 1면〉

보도 내용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대세 굳히기 돌입

(변경 전 제목: 무소속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당선 굳히기 돌입)

오는 6월 13일 제주도지사 선거 출발점에 선 민심이 원희룡 대세, 고은영 후보가 제1 야당의 후보를 제치는 이변을 일으켰다.

특히 선거 출정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지지후보를 대부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후보는 문대림 후보보다 지지도와 당선가능성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굳히기에 들어갔고, 문대림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의 지지도경쟁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며 도민 유권자들은 문대림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중앙 인사들과의 인맥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진작 도민 유권자들은 이를 도지사가 되는 중요한 자질로 보지 않고 있어 문대림 캠프의 중앙인맥을 내세운 선거 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선거 출마에 맞춰 지난 4년 동안의 부족을 인정하고 다짐하고 청렴성을 내세운 선거 전략이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 전이 시작되는 오늘 부터 남은 선거기간동안 큰 이변이 없는 한 원희룡 대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제주신문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7기 제주도지사 선거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풀이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위별)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44.5%로 1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37.5%로 2위,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4.1%로 3위, 자유한국당 김방훈후보 2.6%로 4위, 바른미래당 장성철후보는 1.2%로 5위로 조사됐다.

당선가능성은 원희룡 45.7%, 문대림22.6%, 김방훈 0.9%, 장성철 0.3%, 고은영 0.2%, 잘모름/무응답/없다 30.4%로 나타나 원희룡과 문대림 후보와의 격차가 무려 23.1%p까지 벌어졌다. 당선가능성은 일반 유권자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바닥 여론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이어 지지하는 후보 없다는 2.3%, 잘모름/무응답 7.9%로 조사 됐다. 또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75.2%,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7.7%,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5.3%, 투표를 안 할 생각이다 1.5%, 잘모름/무응답이 0.3%로 조사됐다.

이는 금번 선거에서 교육위원 후보들 대부분이 무투표 당선, 도의원 지역구 중 무투표 당선지역이 많아 낮은 투표율을 보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참여 유권자가 75.2%에 달해 투표율 역시 역대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지사가 갖춰야 할 자질 중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로는 소통과 갈등 해결능력 34.8%, 도정운영 능력 26.3%, 청렴성과 도덕성 22.3%, 중앙정부와의 교감능력 12.1%, 잘모름/무응답이 4.5%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주신문이 서베이몹(KTMM)에 의뢰해 2018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 기준 제주도거주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조사했다.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18년 4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 기준이다. 조사 방식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유선 RDD표본 프레임에서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무작위로 추출한 유무선전화면접조사(유선32% 무선68%)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0.1%(4965명과 통화해 이 가운데 1000명과 응답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 내용

당선되는 후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

(변경 전 제목 : 원희룡 후보 당선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 수두룩)

이번 여론조사의 맥락은 예상됐던 바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75.2%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이어질 경우 원 후보가 문 후보를 겪으며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문제는 누구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소통과 갈등을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전체의 34.8%의 응답자가 주문한 것으로 원 후보는 이를 절대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도정 운영 능력이다. 이 부문은 26.3%의 응답자가 주문한 것이다. 도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이미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22.3%인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도지사로서 갖춰야 할 이 부분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이기도 하다.

네 번째로 중앙정부와의 교섭능력이다. 이 부분도 원 지사가 재임 초기 제주출신보다 서울 등 타지역 출신을 고용하면서 해결하려 했던 부분이다. 결론은 욕만 먹고 실패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선거 이후 도민들이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다.

5. 권고 결정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0
언론사	**강릉신문**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98 대표 최종설
심의대상기사	강릉신문 2018년 3월 14일자(제1157호) 3면 「6·13 지방선거 강릉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심재종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 전문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릉신문 제1157호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3

6 · 13 지방선거 강릉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심재종 출마의 변

▲ 심재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6월13일 지방선거 강릉시장 예비후보 더불어 민주당 심재종입니다.

저는 강릉시 옥천동 47번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까지 강릉에서 공부했으며, 지역 언론 기자생활도 시작했지도 대부분 강원도 였습니다.

다가오는 6.13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아니라 우리 강릉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강릉시장을 뽑는 선거 입니다.

국곤지 여러분들은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강릉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강릉의 여사적 분위를 전홀시킬 수 있는 소신 있고, 예랑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장을 나설 자격이 있는가?"

"진짜 출마의 목적이 무엇인가?"

"강릉을 강릉시민을 위해 일개 진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본 후에 자신이 없다면 그만 물러서는 것이 자기 자신과 강릉시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올바 고아라고 지 "심재종은 "든 감이 출마한 여러 후보님들께 많을 드리고 싶습니다.

"23년 전 최초의 지방 자치제 선거가 시작된 1995년, 저 나이 47세에 정보화의 정점 경영시대 에서는" 전국적 행정의 기법에 경험의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켜야 된 지방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한 슈보건은 그 당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심재종 이였습니다.

2018년 2월 "자치 단체장 및 의원들이 월치보다 아닌 경력 존리에 우선하여 책임 주민의식을 갖고 소신껏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울러야만 경쟁과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시장은 정치를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강릉시민을 위한 손수한 봉사자이어야 합니다.

먼저 "새로 창조한 사람", "지역사회의 혁신에 앞장에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서로 협력하여 모든 일을 풀어 가야다는 예랑으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으로 뽑아놓고 잘못 뽑았다고 가슴을 칠만 스러운 과거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입니다.

특히, 6.1년 시장을 뽑는 6월 선거는, 강릉시가 이대로 머무를 것인가?

강릉이 갖고 있는 미래 잠재적 발전 산업을 대차게 펼아 갈 것인가?

하는 강릉호의 선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 입니다.

심선 넋릴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나 포한 정치적 경력이나 능력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강릉시 발전에 헌신적인 인물이 당선되는 선거 풍토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다시는 잘못에 대한 불신 심까풍운에 대한 실망감을 맛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1표 승으로 뽑아 놓고 내압으로 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시다.

저 심재종은 허남이 "홍길동전"처럼 예고에만 갇혀있던 당시 선비사회에서 보면 이단시 되었지만 그러나 답게받는 허균은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자 강릉의 자랑 "허균"처럼 봄처를 모르며 바른일과 봉등으로 여러분을 대한 하겠습니다.

저는 강릉시민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며, 법과 원칙을 어기지 않고 누구의 지내도 어닌 강릉 시민 여러분의 부지런한 머슴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심사임당" 자체 "율곡이이"선생님은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16세기 이미 "대동법"과 "사창제"를 주장 해왔으며 성리학적 잡론보다 실사의 확립을 주장하여 항후 항아의 실사에 깊이 관여하신 것을 우리 강릉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재종인가?"

"제" 심재종은 우리 강릉시를 잘 이끌어 갈 사람인가?"

그 당시 모든 나이 드신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걱으로 젊지만 보탕고개 시킬 1976년 , 저는 삼양식품그룹의 기획조정실 기획경영부장 및 롯데소중애인로서 주어진 같이 해오면서 그 당시 나의 그런 강릉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우리들은 구슬땀을 흘릴고 버무에서 삶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가난이라는 비바람을 맞으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강릉시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저 심재종은 36년 전 1990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관광리조트 사업인 "대명비발디파크" 해양설립준로로 강릉도 최초의 별종 관광지를 만들었다고 자부 합니다. 그 이후 "대명설악리조트" "홍천 리조트" 개발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당시 불모지 강원도"땅에 관광개념 육지 최고 지상은 세계인이 찾는 "리조트 그룹"의 발전에 기여해 왔고 계획한 꿈을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경험과 마래를 향한 강한 추진력으로 세계적인 명품 관광 리조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심재종은 여러분의 조기동 모이 저 지방자치가 부러워하고 세계인이 선호하는 명품관광 허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 고향 강릉은 여러분들과 자신이 함께 살아왔으며 살아갈 이 터전을 함께 힘과 용기를 모아가 주어 나가야 할 박중하게 봉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나무보 조각을 할 수 없고 적은 돌으로 탑을 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없는 저랑에게 아무리 큰 지역을 쉽게도 여러분 앞에 서 감히 한 꿈을 말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강릉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각할 수 있는 나무 탑을 쌓을 때 할 수 있는 심재종에게 주 기중한 표를 주십시오.

솜항에 스민 경포대 파도소리가 함께한 강릉시민의 곁가에 흐르고 같이 내린 하얀겨울 풍경에서 푸근함을 느끼는 우리 고향 강릉 "자는 대명베리그룹" 접합관광리조트 사업 홀천이조의 개발사업의 종결 본부장을 임할 경력 전문가로서 넓은 유록 속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공고 당당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온 저는 여러분 곁에 서서 할 수 있는 우도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드리는 발로 뛰는 일꾼, 강릉 시민의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며 가슴이 뛰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힘 강냉하시고 개서무무 반은을 기원 합니다.

우리 모두 강릉을 예시하고 창조하는데 "준비된 경영자" "일을 경제 전문가"

저 심재종과 함께 "강릉을 강릉 답게 만듭시다".

감사 합니다.

〈강릉신문 2018년 3월 14일자 3면〉

보도 내용

6·13 지방선거 강릉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심재종 출마의 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6월 13일 지방선거 강릉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심재종 입니다.

저는 강릉시 회산동 473번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까지 강릉에서 공부했으며, 저의 인생 긴 여정의 사회생활도 대부분 강원도 였습니다.

다가오는 6·13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강릉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강릉시장을 뽑는 선거 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강릉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강릉의 역사적 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소신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략)–

23년전, 최초의 지방 자치제 선거가 시작된 1995년, 제 나이 47세에 정보화의 무한 경쟁시대에서는 "전문적 행정의 기법에 경험의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켜야만 지방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한 슬로건은 그 당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심재종 이였습니다.

2014년 5월 "자치 단체장 및 의원들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우선하여 책임주인의식을 갖고 소신껏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울러야만 강릉과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시장은 정치를 위한 정치인 아니라, 강릉시민을 위한 순수한 봉사자이어야 합니다.

먼저 "곧고 정직한 사람" "지역사회의 형편에 밝으며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서로 협력하여 모든 일을 풀어가겠다는 애향심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뽑아놓고 잘못 뽑았다고 가슴을 쳤던 쓰라린 과거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번 시장을 뽑는 6월 선거는 강릉시가 이대로 머무를 것인가?

강릉이 갖고 있는 미래성장 잠재적산업을 대차게 몰아갈 것인가? 하는 강릉호의 선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 입니다.

–(중략)–

저 심재종은 허균의 '홍길동전'처럼 예교에만 얽매였던 당시 선비사회에서 보면 이단시 되었지만 그러나 핍박받는 하층민서민의 입장에서 정치관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자 강릉의 자랑 "허균"처럼 불의를 모르며 바른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대변하겠습니다.

저는 강릉시민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며, 법과 원칙을 어기지 않고 누구의 시녀도 아닌 강릉시민 여러분의 부지런한 머슴이 될 것입니다.

–(중략)–

"왜? 심재종인가?"

"왜? 심재종은 우리 강릉시를 잘 이끌어 갈 사람인가?"

그 당시 모든 나이드신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겪으셨겠지만 보릿고개 시절 1976년, 저는 삼양식품그룹의 기획조정실 기획경영부장으로서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그 당시 나의 고향 강릉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략)–

저 심재종은 28년 전 1990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관광리조트 사업인 '대명레저그룹' 에 창설임원으로 본부장으로서 강원도 최초의 명품 관광지를 만들었다고 자부 합니다. 그 이후 '대명설악리조트', '홍천 리조트' 개발사업과 운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당시 불모지 강원도 땅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금은 세계인이 찾는 "리조트 그룹"의 발전에 기여해 왔고 계획한 꿈을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경험과 미래를 향한 강한 추진력으로 세계적인 명품 관광 허브도시 건설 실현을 위해 심재종은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타 지방자치제가 부러워하고 세계인이 선호하는 명품관광 허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 고향 강릉은 여러분들과 자식이 함께 살아왔으며 살아갈 이 터전을 함께 힘과 슬기를 모아 가꾸어 나가야 할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18년 강릉은 동계올림픽 개최와 서울과 2시간대 KTX개통, 세계속의 스포츠, 문화, 관광, 힐링의 지역으로서 선현들의 지조있는 정신적인 문화가치가 우리 강릉시민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흐

르고 있습니다.

저 심재종은 정치적 경험은 없지만 어느 후보도 갖고 있지 않은 실물경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명품도시"란 정신적 가치의 기반에서 갖추게 된 교통, 숙박시설, 문화시설, 국제 경기장, 선진 시민의식, 역사적인 유, 무형의 고귀한 자산을 한데로 모아야만 합니다.

–(중략)–

솔향이 스민 경포대 파도소리가 활기찬 강릉시민의 귓가에 흐르고 눈이 내린 하얀 겨울 풍경에서 푸근함 느끼는 우리 고향 강릉. 저는 "대명레져 그룹" 종합관광리조트 사업 홍천리조트 개발사업의 총괄 본부장 등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한점 부끄러움 없이 곧고 당당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온 저는 여러분 편에 서서 불편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발로 뛰는 일꾼, 강릉 시민의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며 가슴이 통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음력 4월 5일(양력 5월) 열리는 "민중의 축제" 강릉 단오제처럼 농경과 어로의 불리한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믿음과 문화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강릉시민 정신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불꽃이 되겠습니다.

–(중략)–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고 세대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저 강릉 시민의 살림살이를 똑바로 꾸려가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고착화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재종" 을 시장 뽑아 놓았더니, "우리고향 강릉을 잘 살게 했다는말" 두고두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늘 강녕하시고 가내 두루 행운을 기원 합니다.

우리 고장 강릉을 혁신하고 창조하는데 "준비된 경영자", "실물경제 전문가" 저 심재종과 함께 "강릉을 강릉답게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6
언론사	**주식회사 남도일보**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발행인 김성의
심의대상기사	남도일보 2018년 4월 5일자 17면 「평범한 아버지의 도전」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입장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남도일보

목요마당

2018년 04월 05일
17면 (오피니언)

평범한 아버지의 도전

최유정
<동화작가>

벌떡 일어났다. 신문사에 보내야 할 글 때문이다. 무엇에 대해 써야할 지 갈피조차 잡아 놓지 않은 상태라 잠을 자는 중에도 내내 시달렸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눈이 떠진 것은 미뤄놓은 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계를 보니 5시 27분. 본능적으로 나를 깨워준 불안과 초조에 감사하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10시부터 약속이 있으니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곤 지금밖에 없었다. 나를 깨워준 본능에 감사하며 어제의 일상을 찬찬히 되짚기 시작했다. 어차피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일 터. 일상에서 글의 실마리 역시 찾아야 했다. 문득 어제 만난 얼굴이 떠올랐다. 입양부모 모임에서 만난 목사부부였다. 나는 오랜만에 호젓한 시간을 가졌던 어제의 만남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두 분의 선한 미소가 떠올라 나도 몰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입양부모다.

생후 10개월, 뱃속의 아이가 발딱거릴 때의 느낌마냥 나는 태어난 지 10개월 밖에 안 된, 심핏줄이 퍼렇게 드러날 정도로 얼굴이 창백했던 아기가 내 가슴에 안겨 발딱거리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까? 아이를 안고 평평 울었던 그 순간 역시 잊을 수가 없다. 어제 만난 입양부모와도 그 순간을 이야기 했었는데 느닷없이 몰려왔던 미안함과 감사함. 그 순간 느꼈던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미안함과 감사함은 사실 죄책감 때문이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고는 있지만 때때로, 틈틈이 나 역시도 '다름'을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싶은 깨달음이 천재지변처럼 나를 덮쳤고 나는, 힘들었을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견뎌내준 아이가 너무 대견했다. 위대해 보였다. 그래서 아이를 껴안고 영엉, 펑펑 울었더랬다. 아이는 이유도 없이 저를 껴안고 우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 등을 토닥여줬었다. 나는 그 새털처럼 보드라운 손, 그 작은 손의 온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 만난 입양부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자존' 이었다. 스스로 자(自)에 중할 존(尊). 스스로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입양아들은 탄생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 낳아 준 부모와 살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나가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과정. 그 과정을 원초적으로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자존감 상실은 어쩌면 자연스런 과정일지 모른다. 공개입양부모들은 그래서 때때로 모여 아이의 자존을 세워나갈 갖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더불어, 함께 대처해 나간다. 나 역시 공개입양부모 모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덕분인지 올해 스무 살이 된 딸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변의 힘이고 '더불어'의 힘이다. 다 덕분인 것이다.

물론 '자존', 스스로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세워나가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판단의 기준점이 '나'가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인 우리 사회에선 더더욱 그렇고 입양아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선 유별나게 여려운 문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자. 나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 지듯 힘들을 이겨낸 성장은 보다 더 눈부실 거라 생각한다. 자존감 상실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자존의 꽃을 피워낼 거라 확신한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살피는 과정에서 더 단단한 자존이 만들어질 거라 믿고 단언한다.

입양아들이 힘들을 이겨내는 과정,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는 과정, 탄생으로부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은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혀약한 사회를 견뎌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 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자존' 이란 내 안의 나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며 내 안의 나를 끊임없이 발견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양아들은 자신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하고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입양아인 딸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딸아이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딸아이는 자금 이순간도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끄집어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나는 딸아이가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신에 집중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금은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딸아이가 참, 멋져 보인다. 참, 잘 자라주었다.

어제 만난 입양부모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에게 물었다.

"왜 정치를 하십니까? 왜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쓰던 원고도 멈추게 하고 나를 거리로 나서게 한 남편. 책 한 줄 읽을 여유조차 없는 분주함으로 나를 내몬 남편. 하지만 오늘은 남편의 대답을 끝으로 글을 맺어야 할 것 같다.

"딸아이가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 길 바랍니다.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살 길 바랍니다. 딸 키우는 아버지의 평범한 소망이 그대로 이뤄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 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몰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앞에 앉아 있던 목사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처럼 남편이 자랑스러워지는 시간. 서울로 유학 가 있는 딸이 보고 싶었다.

(23.0×19.3cm)

〈남도일보 2018년 4월 5일자 17면〉

보도 내용

평범한 아버지의 도전

벌떡 일어났다. 신문사에 보내야 할 글 때문이다. 무엇에 대해 써야할 지 갈피조차 잡아 놓지 않은 상태라 잠을 자는 중에도 내내 시달렸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눈이 떠진 것은 미뤄놓은 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계를 보니 5시 27분. 본능적으로 나를 깨워준 불안과 초조에 감사하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10시부터 약속이 있으니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곤 지금밖에 없었다. 나를 깨워준 본능에 감사하며 어제의 일상을 찬찬히 되짚기 시작했다. 어차피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일 터. 일상에서 글의 실마리 역시 찾아야 했다. 문득 어제 만난 얼굴이 떠올랐다. 입양부모 모임에서 만난 목사부부였다. 나는 오랜만에 호젓한 시간을 가졌던 어제의 만남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두 분의 선한 미소가 떠올라 나도 몰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입양부모다.

생후 10개월, 뱃속의 아이가 팔딱거릴 때의 느낌마냥 나는 태어난 지 10개월 밖에 안 된, 실핏줄이 퍼렇게 드러날 정도로 얼굴이 창백했던 아기가 내 가슴에 안겨 팔딱거리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까?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던 그 순간 역시 잊을 수가 없다. 어제 만난 입양부모와도 그 순간을 이야기 했었는데 느닷없이 몰려왔던 미안함과 감사함. 그 순간 느꼈던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미안함과 감사함은 사실 죄책감 때문이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고는 있지만 때때로, 틈틈이 나 역시도 '다름'을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싶은 깨달음이 천재지변처럼 나를 덮쳤고 나는, 힘들었을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견뎌내 준 아이가 너무 대견했다. 위대해 보였다. 그래서 아이를 껴안고 엉엉, 펑펑 울었더랬다. 아이는 이유도 없이 저를 껴안고 우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 등을 토닥여줬었다. 나는 그 새털처럼 보드라운 손, 그 작은 손의 온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 만난 입양부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자존'이었다. 스스로 자(自)에 중할 존(尊), 스스로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입양아들은 탄생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 낳아 준 부모와 살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나가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과정. 그 과정을 원초적으로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자존감 상실은 어쩌면 자연스런 과정일지 모른다. 공개입양부모들은 그래서 때때로 모여 아이의 자존을 세워나갈 갖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더불어, 함께 대처해 나간다. 나 역시 공개입양부모 모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덕분인지 올해 스무 살이 된 딸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변의 힘이고 '더불어'의 힘이다. 다 덕분인 것이다.

물론 '자존', 스스로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세워나가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판단의 기준점이 '나'가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인 우리 사회에선 더더욱 그렇고 입양아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선 유별나게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자. 나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 지듯 힘듦을 이겨낸 성장은 보다 더 눈부실 거라 생각한다. 자존감 상실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자존의 꽃을 피워낼 거라 확신한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살피는 과정에서 더 단단한 자존이 만들어질 거라 믿고 단언한다.

입양아들이 힘듦을 이겨내는 과정, 자존감 상실을 경험하는 과정, 탄생으로부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은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허약한 사회를 견뎌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자존'이란 내 안의 나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며 내 안의 나를 끊임없이 발견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양아들은 자신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하고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입양아인 딸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딸아이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딸아이는 지금 이순간도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끄집어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나는 딸아이가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신에 집중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딸아이가 참, 멋져 보인다. 참, 잘 자라주었다.

어제 만난 입양부모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에게 물었다.

"왜 정치를 하십니까? 왜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쓰던 원고도 멈추게 하고 나를 거리로 나서게 한 남편, 책 한 줄 읽을 여유조차 없는 분주함으로 나를 내몬 남편. 하지만 오늘은 남편의 대답을 끝으로 글을 맺어야 할 것 같다.

"딸아이가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 길 바랍니다.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살 길 바랍니다. 딸 키우는 아버지의 평범한 소망이 그대로 이뤄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 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몰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앞에 앉아 있던 목사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처럼 남편이 자랑스러워지는 시간. 서울로 유학 가 있는 딸이 보고 싶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27
언론사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 박종면
심의대상기사	머니투데이 2018년 3월 28일자 8면 「'34세의 젊은' 강남구청장」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머니투데이
광화문

2018년 03월 28일
08면 (오피니언)

'34세의 젊은' 강남구청장

#'젊은' 도전자가 있다. 말 그대로 젊다. 이제 36세, 만으로 34세다. 현재 직업은 강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다.

사실 젊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다. 누군가에겐 미래고 누군가에겐 과거다. 그에겐 현재다. 그 젊음을 정치에 던진다. 정치는 갈수록 늙어간다. 지난해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평균나이는 55.5세. 2020년 임기 마지막 해가 되면 평균 환갑 나이가 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연간 기획 '젊은 정치'에 따르면 청년들이 정치 진입에서 느낀 가장 큰 장벽은 '나이'였다. "다음 기회에…" "아직 젊잖아…" "경험이 좀…". 젊음을 누르기 위한 기성세대의 단골 메뉴다. '젊은 정치'를 내걸고 뛰는 이의 발을 슬쩍 건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테니스 스타 정현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이율배반적이고 약간 비겁하다.

#'성장'한다. 민주당 당직자 생활을 하던 그는 2014년 강남구의원에 출마한다. 주위의 반응은 대부분 "뜬금없다"였다. 선배들은 "강남구의원에 나가면 구의원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모험을 감행한다. 결과는 최연소 서울시 구의원 당선. 만 서른 살의 구의원을 향한 냉소와 무시는 4년 뒤 사라졌다.

구의원이 할 일이 구청과 구청장 감시라면 그의 실력은 검증됐다. 그는 '신현희 강남구청장 저격수'로 통한다. '강남구 댓글부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강남구 관련 언론 보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하하고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찬양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린 사건이다. 그는 이 댓글을 쓴 누리꾼들 ID가 강남구청 직원들의 ID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슈화했다.

신 구청장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도 터뜨렸다. 신 구청장은 구속됐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선의 구청장을 상대하는 초짜 구의원을 보고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잘못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됐다.

박재범
정치부장

#강남이다. 정치적으론 보수의 텃밭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만한 험지가 없다. 4년 전 서울시 시의원 후보조차 못 낸 곳이다. 역대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그곳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뛰어든다. 당내 눈치를 보기보다 현수막을 내걸고 구민들을 만난다. "구의원 따위가 구청장을…"이란 현실적 편견의 벽에 부닥친다.

강남의 이미지는 성공, 부자 등이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강남의 상징은 테헤란밸리였다. 지금은 강남 하면 아파트를 떠올린다. 강남 브랜드를 아파트에서 스마트도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 자체가 도전이다.

6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그의 정책 고민은 삶과 직결된다. 보건소를 찾고 어린이집을 찾다 보니 눈에 보인다. '애 키우는' 구청장에겐 생활이 곧 의견수렴이다. 무모한 도전인지, 무한 도전인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민주당과 강남은 젊은 도전자, 성장하는 정치인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할 만하다. 민주당과 강남이 그를 선택할 만한 용기를 가졌는지와 별개로 말이다. 그의 이름은 여선웅이다. 6·13 지방선거 때 여선웅 같은 젊은 정치인이 활약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 도전자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을까.

swallow@

(23.4×14.9)cm

〈머니투데이 2018년 3월 28일자 8면〉

보도 내용

‘34세의 젊은’ 강남구청장

‘젊은’ 도전자가 있다. 말 그대로 젊다. 이제 36세, 만 나이로 34세다. 현재 직업은 강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다.

사실 젊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다. 누군가에겐 미래이고 누군가에겐 과거다. 그에겐 현재다. 그 젊음을 정치에 던진다. 정치는 갈수록 늙어간다. 지난해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평균 나이는 55.5세. 2020년 임기 마지막해가 되면 이들의 평균 나이는 59.5세, 환갑이 된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연간기획 ‘젊은 정치’에 따르면 청년들이 정치 진입에서 느낀 가장 큰 장벽은 ‘나이’였다. “다음 기회에…” “아직 젊잖아…” “경험이 좀…”. 젊음을 누르기 위한 기성세대의 단골 메뉴다. ‘젊은 정치’를 내걸고 뛰는 이의 발을 슬쩍 건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테니스 스타 정현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이율배반적이고 약간 비겁하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31세), 저신다 뉴질랜드 총리(37세) 등 30대 지도자들은 지방기초단체 등에서 정치를 경험했다. 이들은 “다음 기회에…”라는 말 대신 “이번에…”라는 격려를 들었을 거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이 된 게 35세 때다. 빌 클린턴은 서른 두살에 아칸소 주지사가 됐다. ‘젊음’은 ‘경륜’과 경쟁할 수 있는 요인이지 양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성장’한다. 민주당 당직자 생활을 하던 그는 2014년 강남구의원에 출마한다. 주위의 반응은 대부분 ‘뜬금없다’였다. 선배들은 “강남구의원에 나가면 구의원 한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모험을 감행한다. 결과는 최연소 서울시 구의원 당선. 만 서른 살의 구의원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다. 냉소와 무시는 4년이 지난 뒤 사라졌다.

구의원이 할 일이 구청과 구청장 감시라면 그의 실력은 검증됐다. 그는 ‘신현희 강남구청장 저격수’로 통한다. ‘강남구 댓글부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강남구 관련 언론 보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하하고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찬양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린 사건이다. 그는 이 댓글을 쓴 누리꾼들 아이디가 강남구청 직원들의 아이디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슈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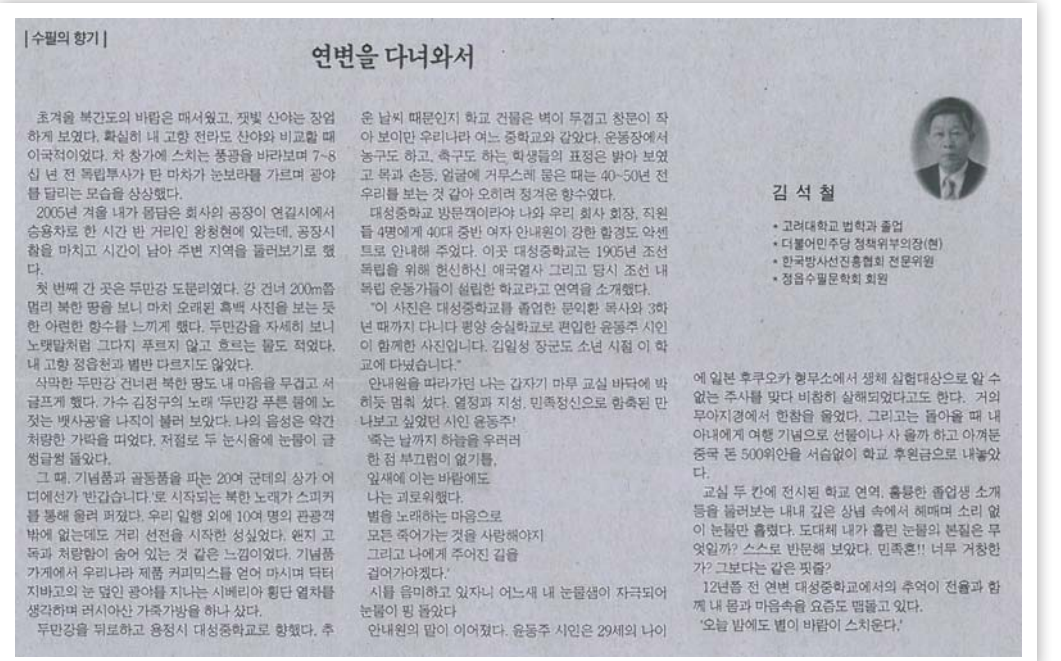
또 신 구청장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도 터뜨렸다. 신 구청장은 구속됐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재선의 구청장을 상대하는 초짜 구의원을 보고 무모하다고 했다. 지겹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잘못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됐다.

강남이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의 텃밭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만한 험지가 없다. 4년 전 서울시 시의원 후보조차 못 낸 곳이다. 역대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지만 쉽지 않은 곳이다. 그 곳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뛰어든다. 당내 눈치를 보기보다 현수막을 내걸고 구민들을 만난다. "애송이" "구의원 따위가 구청장을…"이란 현실적 편견의 벽에 부닥친다.

강남의 이미지는 성공, 부자 등이다. 그는 여기에 젊음을 더한다. 역동적 강남을 그린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강남의 상징은 테헤란 밸리였다. 지금은 강남하면 아파트를 떠올린다. 강남 브랜드를 아파트에서 스마트도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 자체가 도전이다.

6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그의 정책 고민은 삶과 직결된다. 보건소를 찾고 어린이집을 찾다보니 눈에 보인다. '애 키우는' 구청장에겐 생활이 곧 의견 수렴이다. 무모한 도전인지, 무한 도전인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민주당과 강남은 젊은 도전자, 성장하는 정치인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 할 만 하다. 민주당과 강남이 그를 선택할 만한 용기를 가졌는지와 별개로 말이다. 그의 이름은 여선웅이다. 여선웅같은 젊은 정치인이 6·13지방선거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 도전자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을까.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49
언론사	**유한회사 정읍시사**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388 삼화타운상가 302호 발행인 변재윤
심의대상기사	정읍시사 2018년 4월 16일자 7면 「연변을 다녀와서」 제하의 저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북 정읍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저술(수필)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필의 향기 |

연변을 다녀와서

김 석 철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현)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
- 정읍수필문학회 회원

초겨울 북간도의 바람은 매서웠고, 잿빛 산야는 장엄하게 보였다. 확실히 내 고향 전라도 산야와 비교할 때 이국적이었다. 차 창가에 스치는 풍광을 바라보며 7~8십 년 전 독립투사가 탄 마차가 눈보라를 가르며 광야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2005년 겨울 내가 몸담은 회사의 공장이 연길시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 반 거리인 왕청현에 있는데, 공장시찰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주변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간 곳은 두만강 도문리였다. 강 건너 200m쯤 멀리 북한 땅을 보니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했다. 두만강을 자세히 보니 노랫말처럼 그다지 푸르지 않고 흐르는 물도 적었다. 내 고향 정읍천과 별반 다르지도 않았다.

삭막한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도 내 마음을 무겁고 서글프게 했다. 가수 김정구의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나직이 불러 보았다. 나의 음성은 약간 처량한 가락을 띠었다. 저절로 두 눈시울에 눈물이 글썽글썽 돌았다.

그 때, 기념품과 골동품을 파는 20여 군데의 상가 어디에선가 '반갑습니다.'로 시작되는 북한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우리 일행 외에 10여 명의 관광객밖에 없는데도 거리 선전을 시작한 성싶었다. 왠지 고독과 처량함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기념품 가게에서 우리나라 제품 커피믹스를 얻어 마시며 닥터 지바고의 눈 덮인 광야를 지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생각하며 러시아산 가죽가방을 하나 샀다.

두만강을 뒤로하고 용정시 대성중학교로 향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학교 건물은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아 보이만 우리나라 여느 중학교와 같았다.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고 복과 손등, 얼굴에 거무스레 묻은 때는 40~50년 전 우리를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정겨운 향수였다.

대성중학교 방문객이라야 나와 우리 회사 회장, 직원들 4명에게 40대 중반 여자 안내원이 강한 함경도 악센트로 안내해 주었다. 이곳 대성중학교는 1905년 조선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열사 그리고 당시 조선 내 독립 운동가들이 설립한 학교라고 연역을 소개했다.

"이 사진은 대성중학교를 졸업한 문익환 목사와 3학년 때까지 다니다 평양 숭실학교로 편입한 윤동주 시인이 함께한 사진입니다. 김일성 장군도 소년 시절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안내원을 따라가던 나는 갑자기 마루 교실 바닥에 박히듯 멈춰 섰다. 열정과 지성, 민족정신으로 함축된 만나보고 싶었던 시인 윤동주!

'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시를 음미하고 있자니 어느새 내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물이 핑 돌았다

안내원의 말이 이어졌다. 윤동주 시인은 29세의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대상으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다 비참히 살해되었다고도 한다. 거의 무아지경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 내 아내에게 여행 기념으로 선물이나 사 올까 하고 아껴둔 중국 돈 500위안을 서슴없이 학교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교실 두 칸에 전시된 학교 연역, 훌륭한 졸업생 소개 등을 둘러보는 내내 깊은 상념 속에서 헤매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도대체 내가 흘린 눈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스스로 반문해 보았다. 민족혼!! 너무 거창한가? 그보다는 같은 핏줄?

12년쯤 전 연변 대성중학교에서의 추억이 전율과 함께 내 몸과 마음속을 요즘도 맴돌고 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운다.'

〈정읍시사 2018년 4월 16일자 7면〉

보도 내용

연변을 다녀와서

초겨울 북간도의 바람은 매서웠고, 잿빛 산야는 장엄하게 보였다. 확실히 내 고향 전라도 산야와 비교할 때 이국적이었다. 차 창가에 스치는 풍광을 바라보며 7~8십 년 전 독립투사가 탄 마차가 눈보라를 가르며 광야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2005년 겨울 내가 몸담은 회사의 공장이 연길시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 반 거리인 왕청현에 있는데, 공장시찰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주변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간 곳은 두만강 도문리였다. 강 건너 200m쯤 멀리 북한 땅을 보니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했다. 두만강을 자세히 보니 노랫말처럼 그다지 푸르지 않고 흐르는 물도 적었다. 내 고향 정읍천과 별반 다르지도 않았다.

삭막한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도 내 마음을 무겁고 서글프게 했다. 가수 김정구의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을 나직이 불러 보았다. 나의 음성은 약간 처량한 가락을 띠었다. 저절로 두 눈시울에 눈물이 글썽글썽 돌았다.

그 때, 기념품과 골동품을 파는 20여 군데의 상가 어디에선가 '반갑습니다.'로 시작되는 북한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우리 일행 외에 10여 명의 관광객밖에 없는데도 거리 선전을 시작한 성싶었다. 왠지 고독과 처량함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기념품 가게에서 우리나라 제품 커피믹스를 얻어 마시며 닥터 지바고의 눈 덮인 광야를 지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생각하며 러시아산 가죽가방을 하나 샀다.

두만강을 뒤로하고 용정시 대성중학교로 향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학교 건물은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아 보이만 우리나라 여느 중학교와 같았다.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고 목과 손등, 얼굴에 거무스레 묻은 때는 40~50년 전 우리를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정겨운 향수였다.

대성중학교 방문객이라야 나와 우리 회사 회장, 직원들 4명에게 40대 중반 여자 안내원이 강한 함경도 악센트로 안내해 주었다. 이곳 대성중학교는 1905년 조선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열사 그리고 당시 조선 내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학교라고 연혁을 소개했다.

"이 사진은 대성중학교를 졸업한 문익환 목사와 3학년 때까지 다니다 평양 숭실학교로 편입한 윤동주 시인이 함께한 사진입니다. 김일성 장군도 소년 시절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안내원을 따라가던 나는 갑자기 마루 교실 바닥에 박히듯 멈춰 섰다. 열정과 지성, 민족정신으로 함축

된 만나보고 싶었던 시인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시를 음미하고 있자니 어느새 내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물이 핑 돌았다.

안내원의 말이 이어졌다. 윤동주 시인은 29세의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대상으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다 비참히 살해되었다고도 한다. 거의 무아지경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 내 아내에게 여행 기념으로 선물이나 사 올까 하고 아껴둔 중국 돈 500위안을 서슴없이 학교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교실 두 칸에 전시된 학교 연혁, 훌륭한 졸업생 소개 등을 둘러보는 내내 깊은 상념 속에서 헤매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도대체 내가 흘린 눈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스스로 반문해 보았다. 민족혼!! 너무 거창한가? 그보다는 같은 핏줄?

12년쯤 전 연변 대성중학교에서의 추억이 전율과 함께 내 몸과 마음속을 요즘도 맴돌고 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5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발행인 최윤채
심의대상기사	경북매일 2018년 5월 3일자 4면 「한국당, 광역 6명중 3~4석 차지 전망」 및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 2018년 5월 4일자 5면 「한국당 6·13 地選 공천자 명단」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출처 없이 경상북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예측하면서,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자 명단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매일

2018년 05월 03일
04면 (선거)

한국당, 광역 6명중 3~4석 차지 전망

경북 지방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두고 촉각
민주당 30% 지지율 여부 따라 희비 갈릴 듯

한국당 경북도당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가 102명으로 드러나면서 당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최대 4명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초의원 비례는 34명 정원에 84명이 신청해 평균 2.4대 1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여성과 청년, 직능별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최소 5% 이상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원은 정원 54명에 비례대표가 6석이, 기초의원은 지역구 247명에 비례대표 37명이 각 시군에 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은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은 34명이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달았다.

올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한국당이 3~4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2석씩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40%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 비례는 한국당 3석, 더불어민주당 2석, 바른미래당 1석 등으로 배분된다.

한국당 지지율이 60%를 넘고 민주당이 30% 정도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면 한국당 4석, 민주당 2석이고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없어질수 있다. 5% 이상 득표했다고 해도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정당에 밀려 단 한석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이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 선을 넘어서느냐와 바른미래당 지지율 분포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권에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3번까지 안정권에 속해 여성과 남성, 여성 비율로 정해지는 순번에 누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의 전례를 본다면 당직자 중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와 헌신도, 기여도를 기준으로 앞순위가 결정돼 왔다.

도당 대변인과 각 위원장 중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순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 안팎의 예상이다. 도내 노동계도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당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노동계 대표의 당선권 진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역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정해진다. 포항의 경우 비례대표 4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3명이 안정권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5명 이상이 신청한 경주, 김천, 경산, 구미, 영천시 지역은 높은 당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4명을 목표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최소한 3석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례대표 신청자들의 당원 확보 등 당 기여도면에서의 역할을 평가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5.4×10.7)cm

〈경북매일 2018년 5월 3일자 4면〉

경북매일

2018년 05월 03일
04면 (선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

〈성년, 전·현직職〉

▦ 광역의원

△신병철(58년·현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김영식(59년·현 경북도당 장애인위원장) △김성용(65년·현 방송통신대 동문회 부회장) △이광식(54년·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수석부회장) △천기화(69년·현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주정례(56년·전 영주시 환경보호과장) △김성열(69년·현 구미국가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 노조위원장) △박채아(86년·세무사) △황정심(52년·제18대 대선선대위 미래희망대책위 경북여성부위원장) △정경민(71년·현 경북도당 대변인) △박규탁(62년·현 경북도당 대변인) △김무영(58년·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훈(65년·전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이연희(63년·현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신도회장) △김선홍(68년·전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회장) △윤승오(62년·현 자유한국당 영천당협 부위원장) △이선희(62년·전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유신애(69년·현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장)

▦ 기초의원

◇**포항시** △권경옥(55년·전 포항시 여성청소년과장) △한분자(51년·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정(78년·현 자유한국당 포항북 차세대여성위원장) △장영자(62년·현 늘기쁜약국 약사)

◇**울릉군** △김숙희(52년·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장) △이연주(51년·전 울릉군 의원)

◇**경주시** △이종수(56년·현 국제라이온스로타리연합 참사랑클럽 수석부회장) △손협(66년·현 경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찬(53년·전 신한국당 국회5급 비서관) △장복이(61년·현 한국노총 경북지역지부 의장) △최정희(53년·현 행정동우회 여성회 회장) △황명강(58년·전 GBN 경북방송 대표)

◇**김천시** △배정희(64년·전 김천교육청 자원봉사센터 상담강사) △신민서(76년·전 김천고 학부모회장) △강희삼(54년·전 김천조마농협 조합장) △최혜리(72년·현 김천당협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이주영(70년·현 자유한국당 중앙위 여성분과 부위원장) △채진광(71년·현 자유한국당 김천당협 운영위원) △박종성(72년·현 홍익경비센터 대표) △김응숙(59년·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잔은(66년·전 김천서부초 총동창회 체육대회 대회장) △강순옥(59년·전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안동시** △이숙희(60년·현 보험대리점 대표) △박연희(65년·현 안동교도소 교화위원) △손경식(68년·현 자유한국당 중앙위 안동시 부지회장)

◇**구미시** △석유민(80년·현 구미을당협 차세대위원장) △조성원(65년·현 아름다운청년의 미래 대표) △장미경(68년·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김서정(66년·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용(63년·현 경북도당 부위원장)·

◇**영주시** △김화숙(53년·전 영주시 인재양성과 근무) △황장규(61년·현 영주시 정책자문위 농축산분과위원) △이혜란(61년·전 한국예총 경상북도 부지회장)

◇**문경시** △박춘남(55년·전 문경시 여성대학 총동창회장)

◇**예천군** △신향순(57년 현 자유한국당 예천당협 여성위원장) △고시명(52년 현 자유한국당 예천당협 부위원장)

◇**영천시** △김영애(55년·전 영천시 서부동선거관리위원) △박윤성(56년·전 영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우애자(52년·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은(62년·전 (주)영천방송 대표이사) △민순남(52년·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청도군** △홍봉옥(59년·전 청도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수연(64년·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이(62년·현 자유한국당 청도당협 여성부장) △변영주(68년·현 청도군 시화라이온스 회장)

◇**상주시** △이경옥(58년·전 상주농협 상무) △박기영(64년·전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권택형(58년·현 상주상공회의소 감사)

◇**군위군** △오분이(61년·현 자유한국당 군위군 여성위원장) △박정애(58년·현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의성군** △권혁만(62년·현 의성신문사 대표) △이화자(62년·현 편안한노인복지센터 대표) △박화자(61년·전 새누리당 경북선대위 의성군지도위원) △박상숙(64년·전 민주평통 여성분과위원장)

◇**청송군** △황성경(58년·현 경북새마을금고 청송군지부 회장) △김동익(74년·현 자유한국당 청송당협 청년위원장) △최갑선(58년·현 자유한국당 청송당협 여성위원장) △이명숙(54년·현 청송농협 사외이사)

◇**경산시** △손병숙(60년·현 경산시당협 여성위원장) △김화선(61년·현 경산초 총동창회장) △장말선(67년·현 경북도당 홍보위원회 경산지회장) △임창빈(87년·현 자유한국당 경산당협 대변인) △김계태(62년·전 국제라이온스 경북지구 경산 수정라이온스 회장) △노구갑(78년·현 자인면 체육회 회장)

◇**영양군** △김영숙(64년·현 영양당협 양성평등지회 부장) △이옥숙(63년·전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인숙(64년·현 영양군 당협 여성부장)

◇**영덕군** △오정자(60년·전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영양영덕울진봉화지회장) △신진자(67년·현 영덕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봉화군** △이영미(60년·현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전경희(59년·전 대한적십자 봉화군협의회 회장)

◇**울진군** △강다연(71년·현 울진경찰발전위원회 회원) △김복남(74년·전 김복남직업전문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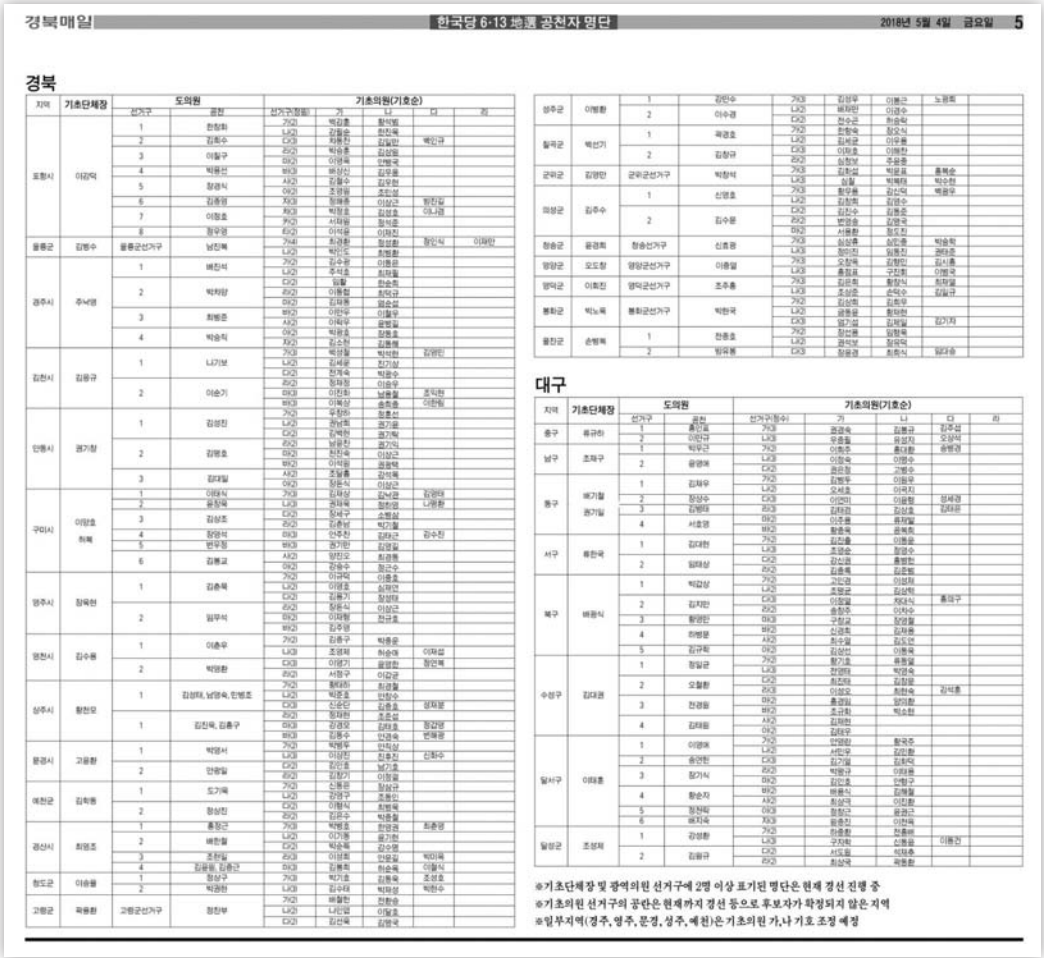
◇**고령군** △배효임(60년·현 고령성주칠곡당협 고령누리봉사단장 △설미선(56년·전 자유한국당 고령당협 운영위원)

◇**성주군** △박성남(68년·국제라이온스 경북성주별빛라이온스 회장) △황숙희(68년·현 고령성주칠곡당협 차세대여성위원장) △은덕희(56년·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 자문위원) △이철희(67년·현 성주군 여성분과위 부회장)

◇**칠곡군** △최인희(58년·전 복상을 숭오4리 이장) △조해숙(68년·현 미용실 대표)

(25.4×21.8)cm

〈경북매일 2018년 5월 3일자 4면〉



경북매일 한국당 6·13 地選 공천자 명단 2018년 5월 4일 금요일 5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기호순)				
		선거구	공천	선거구(정원)	가	나	다	라
포항시	이강덕	1	한창희	가(2)	박경희	황인범		
		2	김종수	나(2)	김철순	최찬욱		
		3	이철구	다(3)	차동찬	김철민	백인규	
		4	박용선	라(2)	박승훈	김상원		
		5	장경식	마(2)	이연복	안병국		
		6	김종영	바(3)	배상신	김무용		
		7	이정호	사(2)	김동수	김무현		
		8	정우영	아(2)	조한성	조진보		
울릉군	김병수	울릉군선거구	남진복	가(1)	최경환	정성환	정인식	이재만
경주시	주낙영	1	배진석	나(2)	박인도	최병환		
				가(2)	김수봉	이종윤		
				나(2)	주석호	최재철		
		2	박차정	다(2)	임철	최승희		
				라(2)	이동원	최덕규		
		3	최병준	마(2)	김재동	정순성		
				바(2)	이한우	이철우		
		4	박승직	사(2)	이석우	윤병길		
				아(2)	박원호	정병호		
				자(2)	김소천	김동해		
김천시	김충규	1	나기보	가(3)	박성철	박석현	김영민	
				나(2)	김세광	진기상		
				다(2)	천계숙	박영수		
		2	이순기	라(2)	정재정	이승우		
				마(3)	이진희	남동철	조직현	
				바(3)	이복상	송춘출	이한형	
안동시	권기창	1	김성진	가(2)	우창하	정홍선		
				나(2)	권남희	권기윤		
				다(2)	김백현	권기덕		
		2	김병호	라(2)	배문진	권기도		
				마(2)	천진숙	이상근		
				바(2)	이석원	권용택		
		3	김대일	사(2)	조일홍	김덕룡		
				아(2)	장은식	이상근		
구미시	이양호 하복	1	이태식	가(3)	김재상	김낙관	김영태	
		2	윤정목	나(3)	권재복	정한영	나병환	
		3	김상조	다(2)	장세구	소병설		
		4	장영석	라(3)	안주찬	김태근	김수진	
		5	변무정	바(3)	권기한	김영길		
		6	김봉교	아(2)	강동수	정근수		
영주시	장욱현	1	김충목	가(2)	이규덕	이홍호		
				나(2)	이병호	심재인		
				다(2)	김용기	정성태		
		2	임무석	라(2)	장동식	이상근		
				마(2)	이재형	천금호		
				바(2)	김주영	정		
영천시	김수용	1	이춘우	가(2)	김종구	박종윤		
				나(3)	조영제	허승대	이재섭	
		2	박영환	다(3)	이병기	윤영희	정인복	
				라(2)	서정구	이갑균		
상주시	황천모	1	김성태, 남영숙, 안병조	가(2)	황태희	최경철		
				나(2)	박종호	안창식		
				다(3)	신승단	김홍효	성재봉	
		1	김진목, 김홍구	라(2)	정재현	조호섭		
				마(3)	강경모	김태호	정갑영	
				바(3)	김종수	안경숙	변해광	
문경시	고윤환	1	박영서	가(2)	박병우	안직상		
				나(3)	이상진	진후진	신화수	
		2	안광일	다(2)	정인호	남기호		
				라(2)	김정기	이정길		
예천군	김학동	1	도기욱	가(2)	신동은	정상구		
				나(2)	강영구	조동인		
		2	정상진	다(2)	이형식	최병욱		
				라(2)	김규수	박종철		
경산시	최영조	1	홍정근	가(3)	박병호	한영권	최종명	
		2	배한철	나(2)	이기동	윤기현		
				다(2)	박승복	강수영		
		3	조한일	라(3)	이성희	안윤길	박미옥	
		4	김윤원, 김홍근	마(3)	김동희	허승욱	이철식	
청도군	이승율	1	정상구	가(3)	박기호	김동욱	조성호	
		2	박경원	나(3)	김수태	박재성	박천수	
고령군	곽용환	고령군선거구	정진부	가(2)	배철현	전한승		
				나(2)	나인업	이철호		
				다(2)	김선욱	김영국		
성주군	이병환	1	김한수	가(3)	김정우	이홍근	노원희	
		2	이수경	나(2)	배재민	이경수		
				다(2)	전수근	최승락		
칠곡군	백선기	1	곽경호	가(2)	최형숙	장오식		
				나(2)	김세균	이우용		
		2	김창규	다(3)	이희호	이혜천		
				라(2)	심창보	주성종		
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선거구	박창석	가(3)	김창섭	박성표	홍혁순	
				나(3)	심철	박혜태	박승현	
의성군	김주수	1	신영호	가(3)	황우용	김선덕	백종우	
				나(2)	김창희	김연수		
		2	김수문	다(2)	김진수	김동준		
				라(2)	변영숙	김영국		
				마(2)	서용환	정도진		
청송군	윤경희	청송선거구	신효원	가(3)	심상홍	심인홍	박승학	
				나(3)	정미진	임동진	권태조	
영양군	오도창	영양군선거구	이종열	가(3)	오창욱	김형민	김시홍	
				나(3)	홍정표	구진회	이병국	
영덕군	이희진	영덕군선거구	조주홍	가(3)	김은희	황창식	최재열	
				나(3)	조상준	손덕수	김일규	
봉화군	박노욱	봉화군선거구	박현국	가(2)	김상희	김희무		
				나(2)	윤동윤	황희현		
				다(3)	임기섭	김제일	김기자	
울진군	손병복	1	전종호	가(2)	정선용	임형복		
				나(2)	정윤보	정덕억		
		2	임유봉	다(3)	정윤경	최춘식	임대수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기호순)				
		선거구	공천	선거구(정수)	가	나	다	라
중구	류규하	1	홍인표	가(3)	권경숙	김봉규	정주섭	
		2	이만규	나(3)	우홍철	유성자	오상석	
		1	박무근	가(2)	이동주	홍대환	유병권	
남구	조재구	2	윤영애	나(3)	이창숙	이명수		
				다(2)	권은정	고병수		
동구	배기철	1	김재우	가(2)	김병두	이원우		
	권기일			나(2)	오세호	이국진		
		2	정상수	다(3)	이인미	이용탁	정세경	
		3	김병태	라(3)	김태관	김상호	김태은	
		4	서호영	마(2)	이주홍	류재일		
				바(2)	황종욱	윤복희		
서구	류한국	1	김대현	가(2)	김진출	이동윤		
				나(3)	조영숙	정영수		
		2	임태상	다(2)	강신권	홍병한		
				라(2)	김종록	김준팔		
북구	배광식	1	박갑상	가(2)	강인경	이성희		
				나(2)	조명균	김상학		
		2	김지만	다(3)	이정달	차대식	홍재구	
				라(2)	송창주	이차수		
		3	황영란	마(3)	구창교	장영철		
		4	이병분	바(2)	신경희	김차원		
				사(2)	최수일	김도연		
		5	김규학	아(2)	김상선	이동욱		
수성구	김대권	1	정일균	가(2)	황기호	류동열		
				나(3)	정영태	박영수		
		2	오철환	다(2)	최진태	김정열		
				라(3)	이상오	최한숙	김덕호	
		3	전경원	마(2)	홍경림	양의환		
				바(2)	조규희	박소희		
		4	김태원	사(2)	김희천			
				아(2)	김태우			
달서구	이태홈	1	이경애	가(3)	마영랑	황국주		
				나(2)	서은우	김진환		
		2	송연헌	다(3)	김기열	김희덕		
		3	정기식	라(2)	박병규	이희원		
				마(2)	김인호	이형규		
		4	황순자	바(2)	배용식	김해철		
				사(2)	최상국	이진환		
		5	정정학	아(3)	정창규	윤권도		
		6	배지숙	자(3)	윤종진	이한욱		
달성군	조성제	1	강성환	가(2)	하종환	전홍배		
				나(3)	구자학	신동윤	이동건	
		2	김원규	다(2)	서도원	배태홍		
				라(2)	최상국	곽동환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구에 2명 이상 표기된 명단은 현재 경선 진행 중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란은 현재까지 경선 등으로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
※일부지역(경주, 영주, 문경, 성주, 예천)은 기초의원 가,나 기호 조정 예정

〈경북매일 2018년 5월 4일자 5면〉

보도 내용

한국당, 광역 6명중 3~4석 차지 전망

한국당 경북도당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가 102명으로 드러나면서 당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최대 4명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초의원 비례는 34명 정원에 84명이 신청해 평균 2.4대 1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여성과 청년, 직능별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최소 5% 이상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원은 정원 54명에 비례대표가 6석이, 기초의원은 지역구 247명에 비례대표 37명이 각 시군에 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은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은 34명이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달았다.

올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한국당이 3~4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2석씩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40%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 비례는 한국당 3석, 더불어민주당 2석, 바른미래당 1석 등으로 배분된다.

한국당 지지율이 60%를 넘고 민주당이 30% 정도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면 한국당 4석, 민주당 2석이고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없어질수 있다. 5% 이상 득표했다고 해도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정당에 밀려 단 한석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이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 선을 넘어서느냐와 바른미래당 지지율 분포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권에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3번까지 안정권에 속해 여성과 남성, 여성 비율로 정해지는 순번에 누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의 전례를 본다면 당직자 중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와 헌신도, 기여도를 기준으로 앞순위가 결정돼 왔다.

도당 대변인과 각 위원장 중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순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 안팎의 예상이다. 도내 노동계도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당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노동계 대표의 당선권 진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역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정해진다. 포항의 경우 비례대표 4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은 3명이 안정권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5명 이상이 신청한 경주, 김천, 경산, 구미, 영천시 지역은 높은 당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4명을 목표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최소한 3석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례대표 신청자들의 당원 확보 등 당 기여도면에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 한국당 6·13 地選 공천자 명단 – 내용 생략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59
언론사	**주식회사 합천신문사**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2길13 발행인 박황규
심의대상기사	합천신문 2018년 4월 19일자(제1123호) 2면 「김윤철 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원에 재도전하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의 출마 입장문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김윤철 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원에 재도전하다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에 나섰던 김윤철 군수 예비후보가 경남도의원 재도전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공천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16일 자유한 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제8대 경남도의원을 역임한 김윤철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의 내홍은 뒤로한 채, '합천군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고수하며 경남도의원직에 도전하겠습니다."며 "비록 군수공천에는 실패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다음은 도의원 출마와 관련한 김윤철 예비후보의 입장문이다. /차성민 기자

경남도의원 출마에 부쳐

우리지역 자유한국당 군수 공천발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였지만 분패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을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니 민심이 떠난 이유가 보였습니다.
손과 발은 진흙탕에 담그고, 입으로 깨끗함을 외치고 토사구팽을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는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군민들께 참된 평가를 받고자 경남도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군민들께 백번 사죄를 구하며 일일이 염거하지 못하는 피 끓는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십시오.
김윤철이 쌓은 인맥과 능력으로 합천을 위해 도의회에서 힘껏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도의원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번에는 2선의 힘으로 내륙의 섬이라 불리는 합천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 살맛나는 살기 좋은 합천으로 꼭 바꾸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합천신문 2018년 4월 19일자 2면〉

보도 내용

김윤철 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원에 재도전하다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에 나섰던 김윤철 군수예비후보가 경남도의원 재도전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공천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제8대 경남도의원을 역임한 김윤철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의 내홍은 뒤로한 채, '합천군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고수하며 경남도의원직에 도전하겠습니다."며 "비록 군수공천에는 실패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다음은 도의원 출마와 관련한 김윤철 예비후보의 입장문이다.

경남도의원 출마에 부쳐

우리 지역 자유한국당 군수 공천발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였지만 분패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을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니 민심이 떠난 이유가 보였습니다.

손과 발은 진흙탕에 담그고, 입으로 깨끗함을 외치고 토사구팽을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는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군민들께 참된 평가를 받고자 경남도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군민들께 백번 사죄를 구하며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피 끓는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십시오.

김윤철이 쌓은 인맥과 능력으로 합천을 위해 도의회에서 힘껏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도의원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번에는 2선의 힘으로 내륙의 섬이라 불리는 합천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 살맛나는 살기 좋은 합천으로 꼭 바꾸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64
언론사	**주식회사 남해시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699 발행인 이정원
심의대상기사	남해시대 2018년 5월 10일자(제597호) 21면 「남해인의 긍지를 안고 강남 한 복판에 출사표 던지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서울 서초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남해인 | 고현 감화출신 김성주 후우

남해인의 긍지를 안고
강남 한 복판에 출사표 던지다

김 성 주
2
구의원후보
(서초2,4)

〈남해시대 2018년 5월 10일자 21면〉

보도 내용

남해인의 긍지를 안고 강남 한 복판에 출사표 던지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향 향우들을 소개한다. 민들레 홀씨가 먼 거리를 날아와 새로운 터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고향을 떠나와 새롭게 자리잡은 생활터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향우들. 그들의 도전을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기 위함이다. 〈편집자 주〉

서울 강남대로 한 복판, 서초 2동 4동 지역구에 서초구의원으로 출마하는 김성주(48) 향우는 고현 갈화 출신 40대 젊은 향우다. 갈화초등학교와 고현중학교, 남해종고를 졸업한 후 용인대학교 체육학과로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나왔다. 고교 시절부터 남해군 복싱대표선수로 활동하면서 경남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고향이름을 더 높이기도 했던 그는 결혼 후 서초구에 자리를 잡고 스포츠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

운동선수에서 스포츠 사업가로 변신

김성주 향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복싱대표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우승은 물론 국군체육부대,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거쳤다. 하지만 그는 대학 졸업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선수나 지도자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좀 더 공부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다"는 그는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에 진학 학업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남해인들이 그렇듯이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 졸업 후 이동통신회사에 입사해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학업을 계속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이다.

학위 취득 후 대학 강단에 서는 한편 새로운 분야에 도전, 스포츠 사업가로 변신했다. 강남대로 한 복판에 그만의 스포츠센터를 개업한 것이다. 다이어트 복싱과 코어근육을 키우는 스포츠센터인 이곳에서는 서초 구청장배 복싱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학교 스포츠클럽, 구청 건강교실, 대한체육회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등을 운영한다.

김성주 향우는 "전공을 살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어 다양한 일을 기획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많아지면서 생활정치까지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구민 건강 책임지는 구의원 될 터

김 향우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서초구 다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을 받았다. 강남대로 양재역 주변에서 교대역까지 서초2동과 4동이 그의 지역구다. "서초구 복싱협회 회장이며 나름 지역사회에서 열

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추천해 주신 것 같다. 처음하는 도전이라 낯설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보고 선거 도전을 결심했다"는 김 향우.

그는 그동안 체육 전문인으로 쌓아온 경험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실현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대학 강단에서 운동 역학, 웨이트,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친 경험과 효율적인 운동방법에 대한 연구논문 10여 편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김 향우는 "서초구 다 지역은 도심이지만 의외로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연령의 건강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5월 중순 즈음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그는 요즘 정책개발과 선거조직 구성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각오를 묻자 거침없이 쏟아지는 그의 답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내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하지만 하나 하나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서초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역시 남해인의 강단이 느껴지는 대답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0
언론사	**북부신문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41 드림하우스 1402호 발행인 장용석
심의대상기사	북부신문 2018년 5월 2일자(제969호) 1면 「이동진, "책임정치의 본모습 보여주겠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서울 도봉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출마 입장, 구청장 재임 중 성과 등을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이동진, "책임정치의 본모습 보여주겠다"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도봉구청장 공천을 단수공천지역에서 경선지역으로 뒤집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직 구청장은 본인을 위한 투표 독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동진 예비후보는 "3선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행해온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 추진해온 도봉의 변화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출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예비후보는 이후 도봉구청장으로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들을 언급했다.

5,300억 원이 투자되는 2만 석 규모의 서울아레나공연장, 3,600억 원이 투자되는 41층 규모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1,000억 원 규모로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건립되는 종합안전체험관 및 청년플라자, 성대야구장 개발을 통한 590억 원 규모의 실내스포츠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등이 그 예이다.

그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오랫동안의 준비와 치밀한 계획,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설득,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이제 준비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떼려고 하고 있다"라며 "저는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 도봉 발전전략을 추진해왔고,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정

치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의 변방 도봉구를 세계적인 공연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것, 도봉구를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며, 3선 도전의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하여 "최근 날조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혼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저는 정도(正道)를 걷겠다. 정책과 비전으로만 평가받고 싶다. 유권자들께서 바로잡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전략은 선거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선거전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신문에 '이동진 도봉구청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이동진 예비후보는 "이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하루만에 스스로 기사를 삭제했다"라며 "이는 인터넷신문 스스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인터넷신문을 갈무리해서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주민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준비된 계획들을 마무리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도봉, 내일이 기다려지는 도봉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동진, "책임정치의 본모습 보여주겠다"

도봉 뉴비전 마무리 '책임' 역설…네거티브 '부메랑 될 것'

▲이동진 도봉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도봉구청장 공천을 단수공천지역에서 경선지역으로 뒤집지 관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직 구청장은 본인을 위한 부표 확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동진 예비후보는 "3선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행해온 확인 있는 정치를 통해 추진해온 도봉의 변화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출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예비후보는 이후 도봉구청장으로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들을 언급했다. 5,300억원이 투자되는 2만 석 규모의 서울아레나공연장, 3,600억원이 투자되는 41층 규모의 분화산업단지 조성, 1,000억원 규모로 방학정 소방터고 부지에 건립되는 종합산선거점과 및 청년플러지, 청대 아구장 개발을 통한 500억원 규모의 실내스포츠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등이 그 예이다.

그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오랫동안의 준비와 치밀한 계획,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설득,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이제 준비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떼려 하고 있다."라며 "저는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 도봉 발전전략을 추진해왔고,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의 변방 도봉구를 세계적인 공연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것, 도봉구를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며, 3선 도전의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하여 "최근 날조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혼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저는 정도(正道)를 걷겠다. 정책과 비전으로만 평가받고 싶다. 유권자들께서 바로잡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전략은 선거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선거전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신문에 '이동진 도봉구청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이동진 예비후보는 "이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하루만에 스스로 기사를 삭제했다"라며 "이는 인터넷신문 스스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인터넷신문을 갈무리해서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주민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준비된 계획들을 마무리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도봉, 내일이 기다려지는 도봉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북부신문 2018년 5월 2일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76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사장 고광헌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8년 5월 30일자 14면 「"쇠락한 도심 '변화'해야…영등포역 고가부터 철거" 채현일 민주당 후보」, 「"43년 토박이…도시재생 사업·교육환경 개선할 것" 김춘수 한국당 후보」, 「"3번째 도전…동네별 랜드마크로 새로운 도약" 양창호 바른미래당 후보」, 「"구민이 저를 불러내…구청장 3選땐 민주당 복당" 조길형 무소속 후보」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입장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인터뷰 후보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만 게재하지 않아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4 6·13 판세 분석 서울시 기초단체장

與 '새얼굴' 前 靑행정관 vs 現 구청장 무소속 출마… 5자 구도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후보

"쇠락한 도심 '변화'해야… 영등포역 고가부터 철거"

"43년 토박이… 도시재생 사업·교육환경 개선할 것"

"3번째 도전… 동네별 랜드마크로 새로운 도약"

"구민이 저를 불러내… 구청장 3選 땐 민주당 복당"

〈서울신문 2018년 5월 30일자 14면〉

※보도내용 생략

의결번호	2018지선-자심85
언론사	**주식회사 호남포스트(호남일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27 솔뫼렉스케이원 211호 대표이사 김덕천
심의대상기사	호남일보 2018년 5월 30일자 15면 「시민과 소통하는 '광주나그네'」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광주시장 후보자의 공약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호남일보

호일칼럼

송 형 택
논설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광주나그네'

〈호남일보 2018년 5월 30일자 15면〉

보도 내용

시민과 소통하는 '광주나그네'

정조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 개혁군주이다. 또 '수원나그네'라는 말이 생길만큼 백성과 직접 만나고 소통했던 군주였다. 실제로 정조는 백성들의 삶을 몰래 살피는 잠행과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수원까지의 능행을 통해 백성들과 함께했다.

정조는 할아버지인 영조의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일부 당파의 권력독점을 막았다. 또 규장각을 정비하여 학문연구와 개혁정치의 중심기구로 삼았다. 이밖에도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젊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였고, '장용원' 설치로 왕권을 뒷받침할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원 화성건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도시를 건설하였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민생 안정책과 문물 정비였다.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하였고,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다. 또 '동문휘고, 탁지지,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문물을 정비하였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인 수원 '현륭원'으로 자주 행차하였는데, 그때마다 특별과거인 별시를 시행하여 유생, 한량, 군인, 무사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한번은 정조가 잠행으로 현륭원에 갈 때였다. 마침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현륭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후 정조는 가슴속 응어리를 덜어주는 이야기를 해준 농부에게 답례를 하고 싶었다. 정조는 농부에게 과거에 응시하기를 권유하고 환궁하여 즉시 과거시험의 영을 내렸다. 또 현륭원 행차 길에 있었던 자신과 농부의 대화를 과거시제로 내었다.

농부의 과거급제는 당연했다. 과거에 급제한 농부는 왕을 알현하며 얼마 전 현륭원에 대해 물었던 나그네임을 알고 크게 놀랐다. 이 개혁군주 정조에게 '수원나그네'라는 말은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이다. 이때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투트랙 선거운동이 지역 정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다. 투트랙 선거운동은 '광주행복 1번가 플랫폼'과 '주요 현안 집중점검 투어' 등 두 가지 축이다.

그 중 '광주행복 1번가'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접수받는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통과 더불어 수백 건이 접수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다.

또 '주요 현안 집중점검 투어'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 후 매주 1차례 이상 발표한 '1자리 2용섭의 12대 정책공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직접 점검하는 현장 행보이다.

이 후보의 투트랙 선거운동이 각광을 받는 것은 과거처럼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을 찾아 인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에서 과감히 탈피한 것이다. 직접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교감하고 소통하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선거운동 모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 패러다임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다.

현재 '광주행복 1번가'에 접수된 주요 사항은 교통문제, 관광문화, 도시개발, 주차문제, 행정개선 등이라고 한다. 신호위반으로 억울하게 벌금을 낸 하소연부터 광주KTX 재진입, 광주역과 대구 내륙고속철도 건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계화 등에 대한 제언, 일자리 창출로 광주 경제를 살려달라는 현안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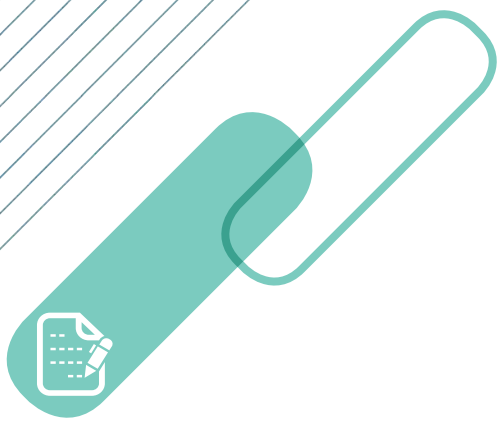
'주요 현안 집중점검 투어'는 지난 5월 4일 동구 아이플렉스(IPLEX) 방문을 시작으로 광주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백운동 고가도로 철거 및 백운교차로와 구 보훈병원 일대 도시재생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어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와 평동 포사격장, 동구 지원배수지 시민힐링쉼터 조성사업 현장, 북구 첨단산단 등을 잇따라 방문해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에 대해 청취하기도 했다.

또 남구 송암공단 내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센터와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현장,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에서 개최된 '자동차부품산업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의 미래자동차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9일에는 열한 번째 현장투어로 광주천을 찾아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무등산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불편사항과 정책들은 광주시장에 당선이 되면 취임 100일안에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한다. 또 이를 위해 시청, 5개 구청, 경찰청, 소방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불편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광주행복 1번가'는 광주 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http://bit.ly/ivyuncle)이나 온라인 고객센터(카카오톡 '@광주행복1번가' 친구추가)를 통해 의견을 제안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수원나그네'처럼 '광주나그네'의 시민과 소통하는 발걸음이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되었으면 한다.



제2장
시정요구심의

1.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4
시정요구인	김성기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중부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대표이사 추성원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8년 4월 12일자 1면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 및 2018년 4월 13일자 1면 「"사실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 제하의 기사
주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주식회사 중부일보)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중부일보〉 1면 하단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8년 4월 13일자 1면 「"사실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 기사의 상단 부제목(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제보자 정모씨 인터뷰)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며, 본문의 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3. 시정요구인의 나머지 시정요구는 기각한다.
신청취지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및 심의대상 기사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평군수 선거 출마예정인 시정요구인이 제보자 정모씨와 2013년 7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A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으며, 시정요구인이 정모씨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2013년 술자리는 A씨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 임명된 이후였고, 시정요구인이 제보자 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거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및 피시정요구인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심의대상기사의 성접대 의혹에 관한 사실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기사의 크기, 게재 지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선거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시정요구인의 반론보도가 게재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밖에 나머지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 제목 : **김성기 가평군수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지 4월 12일자 1면 및 4월 13일자 1면에 게재된 김성기 가평군수의 성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성기 군수는 "당시 술자리는 4월이 아니라 A씨가 이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7월이었으며, 정모씨로부터 성접대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정모씨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재심3** (원결정 2018지선-시심4)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중부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대표이사 추성원
재심청구대상기사	중부일보 2018년 4월 12일자 1면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의혹」 및 2018년 4월 13일자 1면 「"사실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 제하의 기사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2018지선-시심4)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2018지선-시심4의 시정요구인(김성기 가평군수 출마예정자)이 제보자 정모씨와 2013년 7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A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한편, 시정요구인은 2013년 술자리는 A씨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였고, 시정요구인이 제보자 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및 피시정요구인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성접대 의혹에 관한 사실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기사의 크기, 게재 지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선거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제보자의 증언 및 사실 확인서, 취재 과정에서 시정요구인이 답변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보도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으며,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어 구체적인 반론을 게재하지 못한 것이고, 반론보도 게재가 시정요구인이 피시정요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의 보도 경위, 목적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심의대상기사의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따라서 선거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해 시정요구인의 구체적인 반론 게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그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달리, 반론보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반론보도문 게재가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 사이에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부일보

2018년 04월 12일
01면 (종합)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

주점업주 사실확인서 단독입수

민선5기 보궐 당선직후 술자리
접대부와 2차… 인근모텔 이동
동석자, 술값 등 220만원 계산
석달뒤 시설관리公 사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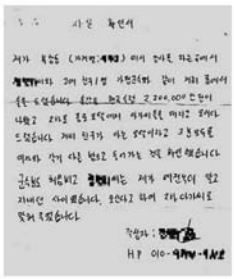
金 군수 "말도 안된다" 부인

김성기 가평군수가 민선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는 3개월 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며 관련의혹을 부인했다.

11일 김성기 가평군수와 제보자 정모 씨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3년 4월께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C주점에서 정씨 등 일행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기 가평군수가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 주점의 업주 D씨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날 술자리는 김 군수의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와 일행들은 술집에 도착해 식사를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술자리에는 여성 접대부 3명과 밴드가 함께 동석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이날 계산된 술값은 220여만 원이었으며, 술값은 A씨가 계산했다.

이날 술값을 계산한 A씨는 3개월 뒤인 2013년 7월 26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김 군수와 일행은 차량 한 대로 이동해 인근 종로에 위치한 모텔로 향했으며, 이 곳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제보자 정씨는 밝혔다.

정씨는 "이날 술자리가 끝나고 다같이 한 차로 모텔까지 이동해서 각자의 여성들과 방으로 갔다"며 "A씨가 계산한 술값에는 접대부와 일명 2차 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부일보가 입수한 C주점 업주 D씨의 사실 확인서에는 '김 군수가 정모씨와 그의 지인 1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종로의 한 모텔에 접대부들과 함께 모셔다 드렸고 3분 모두 여자와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성접대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술값이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성접대가 이뤄진 모텔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그날 정씨에게 전화연락을 받고 A씨와 함께 해당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술집으로 이동할때 까지 그런 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접대부와 모텔에 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성접대와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기 가평군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가평군수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됐다.

장학인·문완태기자

(22.9×14.1)cm

〈중부일보 2018년 4월 12일자 1면〉

보도 내용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

주점업주 사실확인서 단독입수
민선5기 보궐 당선직후 술자리
접대부와 2차… 인근모텔 이동
동석자, 술값 등 220만원 계산
석달뒤 시설관리公 사장 취임
金 군수 "말도 안된다" 부인

김성기 가평군수가 민선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는 3개월 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며 관련의혹을 부인했다.

11일 김성기 가평군수와 제보자 정모씨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3년 4월께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C주점에서 정씨 등 일행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술자리는 김 군수의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와 일행들은 술집에 도착해 식사를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술자리에는 여성 접대부 3명과 밴드가 함께 동석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이날 계산된 술값은 220여만 원이었으며, 술값은 A씨가 지불했다.

이날 술값을 계산한 A씨는 3개월 뒤인 2013년 7월 26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김 군수와 일행은 차량 한대로 이동해 인근 종로에 위치한 모텔로 향했으며, 이 곳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제보자 정씨는 밝혔다.

정씨는 "이날 술자리가 끝나고 다같이 한 차로 모텔까지 이동해서 각자의 여성들과 방으로 갔다"며 "A씨가 계산한 술값에는 접대부와 일명 2차 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부일보가 입수한 C주점 업주 D씨의 사실 확인서에는 '김 군수가 정모씨와 그의 지인 1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종로의 한 모텔에 접대부들과 함께 모셔다 드렸고 3분 모두 여자와 각자 다른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성접대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술값이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성접대가 이뤄진 모텔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그날 정씨에게 전화연락을 받고 A씨와 함께 해당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술집으로 이동할때 까지 그런 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접대부와 모텔에 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성접대와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기 가평군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가평군수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됐다.

중부일보

2018년 04월 13일
01면 (종합)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 제보자 정모씨 인터뷰

"사실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

"金군수 기자회견은 모두 허위
동석했던 A씨도 사실 인정
반강제 끌려 갔다니 말이 되나
도와달라해 정치자금도 빌려줘"

김성기 가평군수가 민선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중부일보 4월 12일자 1면 보도)을 전면 부인하자 술 자리에 동석했던 제보자가 김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 모두가 허위이고 제보한 사실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제보자 정씨는 12일 중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군수가 반 강제로 술집에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김 군수가)한 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반 강제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수사기관에 가서 모두 진술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제보자 정씨와의 일문일답.

중부일보-정00씨 전화인터뷰 요약

기자: 김성기 군수가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동석했던 A씨도 보도사실이 맞다고 했다. 내가 틀렸으면 징역가겠다. — 정00

기자: 반 강제로 술집 끌려갔다는데…
반 강제가 말이 되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 정00

기자: 김 군수와의 관계는?
도와달라해서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주고 했다. — 정00

기자: 김 군수가 법적 대응 한다는데…
거짓 없는데 두려울게 없다. — 정00

-김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을 알고 있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그랬다고 들었다. 김 군수 본인이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김 군수가 목숨을 걸고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 A씨와도 통화를 했다. 기사에 (A씨의 이사장 취임 시기가) 3개월 뒤라고 났는데 날짜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A씨도 모든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사실이 아니면 내가 무고죄 아니냐. 사실 관계를 밝혀봐서 내가 틀렸으면 무고죄로 징역가겠다."

-김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반 강제로 술집에 끌려갔다고 주장했는데.

"자기가 차를 타고 했는데 반 강제가 말이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 나이가 한 두살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강제로 술자리를 데려가고 술을 먹을 수 있냐."

-김 군수는 제보 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지금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녹음되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증거가 뻔히 남을텐데 왜 거짓말을 하겠냐."

-김 군수와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주고 했다. 누가 좀 도와주라고 해서 안하겠다고 했더니 두 번이나 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김 군수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성접대 의혹)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김 군수)저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주겠다. 거짓이 없는데 법적 대응을 두려워 할 게 뭐가 있냐."

장학인·문완태기자

(23.9×15.0)cm

〈중부일보 2018년 4월 13일자 1면〉

보도 내용

[인터뷰]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 제보자 정모씨
"사실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

"金군수 기자회견은 모두 허위
동석했던 A씨도 사실 인정"
"반강제 끌려 갔다니 말이 되나
도와달라해 정치자금도 빌려"

김성기 가평군수가 민선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 후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중부일보 4월 12일자 1면 보도)을 전면 부인하자 술자리에 동석했던 제보자가 김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 모두가 허위이고 제보한 사실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제보자 정씨는 12일 중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군수가 반 강제로 술집에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김 군수가) 한 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반 강제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수사기관에 가서 모두 진술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제보자 정씨와의 일문일답.

Q 김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을 알고 있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그랬다고 들었다. 김 군수 본인이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Q 김 군수가 목숨을 걸고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냐. A씨와도 통화를 했다. 기사에 (A씨의 이사장 취임 시기가) 3개월 뒤라고 났는데 날짜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A씨도 모든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사실이 아니면 내가 무고죄 아니냐. 사실 관계를 밝혀봐서 내가 틀렸으면 무고죄로 징역가겠다."

Q 김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반 강제로 술집에 끌려갔다고 주장했는데.

"자기가 차를 타고 했는데 반 강제가 말이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 나이가 한 두살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강제로 술자리를 데려가고 술을 먹을 수 있냐."

Q 김 군수는 제보 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지금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녹음되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증거가 뻔히 남을텐데 왜 거짓말을 하겠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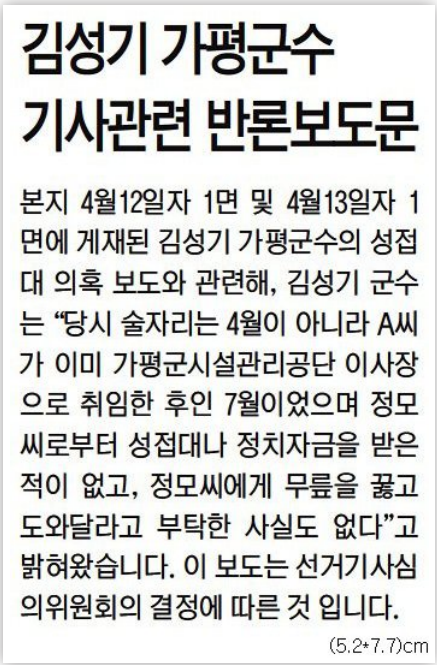
Q 김 군수와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주고 했다. 누가 좀 도와주라고 해서 안하겠다고 했더니 두 번이나 날 찾아와서 무릎꿇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Q 김 군수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성접대 의혹)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김 군수) 저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주겠다. 거짓이 없는데 법적 대응을 두려워 할 게 뭐가 있냐."

[결정 후 보도문]



김성기 가평군수
기사관련 반론보도문

본지 4월12일자 1면 및 4월13일자 1면에 게재된 김성기 가평군수의 성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성기 군수는 "당시 술자리는 4월이 아니라 A씨가 이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7월이었으며 정모씨로부터 성접대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정모씨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 입니다.

(5.2*7.7)cm

〈중부일보 2018년 6월 1일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6
시정요구인	구인모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군민신문(거창군민신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13-1 3층 발행인 하정용
심의대상기사	거창군민신문 2018년 3월 28일자(제406호) 1면 「구인모 前 경남도 국장 선거법 위반 '논란'」 및 2018년 5월 14일자(제409호) 1면 「"구인모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라고 해」 제하의 기사
주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주식회사 군민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거창군민신문〉 1면 하단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거창군민신문〉 2018년 5월 14일자(제409호) 1면 「"구인모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라고 해」 기사의 하단 부제목(당시 협회장과 전문의 말 "대회 준비 회원들 다 들어")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며, 본문의 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신청취지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예정인 시정요구인이 2017년 경상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재직 시 거창군 관내 체육단체가 전례 없는 직접 지원을 받는 등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이 증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이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5, 2016년에도 거창군 내 일부 체육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 금액이 타 시, 군에 비해 매우 적어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심의대상기사에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해당 기사의 크기와 게재 지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선거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반론보도문 게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 제목 : **거창군 체육단체 보조금 관련 구인모 후보 반론보도**

나. 내용 : 〈거창군민신문〉 3월 26일자 1면 「구인모 前 경남도 국장 선거법 위반 논란」, 5월 14일자 1면 「"구인모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라고 해」 제하의 기사 관련, 구인모 후보는 "거창군 체육단체가 직접 지원을 받은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2015, 2016년도에도 거창군 일부 체육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고, 지방생활체육 보조금 공모사항은 연초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구 후보는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적어 2017년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한 후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책무를 다한 것인데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유감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결번호	**2018지선-재심4** (원결정 2018지선-시심6)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군민신문(거창군민신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13-13층 발행인 하정용
재심청구대상기사	거창군민신문 2018년 3월 28일자(제406호) 1면 「구인모 前 경남도 국장 선거법 위반 '논란'」 및 2018년 5월 14일자(제409호) 1면 「"구인모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라고 해」 제하의 기사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2018지선-시심6)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2018지선-시심6의 시정요구인(구인모 거창군수 출마예정자)이 2017년 경상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재직 시 거창군 관내 체육단체가 전례 없는 직접 지원을 받는 등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이 증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시정요구인은 자신이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5, 2016년에도 거창군 내 일부 체육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적어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것이라며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기사에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해당 기사의 크기와 게재 지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현재 거창군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반론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반론보도는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그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달리, 선거관련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므로 심의대상기사 내용에 대한 수사 진행여부는 원심 결정 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인모 前 경남도 국장 선거법 위반 '논란'

거창군 수개 체육단체에 수천만 원 지원

"직위 이용 사전 선거운동 여부 밝혀져야"

구인모 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재직 시 거창군 관내 체육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선거용 선심성 특혜예산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어 사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구인모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거창군협회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에 1천만 원, 10월에 거창사과배 전국테니스동호인랭킹대회에 1천만 원, 거창군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에 5백만 원, 또 11월에는 거창군야구협회장배 사회인야구대회에 1천 5백만 원 등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었다.

이 같은 보조금 지원 논란은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다는 점과, 구 전 국장이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 거창군 관내 체육단체가 전례가 없는 직접 지원받은 이례적인 경우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창군민신문 2018년 3월 28일자 1면〉

보도 내용

구인모 前 경남도 국장 선거법 위반 '논란'

거창군 수개 체육단체에 수천만 원 지원
"직위 이용 사전 선거운동 여부 밝혀져야"

구인모 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재직 시 거창군 관내 체육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선거용 선심성 특혜예산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어 사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구인모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거창군협회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에 1천만 원, 10월에 거창사과배 전국테니스동호인랭킹대회에 1천만 원, 거창군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에 5백만 원, 또 11월에는 거창군야구협회장배 사회인야구대회에 1천 5백만 원 등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었다.

이 같은 보조금 지원 논란은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다는 점과, 구 전 국장이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 거창군 관내 체육단체가 전례가 없는 직접 지원받은 이례적인 경우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해당부서에서는 공모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창군이 지금까지는 이 같은 지원은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또 공모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각 체육단체가 갑작스레 지원을 받았다는 점 등은 충분한 의혹을 받을 만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체육 관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모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도장만 들고 가라. 그러면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체육인이라면 대개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단체의 회장은 "행사 시 구 전 국장을 행사장에서 인사시키지 않았다고 곤욕을 치렀다"면서 이와 관련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군민들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는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는 분명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에 해당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관심 있는 군민들은 "사법기관의 조사의 추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청렴도가 꼴찌인 거창군이 청렴을 내세우는 군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명하겠느냐"며 "지난 2016년 보궐선거와 같은 제2의 사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인모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라고 해

당시 협회장과 전무의 말 "대회 준비 회원들 다 들어"

모 협회장, 대회준비하면서 보조금 지원 출처 밝혀

구인모 후보가 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절 거창군 모 체육단체에 회장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무성했지만 사실로 확인되었다.

모 체육단체의 회원 A씨가 지난 5월 10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2017년 9월 중순인가 말 즈음에 협회장배 대회를 준비하자고 연락이 와 회원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회장은 "경남도청에서 돈을 1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에서, 문화국장인가, 체육국장인가 그쪽에서. 항간에는 다른 ○○대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돌려서 우리 쪽으로 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회원은 "누가 주느냐"고 했더니 회장은 "구인모, 거창사람이거든,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거든"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이야기는 협회장과 전무이사한테 들었다. 나 말고도 회원들이 다 들었다. 그 대회를 준비하는 회원들 다 들었다. 경남도에서 1천 5백만 원을 지원 받았고 그리고 군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 소문으로만 그쳐왔으나 이번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구인모 후보의 보조금 지원이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 졌다.

〈거창군민신문 2018년 5월 14일자 1면〉

보도 내용

"구인모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라고 해

당시 협회장과 전무의 말 "대회 준비 회원들 다 들어"
모 협회장, 대회 준비하면서 보조금 지원 출처 밝혀

구인모 후보가 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절 거창군 모 체육단체에 회장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무성했지만 사실로 확인되었다.

모 체육단체의 회원 A씨가 지난 5월 10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2017년 9월 중순인가 말 즈음에 협회장배 대회를 준비하자고 연락이 와 회원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회장은 "경남도청에서 돈을 1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에서, 문화국장인가, 체육국장인가 그쪽에서. 항간에는 다른 ○○대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돌려서 우리 쪽으로 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회원은 "누가 주느냐"고 했더니 회장은 "구인모, 거창사람이거든,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거든"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이야기는 협회장과 전무이사한테 들었다. 나 말고도 회원들이 다 들었다. 그 대회를 준비하는 회원들 다 들었다. 경남도에서 1천 5백만 원을 지원 받았고 그리고 군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거창군의 각 체육단체가 구인모 후보가 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 소문으로만 그쳐왔으나 이번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구인모 후보의 보조금 지원이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구인모 전 국장, 거창군 체육단체 보조금 적법집행 아무런 하자 없어"

본지 3월 26일자 1면 '구인모 전 경남도 국장 선거법 위반 논란', 5월 14일 자 1면 '구인모 나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라고 해' 제하의 기사에서 보도된 거창군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구인모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반론해 왔습니다.

첫째, 거창군 체육단체가 전례 없는 직접 지원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2016년도에 제13회 거창군수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500만 원, 2015년도에 중고교검도대회에 5백만 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공모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던 각 체육단체가 갑작스레 지원받았다는 점은 충분히 의혹을 받을 만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체육단체 보조금 관련 사항은 연초부터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공지·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2015, 2016년 지원현황에서 보듯 거창군 체육단체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적어 지난해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한 후 타 시군에 비해 거창군 체육단체의 예산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거창군체육단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1월 네거티브 뉴스로 곤욕을 치러 SNS에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또 다시 관련 의혹이 언론에 기사화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선거가 클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거창군민신문 2018년 7월 2일자 1면〉

2. 주의사실 게재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12
시정요구인	김경수
피시정요구인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125 6층 대표이사 송재욱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8년 5월 28일자 1면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 2018년 5월 30일자 1면 「김경수 부친 연루 국유지사기단 수법 교활」, 2018년 6월 7일자 1면 「국군장교 김경수 외숙 '월북'」, 2018년 6월 12일자 1면 「태호가 경수 잡았다…여론조사 1.5% 앞서」 제하의 기사
주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경남매일신문〉 1면 하단에 〈별지〉를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8년 5월 28일자 1면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기사의 부제목(호적등본 위조 대가 5천만원 수뢰혐의 구속)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5월 28일자 및 5월 30일자 1면에 시정요구인의 부친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로 등기됐다가 국가소유로 바뀐 토지를 상속받기 위해 사기를 벌인 일당과 연루된 공무원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고, 6월 7일자 1면에 자유한국당 블로그에 언급된 시정요구인의 병역 비리 의혹 및 외삼촌의 월북사건 등을 보도하였다. 또한 6월 12일자 1면에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시정요구인보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제목에 '태호가 경수 잡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미 30여년이 지난 시정요구인의 부친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교활', '먹잇감'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시정요구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자유한국당 블로그의 게시글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중 김태호 후보가 앞선 결과만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태호가 경수 잡았다'라고 언급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며 경고결정문 게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심의대상기사 중 시정요구인 부친의 국유지사기단 연루, 외숙의 월북, 시정요구인의 병역관련 사항 등에 관한 의혹 보도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이 발표한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해 보도하고, 매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을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수차례 1면에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선거일보다 10일 가량 앞서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부각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나. 내용 : 본지는 2018년 5월 28일자 1면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 2018년 5월 30일자 1면 「김경수 부친 연루 국유지사기단 수법 교활」, 2018년 6월 7일자 1면 「국군장교 김경수 외숙 '월북'」, 2018년 6월 12일자 1면 「태호가 경수 잡았다…여론조사 1.5% 앞서」 제하의 기사에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경남도지사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선거일 전일 여러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면서 해당 결과를 부각하는 제목을 달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경남매일

2018년 05월 28일
01면 (종합)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

호적등본 위조 대가 5천만원 수뢰혐의 구속
50억원대 국유지 가로챈 일당 모두 철창행
도지사선거 앞두고 최대 정치적 이슈로 부상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부친 故 김문삼 씨가 국가를 상대로 법인 '50억 원대 국유지 사기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본 선거 시작을 앞두고 '드루킹사건'에 이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경남지사 후보 부친의 과거사건 때문에 아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두고 '연좌제'를 거론하며 안타까워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던 후보자 부친이 토지사기단과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법인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정치적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8년 전 김경수 후보의 부친 김문삼(당시 53세)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호병계장(호적·병사업무책임자)과 최진열(당시 62세·6급 공무원 출신)은 토지사기단 정찬근(당시 59세·서울 만리동)과 짜고 공범 시길부(施吉夫)의 가짜 제적부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를 만들었다.

이는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郞)' 명의의 토지가 해방 후 국유지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그를 창씨 개명한 조선 사람으로 둔갑시켜 상속을 원인으로 국유지를 가로채기 위한 전 단계 조작이다.

실제 국유지사기단의 주모자 정찬근은 이를 토대로 부산시 진구 부암동 산 76의 1~4번지까지 4필지의 임야 1만 6천 363㎡(당시 시가 50여 원 상당)를 시길부 명의 상속재산으로 등기한 뒤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15억 8천400만 원을 받고 부산에 있는 S건설에 매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사건 1990가합238XX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판결문은 "피고 정찬근과 소외 최진열, 김문삼 등은 공모해 위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郞)'는 소외 시민영이고, 피고 시길부는 위 시민영의 아들인 것처럼 제적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 등을 위조한 후 이들 서류를 이용해 1989년 12월 5일 피고 시길부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경료하고, 같은 달 피고 정찬근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각 등기 경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대가로 김문삼 호병계장은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경찰국은 김 계장을 특경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0년 7월 구속했다.

이런 내용은 김경수 후보의 부친과 함께 고성읍사무소에 근무했던 동료공무원과 90년대 초반 보도된 연합뉴스와 MBC, 중앙일보 등 기사에서도 확인됐다.

실제 1990년 7월 3일 MBC 보도와 1990년 7월 4일자, 1991년 7월 19일자, 1991년 12월 3일자, 1993년 4월 12일자 연합뉴스, 1991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 등은 관련보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당시 이 사건은 "공무원 낀 50억 원대 국유지사기사건 검거" 등 제하의 기사로 전국을 술렁이게 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1990년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재판장 강문종)가 1991년 9월 13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기사건은 막을 내렸다.

한편, 고성읍민 A씨(67)는 "국유지사기단의 꼬임에 빠져 순간 실수를 저지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의 큰일이 가로막힌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현대사회에서 연좌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원로언론인 B씨(65)는 "공무원이 호적등본 등을 위조해주고 국유지사기를 도운 비리를 세월이 지났다고 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패공직자의 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을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경수 후보 측에 '취재보도 업무협조'를 발송하고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용 기자 hanyong5908@naver.com

(23.4×14.8)cm²

〈경남매일 2018년 5월 28일자 1면〉

보도 내용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

호적등본 위조 대가 5천만원 수뢰혐의 구속
50억원대 국유지 가로챈 일당 모두 철창행
도지사선거 앞두고 최대 정치적 이슈로 부상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부친 故 김문삼 씨가 국가를 상대로 벌인 '50억 원대 국유지사기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본 선거 시작을 앞두고 '드루킹사건'에 이어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경남지사 후보 부친의 과거사건 때문에 아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두고 '연좌제'를 거론하며 안타까워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던 후보자 부친이 토지사기단과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정치적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8년 전 김경수 후보의 부친 김문삼(당시 53세)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호병계장(호적·병사업무책임자)과 최진열(당시 62세·6급 공무원 출신)은 토지사기단 정찬근(당시 59세·서울 만리동)과 짜고 공범 시길부(施吉夫)의 가짜 제적부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를 만들었다.

이는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郎)' 명의의 토지가 해방 후 국유지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그를 창씨 개명한 조선 사람으로 둔갑시켜 상속을 원인으로 국유지를 가로채기 위한 전 단계 조작이다.

실제 국유지사기단의 주모자 정창근은 이를 토대로 부산시 진구 부암동 산 76의 1-4번지까지 4필지의 임야 1만 6천363㎡(당시 시가 50억 원 상당)를 시길부 명의 상속재산으로 등기한 뒤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15억 8천400만 원을 받고 부산에 있는 S건설에 매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사건 1990가합238XX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판결문은 "피고 정찬근과 소외 최진열, 김문삼 등은 공모해 위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郎)'는 소외 시민영이고, 피고 시길부는 위 시민영의 아들인 것처럼 제적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 등을 위조한 후 이들 서류를 이용해 1989년 12월 5일 피고 시길부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경료하고, 같은 달 피고 정찬근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각 등기 경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대가로 김문삼 호병계장은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경찰국은 김 계장을 특경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0년 7월 구속했다.

이런 내용은 김경수 후보의 부친과 함께 고성읍사무소에 근무했던 동료공무원과 90년대 초반 보도된 연합뉴스와 MBC, 중앙일보 등 기사에서도 확인됐다.

실제 1990년 7월 3일 MBC 보도와 1990년 7월 4일자, 1991년 7월 19일자, 1991년 12월 3일자, 1993년

4월 12일자 연합뉴스, 1991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 등은 관련보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당시 이 사건은 "공무원 낀 50억 원대 국유지사기사건 검거" 등 제하의 기사로 전국을 술렁이게 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1990년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재판장 강문종)가 1991년 9월 13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기사건은 막을 내렸다.

한편, 고성읍민 A씨(67)는 "국유지사기단의 꼬임에 빠져 순간 실수를 저지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의 큰 일이 가로막힌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현대사회에서 연좌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원로언론인 B씨(65)는 "공무원이 호적등본 등을 위조해주고 국유지사기를 도운 비리를 세월이 지났다고 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패공직자의 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을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경수 후보 측에 '취재보도 업무협조'를 발송하고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경남매일

2018년 05월 30일
01면 (종합)

김경수 부친 연루
국유지사기단 수법 교활

전·현직 공무원 등 공모 일본인 명의 귀속 토지 먹잇감
창씨개명 둔갑… 호적원부 위조 대가 5천만원 받기로
당시 언론 '공무원 낀 국유지 사기단 검거' 등 보도 전국 들썩

속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부친이 과거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국유지사기단에게 위조한 호적등본 등을 제공한 사건이 6·13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자 1면 보도〉

이에 본지는 경남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도의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당시 고성군 고성읍사무소에서 호병계장으로 근무했던 김 후보의 부친 김문삼 씨(당시 53세)가 어떤 경로로 국유지사기단과 접촉했는지, 배경은 무엇이고 과정은 어떠했으며, 결말은 어떻게 났는지 등을 추적했다.

◇**범행배경**= 국유지사기단의 수법은 교활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로 등기됐다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국가소유로 바뀐 토지가 사기범들이 눈독 들이는 먹잇감이다. 이들은 원 소유자로 등기된 일본인이 자신의 선대가 창씨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조한 호적서류에 선조이름을 창씨개명 한 것처럼 일본인 이름으로 기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실제 국유지사기단은 부산시 진구 부암동 76의 1~4번지 일야 1만 6천363㎡(현재 이 땅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가 건설돼 있다. 당시 시가 50억 원 이 땅의 현 시세는 570억 원쯤으로 파악됐다)의 명의가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郎)'로 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이 땅은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 소유로 돼 있었던 것이다.

◇**범행과정**= '와카사노쇼타로'가 창씨개명한 조선 사람이고, 후손이 있다면 국가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찬근(당시 62세) 등 국유지사기단은 시길부(施吉夫)라는 공범을 내세워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는 그의 아버지 시민영이 창씨개명한 사람으로 둔갑시키기로 작심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길부와 시민영의 호적등본이다. 정씨 등 국유지사기단은 이를 조작하기 위해 김경수 후보의 부친인 당시 김문삼 고성군 고성읍 호병계장(호적·병사업무책임자)과 전직 6급 공무원 출신 최진열(당시 62세)을 포섭했다. 이들은 공범 시길부의 가짜 제적부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를 만들고 고성읍에 비치했다. 위조공문서를 만들어준 대가는 5천만 원이다. 정찬근은 이 가짜 호적등본 등을 토대로 부산 부암동 땅을 시길부가 상속받게 하고, 곧바로 증여형식으로 자신에게 등기이전 했다. 정씨는 이 땅을 부산 S건설에 15억 8천400만 원을 받고 매각했다.

◇**범행결과**= 정찬근 등 국유지사기단은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부산시경찰국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경찰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의 단초를 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파악된 바 없다. 다만, 부산시경은 1990년 7월 3일 김문삼 호병계장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달아난 정씨 등 국유지사기단 2명은 공개 수배했다. 같은 해 12월 이들은 붙잡혔다.

정부(법무부)는 정씨와 시씨, S건설과 부산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 1990가합238XX호을 심리한 재판부(재판장 강문종)는 1991년 9월 13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땅은 다시 국유지가 됐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공무원 낀 국유지사기단 검거' 등 다양한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전국은 술렁였다. 사법당국은 일제강점기 때 일인 명의의 토지가 상속형식으로 이전 등기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의심되는 사안은 집중 수사했다.

한용 기자

(17.4×27.6)cm

〈경남매일 2018년 5월 30일자 1면〉

김경수 부친 연루 국유지사기단 수법 교활

전·현직 공무원 등 공모 일본인 명의 귀속 토지 먹잇감
창씨개명 둔갑… 호적원부 위조 대가 5천만원 받기로
당시 언론 '공무원 낀 국유지 사기단 검거' 등 보도 전국 들썩

속보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부친이 과거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국유지사기단에게 위조한 호적등본 등을 제공한 사건이 6·13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자 1면 보도〉

이에 본지는 경남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도의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당시 고성군 고성읍사무소에서 호병계장으로 근무했던 김 후보의 부친 김문삼 씨(당시 53세)가 어떤 경로로 국유지사기단과 접촉했는지, 배경은 무엇이고 과정은 어떠했으며, 결말은 어떻게 났는지 등을 추적했다.

■ **범행배경** : 국유지사기단의 수법은 교활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로 등기됐다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국가소유로 바뀐 토지가 사기범들이 눈독 들이는 먹잇감이다. 이들은 원소유자로 등기된 일본인이 자신의 선대가 창씨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조한 호적서류에 선조이름을 창씨개명 한 것처럼 일본인 이름으로 기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실제 국유지사기단은 부산시 진구 부암동 76의 1-4번지 임야 1만 6천363㎡(현재 이 땅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가 건설돼 있다. 당시 시가 50억 원 이 땅의 현 시세는 570억 원쯤으로 파악됐다)의 명의가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郎)'로 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이 땅은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 소유로 돼 있었던 것이다.

■ **범행과정** : '와카사노쇼타로'가 창씨개명한 조선 사람이고, 후손이 있다면 국가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찬근(당시 62세) 등 국유지사기단은 시길부(施吉夫)라는 공범을 내세워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는 그의 아버지 시민영이 창씨개명한 사람으로 둔갑시키기로 작심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길부와 시민영의 호적등본이다. 정씨 등 국유지사기단은

이를 조작하기 위해 김경수 후보의 부친인 당시 김문삼 고성군 고성읍 호병계장(호적·병사업무책임자)과 전직 6급 공무원 출신 최진열(당시 62세)을 포섭했다. 이들은 공범 시길부의 가짜 제적부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를 만들고 고성읍에 비치했다. 위조공문서를 만들어준 대가는 5천만 원이다. 정찬근은 이 가짜 호적등본 등을 토대로 부산 부암동 땅을 시길부가 상속받게 하고, 곧바로 증여형식으로 자신에게 등기이전 했다. 정씨는 이 땅을 부산 S건설에 15억 8천400만 원을 받고 매각했다.

■ **범행결과** : 정찬근 등 국유지사기단은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부산시경찰국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경찰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의 단초를 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파악된 바 없다. 다만, 부산시경은 1990년 7월 3일 김문삼 호병계장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달아난 정씨 등 국유지사기단 2명은 공개 수배했다. 같은 해 12월 이들은 붙잡혔다.

정부(법무부)는 정씨와 시씨, S건설과 부산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 1990가합238XX호을 심리한 재판부(재판장 강문종)는 1991년 9월 13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땅은 다시 국유지가 됐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공무원 낀 국유지사기단 검거' 등 다양한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전국은 술렁였다. 사법당국은 일제강점기 때 일인 명의의 토지가 상속형식으로 이전 등기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의심되는 사안은 집중 수사했다.

경남매일

2018년 06월 07일
01면 (종합)

국군장교 김경수 외숙 '월북'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각종 의혹을 공표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화면.

김대중 정부 신원조회 걸려 청와대 3개월 만에 나와
손가락 사고 병역 의혹 증폭·친북운동 전과도 논란
한국당, 후보 검증 시리즈 6탄에 병역문제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전과기록과 병역문제, 외삼촌 월북 등이 선거 막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김 후보의 병역문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검증 시리즈 6탄'을 공표했다.

이번 검증에서 한국당은 김경수 후보의 전과기록과 병역면제 관련 의혹, 국군 장교 신분으로 철책선 근무를 하던 김 후보 외삼촌의 월북 사건을 다뤘다.

특히 국군 장교였던 김경수 후보 외삼촌이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실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은 "(김경수 후보가)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신원조회에 걸려 3개월 만에 청와대를 나오게 된 사유는 외삼촌의 월북 때문"이라며 지난 2016년 4월 경청(경남의 청년잡지)의 '김해을 김경수 후보를 만나다' 인터뷰 기사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연좌제로 몰아붙이는 네거티브의 끝장판"이라며 "김경수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에 월북한 외삼촌 일을 새삼 거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저 한심스러울 따름"이라며 한국당의 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지역 정객은 "전통성으로 가문과 혈통을 논하는 이유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가계도를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잣대"라면서 검증시스템을 옹호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김 후보 부친이 토지사기단의 사주를 받아 50억 원대 국유지를 가로챈 사건과 댓글 여론조작 게이트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실제 한국당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을 공개 검증한다면서 순차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후보 검증 시리즈 6탄'에서도 한국당은 김 후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전과 사실을 적시하고 구체적인 형량도 공개했다.

또 이 같은 혐의 때문에 구속에 이르는 등 처벌사실이 혹남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김 후보에 대해 한국당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의 말을 인용,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발전 또는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목적의 '반체제 운동' 또는 '친북 운동'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4월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 MBC 경남 TV토론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가 김 후보의 '국보법 구속 전력'을 거론하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실제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김경수 후보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시대착오적 수준 낮은 공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 후보의 병역면제 문제와 국군 장교였던 외삼촌 월북 사건에 대해서는 색깔 공세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경수 후보는 지난 1986년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그러나 1987년 11월 6일 재검에서 '근위지절 강직(손가락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해 뻣뻣하게 굳어지는 현상)' 사유로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왜 하필 징병검사 연기한 다음 해에 상해를 입게 됐을까"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국일보 기사 제시) '2014년에는 농활에서 기계에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던 김 후보가 (경청잡지 인터뷰기사 제시) '2016년에는 대학생 신분을 속이고 위장 취업했다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했다면서 말 바꾸기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김경수 후보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가의 한 논객은 "'농촌활동에서 다쳤다'와 '위장 취업(공장)에서 다쳤다'는 엄연히 다른 사고원인 차이가 병역문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김 후보 측은 즉각 소명하는 것이 병역의무를 다한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한용 기자

(17.4×32.8)cm²

〈경남매일 2018년 6월 7일자 1면〉

보도 내용

국군장교 김경수 외숙 '월북'

김대중 정부 신원조회 걸려 청와대 3개월 만에 나와
손가락 사고 병역 의혹 증폭·친북운동 전과도 논란
한국당, 후보 검증 시리즈 6탄 병역문제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전과기록과 병역문제, 외삼촌 월북 등이 선거 막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김 후보의 병역문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검증 시리즈 6탄'을 공표했다.

이번 검증에서 한국당은 김경수 후보의 전과기록과 병역면제 관련 의혹, 국군 장교 신분으로 철책선 근무를 하던 김 후보 외삼촌의 월북 사건을 다뤘다.

특히 국군 장교였던 김경수 후보 외삼촌이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실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은 "(김경수 후보가)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신원조회에 걸려 3개월 만에 청와대를 나오게 된 사유는 외삼촌의 월북 때문"이라며 지난 2016년 4월 경청(경남의 청년잡지)의 '김해을 김경수 후보를 만나다' 인터뷰 기사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연좌제로 몰아붙이는 네거티브의 끝장 판"이라며 "김경수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에 월북한 외삼촌 일을 새삼 거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저 한심스러울 따름"이라며 한국당의 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지역 정객은 "전통적으로 가문과 혈통을 논하는 이유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가계도를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잣대"라면서 검증시스템을 옹호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김 후보 부친이 토지사기단의 사주를 받아 50억 원대 국유지를 가로챈 사건과 댓글 여론조작 게이트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실제 한국당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을 공개 검증한다면서 순차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후보 검증 시리즈 6탄'에서도 한국당은 김 후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전과 사실을 적시하고 구체적인 형량도 공개했다.

또 이 같은 혐의 때문에 구속에 이르는 등 처벌사실이 훗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김 후보에 대해 한국당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의 말을 인용,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발전 또는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목적의 '반체제운동'또는 '친북 운동'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4월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 MBC 경남 TV토론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가 김 후보의 '국보법 구속 전력'을 거론하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실제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김경수 후보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시대착오적 수준 낮은 공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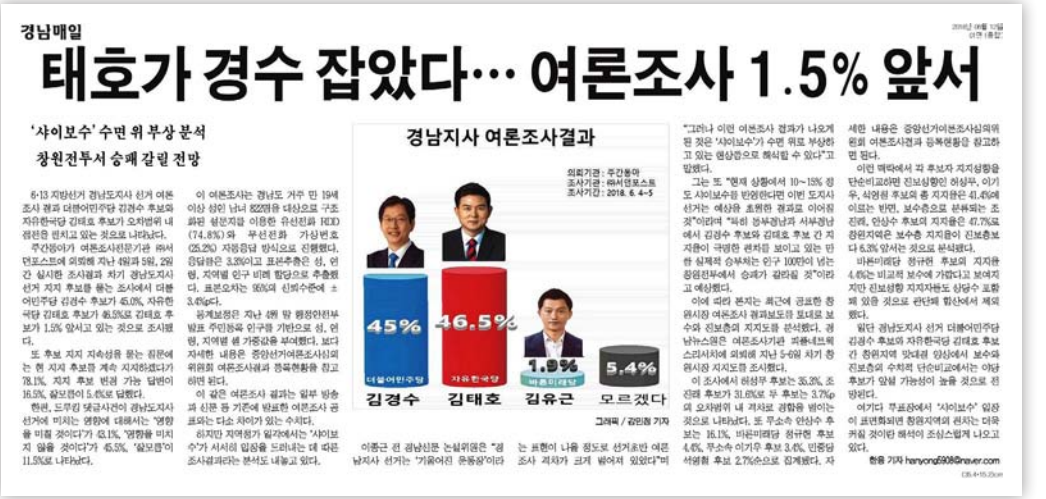
그러나 김경수 후보의 병역면제 문제와 국군 장교였던 외삼촌 월북 사건에 대해서는 색깔 공세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경수 후보는 지난 1986년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그러나 1987년 11월 6일 재검에서 '근위지절 강직(손가락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해 뻣뻣하게 굳어지는 현상)' 사유로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왜 하필 징병검사 연기한 다음 해에 상해를 입게 됐을까"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국일보 기사 제시) '2014년에는 농활에서 기계에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던 김 후보가 (경청잡지 인터뷰기사 제시) 2016년에는 대학생 신분을 속이고 위장 취업했다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했다면서 말 바꾸기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김경수 후보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가의 한 논객은 "'농촌활동에서 다쳤다'와 '위장 취업(공장)에서 다쳤다'는 엄연히 다른 사고원인 차이가 병역문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김 후보 측은 즉각 소명하는 것이 병역의무를 다한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경남매일

태호가 경수 잡았다… 여론조사 1.5% 앞서

'샤이보수' 수면 위 부상 분석
창원전투서 승패 갈릴 전망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2일간 실시한 조사결과 차기 경남도지사 선거 지지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5.0%,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46.5%로 김태호 후보가 1.5%p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보 지지 지속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가 78.1%, 지지 후보 변경 가능 답변이 16.5%, 잘모름이 5.4%로 답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사건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43.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45.5%, '잘모름'이 11.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경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2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RDD(74.8%)와 무선전화 가상번호(25.2%)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3%이고 표

〈경남매일 2018년 6월 12일자 1면〉

보도 내용

태호가 경수 잡았다… 여론조사 1.5%p 앞서

'샤이보수' 수면 위 부상 분석
창원전투서 승패 갈릴 전망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2일간 실시한 조사결과 차기 경남도지사 선거 지지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5.0%,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46.5%로 김태호 후보가 1.5%p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보 지지 지속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가 78.1%, 지지 후보 변경 가능 답변이 16.5%, 잘모름이 5.4%로 답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사건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43.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45.5%, '잘모름'이 11.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경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2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RDD(74.8%)와 무선전화 가상번호(25.2%)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3%이고 표

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4%p다.

통계보정은 지난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셀 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일부 방송과 신문 등 기존에 발표한 여론조사 공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다.

하지만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샤이보수'가 서서히 입장을 드러내는 데 따른 조사결과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종근 전 경남신문 논설위원은 "경남지사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선거초반 여론조사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샤이보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에서 10~15% 정도 샤이보수를 반영한다면 이번 도지사 선거는 예상을 초월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동부경남과 서부경남에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 간 지지율이 극명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적 승부처는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전투에서 승패가 갈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최근에 공표한 창원시장 여론조사 결과보도를 토대로 보수와 진보층의 지지도를 분석했다. 경남뉴스원은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차기 창원시장 지지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허성무 후보는 35.3%, 조진래 후보가 31.6%로 두 후보는 3.7%p의 오차범위 내 격차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16.1%,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 4.4%, 무소속 이기우 후보 3.4%, 민중당 석영철 후보 2.7%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 후보자 지지성향을 단순비교하면 진보성향인 허성무, 이기우, 석영철 후보의 총 지지율은 41.4%에 이르는 반면,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조진래, 안상수 후보의 지지율은 47.7%로 창원지역은 보수층 지지율이 진보층보다 6.3%p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의 지지율 4.4%는 비교적 보수에 가깝다고 보여지지만 진보성향 지지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돼 합산에서 제외했다.

일단 경남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간 창원지역 맞대결 양상에서 보수와 진보층의 수치적 단순비교에서는 야당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투표장에서 '샤이보수' 입장이 표면화되면 창원지역의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지는 2018년 5월 28일 자 1면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파문", 2018년 5월 30일 자 1면 "김경수 부친 연루 국유지사기단 수법 교활", 2018년 6월 7일 자 1면 "국군장교 김경수 외숙 '월북'", 2018년 6월 12일 자 1면 "태호가 경수 잡았다… 여론조사 1.5% 앞서" 제하의 기사에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경남도지사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선거일 전일 여러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면서 해당 결과를 부각하는 제목을 달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경남매일 2018년 7월 11자 1면〉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8
시정요구인	**신현국**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시사문경** 경북 문경시 신흥로 193 발행인 전재수
심의대상기사	시사문경 2018년 5월 24일(제145호) 1면 「고윤환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성황"」 및 「전직 시장의 몽니를 보는 단상(短想)」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2018. 5. 24.자(제145호) 〈시사문경〉 1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발행인 칼럼 및 경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위 심의대상기사 중 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기사에는 제목에 '대성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호적으로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에 관한 칼럼에는 '전직 시장의 몽니를 보는 단상'이라는 부정적인 제목을 달고 객관적이지 못한 근거를 들어 비판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인에 대한 칼럼은 '전직 시장의 몽니' 등과 같이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비판보도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 지면에 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를 게재하여 유권자들이 두 후보자에 대해 긍·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칼럼의 작성주체가 발행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기사심의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윤환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성황"

"시민이 행복한 문경의 꿈을 완성하겠다"며 지지호소

고윤환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후보는 지난 5월 21일 점촌동, 구 삼일극장 사거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2천여명의 지지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운집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고윤환 후보는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문경의 꿈'을 완성하고자 엄숙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문경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고윤환 후보는 시장 재임 6년 동안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이라는 시정 목표아래 2015년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 864억원 규모의 점촌 도심재창조 20대 프로젝트 추진, 신기 2일반산업단지 등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75개 기업, 2,067억원의 투자유치와 1,13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통한 읍·면·동 균형발전, 지방채무를 2012년말 484억원에서 2017년말 328억원으로 32%를 줄이고, 2018년 본 예산 6,200억원 시대를 열어 재정의 확대로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평가결과 문경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4위에 올랐으며, 산업연구원에서 전국 20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성장 특성분석 결과 문경시의 지난 3년간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세 배가 넘는 11.3%로 조사되어 문경이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성장이 가능한 미래 도시성장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아 문경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 층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고윤환 후보는 "앞으로의 4년은 문경의 미래를 결정할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라고 진단하고, "시대정신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경의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 문경'을 만들고 문경시 예산 9천억원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면서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시사문경 2018년 5월 24일자 1면〉

보도 내용

고윤환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성황"

"시민이 행복한 문경의 꿈을 완성하겠다"며 지지호소

고윤환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후보는 지난 5월 21일 점촌동, 구 삼일극장 사거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2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운집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고윤환 후보는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문경의 꿈'을 완성하고자 엄숙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문경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고윤환 후보는 시장 재임 6년 동안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이라는 시정 목표아래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 864억 원 규모의 점촌 도심재창조 20대 프로젝트 추진, 신기 2일반산업단지

등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75개 기업, 2,067억 원의 투자유치와 1,13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통한 읍·면·동 균형발전, 지방채무를 2012년 말 484억 원에서 2017년말 328억 원으로 32%를 줄이고, 2018년 본 예산 6,200억 원 시대를 열어 재정의 확대로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평가결과 문경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4위에 올랐으며, 산업연구원에서 전국 20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성장 특성분석 결과 문경시의 지난 3년간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세 배가 넘는 11.3%로 조사되어 문경이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성장이 가능한 미래 도시성장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아 문경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 층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고윤환 후보는 "앞으로의 4년은 문경의 미래를 결정할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라고 진단하고, "시대정신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경의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 문경'을 만들고 문경시 예산 9천억원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면서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時事時論] 전직 시장의 몽니를 보는 단상(短想)

최근 신현국 전 시장의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몽니에 가까운 처신을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안쓰러움은 물론, 가벼운 연민마저 든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의 문경시장 후보 공천 경선이 부당(?)하다며 경선을 포기했던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시장은 경북도당의 경선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당 공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당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5월 4일 신 전 시장의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시장은 경북도당이 지난 4월 16일 고윤환 현 시장과의 경선을 결정하자 이튿날인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현실에선 경선에 응해봤자 이길 수가 없다"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었다.

신 전 시장의 공무원 선거개입 운운은 최근 도선관위가 문경시청 공무원이 소셜네트워크(밴드 등)에 시정 홍보를 지나치게 많이 해 사전 선거운동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 의뢰를 두고 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었다. 하물며 조사 결과가 나왔겠는가?

신 전 시장이 주장하는 부당한 경선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자신에게로의 전략공천이 아니라서 부당하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당초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꽃았었다. 경북도당은 한 술 더 떠 100만원짜리 벌금 전과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앙당과 경북도당의 약속은 그들이 국회의원답게 헛 약속, 즉 空約(공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됐다. 직권남용과 벌금 200만원의 전과가 있는 신 전시장에게도 경선 참여라는 대문호를 개방(?)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호를 개방한 한국당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신 전 시장은 경선 결정이 잘못됐다고 강변했다.

미국 하버드대 모 정치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남자다움이란 위험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갖고 용맹하게 쟁점을 만들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자는 "남자든 여자든 자신감 책임감, 특히 정치에선 남자다운 남자여야 리더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선택한일에 대한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도 남자다운 책임감일 것이다. 지역을,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강변하는 신 전 시장의 언행(言行)이 일치(一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왜 일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권력은 불가피하고, 한번 권력에 심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그 권력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시민은 안 보이고 시장 자리라는 권력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일이다.

전재수 발행인

〈시사문경 2018년 5월 24일자 1면〉

보도 내용

時 / 事 / 時 / 論

전직 시장의 몽니를 보는 단상(短想)

최근 신현국 전 시장의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몽니에 가까운 처신을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안쓰러움은 물론, 가벼운 연민마저 든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의 문경시장 후보 공천 경선이 부당(?)하다며 경선을 포기했던 신현국 전 문경시

장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시장은 경북도당의 경선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당 공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당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5월 4일 신 전 시장의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시장은 경북도당이 지난 4월 16일 고윤환 현 시장과의 경선을 결정하자 이튿날인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현실에선 경선에 응해봤자 이길 수가 없다"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었다.

신 전 시장의 공무원 선거개입 운운은 최근 도선관위가 문경시청 공무원이 소셜네트워크(밴드 등)에 시정 홍보를 지나치게 많이 해 사전 선거운동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 의뢰를 두고 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었다. 하물며 조사 결과가 나왔겠는가?

신 전 시장이 주장하는 부당한 경선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자신에게로의 전략공천이 아니라서 부당하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당초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꼽았었다. 경북도당은 한 술 더 떠 100만원짜리 벌금 전과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앙당과 경북도당의 약속은 그들이 국회의원답게 헛 약속, 즉 空約(공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됐다. 직권남용과 벌금 2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신 전시장에게도 경선 참여라는 대문호를 개방(?)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호를 개방한 한국당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신 전 시장은 경선 결정이 잘못됐다고 강변했다.

미국 하버드대 모 정치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남자다움이란 위험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갖고 용맹하게 쟁점을 만들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자는 "남자든 여자든 자신감 책임감, 특히 정치에선 남자다운 남자여야 리더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선택한일에 대한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도 남자다운 책임감일 것이다. 지역을,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강변하는 신 전 시장의 언행(言行)이 일치(一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왜 일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권력은 불가피하고, 한번 권력에 심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그 권력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시민은 안 보이고 시장 자리라는 권력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일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9
시정요구인	김종식
피시정요구인	**유한회사 목포솔루션(새목포일보)**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94번길 3층 발행인 박숭봉
심의대상기사	새목포일보 2018년 5월 23일자(제55호) 1면 「김종식 목포시장 출마…"완도 떠나라" 노조 성명 눈길」,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사실상 금품수수 의혹」, 3면 「김종식 목포시장예비후보, 경제시장 표방 … 완도군수 3선동안 '낙제점'」 및 2018년 6월 6일자(제56호) 1면 「김종식 후보 부인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실(?)」, 「김종식 후보 군수시설 '살아있는 흉상' 논란」, 2면 「전국통합 공무원노조 '김종식 후보는 부적격자' 성명 파장」, 3면 「발행인 칼럼 김종식 후보는 목포시민께 거짓말 그만하시고 목포를 떠나면 어떠하십니까?」, 「사설 김종식 후보의 노조탄압에 대한 어설픈 해명」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새목포일보〉 2018. 5. 23.자(제55호) 1면 및 3면, 2018. 6. 6.자(제56호) 1~3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으로 출마하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 내용, 시정요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시정요구인이 완도군수 재임시절 지역경제 관련 성과가 미흡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에 대해 비판적이고 불리한 내용의 기사만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 및 비판보도는 대부분 후보자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기사의 분량, 게재 지면, 게재 횟수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후보자간 형평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설과 발행인 칼럼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기사심의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하였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김종식 목포시장 출마 … "완도 떠나라" 노조 성명 눈길

"완도를 잘살게 만들었다(?)" 는 주장과 달리 12년 완도군수 초라한 성적표

"군정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완도를 떠나야 한다" 망신살

김종식 군수 퇴임식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12년 3선의 완도군수를 지낸 김종식 예비후보가(67)이 목포시장에 출마한 가운데, 출마배경에 대한 갖가지 눈총을 사고 있다.

완도부군수, 목포부시장, 영암부군수 등을 지내고, 완도군수를 12년 지냈고, 광주경제부시장을 거쳐, 또 다시 목포시장 출마는 광주 전남에서 누릴 것 다 누리려 한다는 과욕이다'는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년 완도군수직을 퇴임 할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군을 떠나라'는 치욕적인 성명서가 발표된 것을 두고 12년 완도군정의 성적표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특히 떠나라는 이유가 "군민 화합을 위해…"라고 밝혀, 12년 군정을 수행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 배경에 대해 "'저를 낳아준 고향 완도'를 빚 없이 잘사는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었듯이 '저를 길러준 고향 목포'를 서남권 시대에 대비한 최고의 도시로, 목포의 옛 명성을 되찾고 부활시키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6월 완도군수 시정 퇴임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를 떠나라'는 내용의 당시 성명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군수재임당시 공무원 노조로부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명한 비난 성명까지 받았지만 '완도군을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었다'고 상반된 자평으로, 군수재임당시를 포장해 목포시민들의 기대하라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당시 완도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완도를 떠나야 한다"고 극단 내용으로 망신살을 안겼다.

목사 성명은 "10여년에 걸친 갈등과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에 따른 아픔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6기 '소통과 화합'의 장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민 여론에 따라 불리적인 입체의 행동을 자제하기로 결정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군 발전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배경까지 설명했다.

완도군지부는 김종식 군수의 퇴임을 앞두고 "김종식 군수 퇴임식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라는 성명서를 통해 "김종식 군수는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퇴임식을 끝으로 군민 화합과 군민 화합을 위해서 완도를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완도를 사랑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합과 보복인사로 탄압하는 등은 그 가족들에게 어른 상처를 남기고 완도군에 분열과 갈등을 안겨줬다"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청산도에 유래 없는 흉상을 세워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함께 완도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군수재임 당시 공무원들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었다'는 스스로의 평가와 함께, 목포시장 출마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승봉 기자

〈새목포일보 2018년 5월 23일자 1면〉

보도 내용

김종식 목포시장 출마…"완도 떠나라" 노조 성명 눈길

"완도를 잘살게 만들었다(?)"는 주장과 달리 12년 완도군수 초라한 성적표
"군정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완도를 떠나야 한다" 망신살

12년 3선의 완도군수를 지낸 김종식 예비후보가(67)이 목포시장에 출마한 가운데, 출마배경에 대한 갖가지 눈총을 사고 있다.

완도부군수, 목포부시장, 영암부군수 등을 지내고, 완도군수를 12년 지냈고, 광주경제부시장을 거쳐, 또 다시 목포시장 출마는 광주 전남에서 누릴 것 다 누리려 한다는 과욕이다'는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년 완도군수직을 퇴임 할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군을 떠나라'는 치욕적인 성명서가 발표된 것을 두고 12년 완도군정의 성적표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특히 떠나라는 이유가 "군민 화합을 위해…"라고 밝혀, 12년 군정을 수행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 배경에 대해 "'저를 낳아준 고향 완도'를 빚 없이 잘사는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었듯이 '저를 길러준 고향 목포'를 서남권 시대에 대비한 최고의 도시로, 목포의 옛 명성을 되찾고 부활시키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6월 완도군수 시절 퇴임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를 떠나라'는 내용의 당시 성명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군수재임당시 공무원 노조로부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명한 비난 성명까지 받았지만 '완도군을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었다'고 상반된 자평으로, 군수재임당시를 포장해 목포시민들의 기만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당시 완도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완도를 떠나야 한다"고 극한 내용으로 망신살을 안겼다.

특히 성명은 "10여년에 걸친 갈등과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에 따른 아픔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소통과 화합'의 장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민 여론에 따라 물리적인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기로 결정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군 발전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배경까지 설명했다.

완도군지부는 김종식 군수의 퇴임을 앞두고 '김종식 군수 퇴임식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김종식 군수는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퇴임식을 끝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서 완도를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완도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압과 보복인사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완도군에 분열과 갈등을 안겨줬다"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청산도에 유래 없는 흉상을 세워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함께 완도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군수재임 말기 공무원들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었다'는 스스로의 평가와 함께, 목포시장 출마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사실상 금품수수 의혹

무죄 확정 … 그러나 당시 김군수 부하직원의 위증과 위증교사는 유죄

"위증과 위증 교사해 K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 판결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던 후보 부인의 금품수수의혹이 선거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김종식 후보는 지난 2006년 완도군수 시절 부인이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휘말리는 등 갖가지 잡음을 겪었던 터라 또 다시 목포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사왔다. 언론 등에 따르면 과거 군수시절 부인 K씨가 완도군 모 면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J씨로부터 2006년 9월에 기능직 채용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2월 16일 징역 8월,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쌍방 상소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송부된 이 사건은 2012년 12월 21일 열린 2심 공판에서 K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를 위증하고, 핵심 증인인 공무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당시 김종식 후보의 부하 공무원이었던 완도군청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확정돼, 사실상 매관매직이 일어났다는 눈총을 받았다.

김 후보의 부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뒤늦게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위증하고, 위증을 교사한 당시부하 공무원들이 유죄를 받고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위 금품수수와 관련한 두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김종식 후보의 부인 K씨가 사실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른 금품수수사건의 흐름 정리〉

▷김종식 후보 부인 K씨의 변호사법 위반
2006년 9월 16일
당시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J씨가 K씨의 직장인 광주대학교수실을 찾아가 1000만원이 든 봉투 상자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음.

2007년 1월
J씨 기능직 시험에 합격 2월부터 기능직으로 근무(자격증 등 서류에 의한 평가에서는 최저수준인 2점, 그러나 3명의 면접위원들에 의한 면접점수에서는 유일하게 만점으로 합격)

2012년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K씨 변호사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판결.
→쌍방 항소

2012년 12월 21일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
무죄

2013년 4월 10일
대법원 3심 판결
상고 기각

▷A군청 위증교사, B실장 위증 사건
A군청은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년 12월 10일경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J씨의 형인 김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을 잘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

B실장은 12년 7월 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J씨를 수사에 만났고, J씨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허위로 위증한 사실.

2015년 10월 1일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무죄
→항소

2016년 10월 20일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
각 각 징역 1년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이유: A과장이 위증을 교사해 J씨가 위증을 했고, B실장이 위증해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K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되었다는 판결.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3심판결
상고기각

〈새목포일보 2018년 5월 23일자 1면〉

보도 내용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사실상 금품수수 의혹

무죄 확정… 그러나 당시 김군수 부하직원의 위증과 위증교사는 유죄

"위증과 위증 교사해 K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 판결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사실상 금품수수 의혹 무죄 확정 … 그러나 당시 김군수 부하직원의 위증과 위증교사는 유죄 "위증과 위증 교사해 K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선고" 판결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던 후보 부인의 금품수수의혹이 선거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김종식 후보는 지난 2006년 완도군수 시절 부인이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휘말리는 등 갖가지 잡음을 겪었던 터라 또 다시 목포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사왔다. 언론 등에 따르면 과거 군수시절 부인 K씨가 완도군 모 면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J씨로부터 2006년 9월에 기능직 채용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2월 16일 징역 8월,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쌍방 상소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송부된 이 사건은 2012년 12월 21일 열린 2심 공판에서 K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를 위증하고, 핵심 증인인 공무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당시 김종식 후보의 부하 공무원이었던 완도군청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확정돼, 사실상 매관매직이 일어났다는 눈총을 받았다.

김 후보의 부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뒤늦게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위증하고, 위증을 교사한 당시부하 공무원들이 유죄를 받고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위 금품수수와 관련한 두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김종식 후보의 부인 K씨가 사실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목포일보 종 합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3

김종식 목포시장예비후보, 경제시장 표방 … 완도군수 3선동안 '낙제점'

GRDP, 재정자립도 하위권 … 전복주식회사, 후코이단사업 등 엉망

발 기 문

▲참고사진 : 지난 5월 11일자 완도신문 1132호 (가칭)완도전복산업 재건을 위한 군민 대책위원회(준)이 발표한 발기문 광고

완도군수 3선을 지내고 이번에는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나선 가운데, 과거 완도군수 3선을 역임하는 동안 경제분야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엉터리 케치프레이즈'란 비난을 사고 있다.

김종식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등의 현수막에 '경제시장'을 내세우고 지역민 표시공약에 나섰다.

또 김 예비후보는 전 완도군수를 지낸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완도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작인자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완도군수 12년을 지낸 김종식 전 군수 재임 동안 완도군의 경제상태는 답선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일부 조사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 예비후보가 완도 군수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후코이단사업의 비리에 휘말린 사건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부실경영 사태 등이 일괴되면서 비아냥을 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참사는 지역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혹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규모에서 완도군의 경우 2015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20위에 머물았으며, 특히 김종식 전 군수가 주로 군수직을 맡아하던 14년에는 21위에 머물었고, 2006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성장률은 3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포시는 정종득 전 시장이 주요 시장직을 수행하던 2005년에서 2014년까지 44.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에서 완도군이 7.5%를 기록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14위를 기록했고, 목포시는 21%로 4위를 기록했다.

지역총생산과 재정자립도에서 나타내는 지표를 분석하면 '완도를 최고의 절사는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궁색해 보인다는 시각이다.

김 전 군수시절 실시했던 대규모 사업들도 최근 연루성에 휩싸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부딪한 각종 사태도 의문을 키우게 증폭하다는 주장이다.

2005년 시작한 30억 규모의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이 비리로 결즘이 실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특히 완도군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전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86억 규모의 완도전복주식회사도 곡종 비리와 부실도 손꼽 지적을 받아왔다.

회사는 군비 약 29억을 투입해 군이 최대 주주가 되고, 수협과 어업인들이 약 58억을 들어 만들고 국비 등을 지원받는 등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대표이사가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해다 지적되는가 하면, 2014년 완도전복주식회사 김종식 전 완도군수 체납이 이사로 임용됐다가 3개월만에 그만 두는 해프닝이 발생하는 등 말썽이 계속됐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됐다.

특히 2015년 정관변 완도군의회 의원을 비롯으로 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뤄졌으며, 운영부문적 등 19건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제시장을 주장하고 나선 김종식 예비후보를 바라보는 한 목포지역 가자는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어지로 공어내, 지가에게 유리하도록 맞추는 졸이라는 톡의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며 "몰본 잘한 것도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시장이란 수식어는 어울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승봉 기자

언론인의 눈

완도신문 대표이사 김 정 호

"김종식 마타도어 팩트체크라는 해명서는 새빨간 거짓말"

목포시장으로 출마한 김종식이 마타도어 팩트체크라는 해명서에서 완도신문을 직접 거론했다.

먼저, 고소 1회에 153건을 고소했다고 했는데 검찰에 너무 많이 다녀서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1월 중순에 고소를 시작해 무혐의 처분 받자 2008년에 또 고소하여, 2011년까지 법정을 오기에 여러용을 적었던 기억은 투명하다.

그러니까 1회에 153건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다.

무엇는 김종식이 완도신문 비판 기사보도에 손간 화를 참지 못해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검가촌이가 공작에 무고한 사람을 건립한는 것처럼 치밀한 공작이었다.

단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신문사의 편집국장 자택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지관 지방언론주재기자 곤별의 진정서를 확인하고 김종식과 검찰이 치밀하게 조작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서 내용에 군수 출마를 꿈꾸는 특정정치인이 완도신문에 후원하고 완도신문은 군수를 비방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통장 계좌를 추적했고, 통화내역, 검찰 타 내용물이 필요했다.

검찰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없는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이후 검찰은 재판 진행 중 특정 정치인과 짜고 군수를 비방했다는 기소내용을 법원에 작제 요청했다.

김종식과 검찰이 짜고 비판 언론사를 옭아겠다는 정치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노릇이다. 군민은 언론권리를 자신이에 영구 침권하겠다는 독재자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완도군수와 완도신문 소송 건은 고소 찾수나 건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정치인의 권력욕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는지 들여다 보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목포에 그가 될다. 언론인들은 긴장하라.

4월 27일.

*본 글은 본보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목포일보 2018년 5월 23일자 3면〉

보도 내용

김종식 목포시장예비후보, 경제시장 표방… 완도군수 3선동안 '낙제점'

GRDP, 재정자립도 하위권…전복주식회사, 후코이단사업 등 엉망

완도군수 3선을 지내고 이번에는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나선 가운데, 과거 완도군수 3선을 역임하는 동안 경제분야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엉터리 케치프레이즈'란 비난을 사고 있다.

김종식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등의 현수막에 '경제시장'을 내세우고 지역민 표시공약에 나섰다.

또 김 예비후보는 전 완도군수를 지낸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완도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완도를 최고로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내세우며 목포경제 활성화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완도군수 12년을 지낸 김종식 전 군수 재임 동안 완도군의 경제상태는 발전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일부 조사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 예비후보가 완도 군수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후코이단사업이 비리에 휘말린 사건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부실경영 사태 등이 알려지면서 비아냥을 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혹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규모에서 완도군의 경우 2015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20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김종식 전 군수가 주로 군수직을 퇴임하던 14년에는 21위에 머물렀고,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성장률은 3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포시는 정종득 전 시장이 주로 시장직을 수행하던 2005년에서 2014년까지 4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에서 완도군이 7.5%를 기록했고, 목포시는 21%로 4위를 기록했다.

지역총생산과 재정자립도에서 나타내는 지표를 분석하면 '완도를 최고의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궁색해 보인다는 시각이다.

김 전 군수시절 실시했던 대규모 사업들도 측근 연루설에 휩싸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부당한 각종 사태도 의문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2005년 시작한 30억 규모의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이 비리로 줄줄이 실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특히 완도군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전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88억 규모의 완도전복주식회사도 각종 비리와 부실로 온갖 지적을 받아왔다.

회사는 군비 약 29억을 투입해 군이 최대 주주가 되고, 수협과 어업인 등이 약 58억을 들여 만들고, 국비 등을 지원받는 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대표이사가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2014년 완도전복주식회사 김종식 전 완도군수 처남이 이사로 임용됐다가 3개월만에 그만 두는 헤프닝이 발생하는 등 말썽이 계속됐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됐다.

특히 2015년 정관범 완도군의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뤄졌으며, 운영부정적 등 19건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제시장을 주창하고 나선 김종식 예비후보를 바라보는 한 목포지역 기자는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추는 꼴이라는 뜻의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며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시장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식 후보 부인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실(?)

완도군 간부 2명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무죄 만들어 …

자발적으로 군수 부인 구하기 나섰나?

6.13 지방선거 목포시장에 출마한 김종식 후보 부인의 금품수수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깜깜이 후보검증' 우려를 낳고 있다.

부인의 인사개입의혹과, 이로 인한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점에서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명돼야 할 중요한 문제란 점 때문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종식 후보가 완도군수 시절 후보의 부인은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의혹을 벗는 듯 했다.

그러나 뒤늦은 2015년 10월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부인의 금품수수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재판장에 섰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금품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년 12월 10일경,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네 기능직에 특채되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기능직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한 고위공직자는 12년 7월 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김종식 당시군수의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기능직이)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 2017년 대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금품수수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금품수수혐의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한 김 전 군수의 부하직원들은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기각 판결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과연 금품수수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김종식 군수가 시민들앞에 서기전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승봉 기자

[2016년 10월 20일 위증과 위증교사 확정 판결문 주문과 양형의 이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A를 징역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위증 교사에 따른 i의 위증 및 피고인 B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H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전직 F군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커다란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새목포일보 2018년 6월 6일자 1면〉

보도 내용

김종식 후보 부인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실(?)

완도군 간부 2명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무죄 만들어… 자발적으로 군수 부인 구하기 나섰나?

6·13 지방선거 목포시장에 출마한 김종식 후보 부인의 금품수수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깜깜이 후보검증 우려를 낳고 있다.

부인의 인사개입의혹과 이로 인한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점에서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중요한 문제란 점 때문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종식 후보가 완도군수 시절 후보의 부인은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의혹을 벗는 듯했다.

그러나 뒤늦은 2015년 10월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부인의 금품수수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재판장에 섰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금품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 5회 공판기일인 12년 12월 10일경,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네 기능직에 특채되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기능직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한 고위공직자는 12년 7월 6일경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김종식 당시군수의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능직을 수차례 만났고, (기능직이)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 2017년 대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금품수수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금품수수혐의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한 김 전 군수의 부하직원들은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기각 판결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과연 금품수수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김종식 군수가 시민들앞에 서기전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종식 후보 군수시절 '살아있는 사람 흉상' 논란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주민 자발적 건립' 진실공방 … 농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군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이 또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흉상의 주인공인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가 12년 완도군수를 끝마치고, 광주광역시부시장을 거쳐 이번에는 목포시장으로 출마한 때문이다.

김후보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흉상이라는 비난에 대해 줄곧 '주민들이 공적을 기려 자발적으로 건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과정 불법으로 건립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가 완도군수 시절 완도군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을 철거하라는 여론과 함께 불법 시비가 지속되고 있다.

완도군의회에서 청산도에 세워진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에 대해 "흉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조치 해야한다"는 의견을 군정 질의 과정에 나왔다.

완도군의회 의정질의서에 따르면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행정보존재산 내에 잔일 군수 동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농지 위에 세워진 흉상 건립 지적가 위법행위에 당시 모 과장이 합법화를 위해 사후 보완적으로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며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나 김군수 동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치하고 법치하다 보니 이 지난다"며 "또 다시 후임자 의원들에게 남겨 놓을 수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그는 또한 "완도군은 투법천지로 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김 전 군수의 흉상 철거를 촉구했으며, "집행부에서 해임지자 않을시 허위공문서 작성건 등을 포함 해 의원 개인명으로라도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견도 냈었다.

2013년 7월 세워진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은 농지법위반 문제가 불거지 직후부터 불거 이직 논란이 일었으며, 오월투쟁을 받는 등 전문의 가십거리로 전락된 가운데 완도군의회의 지적에 대한 완도군의 처분에 관심이 주목받았다.

▶6면으로 이어짐

/박승봉 기자

〈새목포일보 2018년 6월 6일자(제56호) 1면〉

보도 내용

김종식 후보 군수시절 '살아있는 사람 흉상' 논란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주민 자발적 건립' 진실공방 … 농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군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이 또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흉상의 주인공인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가 12년 완도군수를 끝마치고, 광주경제부시장을 거쳐 이번에는 목포시장으로 출마한 때문이다.

김 후보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흉상이라는 비난에 대해 줄곧 '주민들이 공적을 기려 자발적으로 건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각종 불법으로 건립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가 완도군수 시절 완도군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을 철거하라는 여론과 함께 불법 시비가 지속되고 있다.

완도군의회에서 청산도에 세워진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에 대해 "흉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조치 해야한다"는 의견이 군정 질의 과정에 나왔다.

완도군의회 의정질의서에 따르면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행정보존재산 내에 전임 군수 동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농지 위에 세워진 흉상 건립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당시 모 과장이 합법화를 위해 사후 보완적으로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며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김 군수 동상을 철거하고 행위 당사자도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치하고 방치하다 몇 년이 지났다"며 "또 다시 후임자 의원들에게 남겨 놓을 수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그는 또한 "완도군은 무법천지로 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김 전 군수의 흉상 철거를 촉구했으며, "집행부에서 책임지지 않을시 허위공문서 작성건 등을 포함해 의원 개인명으로라도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2013년 7월 세워진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은 농지불법전용 문제가 불거져 직후부터 철거 이전 논란이 일었으며, 오물투척을 받는 등 언론의 가십거리로 전락된 가운데 완도군의회의 지적에 대한 완도군의 처분에 주목받았다.

▣ 특집 – 김종식 목포시장후보, 완도군수시절 노조탄압의혹관련 진실공방

전국통합 공무원노조 '김종식 후보는 부적격자' 성명 파장

통공노, "부인비리 의혹, 노조분쇄 의혹 등 논란 … 공천 부적격자"

김 후보 "극소수 불법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 건전한 노사관계 왜곡"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후보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발표로 몸살을 앓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김종식 후보의 "부인비리의혹과 노조갈성을 방해하고 기존의 조합을 분쇄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논란만으로도 공천부적격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식 후보는 12년 완도군수를 마감하는 2014년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군을 떠나라"는 치욕스런 성명으로 망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노조탄압의혹이 불거지자,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해 공식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종식 후보는 즉각 수차례 검증 해명했다고 언론보도를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완도군수 시절 극소수의 불법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당시 전공노를 불법노조라며 강경하게 표현했다.

김종식 후보의 완도군수시절 노조탄압관련 진실공방이 담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조탄압을 주장하는 중요성명서들과 반발하는 기자회견문을 시간순서대로 조명해 진실공방을 들여다봤다.

/편집국

성명서 1

성명서 1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 홈페이지
2005. 1.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노조탄압 분쇄 및 부당인사 철회〉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배부른 철밥통들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재불식 최선하기 때주한 공직자로 거듭나 군민들의 사랑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2. 31일에는 공무원노조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년 후인 2006년 1월부터는 법이 시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노조법이 어떻게 탄생하가 된 것입니다

완도군은 총파업으로 인해 파면 - 3명, 해임 - 4명, 정직 - 22명 등 2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엊그제 3명이 더 추가 되어 총 32명의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단지 출근시간이 몇시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32명의 희생자들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가족한 처분에 대한 소송심사 대비도 해야 하고, 벌점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도군에서는 이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불법단체 운운하며 노조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고 있으며 나가지 않을 경우 전기까지 단전시키겠다고 합니다. 20명의 부양자원들이 경찰에서 조서를 받고 있을 때 심과장, 김면장등을 앞세워 협박과 강요로 노조탈퇴서를 받고 노조가 합법화 되는 마당에서 이제는 사무자이 할 직장 업이회나 만들라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해 10월말 특채인사의 문제점과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이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자들의 해신인사를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이들을 요직에 배치시키고 공직생활이 싸른 선배들을 무시하고 말 잘듣는 측근(?)들만 골라 승진시켰으며, 인사예고(본청전입)를 해놓고도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사원칙과 사생이 무너진 어처구니없는 인사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측근은 3년이 다되도록 요직에 계속 배치하고 뭔에서 올라온지 1년도 되지 않는 노조간부는 다시 면으로 내려보내는 보복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급까지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노조탈퇴서와 직업가입 강압 신청으로 분열된 조직을 다시 추스리고 침체된 직장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몇차례나 군수와 대화를 원했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완도군에서만 유일하게 일어난 공무원노조 탄압행위와 1.10일자 완도군 부당인사를 고발하고 공직사회계에 부정부패추방의 중심으로 움직에 서기 위해 불카리 겨리로 다가게 될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2

성명서 3

성명서 3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2018. 5. 2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적폐 후보, 당선가능성에만 매몰된 정치공학은 지양해야

-정책이 실종된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기준이 사라진 지방선거,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촛불정신의 가치를 이어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각 정당의 공천 후보자 일부의 면면은 지자체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오히려 지난날 적폐의 그림자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중에는 음주운전과 같은 경미한 전과는 물론 사기와 폭력범과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까지 가지고 있는 후보들도 버젓이 공천 후보자에 올라와 있어, 오히려 촛불정신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두눈을 의심케 한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담론만이 뉴스지면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며, 지방선거 관련 각 정당의 방향성과 정책이 실종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목포시장 김종식 예비후보자의 경우, 이전에 완도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해단 처자체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후보자가 친노동을 김조하는 여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에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3권의 강화를 현 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담겼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후보를 단체장에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이며,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목포시장 김종식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완도군수로 재직하던 당시 부인 구모씨가 직원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으로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책임져야만 단체장이 노동자들의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기존에 조합을 분쇄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논란만으로도 공천부적격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김종식 후보 반박 기자회견문 : 김종식 후보 사무소
2018년 5월 24일
김종식 선거사무소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 박 후보는 언론보도도 먼저 확인해라

민주당 경선 · 민주당 지도부 · 기자회견 통해 수차례 검증 및 해명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가 박홍률 후보의 노조탄압 주장에 대해 언론상 보도먼저 확인하라고 입장을 낼했다.

김종식 목포시장후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완도군수 시절 극소수 불법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공직자의 입장에서 불법과 협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불법노조로 불리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는 목포시와 관양시, 영암군에서도 이뤄졌다고 덧 붙였다.

특히 목포시공무원노조의 불법노조 탈퇴 과정에서, 권공노측이 이에 반발하며 시청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박홍률 후보가 있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종식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주관하게 제기됐던 음해성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증을 거쳐 후보로 결정됐다며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최고위원과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지도부에서 김종식 후보가 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재차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후보는 박후보는 언론보도도 확인하지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는 후보를 흔집 내기 위해 기자회견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차례나 정책선거로 나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네거티브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새목포일보 2018년 6월 6일자 2면〉

전국통합 공무원노조 '김종식 후보는 부적격자' 성명 파장

통공노, "부인비리 의혹, 노조분쇄 의혹 등 논란 … 공천 부적격자"
김 후보 "극소수 불법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 건전한 노사관계 왜곡"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후보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발표로 망신을 샀다. 노조는 지난 달 23일 김종식 후보의 "부인비리의혹과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기존의 조합을 분쇄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논란만으로도 공천부적격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식 후보는 12년 완도군수를 마감하는 2014년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군지부로부터 "완도군을 떠나라"는 치욕스런 성명으로 망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노조탄압의혹이 불거지자,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해 공색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식 후보는 즉각 수차례 검증 해명했다고 언론조보도를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완도군수 시절 극소수 불법조노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당시 전공노조를 '불법노조'라며 강경하게 표현했다.

김종식 후보의 완도군수시절 노조탄압관련 진실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조탄압을 주장하는 중요성명서들과 반발하는 기자회견문을 시간순서대로 조명해 진실공방을 들여다봤다.

※성명서 1~3–내용 생략

발행인 칼럼

김종식 후보는 목포시민께
거짓말 그만하시고 목포를 떠나면 어떠하십니까?

박 승 흠 발행인

〈새목포일보 2018년 6월 6일자 3면〉

보도 내용

[발행인칼럼]

김종식 후보는 목포시민께 거짓말 그만하시고 목포를 떠나면 어떠하십니까?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 선거가 올해로 70돌을 맞아 민주주의를 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열정이 한층 높은데도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과 헌신과 희생정신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목포 발전을 바라는 많은 시민 입장에서 행정력을 써내려가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 생활 경제와 지역사회에 반영하도록 적극적 투표에 참여토록 정책 선거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목포시민을 위한 바른 정치인의 기조이고 정직한 단체장을 하겠다고 출마했다면 명분과 가치로 목포시민의 이익을 위해 평소에 동분서주 했어야 했다.

또한 과거 행정의 구체적 범위와 목포시장 선거출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적 결함을 지니고 목포에 나타났으면 상식과 논리의 양지로 봐도 명확하게도 설 자리가 없지 않겠는가?

평소에 목포에 살고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학교 좀 다녔다고 편의를 의식한 암묵적 공생과 유착의 사슬로는 안 된다고 목포시민과 함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과거 잘잘못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상식에 두고, 위대하고 현명한 목포시민은 중단 없는 발전을 거듭하도록 평화와 안전과 안심을 바라고 있는데도 박홍률 목포시장과 시청 공직자가 4년간 펼쳐온 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주간신문에 민선 6기 4년 무능행정 오명, 2016 목포시 종합행정평가 "라"에서 "마"등급 추락이라는 제목을 붙여 발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고 악의적인 보도였다.

이는 국가가 2016년도 전국 22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지방자치 단체 재정분석(건전성, 효율성 기준)"을 발표한 것이지 종합행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또한 4년 동안의 재정효율이 낮았다면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포시청은 현재의 지방행정 경험은 거짓이 없었고, 진실된 사실을 듣고, 느끼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은 개방적인 미래행정에 접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탐욕의 화신처럼 불쑥 나타났기에 목포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공공의 분노가 발생한다.

김종식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적폐 청산 대상이었다.

적폐 청산은 다름 아닌 제도, 관행, 가치, 문화, 인물 등 다양하므로 언론인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과 실망을 하게 된다.

이처럼 김종식 후보의 불이익변명에 명확한 근거나 설명이 100% 부족함을 기자회견문에 나타나 있다.

변명으로 일관하여 지속적으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까지 훼손하고 후보자 부인의 인사 비리 사건의 법

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없다.

또한 김종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린다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자회견문(5월 24일)에 발표했다. 이는 하늘이 웃을 일이다.

특히 개소식도 5000명이 왔다고 허위를 일삼고 있어, 소가 웃을 일이다.

거짓된 수단으로 목포시민을 학습시키려 하지 말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독선과 아집의 원조로서 목포시민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새목포일보 신문사를 탄압하여 고소, 고발로 감시받고, 차량을 이용한 미행을 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성공할 것들을 위하여 지금 겪는 잠시의 고통에 감사한다.

히포크라테스선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의 산물이다. 얄팍한 몇 조각의 과거 지식과 경험으로만 자리를 넘보면 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목포시장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자께 좋은 것이 길고 나쁜 것이 짧기를 기원한다.

社 說

김종식 후보의 노조탄압에 대한 어설픈 해명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혹독하리만큼 철저해야 한다. 검증을 왜곡 네거티브로 치부한다면 공직에 당선된다 해도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탄압 여부에 대한 검증은 비단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약자에 대한 배려, 민관협치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의 기초와 행적들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종식 후보는 자신의 노조탄압 의혹 검증에 대하여 "완도군 극소수 불법 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는 목포시, 광양시, 영암군에서도 있었고 목포시 공무원노조의 불법노조 탈퇴과정에서 전공노측이 반발하며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김종식이 재차 검증된 인물이라고 했다.

이는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편견, 사실관계의 오인, 검증의 오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본은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말처럼 법외노조를 불법노조로 상정했기 때문에 완도군청 대다수 공무원이 가입했던 전공노는 처음부터 비협상의 대상, 즉, 완도군청 소속 대부분의 직원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전공노는 부정부패 추방,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기조로 출범한 법외노조였다.

그럼에도 김종식 후보는 완도군수 재임시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하였다.

전공노의 불법노조 인식은 그가 취해온 노조관련 조치들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말하는 불법노조 탈퇴는 노동조합의 조직진로 변경을 오인한 것이다.

조합원의 탈퇴와 조직진로 변경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종식 후보는 목포시와 광양시, 영암군에서도 전공노 탈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 노조는 탈퇴가 아닌 조직진로 변경이었다.

목포시와 광양시, 영암군에서 이루어진 조직진로 변경은 상급단체를 전공노에서 민공노로 변경하는 사안이었다.

노조의 조직진로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기 홍보 선전전이 있기 마련이고 전공노도 항의 방문이 아닌 홍보 선전전을 했었다.

완도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전공노 탈퇴서 제출 등이 탈퇴이다.

탈퇴 강요와 다른 노조 가입 회유를 하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는 또, 자신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재차 검증된 인물이라고 하였다.

검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검증 시 노조탄압으로 징계 받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었는지, 검증단은 공정한 사람들로 구성하였는지, 검증결과가 정의에 반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

김종식 후보는 조합원들에게 징계뿐만 아니라 전공노 지도부를 해체하기 위하여 각지 다른 도서지방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였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합법의 틀은 과연 지켜졌는가?

그는 조합원 4명에 대하여 과면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결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그들은 2년 9개월의 피말리는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징계와 좌천성 인사 등 많은 상처를 주었다.

인식의 편견, 사실관계의 명확화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제 김종식 후보에게 묻는다.

2005. 5. 전공노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종식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인사비리,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사직 감정은 작용하지 않았는지?

2011년 건전노사문화 대통령 표창 수상은 친기업·반노조성향, 비리백화점 점주인 이명박 전대통령의 노사정책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닌지?

이 물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성찰과 진실 고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에서 과거 흠결은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로 등용한 그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보면 답이 있다.

〈새목포일보 2018년 6월 6일자 3면〉

보도 내용

[社說] 김종식 후보의 노조탄압에 대한 어설픈 해명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혹독하리만큼 철저해야 한다. 검증을 왜곡 네거티브로 치부한다면 공직에 당선된다 해도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탄압 여부에 대한 검증은 비단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약자에 대한 배려, 민관협치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의 기초와 행적들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종식 후보는 자신의 노조탄압 의혹 검증에 대하여 "완도군 극소수 불법 노조의 악의적인 성명서를 이용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는 목포시, 광양시, 영암군에서도 있었고 목포시 공무원노조의 불법노조 탈퇴과정에서 전공노측이 반발하며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김종식이 재차 검증된 인물이라고 했다. 이는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편견, 사실관계의 오인, 검증의 오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본은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말처럼 법외노조를 불법노조로 상정했기 때문에 완도군청 대다수 공무원이 가입했던 전공노는 처음부터 비협상의 대상, 즉, 완도군청 소속 대부분의 직원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전공노는 부정부패 추방,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기조로 출범한 법외노조였다. 그럼에도 김종식 후보는 완도군수 재임시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하였다. 전공노의 불법노조 인식은 그가 취해온 노조관련 조치들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말하는 불법노조 탈퇴는 노동조합의 조직진로 변경을 오인한 것이다. 조합원의 탈퇴와 조직진로 변경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종식 후보는 목포시와 광양시, 영암군에서도 전공노 탈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 노조는 탈퇴가 아닌 조직진로 변경이었다. 목포시와 광양시, 영암군에서 이루어진 조직진로 변경은 상급단체를 전공노에서 민공노로 변경하는 사안이었다.

노조의 조직진로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기 홍보 선전전이 있기 마련이고 전공노도 항의 방문이 아닌 홍보 선전전을 했었다. 완도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전공노 탈퇴서 제출 등이 탈퇴이다. 탈퇴 강요와 다른 노조 가입 회유를 하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는 또, 자신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재차 검증된 인물이라고 하였다. 검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려보아야 한다.

검증 시 노조탄압으로 징계 받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었는지, 검증단은 공정한 사람들로 구성하였는지, 검증 결과가 정의에 반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

김종식 후보는 조합원들에게 징계뿐만 아니라 전공노 지도부를 해체하기 위하여 각지 다른 도서지방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였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합법의 틀은 과연 지켜졌는가? 그는 조합원 4명에 대하여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결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그들은 2년 9개월의 피말리는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징계와 좌천성 인사 등 많은 상처를 주었다.

인식의 편견, 사실관계의 명확화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제 김종식 후보에게 묻는다. 2005. 5. 전공노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종식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인사비리,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사적 감정은 작용하지 않았는지? 2011년 건전노사문화 대통령 표창 수상은 친기업·반노조성향, 비리백화점 점주인 이명박 전대통령의 노사정책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닌지? 이 물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성찰과 진실 고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에서 과거 흠결은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로 등용한 그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보면 답이 있다.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11
시정요구인	**이영숙**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새전북신문**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사옥 4층 발행인 박명규
심의대상기사	새전북신문 2018년 6월 12일자 11면 「장수군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선거를 기대하면서」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전 바른미래당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작성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선거 직전 시정요구인의 부정적인 과거 이력과 함께 '금권선거'로 인한 '재선거' 가능성 등을 언급한 외부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위배하였다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게재한 기고문은 시정요구인과 경쟁하였던 타 정당의 전 예비후보가 작성하였다는 점, 기고문의 내용이 시정요구인에 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기고문 게재 시점이 선거일 전일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기사심의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새전북신문

2018년 06월 12일
11면 (오피니언)

특별기고

장수군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선거를 기대하면서

권 건 주 전 바른미래당 장수군수 예비후보

저는 고향 장수 발전을 위해 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2013년 6월 공직에서 퇴직후 약5년간 지속적으로 군민과 소통 등 저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정치적 역량(DNA)부족과 출향인사에 대한 인색한 평가등 정서적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여 지난 5월 12일 장수군수예비후보를 사퇴하였다.

불출마 회견에서 장수군민께 "이번 장수군수선거가 장수의 미래에 희망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렸다"

그러나 장수군수 선거는 저의 바램과는 달리 선두주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자간의 유언비어 등 비방과 금권선거등으로 많은 군민은 미리부터 재선거를 걱정하는 실상을 접하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장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인구는 2만3,000명에 유권자는 1만9,000명으로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작은 군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 선거를 통한 혁신을 애써 외면하는 환경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시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장수군수선거가 축제의 장과 행복한 선거로 장수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보다는 군민의 생각과는 달리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군민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군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최악의 선거로 변질되는 상황에 장수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목 놓아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 2002년 제3대 장수군수선거의 금품제공등 금권선거로 인하여 군수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장수군의 혈세낭비와 장수군민의 좌절과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장수군에 대한 여론악화 등 나쁜 영향을 초래한 당사자가 남편의 건강을 구실로 장수군수에 출마를 하는 것은 장수군과 군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며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군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께 호소합니다!

당선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법을 무시한 상대방후보에 대한 유언비언 등 네거티브전략과 금권선거는 장수군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재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흠이 있음에도 동정심으로 그동안 군민의 사랑받은 후보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군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번 선거가 최악의 선거가 아닌 행복을 주는 선거가 될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군민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장수군수선거는 후보자간 차열한 접전으로 군민께서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

선거는 당연히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함에도 현실선거에서는 때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이번 군수선거에서 장수의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8.5*15.9)cm

〈새전북신문 2018년 6월 12일자 11면〉

보도 내용

[특별기고]
장수군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선거를 기대하면서

권건주 전 바른미래당 장수군수 예비후보

저는 고향 장수 발전을 위해 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2013년 6월 공직에서 퇴직 후 약 5년간 지속적으로 군민과 소통 등 저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정치적 역량(DNA)부족과 출향인사에 대한 인색한 평가 등 정서적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여 지난 5월 12일 장수군수예비후보를 사퇴하였다.

불출마 회견에서 장수군민께 “이번 장수군수선거가 장수의 미래에 희망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렸다”

그러나 장수군수 선거는 저의 바램과는 달리 선두주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자간의 유언비어 등 비방과 금권 선거 등으로 많은 군민은 미리부터 재선거를 걱정하는 실상을 접하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장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인구는 2만3,000명에 유권자는 1만9,000명으로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작은 군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 선거를 통한 혁신을 애써 외면하는 환경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장수군수선거가 축제의 장과 행복한 선거로 장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보다는 군민의 생각과는 달리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군민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군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최악의 선거로 변질되는 상황에 장수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목 놓아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 2002년 제3대 장수군수선거의 금품제공 등 금권선거로 인하여 군수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장수군의 혈세낭비와 장수군민의 좌절과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장수군에 대한 여론악화 등 나쁜 영향을 초래한 당사자가 남편의 건강을 구실로 장수군수에 출마를 하는 것은 장수군과 군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며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군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께 호소합니다!

당선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법을 무시한 상대방후보에 대한 유언비언 등 네가티브전략과 금권선거는 장수군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재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흠이 있음에도 동정심으로 그동안 군민의 사랑받은 후보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군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번 선거가 최악의 선거가 아닌 행복을 주는 선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군민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장수군수선거는 후보자간 치열한 접전으로 군민께서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

선거는 당연히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함에도 현실선거에서는 때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이번 군수선거에서 장수의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기각 결정 사례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1
시정요구인	**신현국**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21세기엔터테인먼트(문경저널)** 경북 문경시 모전로 54 점촌터미널 206 대표이사 김종희
심의대상기사	문경저널 2018년 3월 20일자 1면 「고윤환 문경시장,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및 「문경에 '선거 가짜뉴스' 난무」, 2면 「문경오미자, 일본식품박람회에서 대만업체와 2만3천500弗 계약」 및 「문경시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643억원 신청」, 3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문경! SNS에서 만나요!」 제하의 기사
주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유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 시정요구인의 측근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출마예정자인 고윤환 현 문경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다수 게재하여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정요구 대상 기사는 여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편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후보자를 현저히 부각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윤환 문경시장, 지방자치행정 대상 수상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중심 희망문경

고윤환 문경시장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고윤환 문경시장이 3월17일 토요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회장 박상규)가 민선6기 4년을 종합평가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창한 것이다.

광역단체장은 원희룡 제주지사 1명이며, 기초지자체장은 고윤환 시장을 비롯해 33명이 수상했고, 경북에서는 고 시장과 장욱현 영주시장 2명만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을 비롯해 박상규 지방자치TV 회장, 최충웅 언론학박사, 민주정책개발원 이로분 박사 등 다수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2018 지방자치 행정대상 평가는 ▲조례 발의 및 통과 건수 ▲공약이행률 ▲재정자립도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공적조서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민주정책개발원 이로분 박사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JJC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지방자치행정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과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저희 지방자치TV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 소통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윤환 시장은 "지난 4년 열심히, 사심 없이 일한 결과를 좋게 평가받은 것은 문경시 8백여 공직자와 8만 문경시민의 덕분"이라며, "지난 2년 전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상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경시 정현호 예산담당은 "지난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아 7억 정도의 상금을 받았다."며, "올해도 그 이상의 상과 상금을 받기 위해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저널 2018년 3월 20일자 1면〉

보도 내용

고윤환 문경시장, 지방자치행정 대상 수상

고윤환 문경시장이 지난 3월 17일 토요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회장 박상규)가 민선6기 4년을 종합평가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창한 것이다.

광역단체장은 원희룡 제주지사 1명이며, 기초지자체장은 고윤환 시장을 비롯해 33명이 수상했고, 경북에서는 고 시장과 장욱현 영주시장 2명만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을 비롯해 박상규 지방자치TV 회장, 최충웅 언론학박사, 민주정책개발원 이로문 박사 등 다수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2018 지방자치 행정대상 평가는 ▲조례 발의 및 통과 건수 ▲공약 이행률 ▲재정자립도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공적조서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민주정책개발원 이로문 박사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JJC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지방자치행정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과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저희 지방자치TV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 소통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윤환 시장은 "지난 4년 열심히, 사심 없이 일한 결과를 좋게 평가받은 것은 문경시 8백여 공직자와 8만 문경시민의 덕분"이라며, "지난 2년 전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상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경시 정현호 예산담당은 "지난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아 7억 정도의 상금을 받았다."며, "올해도 그 이상의 상과 상금을 받기 위해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에 '선거 가짜뉴스' 난무

6.13 지방선거가 '가짜뉴스(fake news)'로 혼탁해지고 있다고 매일신문이 3월19일 보도했다. 특히 '경선이 본선'으로 통하는 대구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경선 시계가 촉박하게 돌아가면서 한국당 후보들을 저격하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가짜 뉴스는 높은 휘발성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쉽게 확산되는 데다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아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이와 관련 문경에는 부인이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뇌물 수수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비리 연루설 등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부인 금품수수설의 경우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1차 조사를 받은 이 단체장이 추가 소환 요구에 대응해 최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연기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그러면서 상대방 지지자들은 2천여 명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 단체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다며 마치 단체장이 시인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장문의 글을 올려 그럴듯하게 퍼 나르고 있다.

하지만 매일신문, 문경저널, 문경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과 정계에서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또 모 예비후보 측근들은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공천은 우리가 다 받았다.'는 등의 말도 퍼뜨리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무근인 유언비어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매일신문은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각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상호 비방 등 과열,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 조치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 발생한다면 공관위가 후보자격 박탈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문경저널 2018년 3월 20일자 1면〉

보도 내용

문경에 '선거 가짜뉴스' 난무

6.13 지방선거가 '가짜뉴스(fake news)'로 혼탁해지고 있다고 매일신문이 3월 19일 보도했다. 특히 '경선이 본선'으로 통하는 대구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경선 시계가 촉박하게 돌아가면서 한국당 후보들을 저격하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가짜 뉴스는 높은 휘발성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쉽게 확산되는 데다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아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이와 관련 문경에는 부인이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뇌물 수수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비리 연루설 등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부인 금품수수설의 경우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1차 조사를 받은 이 단체장이 추가 소환 요구에 대응해 최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연기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그러면서 상대방 지지자들은 2천여 명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 단체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다며 마치 단체장이 시인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장문의 글을 올려 그럴듯하게 퍼 나르고 있다.

하지만 매일신문, 문경저널, 문경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과 정계에서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또 모 예비후보 측근들은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공천은 우리가 다 받았다.'는 등의 말도 퍼뜨리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무근인 유언비어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매일신문은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각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상호 비방 등 과열,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 조치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 발생한다면 공관위가 후보자격 박탈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문경오미자, 일본식품박람회에서 대만업체와 2만3천500弗 계약

캐나다, 멕시코, 태국, 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계약 진행 중

문경시는 일본식품전문박람회(FOODEX JAPAN 2018)에서 문경오미자가 세계 여러 나라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돌아왔다고 3월10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4일간 도쿄 마쿠하리 메세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83개국 3,40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문경 오미자에 총 7만2천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번 전시회에서 오미자 스파클링, 오미자 냉온 음료 시음회를 가져 5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 대부분은 신선하고 새로운 오미자 맛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새로운 음료 출시에 대한 기대가 컸다도 했다.

고윤환 시장과 김지현 시의회 의장, 업체 관계자는 120여명의 바이어를 발굴해 만남을 가졌으며, 이로써 캐나다, 멕시코, 태국, 일본, 대만의 음료회사와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와인회사 등 7개국의 바이어들에게는 조만간 수출오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만으로부터는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시장에서도 오미자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고, 일본의 모 상사와는 독점 공급계약을 했으며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해결 즉시 수출오더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 많은 식품관련 바이어들이 전시관을 방문해 새로운 가공방식의 오미자를 시음하고 호평과 상담이 이어졌으며 몇몇 바이어들은 가격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동결건조 방식으로 가공된 사과와 배 칩은 많은 바이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상담으로 이어졌으며, 표고버섯은 프랑스 바이어로부터 40피터 컨테이너 물량에 대한 가격 견적을 요청받았고, 국내 큰 바이어로부터는 공급제안과 가격을 제안하기로 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전시회에 시음회를 주관한 오미자세계화추진위원회(대표 유광희) 회원들의 활약은 오미자를 세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독립부스로 구성된 문경시관은 많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세계시장의 흐름을 감지하고 오미자 세계화의 길을 찾았다."며, "향후 오미자 수출을 위한 전문 TF팀 구성과 수출 전략을 수립 운영하겠다."고 했다.

〈문경저널 2018년 3월 20일자 2면〉

보도 내용

문경오미자, 일본식품박람회에서 대만업체와 2만3천500弗 계약

문경시는 일본식품전문박람회(FOODEX JAPAN 2018)에서 문경오미자가 세계 여러 나라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돌아왔다고 3월 10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4일간 도쿄 마쿠하리 메세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83개국 3,40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문경 오미자에 총 7만 2천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번 전시회에서 오미자 스파클링, 오미자 냉온 음료 시음회를 가져 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 대부분은 신선하고 새로운 오미자 맛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새로운 음료 출시에 대한 기대가 컸다도 했다.

고윤환 시장과 김지현 시의회 의장, 업체 관계자는 120여 명의 바이어를 발굴해 만남을 가졌으며, 이로써 캐나다, 멕시코, 태국, 일본, 대만의 음료회사와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와인회사 등 7개국의 바이어들에게는 조만간 수출오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만으로부터는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시장에서도 오미자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고, 일본의 모 상사와는 독점 공급계약을 했으며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해결 즉시 수출오더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 많은 식품관련 바이어들이 전시관을 방문해 새로운 가공방식의 오미자를 시음하고 호평과 상담이 이어졌으며 몇몇 바이어들은 가격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동결건조 방식으로 가공된 사과와 배 칩은 많은 바이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상담으로 이어졌으며, 표고버섯은 프랑스 바이어로부터 40피터 컨테이너 물량에 대한 가격 견적을 요청받았고, 국내 큰 바이어로부터는 공급제안과 가격을 제안하기로 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전시회에 시음회를 주관한 오미자세계화추진위원회(대표 유광희) 회원들의 활약은 오미자를 세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독립부스로 구성된 문경시관은 많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세계시장의 흐름을 감지하고 오미자 세계화의 길을 찾았다.”며, “향후 오미자 수출을 위한 전문 TF팀 구성과 수출 전략을 수립 운영하겠다.”고 했다.

문경시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643억원 신청

6차 산업 등 36개 전략사업 선정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3월 2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2018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문경시에서 상정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총 36개 사업에 643억 원을 2019년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신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내년에도 많은 국·도비 확보와 문경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전략사업 중심으로 선정 하였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문경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하여 지난 2월 12까지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심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농업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차후 다양한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농업이 타 산업보다 전망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제 농업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이며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만이 문경농업의 경쟁력"이라며 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당부 하였다.

〈문경저널 2018년 3월 20일자 2면〉

보도 내용

문경시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643억원 신청

문경시는 3월 2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2018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문경시에서 상정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총 36개 사업에 643억 원을 2019년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신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내년에도 많은 국·도비 확보와 문경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전략사업 중심으로 선정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문경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하여 지난 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심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농업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차후 다양한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농업이 타 산업보다 전망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제 농업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이며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만이 문경농업의 경쟁력"이라며 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말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문경! SNS에서 만나요!

문경시 SNS서포터즈 기자단 발대식 열려

문경시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문경시 SNS서포터즈 기자단의 발대식을 실시했다.

SNS를 통한 지역의 홍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SNS서포터즈는 관광지, 축제, 특산물 등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사작성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매년 SNS서포터즈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문경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올해는 각종 분야의 우수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선정되어 다양한 방식의 SNS홍보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올해 4기째를 맞은 문경시 SNS서포터즈는 총 50명으로 파워블로거, 사진작가, 웹툰작가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연말까지 팸투어, 개별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SNS상에서 문경을 알리는 데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문경저널 2018년 3월 20일자 3면〉

보도 내용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문경! SNS에서 만나요!

문경시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문경시 SNS서포터즈 기자단의 발대식을 실시했다.

SNS를 통한 지역의 홍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SNS서포터즈는 관광지, 축제, 특산물 등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사작성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매년 SNS서포터즈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문경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올해는 각종 분야의 우수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선정되어 다양한 방식의 SNS홍보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올해 4기째를 맞은 문경시 SNS서포터즈는 총 50명으로 파워블로거, 사진작가, 웹툰작가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연말까지 팸투어, 개별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SNS상에서 문경을 알리는 데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3
시정요구인	**김춘진**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대표이사 조성부
심의대상기사	연합뉴스 2018년 3월 15일 「"공약 발표하는 김춘진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2018년 4월 2일 「"종합경기장을 전북 실리콘밸리로"」, 2018년 4월 8일 「송하진 지사, 전북기자협회 주관 TV 토론회 개최 제안」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등의 제재조치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유	시정요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정책공약에 대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시정요구인이 타 뉴스통신사에 비해 적은 양의 기사만을 보도하여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시정요구인이 먼저 TV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시정요구인이 4월 8일자 「송하진 지사, 전북기자협회 주관 TV 토론회 개최 제안」 제하의 기사에서 상대 후보인 송하진 후보가 TV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을 보도함으로써 송 후보측이 먼저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다며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거기사의 형평성 여부는 해당 언론사가 기사량, 게재지면 등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정당 간 균형 있게 보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전북도지사 선거 관련 피시정요구인의 기사를 살펴본 결과, 시정요구인과 상대 후보인 송하진 후보 간 기사량, 기사 크기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연합뉴스 4월 8일자 「송하진 지사, 전북기자협회 주관 TV 토론회 개최 제안」 제하의 기사는 시정요구인이 후보자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후 송하진 후보측에서 토론회의 주최기관을 전북기자협회로 하자는 역제안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해당 기사의 내용이 부당하게 시정요구인 측에게 불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합뉴스 2018년 3월 15일자〉

보도 내용

김춘진 전북도지사 후보 "예산 8조원 시대 열겠다"

김춘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도지사가 되면 5년 동안 6조 원대에 머무는 전북 예산을 8조 원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후보는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4년간 전북 예산은 정부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임기 중에 8조 원대를 확보해 도민 복지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처럼 예산이 정체한 것은 전북도가 중앙과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대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지역에 안주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전북 예산을 확보했다면 2016년 이미 7조 원을 넘었어야 했는데 올해도 6조 5천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예산 방향과 맞는 전북 정책 수립, 중앙과 풍부한 인맥 등을 통해 예산을 8조 원대로 증액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예비후보, 정의당 권태홍 전북도당 위원장 간 대결구도다.

김춘진 전북도지사 후보 "종합경기장을 전북 실리콘밸리로"

기사입력 2018/04/02 11:47 송고

변화냐, 김춘진 정체냐?

YONHAP NEWS

김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공약 발표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8.4.2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도지사가 되면 전주 종합경기장을 '전북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 도민 성금으로 조성됐다"며 "이런 역사적 공간은 특정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 편익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 즉시 '종합경기장 개발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확충할 전북형 실리콘밸리와 같은 청사진을 만들어 전주시와 함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민선 6기 전북도는 관광객 1억 명과 소득 2배, 인구 3백만 등 '123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중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약 실패에 대한 송하진 전북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2 11:47 송고

〈연합뉴스 2018년 4월 2일자〉

보도 내용

김춘진 전북도지사 후보 "종합경기장을 전북 실리콘밸리로"

김춘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도지사가 되면 전주 종합경기장을 '전북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 도민 성금으로 조성됐다"며 "이런 역사적 공간은 특정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 편익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 즉시 '종합경기장 개발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확충할 전북형 실리콘밸리와 같은 청사진을 만들어 전주시와 함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민선 6기 전북도는 관광객 1억 명과 소득 2배, 인구 3백만 등 '123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중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약 실패에 대한 송하진 전북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하진 지사, 전북기자협회 주관 TV 토론회 개최 제안

기사입력 2018/04/08 15:51 송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8일 "전북기자협회 주관으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TV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 알 권리 보장과 선택권 보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을 맞추고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전북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후보들만의 토론회가 아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이달 2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토론회를 한차례 열기로 했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를 11일로 확정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 2018년 4월 8일자〉

보도 내용

송하진 지사, 전북기자협회 주관 TV 토론회 개최 제안

송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 알 권리 보장과 선택권 보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을 맞추고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전북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후보들만의 토론회가 아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이달 2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토론회를 한차례 열기로 했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를 11일로 확정했다.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7
시정요구인	**박동영**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괴산타임즈**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관동로 193 발행인 노원래
심의대상기사	괴산타임즈 2018년 5월 16일(제7호) 「괴산군수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듣다」 제하의 기사
주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시정요구인의 출마의 변 게재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2018. 5. 16.자(제7호) 〈괴산타임즈〉 1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예비후보자 중 3명의 출마 동기와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자 중 시정요구인의 입장만 게재하지 않아 공정성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시정요구인은 2018. 5. 29.(제8호) 발행한 〈괴산타임즈〉 1면에 시정요구인을 포함한 후보자 4명의 사진과 출마 관련 입장을 게재하였고, 이는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괴산인의신문

괴산타임즈

Goesan times

괴산타임즈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괴산군수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듣다

이차영(더불어민주당)

"젊음이 역동하는 괴산 만들겠다"

송인헌(자유한국당)

"풍요롭고, 행복한 괴산 만들겠다"

임회무(무소속)

"실추된 괴산군 명예 회복하겠다"

〈괴산타임즈 2018년 5월 16일 1면〉

※보도내용 생략

의결번호	2018지선-시심10
시정요구인	이민근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씨엔엠미디어(안산타임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308호 발행인 민용기
심의대상기사	안산타임스 2018년 5월 22일(제656호) 1면 「4호선 지중화로 초대형 안산시 랜드마크 만든다」 제하의 기사
주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요구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안산타임스〉 2018. 5. 22.자(제656호) 1면에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공약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동일 지면 하단에 안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알림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알림과 함께 해당 후보를 부각하는 기사를 1면에 게재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의 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2018년 5월 29일자(제657호) 1면 하단 알림을 통해 선거기간 동안 주1회에서 주2회로 발행횟수를 늘리겠다고 공지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저촉된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함께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은 2018. 5. 22.자(제656호) 1면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해당 기사는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내용으로 지나치게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보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기사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공정하지 아니한 기사에 대한 제재조치만을 담당할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5조의 위반 여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호선 지중화로 초대형 안산시 랜드마크 만든다

윤화섭 시장후보, 메가 프로젝트 정책공약 준비 관심 집중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캠프가 초대형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 개조 수준으로 안산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화섭 후보측은 안산시의 급속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도시 경쟁력 쇠퇴에 있다고 보고 안산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새로운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공약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초지역 세권을 핵으로 한 안산시 발전 방안으로 4호선(안산선) 지중화를 통한 청년창업공간, 문화예술창작공간, 글로벌 문화쇼핑공간 등이 어우러진 안산 랜드마크 공간 조성 사업이다.

안산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4호선은 고가철도로 그동안 소음과 도시단절 등의 문제로 역대 시장부터 지중화 방안이 검토되고 추진된 사례가 있었으나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로 번번히 실패해 왔던 사업으로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

윤화섭 후보측에 따르면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계획의 안산시 경유 노선에 선부역~한대앞역 구간이 지하화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 철도망 계획과 연계해 나머지 초지역~안산역 구간은 안산시가 지중화 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측은 4호선 지중화 사업이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준공 전후에도 모들러(이동식)방식의 청년창업 플랫폼, 문화예술창작공방, 세계음식 푸드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안산시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 미래 비전을 상징화한 안산타워를 건립해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호선 지중화사업이 주목되는 것은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굵직굵직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도 연계할 경우 안산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산시를 문화예술 남북교류의 서해안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화랑유원지 일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밝혔듯이 안산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416생명안전공원과 복합문화쇼핑타운인 (가칭)아트시티,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 등 의료시설,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도서관 등 각종 복합문화교육스포츠시설 등 시민편화적 시설이 집적화 될 전망이다.

윤화섭 후보 캠프 관계자는 "늪육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안산시 한복판에 거대한 생태 도시숲 공원과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세계음식거리를 조성해 안산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화랑유원지 주변 복합문화교육상업시설과 연계해 안산시의 획기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반 ktc@ansantimes.co.kr

안산타임스 창간 14주년 기념식 가져

18일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민 회장 '일간지 창간의지 밝혀'

안산타임스 민용기 회장이 창간 14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민 회장은 이날 종합일간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안산타임스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계호 사진기자

안산타임스 창간 14주년 기념식이 18일 오후 3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구성된 YBB팀의 신나는 방송댄스와 국국제청소년연합IYF의 건전댄스가 펼쳐졌다. 식후행사는 안산타임스 연혁과 비전 소개, 발전자문위원 위촉패 증정, 우수공무원 시상, 2018 안산시 자원봉사 왕중왕 수상자 시상, 지원소개,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패를 받은 자문위원은 16명이고 우수공무원은 안산시 박양복 공보관과 이영분 문화예술과 예술팀장, 안산소방서 강병규 소방위, 임봉애 초지초등학교 교사, 안산단원서 이희윤 순경, 안산상록서 이두환 경장 등 6명이다.

자원봉사 왕중왕 수상은 개인부문 신은혜씨, 단체부문은 생생정의수남봉사단이 받았다.

이날 창간 14주년 기념사에서 민용기 회장은 "올해 안산타임스는 새로운 인터넷판을 선보였다"면서 "속보판을 신설해 독자들에게 일간지 같은 주간지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주2회 발행으로 독자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새롭게 일간지를 창간해 주간지에서 부족했던 정보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 회장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안산의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동도 챙기겠다"며 "안산구석구석의 동네방네 소식과 지역의 경제 소식도 더 많이 보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2, 10, 14면

김태창이때호기자 ktc@ansantimes.co.kr

전해철,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선임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사진) 의원이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으며 나타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개최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앞서 경기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5월 17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전해철 의원은 "경남의 승리는 민주당에게는 지방선거 압승의 상징이 됨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며"함지인 경남에서 늘 선당후사 해 온 김경수 후보와 허성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경남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와 이재준 고양시장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지난 대선 경기도당은 공조직 중심으로 각 지역위원회와 당원이 똘똘 뭉쳐 경기도 승리를 이끌어 냈다"며"우리 당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하는 압승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특별취재반

창간 14주년 기념, 16면 특집호 발행

알 림

6·13지방선거 안산시장 여론조사 실시

6·13지방선거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도시사 및 시장 등 5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투표용지는 7매를 가지고 일곱 번 투표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에 안산타임스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와 함께 안산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안산시의 핵심 의제인 언론으로서의 책임감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보는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산타임스 ANSANTIMES

〈안산타임스 5월 22일자 1면〉

알 림

6.13지방선거 기간 주 2회 발행… 매주 화·금요일자 독자에게 전달

제2의 창간을 선언하며 안산에서 발행하는 종합주간지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안산타임스가 안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독자들이 시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은 물론 시·도의원까지 독자들에게 자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주기 위해 선거기간(5월 31일~6월13일) 중 주2회 발행체계를 선언합니다.

이같은 안산타임스의 도전은 독자들에게 지방선거를 생생하게 전달하자는 의미가 있고 시장과 시·도의원 등 후보들에게는 좀 더 많은 선거과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도록 하자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산타임스 ANSANTIMES

〈안산타임스 5월 29일자 1면〉

보도 내용

4호선 지중화로 초대형 안산시 랜드마크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 메가 프로젝트 정책공약 준비 관심 집중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캠프가 초대형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 개조 수준으로 안산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화섭 후보측은 안산시의 급속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도시 경쟁력 쇠퇴에 있다고 보고 안산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새로운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공약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초지역세권을 핵으로 한 안산시 발전 방안으로 4호선(안산선) 지중화를 통한 청년창업공간, 문화예술창작공간, 글로벌 문화쇼핑공간 등이 어우러진 안산 랜드마크 공간 조성 사업이다. 안산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4호선은 고가철도로 그동안 소음과 도시단절 등의 문제로 역대 시장부터 지중화 방안이 검토되고 추진된 사례가 있었으나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로 번번이 실패해 왔던 사업으로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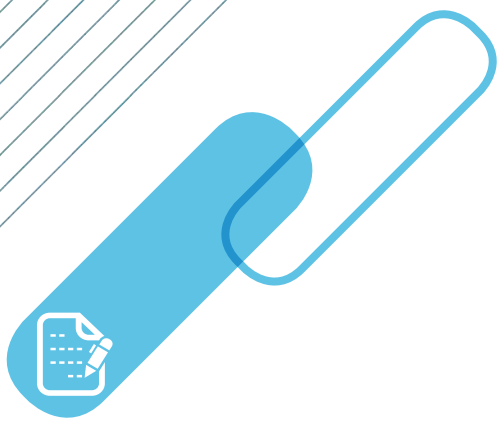
윤화섭 후보측에 따르면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계획의 안산시 경유 노선에 선부역-한대앞역 구간이 지하화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 철도망 계획과 연계해 나머지 초지역-안산역 구간은 안산시가 지중화 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측은 4호선 지중화 사업이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준공 전후에도 모듈러(이동식)방식의 청년창업 플랫폼, 문화예술창작공방, 세계음식 푸트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안산시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 미래 비전을 상징화한 안산타워를 건립해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호선 지중화사업이 주목되는 것은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굵직굵직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도 연계할 경우 안산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산시를 문화예술 남북교류의 서해안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화랑유원지 일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밝혔듯이 안산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416생명안전공원과 복합문화쇼핑타운인 (가칭)아트시티,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 등 의료시설,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도서관 등 각종 복합문화교육스포츠시설 등 시민친화적 시설이 집적화 될 전망이다.

윤화섭 후보 캠프 관계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안산시 한복판에 거대한 생태 도시숲공원과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세계음식거리를 조성해 안산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화랑유원지 주변 복합문화교육상업시설과 연계해 안산시의 획기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5부 기타 사례

제1장 안내문 조치 및 불문 사례
제2장 기타 논의사항



제1장
안내문 조치 및 불문 사례

1. 안내문 조치 사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 제재조치(정정보도·반론보도·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또는 권고)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크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9건의 안건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했다.

주간한국은 2월 12일자 14면에 특정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보도게재 시점, 크기, 내용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으나 출마예정자의 인터뷰 기사 연재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출마예정자의 인터뷰만을 보도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안내문 송부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선거 초반 연재 계획 등의 언급 없이 특정 전라북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전주매일, 특정 충청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음성군자치신문, 진천군자치신문에도 각각 안내문을 송부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하남시장, 오산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을 사진과 함께 게재한 선경일보에 대해서도 안내문 조치했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특정 후보자의 출마의 변만을 게재할 경우 여타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각 후보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 보도할 시 기사형식, 게재지면, 기사의 양 등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영남매일은 2월 22일자 3면에 특정 대구시장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는 실과 바늘과 같은 사이'라고 보도하는 등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을 일부 사용해 안내문 송부 조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대구 수성구청장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예비후보가 전체 후보자 중 1위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도 순서만을 나열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도를 강조한 제목으로 인해 독자들이 자유한국당 내 1위인 후보자가 전체 후보자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심의위원회는 모 체육협회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 경상북도지사 후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의견과 해명만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대구경북일보, 특정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일부 우호적인 의견을 담은 제목과 기사를 보도한 The함안신문에 대해서도 안내문 조치했다.

안내문 조치 사례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주간한국	2월 12일	14	“대구를 수성구처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공정성/형평성
대구영남매일	2월 22일	3	사공정규 위원장의 ‘인생과 정치철학’	객관성 및 사실보도
영남일보	2월 23일	4	한국당 후보 지지도, 오차범위 내 김대권·남상석·정순천·안용모 順	여론조사 보도
대구경북일보	3월 20일	11	이철우, 허위사실 유포와의 전쟁 선포	공정성/형평성
전주매일	3월 15일	16	전북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공정성/형평성
음성군 자치신문	3월 21일	3	“어려운 이웃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정성/형평성
진천군 자치신문	3월 16일	3	“어려운 이웃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정성/형평성
The 함안신문	3월 15일	9	공민배 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선언 ‘봇물’	공정성/형평성
선경일보	4월 13일	5	오수봉 하남시장 출마의 변	공정성/형평성
		7	오산시장 곽상욱 출마의 변	

2. 불문 사례

선거기사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는 총 4건이었다.

인천일보는 인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정 후보자의 인물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당선가능성과 인물선호도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기사가 아닌 칼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가능성을 인물선호 변수 중 하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불문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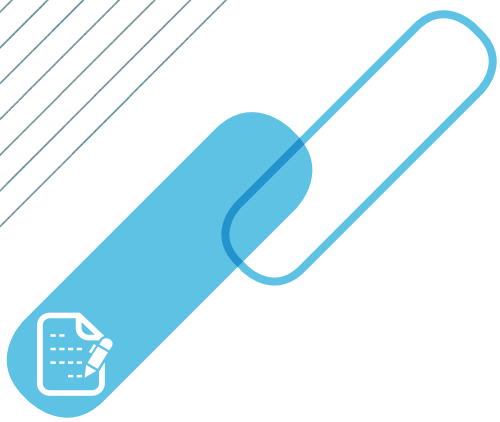
3월 13일자에 특정 포천시장 예비후보자의 인터뷰를 1면에 게재한 포천뉴스의 경우, 언론사측에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게재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후 발행호에 타 후보의 인터뷰가 게재된 것이 확인되어 불문 결정했다. 또 포천뉴스 5월 3일자 ‘포천시장후보 3인 인터뷰–첫 번째’ 제목의 기사는 일반적인 인터뷰 기사 형식이 아닌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형태로 보도

해 선거기사 심의규정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위반소지가 있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취재기자명이 기재되지 않아 출처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은 있지만 이후 게재된 타 후보자 인터뷰 기사의 크기, 내용, 위치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불문 결정했다.

서귀포신문은 선거에 재출마예정인 현직 제주교육감의 인터뷰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으나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4·3 사건과 관련한 교육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인물 부각 등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문 결정했다.

불문 사례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인천일보	3월 13일	11	숫자로 보는 출판기념회	객관성 및 사실보도
포천뉴스	3월 15일 (103호)	1	오로지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공정성/형평성
포천뉴스	5월 3일 (107호)	3	포천뉴스 포천시장후보 3인 인터뷰 – 첫 번째 기호1 포천시장 박윤국 후보	인터뷰 및 인용기사
서귀포신문	3월 29일 (1127호)	4	禧.3은 교육과 문화로 기억, 전승될 것”	공정성/형평성



제2장
기타 논의사항

1. 공직선거법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범위에 관한 해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이번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 1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다. 그런데 4월 2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 당의 당명은 유지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하였고, 공직선거법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방송연설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의 정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33조제1항 후문에 따라 둘 이상 정당의 소속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3. 21. 서면질의회답 내용 참조(http://law.nec.go.kr/lawweb/necwWqrelnqy1030.do?genActiontypeCd=2ACT1012&winWd=900&winHg=900&qnaId=201803220001)

2. 시정요구 주체인 '후보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제8조의2제6항 준용)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통상 선거일 이전에 제기된 후보자 시정요구 안건만을 처리해왔으나 이번 제7회 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일 이후인 2018년 6월 27일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 보도 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안이 접수되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범위에 '후보자였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자'는 후보자였던 자를 포함하며, 불공정한 선거기사가 보도된 것을 안 날부터 시정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에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3]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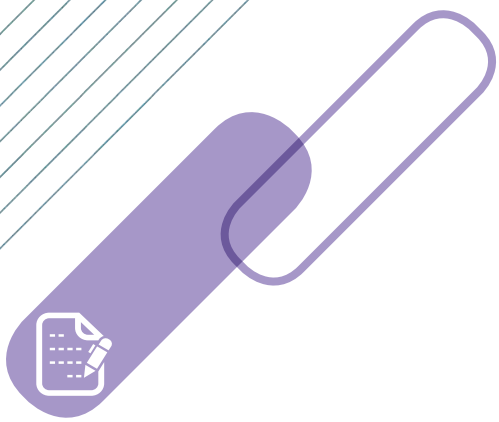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이후 제기된 후보자 시정요구 안건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주의사실 게재 결정(2018지선-시심12)을 내렸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6. 27. 인터넷질의회답 내용 참조(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8/277442?menuNo=200560)

부록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5. 색 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2.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3.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3조(심의고려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 심의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5조(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조제2호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무를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4.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5.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6.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7.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8.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3장 세부 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덧붙여 보도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 또는 변형시켜 편집, 게재한 경우 또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 기사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4장 결 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삭 제〉 (2017. 2. 13.)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권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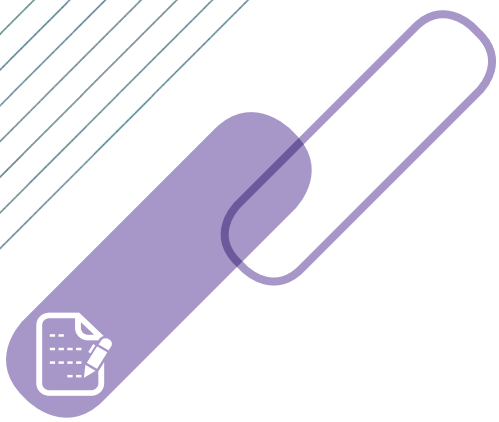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부 칙

제13조(제재결정 등)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8. 1. 29. 규칙 제201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

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 2. 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재조치의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규칙 제2018-1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table>
<tr><td rowspan="2">성명</td><td>한글</td><td></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d rowspan="2">직업</td><td rowspan="2"></td></tr>
<tr><td>한자</td><td></td></tr>
<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3" row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r>
<tr><td>학력</td><td colspan="6"></td></tr>
<tr><td>경력</td><td colspan="6"></td></tr>
</table>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시 정 요 구 서</td></tr>
<tr><td rowspan="3">시정요구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④ 전화번호</td><td></td><td>⑤ E-mail</td><td></td></tr>
<tr><td rowspan="4">시정요구 대상</td><td>⑥ 언론사명 (매체명)</td><td></td><td>⑦ 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⑧ 주소 또는 소재지</td><td></td><td>⑨ 보도일자 및 지면</td><td></td></tr>
<tr><td>⑩ 보 도 내 용 (별첨 가능)</td><td></td><td>⑪ 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4"></td></tr>
<tr><td>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2. 2. 20.>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2">재 심 청 구 서</td></tr>
<tr><td rowspan="2">원 심 결 정</td><td>의 결 번 호</td><td></td></tr>
<tr><td>결 정 일 자</td><td></td></tr>
<tr><td rowspan="4">청 구 인</td><td>성 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E-mail</td><td></td></tr>
<tr><td>청구의 취지
및 사유</td><td colspan="2">별 첨</td></tr>
<tr><td colspan="3">「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2.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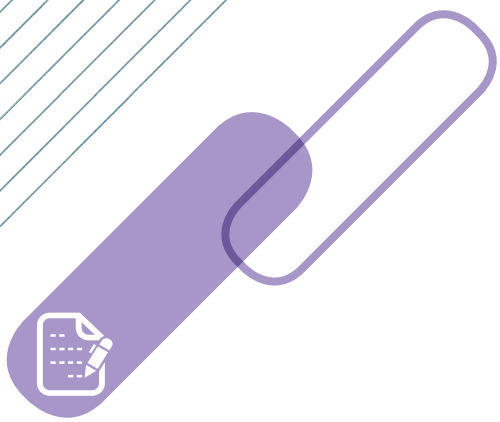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반 론 보 도 청 구 회 부 서</td><td>처리시간
48시간</td></tr>
<tr><td rowspan="3">청 구 인</td><td>① 성명 또는 단체명</td><td></td><td>② 대표자 성명</td><td></td><td></td></tr>
<tr><td>③ 생년월일</td><td></td><td>④ 주소 또는 소재지</td><td></td><td></td></tr>
<tr><td>⑤ 전화번호</td><td></td><td>⑥ E-mail</td><td></td><td></td></tr>
<tr><td rowspan="2">피 청 구 인</td><td>⑦ 성명 또는 단체명</td><td></td><td>⑧ 대표자 성명</td><td></td><td></td></tr>
<tr><td>⑨ 주소 또는 소재지</td><td></td><td>⑩ 전화번호</td><td></td><td></td></tr>
<tr><td rowspan="3">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td><td>⑪ 매 체 명</td><td colspan="3"></td><td></td></tr>
<tr><td>⑫ 보도일자 및 지면</td><td colspan="3"></td><td></td></tr>
<tr><td>⑬ 보 도 내 용 (별첨가능)</td><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6">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

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 삭제 〈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

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

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

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66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

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

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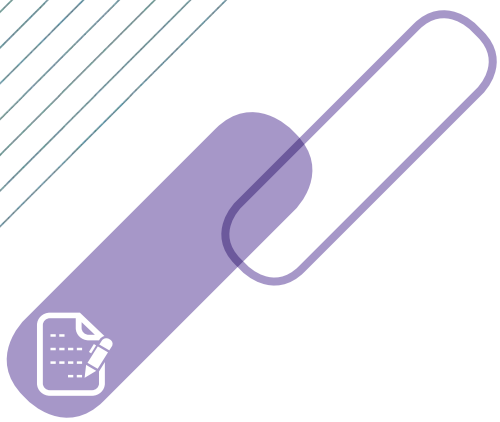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1. 일간지 : 161개

중앙 일간지 (28)	종합일간지(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9)	뉴스토마토,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지(8)	데일리스포츠한국,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한국스포츠경제
지역 일간지 (128)	서울(23)	내외일보, 매일일보, 문화매일, 산경일보, 새한일보, 서울매일, 서울일보, 선경일보, 세계타임즈,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글로브, 아시아일보,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투데이, 에너지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천지일보, 한성일보, 한민일보
	경기/인천(19)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신문,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기호일보, 대한투데이, 도민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중부일보, 페이스월드, 현대일보
	충북(6)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대전/충남(7)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산/울산(9)	경상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광역매일신문,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일간리더스경제, 부산파이낸셜뉴스
	대구/경북(18)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신문, 경북연합일보, 경북일보, 경북일일신문, 경상매일신문, 경안일보, 대경일보, 대구광역신문, 대구경북일보, 대구영남매일,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세명일보, 영남일보, 일간경북
	경남(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도민신문,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경남일보, 일간뉴스경남, 창원일보, 한남일보
	광주/전남(16)	광남일보, 광전매일, 광주드림,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남도일보, 남도투데이, 더대한일보, 무등일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호남일보
	전북(13)	새만금신문, 새전북신문, 전라매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연합신문, 전북중앙신문, 전북타임스, 전주매일, 전주일보
	제주(6)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제주신보, 한라일보
기타 일간지 (5)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농민신문, 메트로, 환경일보

2. 주간지 : 275개

중앙 주간지 (42)	잡지(14)	뉴스위크, 뉴시스아이즈, 매경이코노미, 미래한국, 시사뉴스, 시사인, 시사저널,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CNB저널
	타블로이드(12)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내막,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한국,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기타주간지(16)	글로벌이코노믹, 금융경제, 기자협회보, 뉴스웨이, 대한금융신문, 마케팅신문, 미디어오늘, 변협신문, 서울파이낸스, 아시아에너지경제, 여성신문, 월드경제, 이뉴스투데이, 크리스천투데이, 조세일보, 현대경제신문
지역 주간지 (233)	서울(32)	강서양천일보,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 구로타임즈신문, 노원신문, 동작포커스, 마을신문 금천in,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울N구민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성동신문, 성북신문, 시정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종로저널,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남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북부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중랑신문, 팝콘뉴스
	경기/인천(27)	가평타임즈, 경기북부타임즈, 고양신문, 과천뉴스,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부천신문, 북경기신문, 시사인천, 시흥자치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군포·의왕·과천 주간현대, 안양광역신문, 여주신문, 용인신문, 이천설봉신문, 자치안성신문, 주간 고양신문, 주간 안산신문, 주간 이천저널신문,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신문, 포천뉴스, 포천신문
	대전/충남(17)	공주신문, 굿모닝충청, 금강뉴스, 놀뫼신문, 뉴스서천, 당진투데이, 보령신문, 서산타임즈, 주간 금산신문, 주간 당진시대, 주간 보령시민신문, 주간 서천신문, 주간 태안신문, 청양신문, 태안뉴스, 태안미래신문, 홍성신문
	충북(15)	보은사람들, 영동신문, 음성군자치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제천신문, 주간 보은신문, 주간 중원신문, 중부광역신문, 증평신문, 진천시사신문, 진천자치신문, 충주신문, 충청리더스, 충청리뷰
	강원(13)	강릉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북부신문, 강원신문, 강원종합복지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인제신문, 주간 설악신문, 철원신문사, 태백신문, 홍천신문, 횡성신문
	부산/울산(4)	울산뉴스투데이,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정관타임스
	대구/경북(34)	고령신문, 격주간 의성신문, 경북중부신문, 경북자치신문, 경산신문, 경주시민신문, 경주신문, 고령군민신문, 군위신문, 뉴스상주, 대가야신문, 대구경북신문, 문경신문, 문경저널, 상산신문, 서라벌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 울진마당, 울진마당신문, 울진신문, 의성문소신문, 주간 김천신문, 주간 영주신문, 주간 예천신문, 주간 청도신문, 주간 영남신문, 청송영양신문, 칠곡신문, 팔공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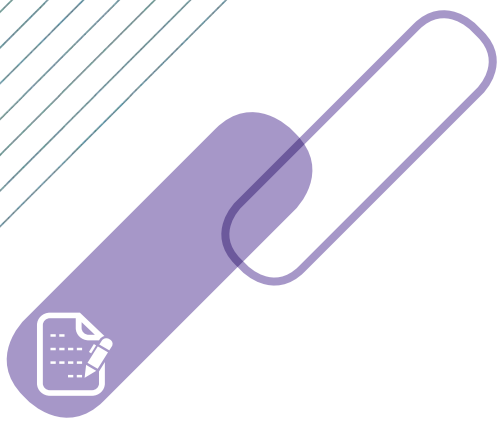
지역 주간지 (233)	경남(33)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거창중앙신문, 경남진주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뉴스사천,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비사벌신문, 사천신문,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시사신문, 의령신문, 주간 아림신문, 주간함양, 하동군민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군민신문, 함안뉴스, 함안아라신문, 함양신문, 합천대야신문, 합천신문, The함안신문
	광주/전남(35)	강진고을, 강진신문, 광양경제,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곡성타임스, 담양군민신문, 담양뉴스, 담양人신문, 더페스트뉴스신문사, 동부매일, 목포투데이, 목포시민신문, 목포타임즈, 무안신문, 시민의소리, 여수신문, 영광21, 영광신문, 영암군민신문,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완도신문, 우리군민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 나주신문, 주간 장흥신문, 진도군민신문, 함평신문, 해남군민신문, 해남우리신문, 호남타임즈, 화순군민신문, JINDO TODAY
	전북(21)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익산신문, 익산열린신문, 익산투데이, 전북신문고, 정읍신문, 정읍시사, 주간 군산신문, 주간 김제신문, 주간 남원시민신문, 주간 완주전주신문, 주간소통신문,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제주(2)	뉴스제주, 서귀포신문

3. 월간지 : 23개

중앙 월간지 (19)	종합지(12)	뉴스메이커, 대한뉴스, 서울21, 시사뉴스타임, 시사뉴스피플,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월간 조선, 월간 중앙, 폴리피플, ANDA
	여성지(7)	에스콰이어, 여성동아, 여성조선, 우먼센스, 주부생활, 코스모폴리탄, 퀸
지역 월간지(4)		고흥타임즈, 영등포포커스, 전라도닷컴, 진주신문

4. 뉴스통신 : 10개

뉴스통신(10)	국제뉴스, 뉴스1코리아, 뉴시스, 내외뉴스통신, 연합뉴스, 서울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KNS뉴스통신, NSP뉴스통신



5
색인

1) 결정유형별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체심의	경고결정문 게재	2018지선-자심78	경북일일신문	91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자심13	담양뉴스	107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자심61	경북일일신문	121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자심72	한남일보	132
	경고	2018지선-자심3	전주일보	147
	경고	2018지선-자심4	경북도민일보	150
	경고	2018지선-자심6	일요신문	153
	경고	2018지선-자심14	도민일보	156
	경고	2018지선-자심15	도민일보	159
	경고	2018지선-자심16	선경일보	163
	경고	2018지선-자심19	충청일보	165
	경고	2018지선-자심21	뉴스경남	167
	경고	2018지선-자심25	거창중앙신문	169
	경고	2018지선-자심28	아시아일보	173
	경고	2018지선-자심29	일간경북신문	176
	경고	2018지선-자심31	경북일일신문	177
	경고	2018지선-자심34	고령신문	180
	경고	2018지선-자심35	경동신문	181
	경고	2018지선-자심37	경상매일신문	184
	경고	2018지선-자심41	시민일보	198
	경고	2018지선-자심44	전북일보	213
	경고	2018지선-자심45	제주신문	216
	경고	2018지선-자심46	함양신문	219
	경고	2018지선-자심53	남해신문	223
	경고	2018지선-자심54	충북일보	226
	경고	2018지선-자심56	대구경북일보	231
	경고	2018지선-자심57	도민일보	235
	경고	2018지선-자심65	조선일보	240
	경고	2018지선-자심67	산경일보	242
	경고	2018지선-자심68	경기매일	244
	경고	2018지선-자심69	경북일일신문	245
	경고	2018지선-자심73	담양곡성타임스	248
	경고	2018지선-자심74	담양뉴스	251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체심의	경고	2018지선-자심75	선경일보	252
	경고	2018지선-자심81	상산신문	254
	경고	2018지선-자심82	순창신문	258
	경고	2018지선-자심83	시민의소리	261
	경고	2018지선-자심87	담양곡성타임스	266
	경고	2018지선-자심88	담양군민신문	269
	경고	2018지선-자심89	문화매일	270
	경고	2018지선-자심90	시민의소리	271
	경고	2018지선-자심91	열린순창	275
	주의	2018지선-자심1	내외일보	276
	주의	2018지선-자심2	내외일보	279
	주의	2018지선-자심5	일요서울	283
	주의	2018지선-자심7	경북연합일보	290
	주의	2018지선-자심8	경안일보	293
	주의	2018지선-자심9	경기신문	296
	주의	2018지선-자심10	경도신문	301
	주의	2018지선-자심11	경북도민일보	303
	주의	2018지선-자심12	경북신문	306
	주의	2018지선-자심17	안산정론신문	308
	주의	2018지선-자심18	전북타임스	312
	주의	2018지선-자심22	뉴스제주	315
	주의	2018지선-자심23	제주매일	325
	주의	2018지선-자심24	홍성신문	328
	주의	2018지선-자심30	경기일보	330
	주의	2018지선-자심32	국민일보	333
	주의	2018지선-자심33	전남일보	337
	주의	2018지선-자심36	경상매일신문	340
	주의	2018지선-자심38	경인종합일보	345
	주의	2018지선-자심39	아시아일보	351
	주의	2018지선-자심40	보령신문	352
	주의	2018지선-자심42	전남매일	354
	주의	2018지선-자심43	경인종합일보	357
	주의	2018지선-자심47	경기매일	363
	주의	2018지선-자심48	경인매일	365
	주의	2018지선-자심50	동양일보	367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체심의	주의	2018지선-자심51	중부매일	368
	주의	2018지선-자심52	충북일보	369
	주의	2018지선-자심58	도민일보	370
	주의	2018지선-자심60	경남매일	371
	주의	2018지선-자심62	서천신문	374
	주의	2018지선-자심63	김해뉴스	376
	주의	2018지선-자심66	함안뉴스	379
	주의	2018지선-자심71	시민일보	385
	주의	2018지선-자심77	홍주신문	388
	주의	2018지선-자심79	대전투데이	391
	주의	2018지선-자심80	산경일보	394
	주의	2018지선-자심84	청송영양신문	396
	주의	2018지선-자심86	제주신문	400
	권고	2018지선-자심20	강릉신문	404
	권고	2018지선-자심26	남도일보	408
	권고	2018지선-자심27	머니투데이	411
	권고	2018지선-자심49	정읍시사	414
	권고	2018지선-자심55	경북매일	417
	권고	2018지선-자심59	합천신문	422
	권고	2018지선-자심64	남해시대	424
	권고	2018지선-자심70	북부신문	427
	권고	2018지선-자심76	서울신문	429
	권고	2018지선-자심85	호남일보	430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시정요구인 / 매체명	면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문 게재	2018지선-시심4	김성기 / 중부일보	434
	반론보도문 게재	2018지선-시심6	구인모 / 거창군민신문	442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시심12	김경수 / 경남매일	449
	경고	2018지선-시심8	신현국 / 시사문경	463
	경고	2018지선-시심9	김종식 / 새목포일보	468
	경고	2018지선-시심11	이영숙 / 새전북신문	484
	기각	2018지선-시심1	신현국 / 문경저널	487
	기각	2018지선-시심3	김춘진 / 연합뉴스	495
	기각	2018지선-시심7	박동영 / 괴산타임즈	499
	기각	2018지선-시심10	이민근 / 안산타임스	500

2) 언론사별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체심의	강릉신문	권고	2018지선-자심20	404
	거창중앙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25	169
	경기매일	경고	2018지선-자심68	244
	경기매일	주의	2018지선-자심47	363
	경기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9	296
	경기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30	330
	경남매일	주의	2018지선-자심60	371
	경도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10	301
	경동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35	181
	경북도민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4	150
	경북도민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11	303
	경북매일	권고	2018지선-자심55	417
	경북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12	306
	경북연합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7	290
	경북일일신문	경고결정문 게재	2018지선-자심78	91
	경북일일신문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자심61	121
	경북일일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31	177
	경북일일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69	245
	경상매일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37	184
	경상매일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36	340
	경안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8	293
	경인매일	주의	2018지선-자심48	365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38	345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43	357
	고령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34	180
	국민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32	333
	김해뉴스	주의	2018지선-자심63	376
	남도일보	권고	2018지선-자심26	408
	남해시대	권고	2018지선-자심64	424
	남해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53	223
	내외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1	276
	내외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2	279
	뉴스경남	경고	2018지선-자심21	167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체심의	뉴스제주	주의	2018지선-자심22	315
	담양곡성타임스	경고	2018지선-자심73	248
	담양곡성타임스	경고	2018지선-자심87	266
	담양군민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88	269
	담양뉴스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자심13	107
	담양뉴스	경고	2018지선-자심74	251
	대구경북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56	231
	대전투데이	주의	2018지선-자심79	391
	도민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14	156
	도민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15	159
	도민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57	235
	도민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58	370
	동양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50	367
	머니투데이	권고	2018지선-자심27	411
	문화매일	경고	2018지선-자심89	270
	보령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40	352
	북부신문	권고	2018지선-자심70	427
	산경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67	242
	산경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80	394
	상산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81	254
	서울신문	권고	2018지선-자심76	429
	서천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62	374
	선경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16	163
	선경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75	252
	순창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82	258
	시민의소리	경고	2018지선-자심83	261
	시민의소리	경고	2018지선-자심90	271
	시민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41	198
	시민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71	385
	아시아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28	173
	아시아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39	351
	안산정론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17	308
	열린순창	경고	2018지선-자심91	275
	일간경북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29	176
	일요서울	주의	2018지선-자심5	283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체심의	일요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6	153
	전남매일	주의	2018지선-자심42	354
	전남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33	337
	전북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44	213
	전북타임스	주의	2018지선-자심18	312
	전주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3	147
	정읍시사	권고	2018지선-자심49	414
	제주매일	주의	2018지선-자심23	325
	제주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45	216
	제주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86	400
	조선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65	240
	중부매일	주의	2018지선-자심51	368
	청송영양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84	396
	충북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54	226
	충북일보	주의	2018지선-자심52	369
	충청일보	경고	2018지선-자심19	165
	한남일보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자심72	132
	함안뉴스	주의	2018지선-자심66	379
	함양신문	경고	2018지선-자심46	219
	합천신문	권고	2018지선-자심59	422
	호남일보	권고	2018지선-자심85	430
	홍성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24	328
	홍주신문	주의	2018지선-자심77	388

구분	매체명 / 시정요구인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시정요구심의	거창군민신문 / 구인모	반론보도문 게재	2018지선-시심6	442
	경남매일 / 김경수	주의사실 게재	2018지선-시심12	449
	괴산타임즈 / 박동영	기각	2018지선-시심7	499
	문경저널 / 신현국	기각	2018지선-시심1	487
	새목포일보 / 김종식	경고	2018지선-시심9	468
	새전북신문 / 이영숙	경고	2018지선-시심11	484
	시사문경 / 신현국	경고	2018지선-시심8	463
	안산타임스 / 이민근	기각	2018지선-시심10	500
	연합뉴스 / 김춘진	기각	2018지선-시심3	495
	중부일보 / 김성기	반론보도문 게재	2018지선-시심4	434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397-3114
언론분쟁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팩스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6층
전화 051) 759-7083~4 | FAX 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금동 541-1) 은성빌딩 5층
전화 053)763-0020~1 | FAX 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치평동) 우체국보험회관 5층
전화 062)676-0360~1 | FAX 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5층
전화 042)525-0778~9 | FAX 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211-9022, 9027 | FAX 031)211-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255-2878~9 | FAX 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286-8081, 8083 | FAX 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405호
전화 063)288-0010, 0981 | FAX 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263-1780, 1787 | FAX 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 5길(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722-3328, 3352 | FAX 064)726-320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행일 2018년 10월 1일
발행인 이석형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2팀 (02-397-3152)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제 작 문화공감(02-2266-1897~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대표 02)397-3114 **FAX** 02)397-3089 http://www.pac.or.kr